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5-030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김은미 · 김지영 · 김지현 · 조혜림



KOICA
WORLD'S FRIEND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김은미 · 김지영 · 김지현 · 조혜림

2010. 1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그림 목차 i
표 목차 i
약어 ii
한글요약 v
영문요약 xx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II.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 6
1. OECD와 공적개발원조 6
(1) OECD/DAC의 역사 6
(2) UN 천년개발목표 8
(3)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10
(4) 동료심사 13
2.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 14
(1) UN 천년개발목표 15
(2) 빈곤 감소 17
(3) 성 평등 21
(4) 환경 25
(5) 분쟁과 평화 28
(6) 무역 33
(7) 원조의 효과성 36
(8) 원조의 질 38
(9) 거버넌스 40

Ⅲ.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 44
1. OECD/DAC 원조모델 44
2. OECD/DAC 원조모델 지표 45
(1) 공통지표 48
(2)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 52

Ⅳ. OECD/DAC 국가 분석
1. OECD/DAC 국가 전체 분석 58
(1) 영국 59
(2) 스페인 62
(3) 핀란드 64
(4) 미국 66
(5) 캐나다 68
(6) 독일 70
(7) 네덜란드 72
(8) 스위스 74
(9) 호주 76
(10) 오스트리아 78
(11) 벨기에 79
(12) 덴마크 81
(13) 프랑스 83
(14) 그리스 84
(15) 아일랜드 85
(16) 이탈리아 88
(17) 일본 89
(18) 룩셈부르크 90
(19) 뉴질랜드 91
(20) 노르웨이 93
(21) 포르투갈 96
(22) 스웨덴 97
(23) OECD/DAC 회원국가 비교분석 99

2. OECD/DAC 권고사항 적용 모범 사례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101
(1) 분석틀 101
(2)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행위 분석 105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0

V.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을 위한 KOICA의 현황 및 당면과제 122
1. 연구방법 122
2. 웹 서베이 결과 123
3. 임원진 심층면접 결과 128
4. 직원 집단좌담회 결과 요약 132

VI. 정책제언 138
1. 한국 ODA 체계와 분야별 원조정책의 방향성 제고 138
2. KOICA 원조사업 단계별 Action Plan 141
3. KOICA 역량강화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9

첨부자료1 DAC 동료심사 가이드 168
첨부자료2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서 리스트 210
첨부자료3 네덜란드 · 아일랜드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내용 215
첨부자료4 KOICA 직원 웹서베이 222
OECD/DAC 권고사항 문서 요약 225

그림 목차

그림 1. UN MDGs 21
그림 2. 빈곤 감소 37
그림 3. 성 평등 55
그림 4. 환경 77
그림 5. 분쟁과 평화 87
그림 6. 무역 91
그림 7. 원조의 효과성 101
그림 8. 원조의 질 102
그림 9. 거버넌스 108
그림 10.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 109
그림 11. OECD/DAC 방사형 원조모델 116
그림 12. 원조 Project Cycle Management 129
그림 13. 아일랜드의 주류화 과정 131
그림 14. 정책 일관성 사이클: 네덜란드 139
그림 15. 국가전략페이퍼에 대한 아일랜드의 성과 지향적 관리 접근법 157

표 목차

표 1.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서 분류 52
표 2. OECD/DAC 회원국 동료심사 분석 결과 59
표 3. OECD/DAC 권고사항 적용방안: 네덜란드, 아일랜드 63
표 4. HIV/AIDS의 주류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아일랜드 68
표 5. 아일랜드 주류화 전략 86
표 6. 아일랜드의 주류화 전략 모니터링 지표 89
표 7. 네덜란드 수원국 프로파일 149
표 8.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네덜란드 151
표 9. 정책입안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159
표 10. 원조사업계획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202
표 11. 원조집행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229
표 12. 원조 평가 단계의 OECD/DAC 주요 권고사항 231

약어

AAA	Accra Agenda for Action	아크라행동강령
ADA	Austrian Development Agency	오스트리아 개발기구
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 국제개발 집행기구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독일 경제협력부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별 지원전략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UN)	중앙긴급대응기금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기관
CMM	Office of Conflict Management and Mitigation (USA)	분쟁 관리 및 완화 부서
CPS	Civil Peace Service (Germany)	시민 평화 서비스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기구
CSP	Country Strategy Papers	국가전략페이퍼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협력위원회
DED	German Development Service	독일 개발 서비스
DEK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 (Netherlands)	원조의 효과성 및 질 부서
DFAI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외교 및 국제무역부 (캐나다)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ngland)	영국 국제개발부
DGDC	Directorate General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lgium)	개발협력
DGIS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herlands)	개발협력부 (네덜란드)
DGC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taly)	개발협력부 (이탈리아)
EBRD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재건 및 개발 유럽 은행
ECHO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Office	유럽위원회 인도적지원부
EDC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고채무국가
HLM	High Level Meeting (DAC)	고위급회담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Canada)	국제개발연구센터 (캐나다)
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금융기구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 인도주의 법
IOB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Netherlands)	정책 및 활동 평가 부서
IPDET	International Program in Development Training	개발훈련 국제 프로그램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병해충종합관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ICUS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저소득 취약국가
MAPs	Multi-Annual Program System	다년간프로그램시스템
MASPs	Multi-Annual Strategic Plans (Netherlands)	다년간전략계획 (네덜란드)
MDBs	Multilateral Developmental Banks	다자간개발은행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천년개발목표
MO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	외교통상부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ZAID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뉴질랜드 국제개발청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일관성
PCM	Project Cycle Management	프로젝트사이클관리
PCU	Policy Coherence Unit (Netherlands)	정책 일관성 부서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PFDs	partnership framework documents (France)	파트너십 프레임웍 다큐먼트
PFM	Public Finance Management	공공재정관리
PGD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글로벌 개발 정책
PLWHA	People Living With HIV/AIDS	HIV/AIDS 보균자

PMD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 민간 파트너십
PPU	Policy Planning Unit (Ireland)	정책 계획 부서
S/CR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USA)	국무부/재건및안정조정국 (미국)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 개발협력기구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전략적 환경평가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스위스 경제담당주사무국
SGACA	Strategic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ssessment (Netherlands)	전략적거버넌스 및 반부패진단 (네덜란드)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 국제개발청
SOFI	Swiss Organization for Facilitating Investment	스위스 투자 촉진기구
SPICAD	Embassy Support Programme for Institutional and Capacity Development (Netherlands)	제도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대사관 지원 (네덜란드)
SRH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성과 출산에 관한 건강 및 권리
SSR	Security System Reform	안보 시스템 개혁
SWAps	Sector-Wide Approaches	범분야별접근
UNAIDS	United Nations Joint Programme on HIV/AIDS	HIV/AIDS에 대한 UN 공동프로그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 프로그램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 환경 프로그램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 여성 개발 기금
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한글 요약

I. 서론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오는 2010년 OECD 내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2009년 2월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하였다. OECD/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한국 원조체계와 전략의 선진화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살펴보고 선진 원조기관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서 한국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대상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에 대한 전수 분석, (2)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DAC이 지향하는 모범 원조모델 도출, (3) OECD/DAC 전 회원국의 동료 평가 분석을 통해 OECD/DAC 회원국의 원조 행위 분석, (4) 한국 ODA 체계 진단과 KOICA의 OECD/DAC 가입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탐방 조사 분석, (5) OECD/DAC 권고사항을 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KOICA가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 원조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단기적 Action Plan 제시이다.

II.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

OECD/DAC은 UN, 세계은행 등과 달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적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자개발기관과 각 공여국이 집행한 원조에 관한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정보와 경험 및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OECD/DAC은 UN MDGs, 빈곤,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무역, 원조 효과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 등 9가지 분야를 원조의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가이드라인(Guideline), 매뉴얼(Manual), 리포트(Report), 그리고 퍼블리케이션(Publication)을 통해 OECD/DAC이 추구하는 이슈별 이념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동료심사를 통해 회원국 원조기관 및 전반적 원조 활동성과를 평가하며 회원국의 원조 정책 및 집행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특히 OECD/DAC 가이드라인 문서에 주안점을 두고 9가지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각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1) UN 천년개발목표(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먼저 UN MDGs는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여국과 수원국에게 개발협력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한 UN MDGs는 교육 확대, 보건 증진, 질병 퇴치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을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에게 구체적인 개발 협력 목표를 제시해준다. 끝으로 UN MDGs는 2000년 이후 OECD의 역할을 제시해준다. UN MDGs의 정신에 발맞추어 OECD는 주요 공여국간의 국제적 협력 도모와 OECD 국가의 정책 실행자들 간의 정책 경험 및 역량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 증진과 정책 통일성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빈곤 감소

빈곤은 현재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빈곤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OECD/DAC은 빈곤 감소와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을 빈곤 감소를 위한 지침의 큰 축으로 삼고 있다. 빈곤 친화적 성장이란 개발과 빈곤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시장주도의 경제발전만을 통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즉, 빈곤층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개발에 있어서 발전속도와 질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OECD/DAC은 빈곤 친화적 성장 개념을 도

입하여 원조 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또한 OECD/DAC은 효과적인 빈곤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원국 제도와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빈곤 친화적 성장과 함께 OECD/DAC은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경제적 접근, 즉 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 민간 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OECD/DAC은 민간 · 공공간의 협력과 빈곤층의 참여 그리고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빈곤층을 고려한 성장정책과 빈곤층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3) 성 평등

OECD는 2005년 제 2차 파리 고위급 회담에서 양성불평등 문제가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을 저해하며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8년 제 3차 아크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성평등이 인류의 삶과 빈곤계층의 여성, 남성, 아이들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조직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OECD/DAC은 OECD/DAC 회원국이 양성평등을 개발정책 및 집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젠더 네트워크(GENDERNET)를 통하여 양성평등 전문가, 시민사회,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성 평등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마련하고 경험 · 정보 · 지식의 공유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OECD/DAC은 공여국이 양성 평등을 주요 이슈로 인식하고 다른 원조목표와 연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성 주류화를 양성 평등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공여국이 수원국 내 성 주류화 보장을 위한 조직구조 개선과 역량 개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OECD/DAC은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교육과 함께 양성 평등을 모든 개발 활동 및 정책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성 주류화와 함께 OECD/DAC은 성 평등문제에 있어서 범분야별접근 방식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 분석의 실시와 수원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성 평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권한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인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확대와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

경 조성 등 여성의 정치 · 사회적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환경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지구촌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 접근법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DAC은 환경관련 조직인 환경 네트워크(ENVIRONET)를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OECD/DAC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여국은 특정 개발프로젝트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정책이나 계획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한 전략적 환경평가가 도입되었다. 전략적 환경평가는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 · 계획 ·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적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국가기관이 환경 친화적 개발 정책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OECD/DAC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여국들이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고 범분야적 접근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과 윈-윈(Win-win)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OECD/DAC에 의하면 공여국은 원조 집행 시 단기적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 개발 우선순위인 농업, 삼림, 에너지 분야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윈-윈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OECD/DAC은 환경파괴는 경제 개발과 세계화 등 여러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므로 공여국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주류화에 힘쓸 것을 권고한다.

넷째, OECD/DAC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와 국가 차원에서의 범세계적인 동반자관계 수립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OECD/DAC은 대부분의 수원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공여국이 수원국의 기후변화 원인 파악을 위해 협력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5) 분쟁과 평화

폭력분쟁은 개발도상국 개발의 토대가 될 교육, 건강, 사회기본서비스 및 사회 · 인적자본을 파괴시키고 질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등 UN MDGs 달성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취약국가에 관한 문제는 더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취약국가(fragile states)란 국민들에게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지 또는 역량이 없는 국가로 대부분 취약한 거버넌스, 제한된 행정능력, 만성적 빈곤, 비인도주의, 지속적 사회갈등, 폭력 및 내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를 일컫는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취약성은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여 수원국 정부의 정책집행은 물론 공여국의 원조집행 또한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OECD/DAC은 2007년 '취약국가와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개입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여국은 정치, 안보, 개발 목표 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분쟁방지를 원조 목적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둘째, 공여국은 테러방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수원국의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국제 원조기관 및 원조 행위자들과 조화를 통한 원조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신속하며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OECD/DAC은 분쟁상황을 분쟁 발생 전, 분쟁 중, 과도기, 분쟁 후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따라 공여국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수원국의 평화유지를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 OECD/DAC은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는 해당 지역 내의 평화건설과 함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개발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특히 취약국가의 원조효과성과 안보시스템개혁에 대한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취약국가에 대

한 원조일 경우에도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십과 주인의식 향상을 목표로 원조를 집행해야 하며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6) 무역

수출 지향적 전략을 갖고 있는 개방 경제 국가가 폐쇄경제 국가에 비해 빈곤 감소와 성장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국제사회는 개발과 무역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방이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및 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와 OECD는 무역과 개발 영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시작하였으며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사업을 OECD/DAC의 활동 목표에 포함시켰다.

무역에 관한 OECD/DAC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DAC은 공여국 간의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공여국의 무역정책이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 전략과 통합된 일관성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 한다.

둘째, OECD/DAC은 공여국과 수원국 공동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책 결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니터링과 평가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OECD/DAC은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무역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수원국 무역 역량 지원에 공여국이 힘쓸 것을 권고한다.

(7) 원조의 효과성

원조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 수원국에 따라 원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22개의 공여국과 57개의 수원국은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UN MDGs 달성과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OECD/DAC은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공여국 간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협력과 조화 및 시스템과 제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DAC은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해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를 권고하고 있다. 공여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원조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OECD/DAC은 집행기관 간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 및 원조 조화와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OECD/DAC은 효과적이고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원조의 상호 책임성을 높이며,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원조를 통해 원조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셋째, OECD/DAC은 수원국이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원조를 고려하여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해 재정관리 역량을 포함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8) 원조의 질

1972년 OECD/DAC은 원조재원에 대한 조달처의 범주에 따라 원조를 구속성(untied), 부분적 비구속성(partially untied), 구속성(tied) 원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와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와 기자재,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원조"를 말한다(KOICA 2009). 이와 달리 비구속성 원조는 위와 같은 조건이 없는 원조를 지칭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조달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속성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수원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조의 비구속화와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OECD/DAC은 원조의 비구속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또한 OECD/DAC은 원조의 유효성, 지속성, 질적 향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ECD/DAC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9) 거버넌스

1989년 세계은행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이 빈곤 감소를 위

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사회가 경제성장과 정치적 발전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게 됨에 따라 건전한 거버넌스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경제 · 정치 · 행정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지칭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공공행정 체계와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운영체계, 정부의 권한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다. OECD/DAC은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수원국의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기본 목표로 한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OECD/DAC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OECD/DAC은 수원국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가별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OECD/DAC은 또한 참여 개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 강화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은 크게 경제적, 정치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OECD/DAC은 거버넌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법으로 수원국의 시장 자율화와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국민 재산권 보장, 경제 투자촉진 및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활성화 추구 등을 권고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버넌스는 인간개발,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보호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권 강화와 자유 확대는 거버넌스의 정치적 접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강화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확립은 그 자체가 개발의 중요요소가 되며 결과적으로 건전한 거버넌스는 사회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써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접근으로 OECD/DAC은 개발과 거버넌스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 환경 조성과 법률 시스템 강화를 통해 수원국 내의 부패문제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OECD/DAC은 수원국 내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웍을 마련하고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원조지원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공여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III.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

1. OECD/DAC 원조모델

OECD/DAC의 원조모델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DAC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크게 원조목표와 원조 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원조목표란 공여국들이 원조행위의 궁극적 목표, 즉 원조를 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원조 체계란 원조가 정해진 원조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질적으로도 우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공여국의 원조 인프라와 역량을 의미한다. 앞에서 분류한 9개의 OECD/DAC 이슈 중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무역, 거버넌스는 원조 목표로 구분할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과 원조의 질은 앞의 원조 목표를 뒷받침해주는 상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원조체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UN MDGs는 원조목표의 설정 방향과 목표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OECD/DAC 권고사항 내의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OECD/DAC이 제안하는 원조모델이란 이러한 원조 목표와 원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어 이루어지는 원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문제, 분쟁과 평화, 거버넌스 등 각각의 원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원조의 질 면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원조를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모든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자료와 동료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를 작성하여 특정 공여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 해당 공여국의 원조행위가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에 가까운 사례로 네덜란드를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과 비슷한 원조 규모로 효과적인, OECD/DAC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원조 행위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두 번째 사례국으로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OECD/DAC 원조모델 지표

본 장에서 동 연구진은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를 크게 공통지표와 개별 프로젝

트 지표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의 목적은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특정 국가의 원조 프로젝트 평가 시, 본 적용지표들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본 장에서 정리한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들을 사용하면 특정 공여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평가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공여국의 원조행위가 OECD/DAC 원조모델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OECD/DAC의 9개 이슈 중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질,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성 평등, 환경, 빈곤 친화적 성장, UN MDGs는 공통지표로서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개별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공통지표 이외에 원조 집행과 관련한 개별 이슈에 대한 평가지표로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가 있다.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무역, 거버넌스의 이슈는 개별 프로젝트의 평가지표를 통해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원조프로젝트에 공통지표를 적용해 보면 원조체계, 즉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이슈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를 사용하면 관련 이슈의 주요 사안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OECD/DAC 국가 분석

1. OECD/DAC 국가 전체 분석

우리는 각 회원국별로 OECD/DAC의 가장 최근 동료심사 자료를 검토・분석함으로써 각 회원국들이 어떠한 원조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원조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OECD/DAC 동료심사 자료 분석은 공여국이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원조 정책이나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원조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OECD/DAC의 주요 원조 이슈, 즉,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거버넌스, 원조의 효과성 등에 대한 회원국의 적용 방안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OECD/DAC 회원국 전체에 대한 동료심사 분석 결과 회원국들은 각 이슈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 및 도구를 적용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OECD/DAC의 권고사

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류화, SWAps, 범정부적 접근법을 적용 메커니즘으로 도입하여 주요 원조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정책 선언이나 보고서를 통해 빈곤 감소, 성 평등, 거버넌스, 분쟁과 평화 등의 이슈를 주요 원조 목표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 동료심사를 살펴보면 OECD/DAC이 파리 선언에 기초한 원조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은 파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Action Plan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국별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 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 OECD/DAC 권고사항 적용 모범 사례국 분석: 네덜란드, 아일랜드

우리는 2009년 5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국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조사 시 실행되었던 인터뷰 조사내용과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례국가들이 OECD/DAC 주요 이슈와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도구와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 행위를 Project Cycle Management(PCM) 단계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류화

OECD/DAC은 빈곤, 환경, 성 평등 등의 주요 원조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류화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두 사례국가들은 이러한 크로스커팅 이슈의 달성을 위해 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주류화 전략은 원조 활동의 모든 단계, 다시 말해 원조 계획, 실행, 평가 전 단계에 걸쳐 도입된다.

OECD/DAC 권고를 지침으로 비교적 최근에 주류화 전략을 도입한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도에 2년 단위의 주류화 전략을 세우고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 목표로 성 평등, 환경 지속성, HIV/AIDS, 건전한 거버넌스 등 4가지의 주요 이슈 분야를 선정하였다. 아일랜드의 주류화 전략은 아일랜드 자국의 Irish Aid Director General과 주요 수원국의 개발협력 책임자(Head)들의 주도 하에 추진된다. 자국 내 Irish Aid Headquarter (HQ)에서는 전체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정책계획부서(Policy Planning Unit)가 성 평등, 환경 지속성, HIV/AIDS, 건전한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4개 이슈의 주류화가 모든 Irish Aid의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한다. 또한 Irish Aid 모든 부서에서 1-2명의 팀원들이 파견되어 주류화 조언 그룹(mainstreaming reference group)을 구성하고, 이들은 주류화와 관련하여 정책

계획부서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그룹은 크로스커팅 이슈의 주류화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고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Irish Aid 직원들은 주류화에 대한 이해 향상뿐 아니라 주류화 전략을 원조 계획, 집행, 평가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2) 원조 효과성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전체 원조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원칙은 원조 효과성을 강조한 2005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과 2008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이다. 원조 활동에 있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공여국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성과지향적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상호 책임성 강화 Mutual Accountability)를 강조한 2005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과 파리 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예측성(Predictability), 조건부 제한 (Conditionality), 비구속화(Untying)원칙을 선언한 2008 아크라 행동계획은 모두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도입한 원칙들이며 OECD/DAC은 이러한 원칙들을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의 주요 근간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모든 원조 활동 단계에 수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본부와 대사관에 파리 선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프로그램과 실행도구를 마련하였다. 네덜란드는 우선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원조조화본부(harmonization desk)와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 (DEK)와 같은 특별 기구를 외무부 내에 설립하였다. 2002년 재정경제부 내에 조직된 원조조화 본부는 2003년 로마 선언과 2005년 파리 선언 내용을 네덜란드 원조에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에서 원조조화 어젠다와 관련된 여러 국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원조 효과성 촉진 및 권고 제공을 위해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DGIS)에 조직된 DEK는 파리 선언을 네덜란드 개발협력에 도입,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EK는 리포팅과 모니터링 부서(DEK Reporting and Monitoring Division, RM), 정책 분석과 권고부서(DEK Policy Analysis and Advice Division, BA), 원조방식과 도구개발 부서(DEK Aid Modalities and Instrument Development Division, HI)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부서는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및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통합된 개발협력 관련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 또한 크로스커팅 이슈와 cross-country 이슈

에 관한 정책 실행 도구 개발 및 제공, 수원국 주재 대사관 지원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집행, 트랙 레코드와 다년간(Multi-Annual) 전략계획 및 평가를 담당한다.

(3) 원조 목표와 정책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모두 빈곤 감소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조 목표로 천명하고 있으며 UN MDGs를 원조목표설정의 주요 논리와 근거로 도입하고 있다. 분명하고 실천적인 원조목표의 설정은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강조하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원국 선정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공여국은 빈곤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정치적 의지,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빈곤 감소라는 원조목표의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가장 중요한 수원국 선정 기준으로 빈곤의 정도와 빈곤상태의 지속성을 고려한다. 사례국들은 주요 수원국 선정 시, 심각한 빈곤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국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역사적 관계, 수원국의 거버넌스 상태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수원국을 선정한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원조활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선진적인 원조활동이 국제적 무대에서 자국의 힘과 위치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네덜란드의 3D 정책(Development, Diplomacy, and Defense), 즉 개발과 외교, 국방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두 국가 모두 원조를 담당하는 조직 (네덜란드의 개발협력부와 아일랜드의 Irish Aid)를 외교부 내에 두는 이유 또한 원조가 외교 및 안보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정책적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위기로 원조의 양을 감축한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여전히 빈곤 감소가 원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원조가 아일랜드 외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OECD/DAC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 일관성 향상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일관적인 원조집행을 용이하게 해 주고 정부 부처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조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원조에 대한 부처 간 갈등이 미미하며, 외무부 내 원조담당부서와 다른 기관들의 관계도 매우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개발협력부, 아일랜드는 Irish Aid가 갖고 있으며 두 조직 모두 외교부 내에 있다.

OECD/DAC의 권고에 따라 정책 일관성 향상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네덜란드는 정책일관성부서(Policy Coherence Unit: PCU), 아일랜드는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IDCD)라는 조정기구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일관성부서는 관련 이슈에 있어서 각기 다른 부서들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EU 회의에서 네덜란드가 주요 공여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PCU는 또한 네덜란드 외무부가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일랜드의 IDCD는 2007년에 만들어진 정부 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해외개발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Irish Aid와 외무부 내의 간부급 관료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14개 정부 부서에서 1-2명의 간부급 관료들도 IDCD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IDCD는 수원국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 일관성 향상을 위해 자문과 권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원조계획 수립

OECD/DAC은 원조계획 단계에서 수원국 역량강화, 수원국 자원 활용, 예산의 효과적 분배, 프로젝트 별 구체적 목표 수립, 분야별 원조계획 및 집행,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한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수원국 주재 대사관이 각 수원국에 대한 원조 계획, 집행, 평가에 걸친 전반적인 원조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두 사례국가를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가 아일랜드보다 원조활동에 관한 대사관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본국의 Irish Aid와 정부가 수원국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네덜란드는 수원국 주재 대사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원조 계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원조 계획은 이전의 원조 프로그램 수행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된다. 각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개별 수원국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진단에 기반하여 국별 프로그램 (네덜란드는 4년, 아일랜드는 5년)을 기안한다. 각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는 일반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직 공무원 뿐 아니라 본국에서 파견된 개발협력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전문가들이 해당 수원국의 국별프로그램 기안을 주도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수원국 현실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별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인 출신 개발협력전문가들을 아일랜드 대사관의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5) 원조 집행

수원 대상국에 대한 원조 계획이 수립되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본국의 개발협력부와 Irish Aid를 통해 원조가 제공된다. 원조집행단계에서 두 국가모두 수원국 내 역량강화, 원조 조화, 수원국과 협의 등의 OECD/DAC 권고사항을 주요 지침으로 수용하고 있다. 두 사례국 모두 원조 집행은 각 수원국 내의 대사관들이 주도한다. 본국의 본부(네덜란드의 개발협력부와 아일랜드의 Irish Aid)는 주로 대사관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며 각 본부에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원조집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원국 주재 대사관은 본국의 국별 프로그램 담당 부서를 통해 본부와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다.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Irish Aid의 경우 수원국 주재 대사관과 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은 불과 1-2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수원국 원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수원국 주재 대사관의 개발협력 담당관은 본부의 국가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즉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당 본부 국가프로그램 담당자는 개발협력부 장관(Head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포함, Irish Aid 본부 내의 모든 관련 담당부서들과의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린 후, 해당 대사관에 통보한다. Irish Aid 직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조직의 유연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원조집행을 위해 본부에 국가팀(country team)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가팀은 재정경제부와 DEK를 포함한 부서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수원국의 대사관을 방문한다.

(6) 원조 평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두 사례국은 OECD/DAC이 평가단계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원국 주도와 단계별 평가 메커니즘, 그리고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영향력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원조평가의 주요 지향점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원조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며 향후 원조 정책과 계획에 반영된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두 사례국 모두 전문 컨설턴트를 평가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수원국도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원칙적으로 분산평가시스템(disintegrated evaluation system)을 지향하고 있다. 분산평가시스템이란 중요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본국의 담당 부처에서 수행하지만 그 외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수원국 주재 대사관내 원조집행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원조 평가는 개발협력 정책을 포함한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영향력과 실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정책 및 활동 평가 부서(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에서 ODA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외교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네덜란드는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부서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분리함으로써 IOB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보고서(Evaluation Report)와 결과 반영 보고서(Reaction Report)로 작성되며 이 보고서들은 매년 국회 외교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연관성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평가결과는 대중에 공개되며 공개에 앞서 ODA의 의미가 손상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두어 순화작업을 거친다. 아일랜드의 경우 Irish Aid 내의 평가담당 부서가 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평가담당 부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 원조 평가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V.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을 위한 KOICA의 현황과 당면과제

본 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ODA를 PCM 단계로 나누어 보고 각 단계별 한국의 ODA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원조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무상원조의 집행기관인 KOICA의 임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전체의 원조 틀 안에서 한국 원조의 선진화를 위한 KOICA의 역할과 Action Plan을 제시하고자 한다.

1. KOICA 직원 웹 서베이 결과

2009년 6월 30일-7월 6일까지 해외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KOICA 190여명의 임직원 중 총 72명이 참여한 웹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KOICA 직원들은 대체로 한국의 OECD/DAC 가입을 앞두고 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KOICA에 적용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고과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반영하는 등 조직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에 대하여 직원들은 KOICA 내부 강사진에 의한 직무 연계가 높은

교육 및 해외 선진공여 기관의 방문 탐방 교육과 연수 등으로 구성하여 선진적인 원조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원진 심층면접 결과

KOICA 임원진에 대한 심층면접은 2009년 7월 7일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은 연구대표가 각 1인의 임원에 대하여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질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KOICA 임원진 대부분이 OECD/DAC 가입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원조 모델로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무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피력된 반면, OECD/DAC 가입 후 한국원조체제에 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실시될 OECD/DAC 동료심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에 따른 KOICA의 개편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현재 한국 ODA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원들은 외교부와 KOICA 간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OECD/DAC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공통된 의견 또는 문제의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KOICA임원진의 문제라기보다는 KOICA와 외교통상부, 더 나아가 한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ODA 정책에 대한 통일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진을 비롯하여 KOICA 전 직원들은 선진 공여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KOICA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KOICA 임원진들은 특히 KOICA 이외에 한국 내의 ODA 전문가 및 정부 관련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여론형성자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3. 직원 집단좌담회 결과

실 · 부장급 중간관리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은 2009년 6월 30일 – 7월 1일 양일간, 직원 집단 좌담회는 6월 30일 – 7월 2일 (3일간) 진행되었다. 좌담회 참가자 그룹은 직급과 업무내용 (소속 부서)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2명에서 6명까지 그룹마다 다양한 참가인

원으로 구성되었다.

좌담회 참가자 대부분이 OECD/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그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하여 부서차원에서 뚜렷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OECD/DAC 각 이슈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KOICA의 개선사항으로 많은 KOICA 직원들이 DAC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OECD/DAC 권고사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으나 DAC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의 도입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국 원조 시스템이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KOICA 전체의 조직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현재의 top-down 방식의 위계적 구조 하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중요 이슈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독립된 권한을 갖는 평가시스템과 OECD/DAC 권고사항 등을 전담해서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KOICA 조직 내 독립 기구의 설치를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KOICA 직원들은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및 지침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원진 이상의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KOICA 직원들은 임원진들이 선진 공여기관의 원조 시스템에 대해 숙지하고 그 변화과정들을 파악함으로써 KOICA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은 대외적으로 KOICA와 외교통상부 간의 역할분담 사항을 공론화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임원진에게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KOICA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율과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현재 KOICA 교육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KOICA 직원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참여율의 이유로 중간관리자의 이해부족, 업무 우선, 시간적 제약, 필요성을 못 느낌 등을 꼽았다. 또한 좌담회에서 직원들은 KOICA내 교육의 활성화와 선진원조기관 실무자들의 강연이나 교육 등이 한국의 외부전문가 특강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는 웹 서베이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였다.

Summary

I.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ole and nee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re growing important.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s Korea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which matches its economic volume and capacity,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February 2009, to meet these expectations and to enhance Korea's status,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applied to jo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ECD/DAC). At this point, now that Korea has become the newest member of the OECD/DAC, a road map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aid system and strategy is emphasized. In this research paper, we are going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and through case studies, offer the rationale behind the advancement of Korea's aid and what such a policy implies.

In this research paper,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as the main thesis: (1) Analyzing OECD/DAC recommendations and evaluation standards by complete enumeration, (2) Deriving an exemplary model of the OECD/DAC from the analysis above, (3) Analyzing OECD/DAC member countries' activities through peer reviews, (4) Analyzing a diagnosis of the current Korean ODA system and expedition research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KOICA's) preparation for OECD/DAC entry, and (5) Proposing short-ter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KOICA in order to be a leading assistance agenc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under the guidelines of the OECD/DAC.

II. Analysis of OECD/DAC Guidelines and Evaluation Standards

The OECD/DAC, unlike the World Bank or the United Nations (UN), does not offer direct development assistance, but provides guidelines for promoting the efficiency of aid operations by providing statistics, data gathering, aid analysis, information, experience and sharing of examples performed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each donor country.

The OECD/DAC mainly handles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poverty, gender, environment, peace and conflict (fragile states), trade, aid effectiveness, quality of aid and governance as main issues of aid, and presents doctrines and methods of approach it pursues by providing guidelines, manuals, reports and publications. In addition, through regular DAC peer reviews, its members work together to assess each other's aid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OECD/DAC guidelines and examined guidelines for each issue. The following includes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issue.

(1)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First of all, the MDGs suggest a new wa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provide the rationale behi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s. Therefore, OECD/DAC members' combined efforts to achieve the MDGs are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countries, which are an example of extending the roles of donor countries and raising their status. The MDGs provide specific goals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s, as well as recommend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by sharing policy experiences, information on capacity development and analyses on approaching methods for each institution between policy enforcers.

(2) Poverty Reduction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world, solving poverty, requires global

cooperation because its causes are very diverse and complicated. Since it is difficult to reduce poverty in a short period of time, long-term and enduring policies are needed, but most important, not only the speed of growth but also the method of growth should be considered.

The OECD/DAC adopted "pro-poor growth," which promotes both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as its core guidelines for poverty reduction. Pro-poor growth is a newly emerging term which recognizes the link between development and poverty and equally covers both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hus, it is a term for improving overall social inequality (to ensure fair benefits among the poor) and pursuing balance between development speed and quality.

The OECD/DAC emphasizes economic growth as a main measure for poverty reduction, as well as pro-poor growth, especially a market economic approach, which means market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stimulating the private economy. The OECD/DAC also strives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lead the poor to participate in poverty reduction and to build the capacity of the recipient. In particular, the OECD/DAC emphasizes making a policy for the poor and to help the poor to build capacity, and to make sure that the poor receive equal benefits.

(3) Gender

At the Second High-Level Forum held in Paris, the OECD/DAC emphasized that gender inequality decreases aid effectiveness and hinders development, and that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are important for achieving the MDGs. Moreover, in 2008, at the Third High-Level Forum in Accra, it stated that gender equality continuously impacts on the lives and potential of poor women, men and children, and it is vital that all our policies regarding gender equality b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formulated. For this, the OECD/DAC established GENDERNET to help its member countries integrate gender equality

into development policy and execution, which brings together gender equality experts from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to define common approaches, share good practices, information and ideas.

The OECD/DAC recommends its members to set gender equality as a development objective and relate it with other aid objectives. Moreover, it emphasizes gender mainstreaming as the key strategy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also suggests participating in building capacity and improving the system in recipient countri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addition, the OECD/DAC recommends taking gender equality, along with education, into account in all aspec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systematic base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e OECD/DAC also suggests adopting sector-wide approaches (SWAps) when aiding recipient countries in gender issues. Conducting a gender budgeting analysis and establishing a legal system which enables men and women to claim equal rights throughout the recipient society is especially emphasized. To strengthen women's rights, not only economic rights, but also women's sociopolitical rights such as providing an environment for broader education and guaranteeing political activity must be performed.

(4) Environmen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wo world wars, destroyed th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ives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approach of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environmental problems is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means th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at said, the OECD/DAC established the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ENVIRONET) and also suggested specific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follows.

First, the OECD/DAC suggested apply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s) as specific method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n EIA, a donor country can assess the possible impact that a proposed project may have on the environment. However, EIAs are less easily applied to broader country-level policies and plans. Thus, in the 2000s, SEAs, which are reformed EIAs, have been used instead ever since. SEAs aim to integrate issues which should be environmentally considered into policies, plans, and programs, helping governmental institutions promot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by concentrating in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Second, the OECD/DAC recommends carrying out consistent policies among donor countries and adopting SWAps and win-win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 to donor countries. According to the OECD/DAC, when donor countries deliver aid, they should consider not only short-term development but also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long term. Moreover, donor countries should adopt win-win strategies which bring positive results to both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s in priority sectors such as agriculture, energy and forestry.

Third, because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the combined resul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the OECD/DAC recommends donor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mainstream policy.

Fourth, the OECD/DAC recommend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as well as country-level establishment of global companionship.

Fifth, the OECD/DAC suggests that donor countries cooperate in finding out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in recipient countries, most of which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o support establishing a country-level program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5) Conflict and Peace

Violent conflict destroys the foundations for 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health, soci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widely spreads diseases and threatens regional or international security. That is, violent conflict hinders the achievement of the MDGs. The fragile states refer to countries that have no willingness or capability to offer basic public services, as well as social problems such as weak governance, limite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constant poverty, inhumanity, lasting social conflicts, violence, civil war, etc. and have received attention especially since the 9/11 attacks. Most important, it is known that the fragility of those countries reduces aid effectiveness and increases the costs of development, making not only the execution of recipient countries' policies but also the provision of donor countries' aid more difficult. Thus, in 2007, the OECD/DAC made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fragile states: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also provided the following guidelines on the issue.

First, donor countries should recognize the link between politics, security and development objectives, and set preventing conflict as a priority of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 donor countries should introduce a conflict prevention mechanism to ensure long-term structural stability, polic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to make policies coherent and comprehensive, and also coordinate aid policies with other development agencies. In particular, when aiding fragile states, donor countries should consider the countries' priorities and deliver quick, consistent and long-term aid.

Third, for building peace in the fragile states, the OECD/DAC recommends donor countries to bear in mind the need for flexible approaches in different phases of conflict: before conflict flares, in open conflict, in fragile transitional situations and the aftermath. In every phase, donor countries should adopt

different approaches to keep peace in the recipient countries.

Above all, the OECD/DAC emphasizes the linkage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because the purpose of aiding fragile states is to establish peace in the region, as well as build the country, and especially suggests supporting increasing aid effectiveness and helping security system reform in the fragile states. Also, the OECD/DAC recommends donor countries to help raise the recipient countries'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to sustain support for building capacity, even in the case of fragile states.

(6) Trade

In an open economy with a trade-oriented strategy, the rate of poverty reduction and industrial growth is more rapid than in a closed econom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recognized the linkage between development and trade, and has been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an open economy on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aid effectiveness. Therefore, the OECD cooperates with the WTO in developing the field of trade and development assistance, and also includes "aid for trade" in the main objective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 OECD/DAC provides the guidelines on trade as follows.

First, the OECD/DAC emphasizes cooperation among donor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donor countries and the recipient countries, consistency of the recipient countries' development strategies, and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and civil society.

Second, the OECD/DAC suggests that both donor countries and their recipients participate in monitoring and assessment for improving joint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olicy outcomes.

Third, the OECD/DAC recommends donor countries to help recipient countries

in flexing capabilities to make and conduct trade strategy.

(7) Effectiveness

As the volume of aid increased, it became apparent that the effectiveness of aid differed among the recipient countries.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emphasize improv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in 2005, 22 donor countries and 57 recipient countries agreed on the Paris Declaration to continue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and to achieve the MDG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aid, the OECD/DAC emphasizes harmonization, alignment,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The detailed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ECD/DAC published guidelines entitle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That is, because the different interests among donor countries could reduce aid effectiveness, the OECD/DAC suggests strengthening the mechanism for harmonization of the policies among development agencies and harmonizing development assistance.

Second, the OECD/DAC recommends donor countries to increase the recipient countries' responsibility and mutual accountability through effective and coherent partnerships, as well as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sustainability through consistent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assistance.

Third, the OECD/DAC suggests supporting the capacity buildup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 areas such as finance management, and cooperating with the recipient countries to reflect the aid in budgeting and planning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8) Quality of Aid

In 1972, the OECD/DAC classified the different types of aid into untied aid, partially untied aid and tied aid in accordance with procurement. Tied aid means

that the recipient country must procure goods and services produced from the donor country or a select few countries, which also restricts the recipient country to making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 deals with corporations from the donor countries only. In contrast with tied aid, untied aid is defined as loans or grants which are freely and fully available to finance procurement from all countries.

As concerns about the tied aid's distor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burdens have increa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untie aid and improve the quality of ai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aid, the OECD/DAC strongly recommends untying aid and also monitoring the aid for seeing the validity,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 of aid at the OECD/DAC level.

(9) Governance

As in 1989, the World Bank stated that one of the causes of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as "failed governance" building, and "good governance" emerged as one of the ways to reduce poverty. After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id attention to the co-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refore, awareness on the linkage between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has been raised even more. There is no agreed international definition of governance, but in general, governance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and the society in econom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term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finition of governance includes public administration systems, systems needed for the market to operate appropriately, and methods of exercising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For building good governance, the OECD/DAC emphasizes development assistance aiming at the overall social chang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s basic objective. The OECD/DAC recommendations on such matters are as follows.

The OECD/DAC recommends "participatory development," which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ment. For participatory development, donor countries should support flexing the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by considering each country's situation at a multidimensional level.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articipatory development, the OECD/DAC emphasizes strengthening and supporting the strategic role of civil society.

The approaches of good governance are classified into economic approach and political approach. The OECD/DAC recommends market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in resource management,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nd attracting investment and deregulation of the market economy as an economic approach. In politics, good governance includes human development, constitutionalism,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promoting human rights and freedom is crucial in a political approach in good governance. Therefore, assuring human rights,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is an essential element itself in development. Consequently, good governance is a vital tool for poverty reduction, as it enables socioeconomic growth. As a political approach, the OECD/DAC emphasizes the linkage between development and governance, and recommends preventing corruption and establishing constitutionalism through establishing legal environments and enhancing legal systems.

Lastly, the OECD/DAC recommends making a strategic approach and a long-term framework for building good governance within the recipient country, and strengthening policy adjustment and ensure consistency by taking the situ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into account.

III. OECD/DAC Aid Model

1. Aid Models of the OECD/DAC

In this paper,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we are going to divide the issues dealt in the OECD/DAC into two categories: the purpose of aid, and the system of aid. The purpose of aid refers to the ultimate goal of development

assistance, that is, the reason donor nations give aid in the first place. The system of aid system refers to donor countries' capacity and infrastructure which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aid's purpose. Among the above-mentioned issues, poverty reduction, gender, environment, peace and conflict, trade and governance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purpose of aid, while aid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aid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system of aid. Additionally, the MDGs could serve as a rationale behind the direction of the purpose of aid by the OECD/DAC.

The OECD/DAC aid model can be defined as an aid model that harmonizes the purpose and the system. In other words, an aid model desired by the OECD/DAC would try to achieve the purposes of aid, such as poverty reduction, alleviation of gender and environmental problems, peace and conflicts, governance, etc. as well as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aid itself.

Based on th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OECD/DAC, we made indicators on each issue. Using the indicators, we evaluated, reviewed, and analyzed the member countries' aid projects. We concluded that the Dutch model of aid was the closest aid model to that recommended by the OECD/DAC. We have also selected Ireland, whose aid volume is similar to Korea and which follows OECD/DAC recommendations.

2. OECD/DAC Aid Model Indicators

In this section, we divided OECD/DAC aid model indicators into common and individual indicators to better understand OECD/DAC recommendations. Also, we have developed these indicators to use them in assessing ODA projects of a specific donor country. In other words, by using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ection, one could assess how close a specific donor's aid activity is to the OECD/DAC's ideal aid model. We categorized aid effectiveness, aid quality, gender, environment, pro-poor growth, and the MDGs as common indicators. These common indicators could be used for all kinds of projects regardless of their sectoral focus.

We also developed individual indicators to assess whether a particular aid project follows DAC recommendations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For issues including poverty reduction, gender, environment, peace and conflict, trade, and governance, we have developed individual indicators. By applying common indicators to a specific aid project, one could assess the aid system (aid effectiveness and aid quality). Also, by applying individual indicators, one could identify major DAC recommendations of a particular aid issue and make sure that the specific aid project follows DAC recommendations.

IV. Analysis of OECD/DAC Members

1. Analysis of Aid Activity of OECD/DAC Members

In this section, we have examined the main goals and specific action plans, and tools adopted by OECD/DAC members to achieve these goa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most recent OECD/DAC peer reviews. Also, we have investigated what kinds of efforts have been made by DAC members to improve their aid system. We believe that DAC peer reviews provide more objective data in analyzing aid activities of DAC members as they exclude such promises made by donors but have not actually been realized. In particular, we focused on how each member applied OECD/DAC major aid issues including poverty reduction, environment, peace and conflict, governance, and aid effectiveness in their aid activity.

OECD/DAC members have adopted various policies, mechanisms, and tools to achieve DAC recommendations. In response to DAC recommendations, a number of DAC members have used mainstreaming, SWAps, and whole-of-government approaches as major mechanisms. Also, through various policy papers and announcements, DAC members made it clear that poverty reduction, gender equality, governance, peace and conflict are their major goals of ODA. In addition, following the OECD/DAC's emphasis on improving aid effectiveness based on the Paris Declaration, many DAC members have developed (or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ecific action plans to adopt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2. Case Study: The Netherlands and Ireland

In May 2009, we visited the Netherlands and Ireland and researched what mechanisms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in order to follow OECD/DAC recommendations, based on interviews and data we collected during the field trip. The analysis of each step of the project cycle management (PCM) of the Dutch and Irish aid models are as follows:

(1) Mainstreaming

The OECD/DAC recommends its members to adopt mainstreaming policies on poverty, environment and gender. The Netherlands and Ireland have adopted and aggressively implemented such strateg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cross-cutting issues. The mainstreaming strategy is phased in every stage of aid from planning to evaluation.

Recently, by accepting the OECD/DAC recommendations, Ireland adopted the mainstreaming strategy. In 2007, Ireland established a two-year term mainstreaming strategy and affirmed Ireland's priorities in development: gender equa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HIV/AIDS and good governance. The Irish Aid Director General and heads of field offices in the recipient nations lead the mainstreaming strategy. The Policy Planning Unit in the Irish Aid Headquarters is in charge of mainstreaming the above-mentioned four priorities in Irish Aid. In addition, all sub-divisions of Irish Aid sends one or two members of their teams to organize a mainstreaming reference group, which advises and trains the Policy Planning Unit on mainstreaming issues. This group also hires external experts and consultants to train the members of the Irish Aid Headquarter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mainstream issues. Through these training programs, the staff of Irish Aid can understand the mainstreaming strategy and also acquire techniques to incorporate the mainstreaming strategy into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on.

(2) Aid Effectiveness

The Paris Declaration (2005)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AAA) (2008) support the Irish and the Dutch aid models. The Paris Declaration emphasized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while the AAA was drawn up in 2008 to strengthen the Paris Declaration by building commitments. The AAA suggests the principles, such as predictability, conditionality and untied aid, to accelerate the Paris Declaration. The OECD/DAC adopted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AA on aid effectiveness in the OECD/DAC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which Ireland and the Netherlands plan to fully implement.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de programs and implementing tools to implement the Paris Declaration both at headquarters and embass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For aid effectiveness, the Netherlands established the Harmonization Desk and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 (DEK) in i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02, the Harmonization Desk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lays a role in adopting th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AA into real-time policies of the Dutch Government, as well as taking part in aid harmonization in the EU. The DEK of the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GIS) plays a crucial role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into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The DEK Reporting and Monitoring Division (RM), DEK Policy Analysis and Advice Division (BA) and DEK Aid Modalities and Instrument Development Division (HI) constitute DEK. The DEK has a broad mandate to oversee effectiveness and quality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llects and records data,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develops and maintains instruments for implementing policy on cross-cutting and cross-country issues. It also trains staff, supports embassies in the partner countries, makes policy implementing tools and evaluates track records and multi-annual strategies.

(3) Aim and Policy

The Netherlands and Ireland affirm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as an important aim of their development policy, and also use the MDGs to set clear and practical goals. This helps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which was emphasized in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AA. When selecting the recipient countries, donors including the Netherlands and Ireland consider the degree of poverty, governance, political will and capacity. For achieving poverty reduction, the Netherlands and Ireland consider the degree of poverty and sustainability of poverty when they select partner countries. Moreover, two countries prioritize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suffering from poverty for a long time as recipient countries, and also consider the historical relationship and governanc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ch and Irish aid models is that both are strongly supported by political leadership. The Netherlands and Ireland believe that development assistance helps raise their power an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therlands' 3D policy, which incorporates development with diplomacy and defense can be an example. Moreover, development agencies of the Netherlands and Ireland belo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spectively. Although Ireland has reduced its aid volume due to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poverty reduction is still an important aim of aid policy with the notion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diplomacy.

To improve policy coherence, the Netherlands and Ireland have organizations which minimize conflicts among ministries and consistently deliver aid. The foreign aid-related divisions of the government show very little or no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show cooperative atmospheres among themselves. In the Netherland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DGIS is the organizational heart of Dutch foreign aid. In Ireland,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rish Aid is in charg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ccording to OECD/DAC recommendations, the Netherlands established the Policy Coherence Unit (PCU) and Ireland established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IDCD). The PCU provides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enabl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work pro-actively and intensively on coherence. The IDCD was established in 2007, it is consultative and advisory, and is chaired by the Minister of State for Overseas Development. It is composed of senior officials from Irish Aid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as senior officials from 14 other divisions of the government.

The IDCD's role includes consultations and suggestions that aim to improve policy coherence of foreign-aid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government.

(4) Planning

The OECD/DAC recommends its members to support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recipient countries, by making use of resourc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efficiently allocating budgets, making specific targets per project, and planning/implementing/evaluating aid models by categorizing them by field type. In the Netherlands and Ireland, embass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play a leading role in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on, while the Netherlands grants more autonomy to embassies than Ireland does. In the case of Ireland, Irish Aid and the Irish government take part in planning foreign aid to the recipient countries from the start. On the other hand, in the Netherlands, embassies, which have autonomy and independence, plan and implement development projects by themselves.

Reflecting the results of former programs, development agencies plan aid program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situations of the recipient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plan country programs (Netherlands – four-year term, Ireland – six-year term). In embassies,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play a leading role in planning country programs. In the case of Ireland, to reflect recipients' needs into the program, the Irish embassies hire experts from the recipient countries as regular staff.

(5) Delivery

After making plans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recipient countries, aid is delivered to the recipient countries through the DGIS and Irish Aid, respectively. At the stage of implementation, both countries adopt OECD/DAC recommendations on capacity building, coordination and policy dialogue with their partner countries. The embassies are in charge of aid delivery. The DGIS and Irish Aid headquarters help in providing political and technical support needed by the embassies. The headquarters also have established separate departments for country programs to help deal with any problem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aid delivery. In the case of Irish Aid, if any problems occur during the process of aid delivery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problems are directly reported to the person in charge in Irish Aid. The notified person would then discuss the problem with all related divisions within the Irish Aid, including the Hea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otify the decision to the embassy. The tight but flexible network among the staff of Irish Aid facilitates fast decision-making processes. Also, the Netherlands has established the Country Team in its headquarters for effective and consistent aid delivery. The Country Team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foreign aid-related government divis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and DEK, and they regularly visit the embass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6) Evaluation

The Netherlands and Ireland adopt OECD/DAC recommendations on evaluations which suggest the following elements be included: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evaluation mechanism by stage, effectiveness, efficiency, sustainability and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re released to the public and are also reflected in future aid policies and planning.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and professional evaluation system, the Netherlands and Ireland have allocated professional consultants in the evaluation process while trying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 the process as

well. In principle, two countries aim at a disintegrated evaluation system which means that while the evaluations on the important development programs are conducted by headquarters, small projects are evaluated by the implementing agencies in the embassies in recipient countries.

In the Netherlands, aid evaluations focusing on broad policy and cross-cutting themes are generally undertaken by the central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 To ensure transparency, the IOB is an independent "Inspection Unit", which tak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evaluating foreign affairs as well as foreign aid. Evaluation reports and reaction reports are produced as the result of evaluations every year. These reports are then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for review based on effectiveness,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The results of the committee's review are released to the public but the coordination organization refines the results to prevent spreading negative effects on ODA to the public. In Ireland, within Irish Aid, the evaluation department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evaluation process. However, the evaluation department is small, and thus aid evaluation is usually conducted by outside experts.

IV. Current Status of KOICA and Its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and Evaluation Standards of the OECD/DAC

In this chapter, we have divided the ODA of Korea into several PCM stages and analyzed each stage. In addition,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Korean foreign aid policy based on OECD/DAC guidelines. In order to analyze KOICA's preparedness for the ascension to the OECD/DAC, we have conducted a three-level study of KOICA employees: (1) a web survey with all KOICA employees (2)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mid-level KOICA officials and (3)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op leadership of KOICA. The analysis was conducted at three levels in order to allow for all employees of KOICA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We will provide an Action Plan for KOICA in the context of Korea's foreign aid policies in the future as a member of the OECD/DAC.

1. Survey Results of KOICA Employees

A web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0 to July 6, 2009 with all employees. 72 out of a total of 190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Overseas employees also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key finding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KOICA employees recognized the need to take preparatory steps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ascension to the OECD/DAC, in which Korea's aid activities will be evaluated using the guidelines of the OECD/DAC. The employees expressed the opinion that training sessions should be provided by KOICA, and that attendance at such training sessions should be reflected in individual evaluations for promo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the employees wanted the programs to be conducted by KOICA staff, so that the content would be directly relevant to KOICA's tasks. The employees recommended that KOICA's lecturers (mid- to high-level staff) should be active in visiting and learning about new training programs developed overseas (especially in advanced donors and the OECD/DAC).

2. In-depth Interviews with the KOICA Leadership

In order to allow for senior officials of KOICA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the Principal Investigato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ll available Vice Presidents as well as the President of KOICA. Individual interviews took place in their respective offices for one hour each on July 7, 2009. The interview questions were provided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prior to the interview.

The senior officials were duly aware about the significance of Korea's ascension to the OECD/DAC. Although they were very excited about the prospects of joining the OECD/DAC and were keenly interested in showing how Korea could contribute to the discussions at the OECD/DAC, they were less aware of how Korea should be preparing to conform to OECD/DAC guidelines. Thus, they appeared to be less prepared for OECD/DAC peer reviews that would happen once Korea

joins the OECD/DAC. The senior officials also asserted that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KOIC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in order to improve Korea's aid activities.

In sum,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at there should a clear set of priorities within the OECD/DAC guidelines as they pertain to Korea. The interviews at KOICA affirmed that there are no clear agreed-upon priority areas of Korean ODA among various stakeholders-i.e., MOF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ICA, Korea Eximbank, etc. Thus, this was not just a problem of KOICA, but reflected a problem in the Korean government as a whole. All KOICA employees, regardless of their rank, appeared to support the need to develop KOICA's capacity to communicate with other aid agencies in the world. The senior officials emphasized the role of external expe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various ODA issues.

3.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Mid-Level KOICA Employees

We conducted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mid-level employees from June 30 to July 1, 2009. A collective interview on all the employees was conducted from June 30th to July 2nd. Groups were allocated by level and division of the employees, from groups of two to groups of six.

Many of the mid-level employees did not have a clear opinion on the issues and recommendations discussed in the OECD/DAC. Moreover, they did not seem to understand how their work at KOICA is related to the OECD/DAC guidelines. The employees pointed out that KOICA's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OECD/DAC guidelines was somewhat low. The study showed that while the employees were aware of the need to implement the guidelines of the OECD/DAC, they did not know how. Most of the employees thought that Korea's aid system was not ready to implement the OECD/DAC guidelines, and thus, they saw the need to reform KOICA. They felt that the current top-down hierarchical system restricted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valuation agency or of an independent

agency for handling OECD/DAC-related issues was strongly suggested.

The employees of KOICA felt strongly that the policy and directions of the organization must be firmly established in order to implement the guidelines and evaluation standards of the OECD/DAC into their everyday work. The opinions of the employe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enior officials of KOICA should constantly update their knowledge about aid activities of advanced donors, and introduce new programs and update existing programs and organization of KOICA. Second, the senior officials must help retoo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FAT and KOICA. In particular, they noted that KOICA cannot initiate projects in the field, since new project developmen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MOFAT. They felt that KOICA should be able to initiate new projects. Third, many employees expressed that the current training/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maximize efficiency. Although KOICA provides incentives to employees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these programs show very low participation since mid-level managers do not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such training programs. Some employees complain that their workload is too high, which prevents them from learning and retooling their knowledge and skills. Some employees suggested that KOICA should focus more on providing internal training and lectures by KOICA staff with overseas experience and/or experts from international aid agencies rather than other Korean experts. These opinions were similar to the web survey resul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비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전체의 번영이나 위기가 개별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지구촌에 대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UN은 2000년 'UN 천년개발목표'(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절대 빈곤, 기아, 교육기회의 절대적 부족, 양성 불평등, 높은 유아사망률, 질병, 환경오염 등 지구촌의 개발과제를 2015년까지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다. UN MDGs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개발의 여러 다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세계적 기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창설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내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을 목표로 2009년 2월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그 경제규모와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09%에 불과했는데, 이 수치는 OECD/DAC 권고수준인 0.7%에 비해 매우 미미한 규모이다. 참고로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었을 때 일본은 한국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ODA 규모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양적 규모 측면 뿐 아니라 "원조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아직 부재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정이다.

한국은 최근의 세계적 경제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제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 상위 10위권의 국가로서 ODA의 규모와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후에 원조 수원국으로서 해외로부터 많은 ODA를 받아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함으로써 한국은 ODA 역할 제고에 있어서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이룩하였기에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전수받고 싶다는 제의를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2010년 OECD/DAC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이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하겠다. 2010년 OECD/DAC가입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ODA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원칙 아래, 2012년 GNI 대비 0.15%, UN MDGs 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ODA를 최소한 현 OECD/DAC 평균수준(0.25%)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3)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원조의 전략과 체계 완비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 한국의 2010년 OECD/DAC 가입에 발맞추어 국제적 동향에 맞춘 선진적 원조 전략 및 체계를 시급히 완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OECD/DAC 가입의 대외적인 의미는 이제 한국도 선진적인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할 것이며,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선진적인 원조의 예외적인 규범 적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OECD/DAC 가입 그 자체가 한국 원조의 목표라기보다는, 선진적인 원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로 여겨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OECD/DAC 가입을 위한 준비는 2009년 OECD/DAC 실사단의 방문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2010년 가입 이후 3-4년 주기로 시행될 동료심사(Peer Review)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또한 지금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OECD/DAC 가입을 통해 한국 나름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ODA 체제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서 UN MDGs 달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1) 한국은 선진 공여국들과는 달리 식민통치국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수원국들에게 비교적 순수한 한국의 ODA 원조의 목적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강점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물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인데, 원조 수원국의 경험이 없으며 100-200년 전에 경제발

전을 이룩한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더 실현 가능성 높은 경제・사회발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과거 OECD/DAC과 UN등에서 ODA에 관한 논의가 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국이 OECD/DAC의 회원국이 되면서 공여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입장도 경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로서, Amartya Sen과 같은 학자들이 주창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동의 목표인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주권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안보적 대립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우로서 UN MDGs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책 제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UN MDGs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부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질병・남녀평등 등과 같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적 위기와 전후 복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중요한 모범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서 ODA의 역사가 짧고, ODA의 규모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한국 특유의 강점을 가지고 세계의 ODA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적인 원조를 하기 위하여 OECD/DAC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 ODA의 장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까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원조의 질 (Quality) 또는 주제별 이슈에 대한 내용보다는 원조의 규모(Quantity)와 국가 이익의 부합 여부에 집중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ODA 규모 증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OECD/DAC가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원조의 질에 해당하는 여러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잘 준수하겠다는 암묵적 동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DAC의 권고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OECD/DAC 회원국들이 이를 어떤 형태로 원조체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OECD/DAC 가입을 준비하면서 OECD/DAC의 모든 권고사항을 가입과 동시에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OECD/DAC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발전시키고 수정・보완하여왔던 권고사항들을 한국이 가입과 동시에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선진적인 원조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현황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의 개선과 강화를 유도할 단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선진국 사례분석과 한국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검토 ·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제언과 Action Plan을 바탕으로 KOICA는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어떤 우선순위와 단계별로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에 맞추어 조직의 개혁 및 정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10년도 OECD/DAC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1)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에 대한 전수 분석, (2) OECD/DAC 모든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번역하여 간단한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향후 OECD/DAC 동료심사에 대비하여 일목요연하게 선진적인 원조에 대한 자료 제공, (3)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에 비추어서 가장 선진적인 원조를 하는 모범 사례국 연구, (4) 한국 ODA 체계 진단과 KOICA의 OECD/DAC가입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탐방 조사 분석, (5) 한국의 ODA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Action Plan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상 5가지 방면의 구체적 연구 목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하여, OECD/DAC에서 추구하는 모범적인 ODA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선진 공여국들은 그동안 수십 년의 ODA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떠한 ODA를 가장 선진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OECD/DAC 권고사항 전수에 대한 통일된 간략한 템플릿을 가지고 한글 번역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매년 여러 건의 권고사항 문건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정리하여 한국의 ODA정책 입안가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든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용이하게 공유하도록 하였고, 권고사항의 제목・내용・제안 이슈 등에 대한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재분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각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에 고유의 ID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문에 대한 검색도 용이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는 OECD/DAC 권고사항 전수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한 선진적인 원조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사례 연구를 하였다.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가장 우

수한 ODA 사례국으로서, 또한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원조 규모이면서 정책목표 선정과 집행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문헌 연구와 함께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의 ODA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심층사례연구 국가 분석을 통해 사례국들이 OECD/DAC 권고사항을 실제 ODA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세 번째 연구 단계에서 선정된 두 심층 사례국들이 OECD에서 개발한 Project (Program) Cycle Management(PC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M의 단계에 따라 한국의 ODA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한국의 ODA의 역사가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PCM의 모든 단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보다는, PCM 구현의 첫 단계인 정책 입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OECD/DAC 가입을 앞두고 ODA 규모나 위상 면에서 한국 무상원조의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인 KOICA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KOICA의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OECD/DAC 가입에 대비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 및 분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OECD/DAC 권고사항을 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KOICA가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원조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수립 및 사업실행 시 필요한 조직 변화의 단계를 도출하고 장・단기적 Action Plan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II.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

1. OECD와 공적개발원조

(1) OECD/DAC의 역사[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48년 유럽부흥계획 마샬 플랜(Marshall Plan)의 집행기구였던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OEEC)를 모체로 하며, 1961년 OECD로 개편, 발족한 이래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 최초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 등 20개국이었다. 1964년 일본의 가입을 시작으로 핀란드(1969), 호주(1974), 뉴질랜드(1973)가 뒤를 이었고, 1994년 이후에는 신흥공업국 및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편입 지원을 통해 멕시코(1994), 체코(1995),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가 수는 30개국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촉진을 통해 세계경제발전 및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를 통해 세계무역확대에 공헌할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OECD는 산하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OECD/DAC은 OECD 산하의 26개 위원회 중 하나이다. 1961년에 OEEC 내의 개발원조그룹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이 OECD 조약발효와 함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개편된 이후, OECD/DAC은 원조 효과성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해 오는 동시에 그 규모와 기능을 확대 · 강화해왔다. 또한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의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위원회로 간주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22개의 국가와

1) 이 부분은 OECD 과학기술 정책위원회 웹사이트의 OECD 개요 부분을 참고로 함. (http://www.cstp.or.kr).

EU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OECD/DAC은 OECD 내에서 개발도상국 원조문제에 관한 정책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한다. OECD/DAC은 산하의 통계(WP-STAT), 원조 효율 및 원조관행(WP-EFF), 개발평가 네트워크(EVALUNET), 젠더 네트워크 (GENDERNET), 환경 네트워크(ENVIRONET), 빈곤퇴치 네트워크 (POVNET),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NET), 분쟁 · 평화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CPDC)와 같은 8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위한 실질적 연구와 정책안 마련을 지원한다.

OECD/DAC은 1961년 개편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반에는 양허성 차관의 비구속화에 관한 다자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조사, 공여국의 원조평가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전략, 신 국제 경제 질서와 최빈국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1977년 OECD/DAC 고위급 회담에서는 경제성장과 인간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개발협력 선언(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Meeting Basic Human Needs)을 채택하였고 이후 이를 위한 재원조달 권고사항을 함께 채택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OECD/DAC은 다양한 분야의 자문 그룹을 통해 공여국간 원조조화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으며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OECD/DAC은 시장경제, 민주화, 인권 옹호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러시아와 구소련연방의 신생 독립국가들에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대두된 채무문제 및 통상 개방 · 보호, HIV/AIDS, 환경, 성 평등, 빈곤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1995년에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서의 개발파트너십 선언(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강조하였다. 이어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보고서(Shaping the 21th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를 통해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파트너십, 수원국의 주인의식, 공여국의 원조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이후 UN MDGs의 기초가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 · 11 테러 이

후 빈곤과 테러 문제, 평화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되자 OECD/DAC은 이에 관한 관련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테러방지를 위한 개발협력보고서(A Development Cooperation Lens on Terrorism Prevention)를 발표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2001년에는 최빈국에 대한 ODA의 비구속화 합의를 통해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OECD/DAC은 동료심사를 통해 회원국 간의 정책을 비교, 공유하여 이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국제적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또한, 선언(declaration), 권고사항(guideline), 약정(arrangement)과 같은 비구속적 규범(soft law)과 결정(decis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과 같은 구속적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한다.

OECD/DAC은 UN, 세계은행 등과 달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적 유 · 무상 원조는 제공하지 않지만 다자개발기관과 공여국에 의해 집행된 원조에 관한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정보와 경험 및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2005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은 이러한 OECD 활동의 결정체로 볼 수 있으며 이후 OECD/DAC은 파리 선언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2) UN 천년개발목표(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9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아랍, 아프리카, 유럽연합, 이슬람 등 189개 유엔회원국 정상들은 UN 총회에서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를 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UN 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 보건 증진, 유아와 산모 사망률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UN 천년개발목표(UN MDGs)'라 명명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여국들이 가입해 있는 OECD는 UN MDGs 수립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UN MDGs는 21세기 개발협력 활동 방안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UN MDGs가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빈층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률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1/3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개선하여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초·중·고등교육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 간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여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교육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영유아사망률을 현재의 2/3까지 감소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산모 사망률을 현재의 3/4으로 줄이도록 한다. 여섯째, 환경개선을 통해 질병을 감소시킨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한다. 여덟째, 무역, 재정 구조 등 경제구조 개선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실제로 UN MDGs의 모태는 OECD 회원국들이 일찍이 합의한 '개발협력 실천목표'(Development Cooperation Action Goals)에 근간 하고 있다. OECD/DAC은 1996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의지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OECD의 개발협력 실천목표이다. OECD의 개발협력 실천목표의 발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회원국들은 전 세계 80%의 인구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래는 회원국들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둘째,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주도해온, 이미 산업화된 OECD 회원국들은 지구촌 시민들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이해와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하였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을 통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빈곤 감소, 녹색 혁명, 출산율 감소, 인프라 구축, 질병 퇴치 등을 실제 경험하였으므로 원조를 통한 개발 협력이 한 국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지구촌의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구촌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OECD 회원국들은 개발 협력 사업에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만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OECD 공여국들의 활동과 노력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목표를 선정했다. 1996년 당시 OECD가 선정한 목표에는 1) 경제 안정: 2015년까지 세계 극빈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 2) 사회 발전: 초등 교육, 양성 평등, 영아 사망률 감축, 인구 조절을 위한 대응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존 등과 같은 지구촌 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포괄되어 있었다. 이는 향후 2000년 UN MDGs의 토대가 되었다.

OECD/DAC이 위와 같이 경제 안정, 사회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촌 극빈층의 삶의 질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민간영역의 활발한 활동은 선진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상호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또 다른 새로운 소비 시장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민과 환경, 전쟁 문제와 같은 인간 안보에 있어서의 위협요소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선진국가의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구증가, 수자원 부족, 토양오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해양 생물 감소 등과 같이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자생능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지구촌 이슈에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 인구증가 억제, 핵 확산 금지, 질병 퇴치와 같은 전 지구촌 이슈들의 공동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OECD/DAC이 UN MDGs의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주요 목적은 UN MDGs의 달성이 OECD/DAC 회원국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3)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발원조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존의 원조관행에 대한 자성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제고에 관한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OECD/DAC은 원조효과성 제고와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OECD/DAC은 21세기 개발협력전략보고서(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십 강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 강조, 원조효과의 제고 등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2000년 UN MDGs 달성을 위해 대외개발원조 확대와 함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2002년 UN 개발금융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자금조달의 추진과 OECD/DAC 회원국의 ODA 증액(2015년 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7%로 증액), 공여국간 상호책임성 제고, 파트너십 구축, 정책 일관성 추구, 원조의 비구속화, 원조의 질 향상 등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몬테레이합의(Monterrey Consensus)를 발표하였다. 몬테레이 합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의 '원조효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OECD는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원조효과 고위급 회담'은 OECD와 세계은행이 3년마다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회담이다. 이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는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해야 할 역할과 이행약속을 명시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 지침이 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2003년 1차 로마 고위급 회담에서는 '원조조화에 대한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을, 2005년 2차 파리 고위급 회담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2008년 3차 아크라 고위급 회담에서는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4차 고위급 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회담의 결과는 개발원조에 대한 중요한 국제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1) 제 1차 로마 고위급 회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2년 UN이 개최한 개발금융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레이 합의를 통해 UN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자금조달의 추진과 OECD/DAC 회원국의 ODA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6개 주요 분야 (국내자원 동원, 민간부문 국제투자 증대, ODA 강화, 시장접근성과 자유무역 확대, 채무부담 해결, 국제개발협력의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에도 공정한 대표권 부여)에서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원조의 질 향상, 원조의 비구속화 등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원조의 양적 · 질적 향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인 몬테레이 합의를 기반으로 원조 효과성에 관한 1차 고위급 회담이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1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는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을 발표하였다. 로마 선언은 UN MDGs 및 몬테레이 합의 등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원조조화를 강조한다. 로마 선언은 원조의 거래비용 축소, 공여국간 협력을 통한 원조 공동 집행 등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또한 공여국들이 원조정책과 집행절차를 결정할 때 수원국의 개발전략 운선순위 및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도록 원조정책을 조율할 것 등 원조조화

를 강조했다.

2) 제 2차 파리 고위급 회담

2005년 2월 파리 고위급 회담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다자원조기관, 지역 개발 은행,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조에 관한 기존 합의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파리 선언에서는 5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었고 그 이행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12개 지표가 함께 설정되었다.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은 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 수원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원조집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②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수원국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③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공여국간의 원조낭비를 줄이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여국들 상호 간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공동조사, 개발 공동분석 등을 실시한다.
④ 성과지향적 관리(Managing for Results): 성과 중심의 원조체계를 수립하여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집행한다. 투명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행평가체계를 마련한다.
⑤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개발 결과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 합의된 사항들의 실행여부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한다.

3) 제 3차 아크라 고위급 회담

2008년에 열린 제 3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파리 선언 이행과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실질적 원조효과 개선 및 원조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크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인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춘 ODA 집행, 개발협력의 이행주체로서의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수원국의 인적자원과 제도,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지원 및 원조

예측성 강화 등에 주력한다.

② OECD/DAC 비회원국의 원조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공여국간의 원조 정책의 일관성,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따른 공여국 간의 역할 분담, 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실질적 원조 가치 향상,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마련과 파트너십 구축, 취약 국가를 위한 개발협력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

③ 원조 집행 성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성과 관리 체계와 평가 도구의 개발, 원조 자원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적, 행정적 인센티브 향상 등이 필요하다.

4) 제 4차 서울 고위급 회담

한국은 2009년 3월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원조효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회의에서 2011년 제 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담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 고위급 회담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파리 선언에서 제시된 원조 효과성의 결과가 나오는 2010년 이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고위급 회담은 150여개 국가의 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를 포함하여 2,000여명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한국의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OECD의 주요한 의제인 원조 효과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질에 대한 중요한 이슈 중 특히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NGO들의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국내외 NGO들과도 협력하여 본격적인 회담 준비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동료심사(Peer Review)

OECD/DAC 동료심사는 OECD/DAC의 주요하고 독특한 활동으로 OECD/DAC은 매

4-5년마다 각 회원국의 개발 협력분야에서의 노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동료심사는 회원국의 개별 협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OECD/DAC에서 합의된 목표 및 국내외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상호 학습을 통한 DAC 회원국들의 개별 원조 성과 및 공동 원조 성과 향상, 모범 사례파악 및 원조조화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동료심사를 통해 OECD/DAC은 회원국의 원조기관 및 전반적 활동성과를 평가하며 회원국의 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해 조사한다. OECD/DAC 동료심사는 평가 대상 회원국의 협력 활동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통일된 시스템적 시각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OECD/DAC 모범 사례 연구와 권고사항,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 문헌도 참고로 한다. 국제적 기준 및 OECD/DAC의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이 동료심사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본 보고서와 함께 DAC 동료심사 가이드(DAC Peer Review Content Guide)를 번역하여 첨부자료로 포함하였다. DAC 동료심사 가이드는 OECD/DAC이 2008년에 출판한 것으로 모든 동료심사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동료심사 각 장의 주요 질문을 제공한다. DAC 동료심사 가이드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1〉을 참고하기 바란다.

2.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

OECD/DAC은 UN MDGs, 빈곤,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무역, 원조효과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의 9가지 분야를 원조의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가이드라인(Guideline), 매뉴얼(Manual), 리포트(Report), 그리고 퍼블리케이션(Publication) 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 OECD/DAC이 추구하는 이슈별 원칙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총 9개 이슈 81건의 OECD/DAC 문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정리를 통해 이슈별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표1〉은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서를 문서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각 이슈별 OECD/DAC 문서의 종류로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리포트,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OECD/DAC 주요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매뉴얼은 권고사항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세부 매뉴얼과 평가지표를 제공한다. 리포트와 퍼블리케이션은 주로 주요 개념정의와 역사적 배경 설명 등 권고사항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충자료의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서별

특성을 기반으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에 주안점을 두고 각 이슈별 주제 및 위계구도를 분류하였다. 취약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과 평화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서의 상세 제목은 〈첨부자료 2〉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첨부자료 2〉는 각 문서의 키워드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지는 각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은 〈첨부자료 2〉의 81건의 문서들을 참고로 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표1〉의 모든 OECD/DAC 문서들을 번역, 한글로 요약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각 요약본은 해당 문서에 대한 DB 키워드와 관련 DAC 주제, 관련 DAC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문서는 이와 함께, DAC 권고사항, 주요 개념, 그리고 배경과 역사를 요약 틀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매뉴얼 문서는 주요 권고사항, 기본 개념, 세부 매뉴얼, 보고체계, 평가 및 피드백을 기준으로 문서를 분석, 정리하였다. 리포트와 퍼블리케이션은 주요 연구결과, 주요 정책제언,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분석 틀로 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는 본 보고서와 함께 81건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제출한다. 81건에 대한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제 ODA 원칙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별 OECD/DAC의 권고사항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1>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서 분류

이슈 / 문서	UN MDGs	빈곤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무역	원조 효과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	소계
가이드라인	1	5	1	7	4	1	3	1	3	26
매뉴얼		1	3	3	2		-			9
리포트 & 퍼블리케이션	2	8	6	1	8	4	8	2	7	46
소계	3	14	10	11	14	5	11	3	10	전체 81

* 취약국가는 분쟁과 평화에 포함하였음.

(1) UN 천년개발목표(U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MDGs 달성을 위해 OECD/DAC은 OECD 회원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UN MDGs

의 당위성,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OECD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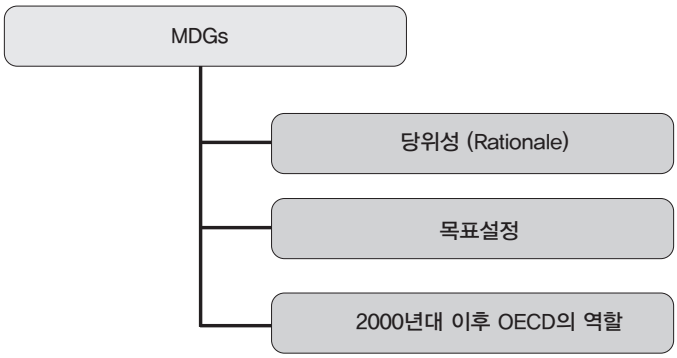
첫째, UN MDGs는 공여국과 수원국가에게 개발협력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OECD/DAC은 UN MDGs 달성을 위한 협력과 노력은 공여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UN MDGs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기준이라 인식하고 있다.

둘째, UN MDGs는 구체적인 개발협력 목표를 제시해준다. 교육 확대, 보건 증진, 질병 퇴치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UN MDGs 달성에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OECD 회원국들과 수원국들의 경제성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성장과 개발, 빈곤 감소를 위한 필수조건인 개발도상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한다.

셋째, UN MDGs는 2000년 이후 OECD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UN MDGs를 달성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ECD/DAC은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주요 공여국들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위해 OECD 국가의 정책 실행자들 간의 OECD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정책 경험 및 역량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접근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한다. 또한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을 통합하고 원조 집행을 감독 및 평가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OECD/DAC은 수원국내 기관과 제도를 사용하는 일관된 원조 수행과 수원국 국가개발정책을 따르는 원조 및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원조제공자 간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수원국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조세 시스템 개혁, 무역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 외 OECD/DAC은 민간 · 공공간의 협력과 빈곤층의 참여를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민간부문의 역량개발 지원을 추구한다. OECD 회원국은 원조의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한 재정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 그림은 UN MDGs에 대한 OECD/DAC 문서 검토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1> UN MDGs



(2) 빈곤 감소

1) 배경 및 역사

빈곤은 현재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로 경제적, 사회 · 문화적, 정치적, 안보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차원의 박탈감을 지칭한다. 이렇듯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빈곤을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선언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빈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 MDGs의 제 1의 목표로 빈곤 감소가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국제개발원조 커뮤니티가 수원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 30년 간 영유아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초등학교 입학률은 배 이상 증가하였고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괄목할만한 결과들은 빈곤이 근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빈곤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DAC은 빈곤 감소와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을 빈곤 감소를 위한 지침의 큰 축으로 삼고 있다. 빈곤 친화적 성장이란 개발과 빈곤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으로 시장주도의 경제발전만을 통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빈곤 친화적 성장은 빈곤층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개선한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발에 있어서 발전 속도와 질의 조화를 추구 한다.

빈곤 감소를 위한 OECD/DAC의 보다 구체적 노력으로는 빈곤의 다양성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경제성장, 빈곤퇴치 간의 관련성 연구, 빈곤 친화적 성장에 관한 여러 지침서와 실제 사례를 교환하는 포럼 개최 등이 있다. OECD/DAC은 또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개발 등에 관한 연구와 빈곤 감소전략의 지원을 위해 OECD/DAC 산하에 빈곤퇴치 네트워크(POVNET)을 두고 있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OECD/DAC은 크게 빈곤 친화적 성장과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를 추구한다. 이에 대한 OECD/DAC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OECD/DAC은 빈곤 감소를 위해 빈곤 친화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공여국의 주요이슈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는 빈곤 감소에 대한 공여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여국은 모든 원조정책과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 빈곤 감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빈곤 친화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비롯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빈곤 문제가 전 부문과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효과적 빈곤 감소를 위해 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농업, 빈곤층 여성문제, 빈곤층에게 더욱 심각한 보건 등의 여러 분야들을 연결하여 접근하는 범분야적 접근 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을 강조한다.

OECD/DAC은 효과적인 빈곤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와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 · 법률 · 제도 등 안정되고 법제화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민간부문 시장의 환경 개

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OECD/DAC은 공여국의 원조 프로젝트 실행에 앞서 사전영향성 평가(Ex-ante Impact Assessment)의 실행을 권고하고 있다. 사전영향성 평가를 통해 수원국의 빈곤 감소 목표,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관계자, 경제적 · 정치적 · 사회문화적 · 안보적 · 인적 역량을 파악하고 원조집행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공여국은 보다 뚜렷하고 효과적인 빈곤 감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빈곤 친화적 성장과 함께 OECD/DAC은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경제적 접근, 즉 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 민간 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OECD/DAC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빈곤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을 통해 수원국 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등 간접적인 빈곤 감소의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성장을 빈곤 감소의 주요 정책으로 함께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기존의 경제 · 사회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세워야하며 민간부문의 개발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 효과성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초하여 민간부문의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수원국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공여국은 수원국 내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며 인적 · 제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수원국 기업이 새로운 투자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 생성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민간부문은 수원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 개발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 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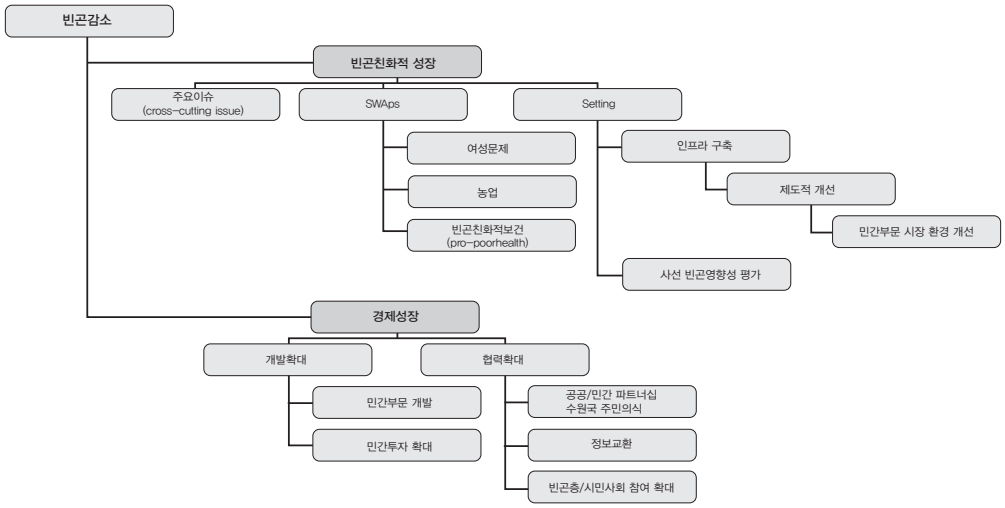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완화하고 규제 또는 개입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OECD/DAC은 민간 · 공공간의 협력과 빈곤층의 참여를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여국은 민영화와 공기업개혁을 지원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수원국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기업의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하며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민간분야의 대화를 시도하고 소외되기 쉬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모두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질적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 국가분석을 통해서 수원국 정부가 빈곤 친화적 성장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해당 수원국의 개발단계, 정책 환경, 국가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OECD/DAC은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여국이 현지 인력의 역량을 개발 및 강화하여, 이들이 직접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 · 조정 ·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빈곤계층의 역량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성장정책을 수립할 때 빈곤층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빈곤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곤층의 토지 · 노동 ·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개발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교육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그림2〉이다.

<그림2> 빈곤 감소



(3) 성 평등

1) 배경 및 역사

성 평등문제는 1950년대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초기의 성 평등문제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는 고정적 여성관에 근거한 보호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점 전통적 신분 및 관습 등에서 오는 불평등의 해소를 목표로 법규 등의 수정보완을 통해 여성을 보호하는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근대로 들어서면서 남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비차별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UN은 1945년 설립된 이래로 UN헌장, 세계 인권선언,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2), 모성보호관련협약(195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등의 ILO관련 협약 및 권고, 교육에서의 차별금지협약(1960),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등 다양한 규약 및 선언을 통하여 성 평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하여 성 평등을 강조하였고 1979년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문제를 개

발 계획 · 수립 및 이행에 통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위한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1975-1985)'을 발표하였다. 이후 1992년 UN 환경회의, 1993년 UN 인권회의, 1994년 UN 인구개발회의, 1995년 UN 사회개발회의 등에서 성 평등은 효과적인 사회 경제 발전의 지표이자 기초로 인식되었다.

OECD/DAC 회원국과 수원국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인간중심적인 개발모델을 바탕으로 한 성 평등 (Gender Equality)과 여성의 권한강화(Empowerment)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관점을 반영하는데 동의하였다. 국제사회는 베이징행동선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하며 인간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의 권력분담과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OECD/DAC은 1996년 '21세기 전략보고서'를 통해 개발협력의 모든 부문에 성 평등을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제공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이후 1998년 '개발협력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권고사항(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하였다.

또한 OECD는 2005년 제 2차 파리 고위급 회담에서 성 불평등 문제가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을 저해하며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08년 제 3차 아크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성 평등이 전 인류의 삶과 빈곤계층의 여성, 남성, 아이들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성 평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조직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OECD/DAC은 젠더 네트워크(GENDERNET)를 통하여 성 평등 전문가, 시민사회,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성 평등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마련하고 경험 · 정보 · 지식의 공유를 모색하고 있다. 젠더 네트워크는 OECD/DAC 회원국이 성 평등을 개발정책 및 집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7년 젠더 네트워크의 회원국은 기존의 OECD/DAC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주류화를 성 평등 달성을 위한 1단계 과제로 선정하였고, 2단계로 특정 국가 또는 집단을 겨냥하여 개입하는 방법인 트윈트랙(Twin Track) 접근법을 채택했다. 또한 OECD/DAC은 '원조 효과성, 성 평등, 여성 권한강화에 대한 권고사항(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을 통해 기존의 권고사항을 보완하였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OECD/DAC의 젠더문제에 관한 지침은 크게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OECD/DAC은 양성 불평등을 성 평등문제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개도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정보나 기회,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예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량이 개발되거나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개발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OECD/DAC은 공여국이 성 평등을 주요 이슈로 인식하고 다른 원조목표와 연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성 주류화를 성 평등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여국이 수원국 내 성 주류화 보장을 위해 수원국의 조직구조 개선과 역량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국 정부의 역량 미비와 원조기관의 제한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성 주류화 달성은 쉽지 않으므로 국제사회는 더욱 효과적인 성 주류화 정책 달성을 위해서 성 평등 및 개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협의구조, 연구, 기획, 관리구조를 구축 · 개선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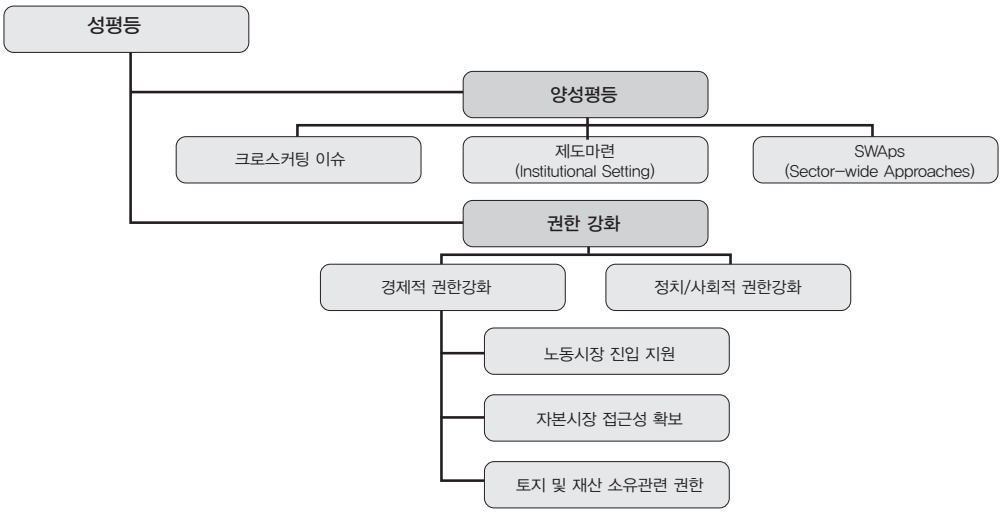
OECD/DAC은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 평등을 모든 개발 활동 및 정책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OECD/DAC이 제안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5 가지이다. 첫째, 성 평등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집행에 대한 투자와 직원 교육, 둘째, 성 평등을 위한 제도 마련, 셋째, 성 평등 자문단의 확충과 이들의 현장 배치 확대, 넷째, 다양한 모니터링과 책임기제 개발, 다섯째, 수원국의 여성조직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에 공여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OECD/DAC은 성 평등문제에 있어서 분야별접근 방식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성 인지 예산 분석의 실시와 수원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남녀 각각의 필요와 이익에 모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자 간의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OECD/DAC은 성 평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권한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권한강화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성에 따른 차별과 기회 결여, 가난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은 개발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해 공여국은 여성의 토지소유권과 재산권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성 평등을 고려한 통치 강화와 성 평등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지원, 투자 및 무역 기회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자립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육제도를 보완하고 소액대출 제도를 확대하며 여성제조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삭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확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지원 등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사항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그림3〉이다.

<그림3> 성 평등



(4) 환경

1) 배경 및 역사

환경은 인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제적 주요 이슈로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적 접근법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량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가되었다. 국제사회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같은 해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류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는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인류의 생존, 복지,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 환경보호가 필요불가결하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주제로 이후 지구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 된 '리우선언'과 그에 대한 실천계획인 '어젠다 21'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OECD/DAC과 같은 국제개발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을 UN MDGs의 7번째 목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인류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개발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전 세계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후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다시 한 번 리우회의에서의 노력 및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천방향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OECD/DAC은 환경관련 조직인 환경네트워크(ENVIRONET)를 설치하였다. 환경 네트워크는 OECD/DAC 산하의 환경관련 조직으로 각국의 개발원조기관의 중견간부들과 UN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기구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NGO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정책 내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세부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전략적 환경평가(SEA)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정하여 공여국 간 경험 공유와 이행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 국제적으로 수립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의 이행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전 지구적인 노력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OECD/DAC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이를 원조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펴고 있다.

OECD/DAC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개발프로젝트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EIA)의 경우 1990년대에 사용이 권장되었으나 특정 개발프로젝트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정책이나 계획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 · 계획 ·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환경평가(SEA)를 권장하고 있다. 전략적 환경평가는 국가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부터 마무리까지 환경문제를 주안점으로 삼고 제도적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국가기관의 개발 정책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새로운 기관이나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관과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환경평가를 통해 국가는 환경을 고려한 정책 · 계획 ·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정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와 지속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과 개발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OECD/DAC이 권고하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은 정책일관성을 가지고 환경과 개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원조 수행 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국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계획수립 프레임웍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여국은 SWAps과 윈윈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면 과제인 빈곤 감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천연자원과 토지의 개발이 필요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호가 개발만큼 중요한 것처럼 사회 · 경제적 우선사항을 해결하는 단기적 목표가 중 · 장기적 환경 목표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결정시, 예측되는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원조 집행 시 단기적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 환경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 개발 우선순위인 농업, 삼림, 에너지 분야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윈윈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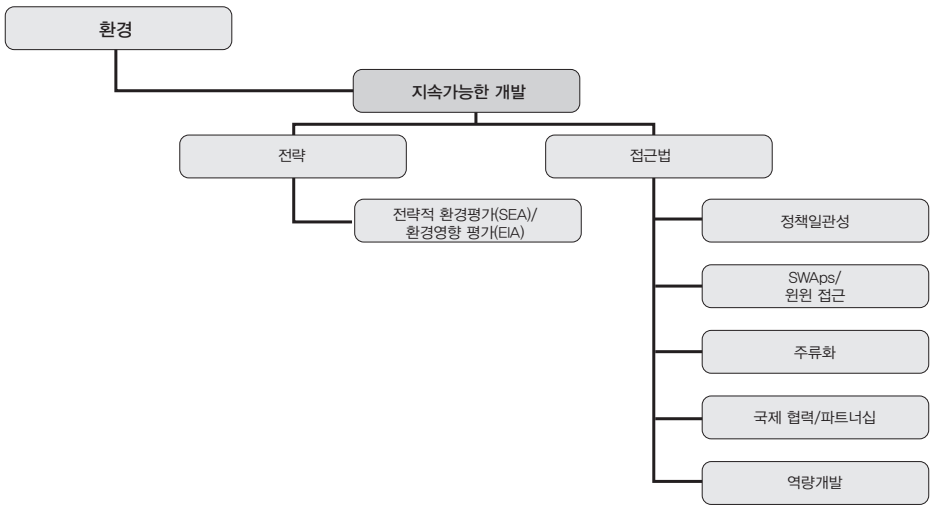
셋째, 공여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주류화에 힘써야 한다. 환경문제는 경제 개발과 세계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원인이 되므로 다양한 환경 위협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아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오존층파괴 등과 같은 주요 환경사안들은 비단 수원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세계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모두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지속하게 해주는 원조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며 UN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국제적 프레임웍에 통합시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데 기후변화 문제를 보자면 대부분의 수원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공여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돕고 수원국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수원국이 국제기후변화 메커니즘아래 시행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환경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원국들을 위해 공식화된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환경보호전략 수립을 도우며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빈곤 감소 전략에 반드시 환경문제가 고려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OECD/DAC 문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음의 〈그림 4〉이다.

<그림4> 환경



(5) 분쟁과 평화

1) 배경 및 역사

WHO 보고서가 폭력분쟁을 성인남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듯이, 실제로 매년 74만 명이 폭력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34개 최빈국 중 20여개 국가가 폭력분쟁에 휘말려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냉전 종식 후, 국제 분쟁의 양상은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내의 갈등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민족, 문화, 종교, 인종, 경제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분쟁은 개발도상국 개발의 토대가 될 교육, 건강, 사회기본서비스 및 사회적 · 인적 자본을 파괴시키며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UN MDGs 달성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내전의 증가는 국내 정치 · 경제 · 문화 등을 파괴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빈곤, 성 평등, 환경 등 다른 주요 이슈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폭력분쟁을 겪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거나 극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쟁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

니라 재산을 파괴하고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를 축소시키며 불평등, 빈곤, 사회 · 정치적 불안정, 거버넌스의 붕괴 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명, 신체의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였다. 특히 1994년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 이후, OECD/DAC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대학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 방지와 평화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여국은 분쟁지역의 평화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 · 외교적 활동이 개도국 내 분쟁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Do No Harm'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폭력 및 테러리즘 방지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분쟁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원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수원국의 취약한 안보시스템 개혁도 지원하고 있다.

2001년 9 · 11 테러를 기점으로 취약국가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취약국가(Fragile States)란 국민들에게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지 또는 역량이 없는 국가로 대부분 취약한 거버넌스, 제한된 행정능력, 만성적 빈곤, 비인도주의, 지속적 사회갈등, 폭력 및 내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다(OECD 2007). 따라서 취약국가(failing or failed states) 또는 저소득 취약국가(LICUS: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라고도 불린다.

전세계인구의 26%, 하루 1달러 미만 수입으로 생활하는 극도 빈곤층의 1/3이 바로 이러한 취약국가에서 살고 있다(ADB 2008). 이들 국가의 폭력 분쟁, 정치 및 사회 불안,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주변국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국가문제는 비단 해당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및 국제안보, UN MDGs 달성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테러리즘과의 연계로 인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관리와 개발 문제는 인도주의적 접근뿐만 아니라 핵 확산 방지, 군비통제, 테러리즘 근절 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국가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 차원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 (임강택 외 2008).

취약국가의 공통적 특징은 취약한 거버넌스로 다른 여러 취약 요인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만성적 빈곤, 정치 · 사회적 불안정, 인권 침해, 미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취약성은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여 수원국 정부의 정

책집행은 물론 공여국의 원조집행 또한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기존의 전통적 원조방식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쳐 취약한 이들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원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보와 개발을 연계한 새로운 원조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 OECD/DAC은 '취약국가와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개입의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여국은 정치, 안보, 개발 목표 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분쟁방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역적 맥락에서 취약국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조는 신속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원조를 수행하고 다른 국제 원조기관 및 원조 행위자들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 한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국가의 안정된 정치와 안보는 장기적 성장과 개발, 빈곤감소를 위해 필수적 전제 요건이 되므로 OECD/DAC은 분쟁에 대하여 크게 평화유지와 안보와 개발로 나누어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OECD/DAC은 평화유지를 위해 폭력분쟁방지와 테러방지 메커니즘 그리고 분쟁상황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첫째, 폭력분쟁방지를 위하여 OECD 회원국은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안보와 개발을 통한 평화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무역, 금융, 투자, 외교, 개발협력 및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폭력분쟁방지 정책을 통합시키고, 분쟁방지렌즈(Conflict Prevention Lens)를 도입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화정착을 위하여 폭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개발협력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둘째, 공여국은 테러방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여국은 테러에 대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유지해야 하며 대화와 토론,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 및 문화 집단들 간의 충돌을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거버넌스, 분쟁 및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이 보편적인 인권전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수원국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빈곤층이나 청년층의 테러리즘 참여 방지를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사회 · 경제 환경 조성은 테러 방지와 평화 구축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공여국은 분쟁상황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수원국의 평화유지를 추구해야 한다. OECD/DAC은 분쟁상황을 분쟁 발생 전, 분쟁 중, 과도기, 분쟁 후 상황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각기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수원국의 평화유지를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분쟁 전에 경제성장, 빈곤 감소, 민주화, 건전한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이슈와 근대적 이슈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원국이 분쟁 중에 있는 경우라면 공여국은 수원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외교 · 정치 · 경제적 조치와 분쟁 후 재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의 취약한 상황일 경우, 원조가 인명구조에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이후의 평화체제 도입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른 폭력갈등사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한다. 반면 분쟁 후에는 수원국에 안보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여국은 정치적 · 법적 · 경제적 · 행정적 개혁을 통해 합법적인 정부 기관과 제도를 마련하고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OECD/DAC은 취약국가를 원조함에 있어 평화건설과 국가건설을 동시에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개발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특히 취약국가의 원조 효과성과 안보시스템개혁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시스템개혁은 수원국이 빈곤 완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안보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안보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안보시스템개혁을 위하여 공여국은 먼저 수원국의 안보를 개선하고 보다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사회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취약국가에서는 사법체계와 국가정당성이 자체적으로 확립되기 어려우므로 공여국은 국가는 물론 비국가행위자 (이해집단, 다국적기업 등), 국제행위자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등)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때 비록 수원국이 취약국가라 할지라도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십과 주인의식 향상을 목표로 원조를 집행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 효율적인 법과 질서의 수립, 무역자유화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DAC은 수원국 내 평화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국과 취약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취약국가 내부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면, 여러 원조 프로그램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제사회는 취약국가 지원 시 범정부적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 제공 시, 공여국은 범정부적 접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행위자간의 효과적인 대화창구 마련 및 각 조직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범정부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원국 내에 통합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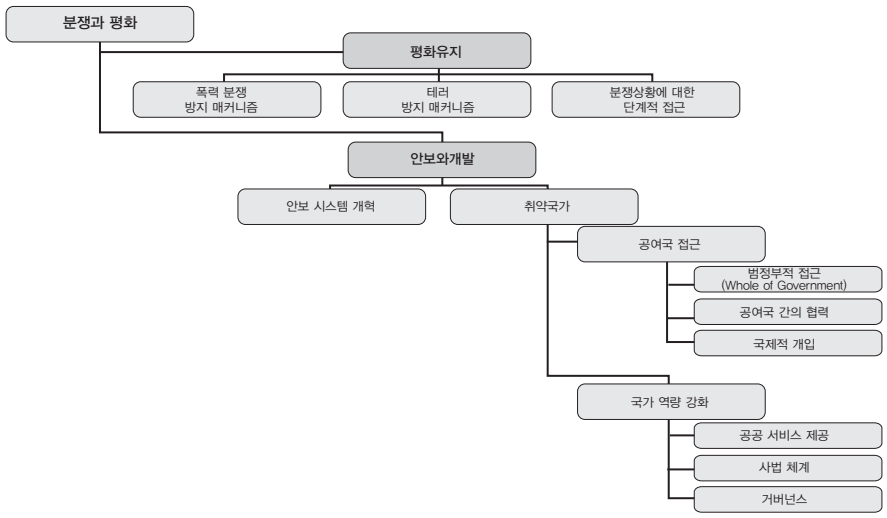
취약국가가 빈곤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국제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제적 개입은 취약국가의 사회 ·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안정된 국가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공여국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일관되고 장기적인 개입을 추구해야 한다.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원조 소외국가(Marginalized Countries), 높은 수준의 물적 지원이 필요하나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Countries with High-levels of Need and Weak Governance), 원조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국가(Countries with Improving Aid-levels)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OECD/DAC은 취약상황에서 정부의 기초공공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므로 공여국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취약상황은 상황이 악화되는 개발정체기, 개발후퇴기와 상황이 안정화되는 전후과도기, 초기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가 취약상황의 개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과의 공동 작업을 추구하도록 하고, 의지 또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취약상황 개선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취약상황 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여국은 기초공공서비스 제공 시 공여국의 참여방법, 공공서비스제공의 주도권, 효율성과 지속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거버넌스를 통해 수원국의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공여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안보,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여국의 활동과 협력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림5> 분쟁과 평화



(6) 무역

1) 배경 및 역사

수출 지향적 전략을 갖고 있는 개방경제 국가가 폐쇄경제 국가에 비해 빈곤 감소와 성장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국제사회는 개발과 무역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방이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후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최빈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역 분야의 성장이 중요함을 밝히고 수원국의 무역 부문에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가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5년에는 홍콩 장관급 회의에서 극빈국의 성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극빈국의 무역 역량 확대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와 OECD는 무역과 개발 영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시작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사업을 OECD/DAC의 활동 목표에 포함시켰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빈곤 국가들의 생산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망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고용확대와 삶의 질 향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결국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OECD/DAC은 무역 역량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

OECD/DAC은 거시경제의 안정,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 올바른 국가운영 등의 적절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무역은 빈곤 친화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힌다. 즉, 무역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이는 상품과 서비스, 기술과 지식의 향상은 물론 직업 창출, 학습 기회 형성, 개인 투자 촉진, 외자 유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책, 제도, 사회 인프라 등 무역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발을 위한 무역과 무역을 위한 개발 원조의 조율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OECD/DAC 은 무역 및 무역 원조, 무역 역량 개발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OECD/DAC은 공여국 간의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공여국의 무역정책이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 전략과 통합된 일관성 있는 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 한다.

특히 OECD/DAC은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무역 개발의 효과 제고를 위해 공여국이 개인, 기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공여국은 무역은 물론 투자와 민간부문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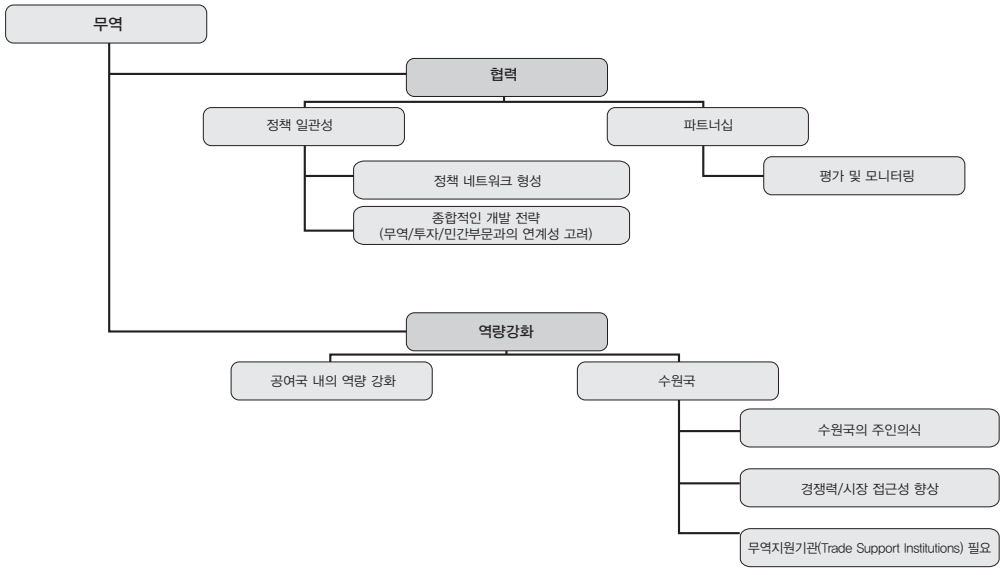
둘째로, OECD/DAC은 공여국과 수원국 공동의 책임의식 향상과 정책 결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니터링과 평가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과 공여국과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OECD/DAC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권고한다.

먼저, 공여국은 무역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장 확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국의 무역개발과 공여국의 원조 효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참여와 주인의식 고취를 통해 개발 협력 계획이 수원국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수원국은 무역 지원 기관(Trade Support Institutions)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문기구 설치 및 기술 지원과 정보 교환 등 무역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수원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의 다양화, 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림6> 무역



(7) 원조의 효과성

1) 배경 및 역사

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 향상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한 가운데 2005년 파리 선언에서 22개의 공여국과 57개의 수원국은 UN MDGs 달성과 원조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공동의 정의는 아직 부재하다. OECD/DAC의 '평가와 성과 지향적 관리에 대한 주요 용어 사전(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에 의하면 원조의 효과성이란 "개발원조 목표가 달성된 정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의미 한다(OECD/DAC 2002, p.20).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각 국가에 따라 원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OECD/DAC은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공여국 간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협력과 조화 및 시스템과 제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조 활동의 증대와 원조 기관의 급증에 따라 집행 기관 간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OECD/DAC은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해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를 권고하고 있다. 공여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원조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OECD/DAC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조 조화와 협력을 원조 효과성 향상의 필수요소로 보고 있다.

먼저 공여국 간의 협력과 조화를 위해 OECD/DAC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UN MDGs 등의 목표를 공유하며 원조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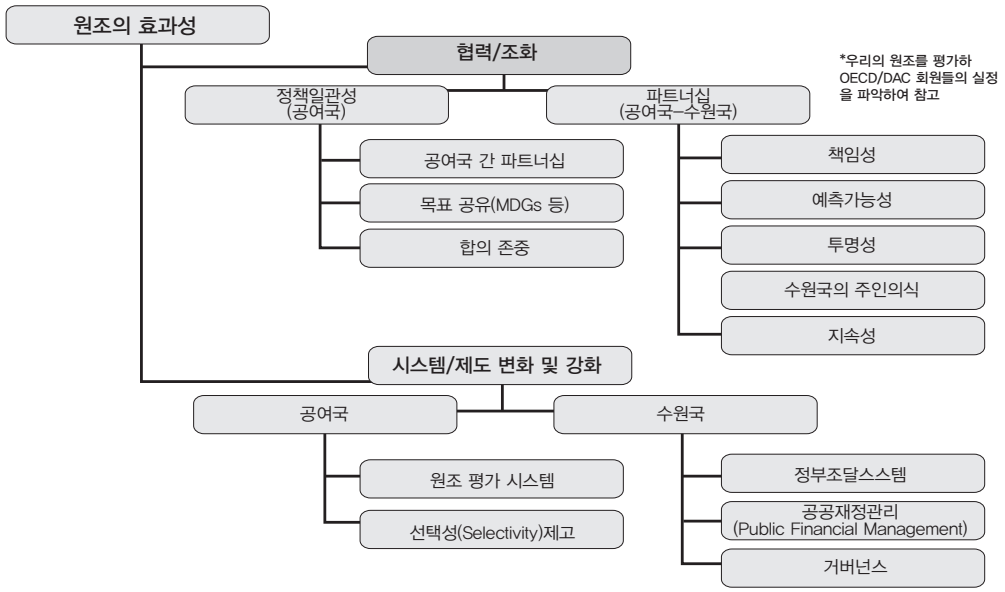
또한 OECD/DAC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원조의 상호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원조를 통해 원조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여 수원국이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원조를 고려하여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또한 투명한 원조집행을 통해 원조가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DAC은 위에 기술한 국제사회와 개발도상국의 협력과 조화뿐만 아니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시스템 변화와 역량강화 또한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선,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력 하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원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조의 사후관리와 원조 정책 실행 및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여국은 원조평가를 통해 개발 목표,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지속성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평가는 원조의 질적, 양적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원조평가가 사후 활동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원조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이루어져 정책 결정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OECD/DAC은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정부조달 시스템(National Procurement System),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거버넌스의 취약성에서 기인한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즉, 수원국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중요하므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정부조달 시스템과 공공재정 관리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그림7> 원조의 효과성



(8) 원조의 질

1) 배경 및 역사

공여국의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 원조동기에 따라 공여국의 원조형태와 원조의 질은 달라진다. 따라서 개발 원조는 원조동기에 따라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질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정치 · 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 인권 향상 과 빈곤 해소를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원조 그리고 원조 제공을 통해 공여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원조로 구분 될 수 있다(임강택 외 2008).

1972년 OECD/DAC은 원조재원에 대한 조달처의 범주에 따라 원조를 비구속성(Untied), 부분적 비구속성(Partially Untied), 구속성(Tied) 원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와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와 기자재,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원조를 말한다(KOICA 2008). 이와 달리 비구속성 원조는 위와 같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조달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적 비구속성은 위의 두 형태가 결합한 것으로 조달처를 지역개발기구의 표준절차를 따르는 회원국 또는 공여국과 제한된 수의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물품 및 서비스로 원조를 집행하는 형태의 구속성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수원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조의 비구속화와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점차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7년 OECD/DAC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가 국제발전 목표를 지향하고 공정한 무역경쟁 원칙과 일치할 것을 권고하는 '혼합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위 권고사항은 ODA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할 것과 무상제공 또는 증여율을 최소 25%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 2001년 OECD/DAC은 '최빈국 ODA의 비구속화에 대한 OECD/DAC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는 2002년 UN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Finance에서 원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OECD/DAC은 최빈국에 대한 ODA의 경우, 국제수

지(Balance of Payments)와 구조조정 지원, 채무면제, 부문별 또는 다 부문 프로그램 지원, 투자관련 프로젝트 지원, 수입 및 물자 지원, 그리고 상업 서비스 계약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최빈국 내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NGO에 제공되는 ODA를 2002년 1월 까지 비구속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 증진과 함께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양자 간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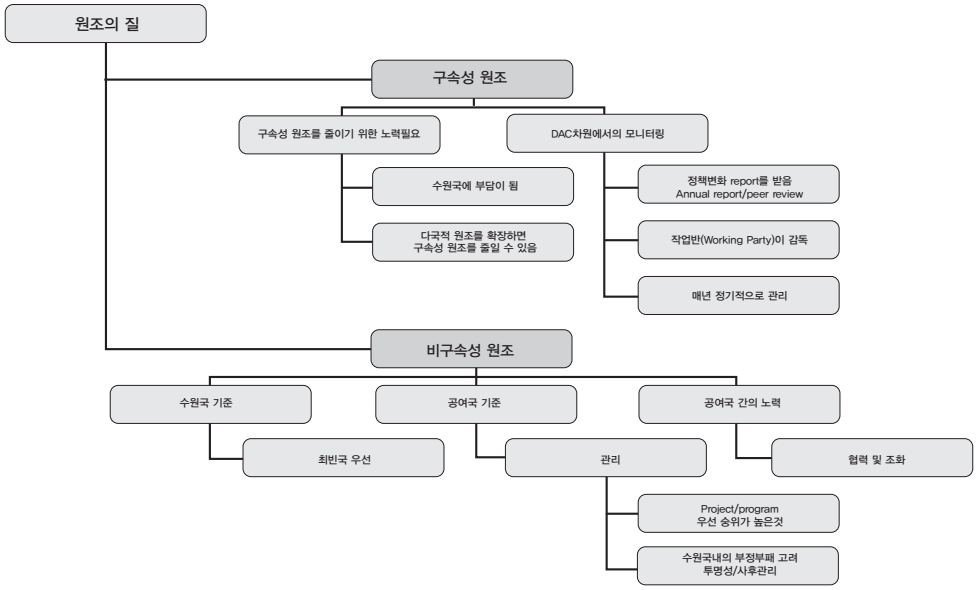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OECD/DAC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구속성 원조는 수원국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원조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OECD/DAC은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성 원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OECD/DAC은 공여국이 구속성 원조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다자간 원조는 구속성 원조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긴 하나 공여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양자 간 원조에 비해 신속하고 활발한 원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OECD/DAC은 원조의 유효성, 지속성 및 질적 향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ECD/DAC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정책 변화와 실행에 관한 국가 연차 보고서를 OECD/DAC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동료심사 또는 다른 평가에서 사용되어진다. 특히 개발원조의 재정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이 구속성 또는 비구속성 ODA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들을 검토 한다.

무엇보다 OECD/DAC은 원조의 비구속화를 권고한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우선적으로 비구속화 할 것을 촉구한다. 공여국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ODA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원조 집행 시에는 수원국 내의 부정부패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조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원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림8> 원조의 질



(9) 거버넌스

1) 배경 및 역사

198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건건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개도국 경제 제도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특히, 1989년 세계은행이 거버넌스의 실패를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빈곤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이 빈곤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점차 경제성장과 정치적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게 됨에 따라 건전한 거버넌스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경제 · 정치 · 행정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지칭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공공행정 체계와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운영체계, 정부의 권한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정치적 권한 및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해 자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 내에서의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버넌스로 정의

하고 있다(KOICA 2008). 즉, 건전한 거버넌스란 위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국민이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은 크게 경제적, 정치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는 법적 제도와 규범의 확립을 토한 부패 방지, 시장 자율화와 자원관리의 책임성 강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경제적 투자촉진 및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활성화 추구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정치적 거버넌스는 인간개발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보호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권강화와 자유 확대는 거버넌스의 정치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강화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확립은 그 자체가 개발의 중요요소가 되며 결과적으로 건전한 거버넌스는 사회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써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이어 등장한 '참여적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 계층, 양성간의 사회 · 경제적 격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는 참여와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건전한 거버넌스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건전한 거버넌스와 참여적 개발의 연계성은 건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05년 파리 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강조하고 원조 집행에 있어 수원국의 참여 제고를 권고하여 참여적 개발을 더욱 강조하였다.

건전한 거버넌스와 참여적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OECD/DAC은 1996년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 차원의 원조조정 강화에 대한 정책각서(The Policy Note on Strengthening Country Level Coordination for PD/GG)를 채택하여 수원국 주도의 참여적 개발을 권고하였다. 또한 OECD/DAC은 산하의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을 통하여 수원국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수원국의 역량개발, 반부패, 조세 관리역량 강화, 인권신장 등 거버넌스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주요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OECD/DAC이 말하는 거버넌스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기본 목표로 한 개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OECD/DAC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OECD/DAC은 수원국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장려하고 있다. 1997년 OECD/DAC이 채택한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에 따르면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 강화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차원의 정책대화 및 활발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권고한다. 또한 공여국은 수원국이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공공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수원국의 참여적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수원국의 역량개발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효과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을 개인, 기관, 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며 특히 수원국의 전문가 협회, 여성 및 소비자 단체, 조직간 협의체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모니터링,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국가별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OECD/DAC은 개발과 거버넌스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수원국의 법적 환경 조성과 법률 시스템 강화를 통해 수원국에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원국 내 독립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원국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과도한 군사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 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보전략을 개발하고, 군 규모 축소를 위해 군사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조정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행정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교육을 통해 수원국이 스스로 공공 분야 관리에 대한 역량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OECD/DAC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수원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를 지원하며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수원국 거버넌스의 발전과 원조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원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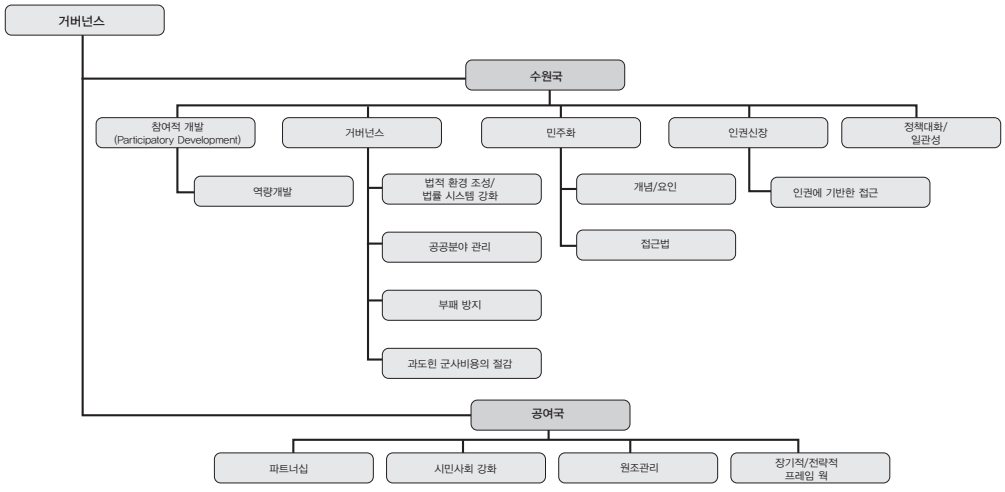
특수한 사회 · 경제 ·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국 내 다원적 시민사회 건립을 도울 것을 권장하고 언론의 독립성 획득, 여성 및 빈곤층에 대한 교육,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 설립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넷째로, OECD/DAC은 수원국 내 민주주의 기반 확립과 함께 수원국의 인권 보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인권분석을 통해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해야 한다.

다섯째로, 거버넌스에 관한 수원국의 정책 조정과 일관성 확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OECD/DAC은 수원국의 환경에 기초한 공여국의 장기적,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OECD/DAC은 공여국이 수원국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웍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수원국의 참여적 개발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개발과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자신들의 역량과 원조 프로그램을 수원국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원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림9> 거버넌스



III.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

1. OECD/DAC 원조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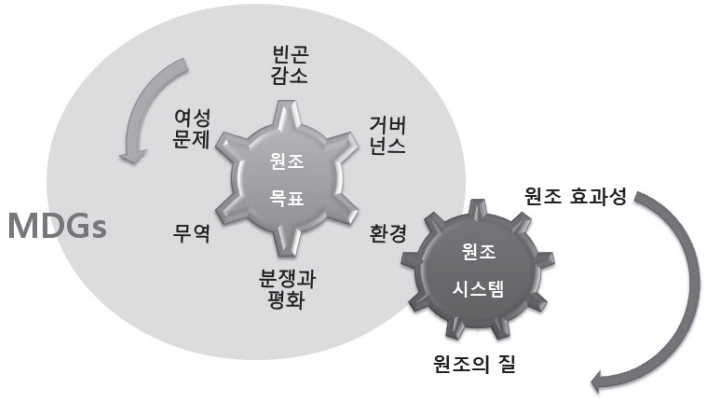
그렇다면 OECD/DAC은 어떠한 원조행위를 지향하고 있을까? OECD/DAC이 지향하고 있는 원조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각 이슈별 OECD/DAC의 모든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를 만족시키며 이루어지는 원조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각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OECD/DAC 원조모델이란 OECD/DAC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원조행위를 의미한다. OECD/DAC 원조모델은 또한 앞 장의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의 분석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OECD/DAC의 원조모델 도출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DAC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크게 원조목표와 원조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원조목표란 공여국들이 원조행위의 궁극적 목표, 즉 원조를 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원조체계란 원조가 정해진 원조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질적으로도 우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공여국의 원조 인프라와 역량을 의미한다. 앞에서 분류한 9개의 OECD/DAC 이슈 중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무역, 거버넌스는 원조목표로 구분할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과 원조의 질은 앞의 원조목표를 뒷받침해주는 상위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원조체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UN MDGs는 원조목표의 설정 방향과 목표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OECD/DAC 권고사항 내의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각 이슈별 원조모델 적용지표는 뒤에서 더욱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이란 이러한 원조목표와 원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어 이루어지는 원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문제, 분쟁과 평화, 거버넌스 등 각각의 원조목표의 달성을 위해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며 원조의 질 면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지는 원조를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OECD/DAC이 말하는 효과적 원조와 질 높은 원조란 무엇일까? 각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간략히 여기서 다시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OECD/DAC은 효과적 원조를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원조기관간의 협조, 조화, 결과 중심의 원조 활동, 상호 책무성 등 파리 선언에서 공약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원칙들이 실행되는 원조라 정의한다. 또한 질 높은 원조의 조건으로 OECD/DAC은 예측성 강화와 비구속성 원조, 수원국 주도의 원조 집행 등을 강조한다.

<그림10>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



위의 〈그림10〉 OECD/DAC 원조모델은 원조가 질적 측면과 효과성 측면에서 OECD/DAC의 모든 권고사항에 부합하며 이루어지는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빈곤 감소, 환경, 성평등, 분쟁과 평화 등 각각의 원조 목표가 질 높고 효과적인 원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OECD/DAC원조모델로 상정해 보았다. 또한 OECD/DAC 원조모델은 모든 이슈에 걸쳐 OECD/DAC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권고사항과 지침이 원조행위에 충실히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어서 각 이슈별 OECD/DAC이 권고하고 있는 원조모델 지표 분석을 통해 OECD/DAC 원조모델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다.

2. OECD/DAC 원조모델 지표

앞 장에서 우리는 OECD/DAC의 81개의 문서들을 9개의 이슈별로 정리해서 각 이슈

별 OECD/DAC의 주요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여러 이슈들을 원조목표와 체계로 나누어 OECD/DAC이 지향하고 있는 원조모델을 그려보았다. 우리는 OECD/DAC의 원조모델이란 원조목표와 원조체계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원조 목표가 효과적이고 높은 질의 원조 체계를 통해 달성되는 원조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각 이슈별로 OECD/DAC은 어떠한 구체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 OECD/DAC이 지향하고 있는 이슈별 원조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모든 이슈들에 대하여 OECD/DAC 권고사항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인데 과연 OECD/DAC은 이슈별 어떠한 지표를 바탕으로 원조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슈별 OECD/DAC이 도입하고 있는 지표를 더욱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지표는 OECD/DAC 원조모델에 다다르기 위해 적용해야할 평가지표이며 OECD/DAC 동료심사의 평가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지표들은 동 연구팀이 81건의 OECD/DAC 문서의 전수 분석을 통해 각 이슈별 OECD/DAC의 주요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정리, 지표화한 것이다.

우리는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를 크게 공통지표와 개별 프로젝트 지표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의 목적은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특정 국가의 원조 프로젝트 평가 시, 본 적용지표들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아래의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들을 사용하여 특정 공여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평가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공여국의 원조행위가 OECD/DAC 원조모델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OECD/DAC의 9개 이슈 중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질,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성 평등, 환경, 빈곤 친화적 성장, UN MDGs는 공통지표로서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개별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공통지표 이외에 원조 집행과 관련한 개별 이슈에 대한 평가지표로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가 있다.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무역, 거버넌스의 이슈는 개별 프로젝트의 평가지표를 통해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원조프로젝트에 공통지표를 적용해 보면 원조체계, 즉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이슈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를 사용하면 관련 이슈의 주요 사안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여국 A가 수원국 B에 분쟁예방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계획 및 집행한다고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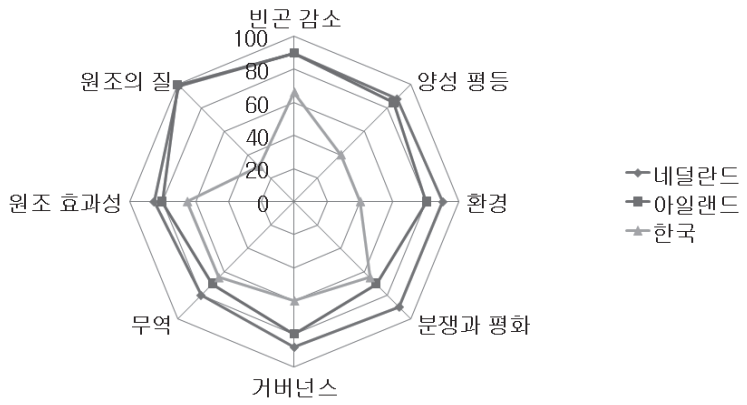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질, 크로스커팅 이슈가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분쟁과 평화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를 도입해 보면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해 보면 하면 특정 공여국의 원조활동을 OECD/DAC 원조모델과 비교・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공여국의 원조의 질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투명하게 집행되는가?
-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에 관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전체 ODA중 50% 이하인가?
- 공여국은 수원국의 원조를 구속성에서 비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로 전환 시 수원국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하는가?
- 양자 구속성 원조에서 다자 공여국의 개발 프로그램, 정책 일관성을 강화해 주는 다자 구속성원조로 이행을 진행하고 있는가?
- 수원국을 우선 고려한 비구속성 원조를 집행하는가?
- OECD/DAC 규정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가들에게 ODA를 비구속화 하는가?
- 효과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지원을 위하여 공여국은 이해관계자 및 수원국과 협력하는가?

이러한 지표들을 도입하면 특정 공여국의 원조의 질을 평가하고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0점을 만점으로 가정하고 위의 모든 지표를 충족시킨다면 100점을 기록하고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0으로 기록한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공여국의 원조 행위를 평가하면 다음의 〈그림1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특정 공여국이 모든 OECD/DAC 원조모델 적용지표를 완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정 팔각형 (OECD/DAC의 9개 분야에서 UN MDGs를 제외)의 맨 가장자리 (아래 도식에서는 100점 만점)에 위치할 것이며 이는 OECD/DAC 원조모델의 또 다른 도식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이슈들에서 만점을 받고 있는 공여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그림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한국을 임의로 도식화해 보았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네덜란드는 전 분야에 걸쳐 비교적 OECD/DAC 원조모델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특히 성 평등, 빈곤, 원조의 질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두 선진 원조모델에 비해서는 아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많

다는 가정 하에 도식화 해 보았다. 물론 지표들의 정확한 수치화를 위해서는 각 지표의 수치화에 더욱 많은 연구 작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11> OECD/DAC 방사형 원조모델



(1) 공통지표

1) 원조의 효과성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원조의 효과성	프로젝트의 기획	1. 사전영향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 가. 수원국 정책을 파악하였는가? · 제도/법률적 근거 · 정부역량 (인력, 정부조직구조) 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는가? 다. 전달경로(transition channel)를 채택하였는가? 라. 수원국의 현재 상황(상태)을 파악하고 영향성을 예측하였는가? 마. UN MDGs 및 기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영향성이 파악되었는가? 2. 사전조사 결과가 프로젝트 기획에 반영되었는가? 3. 기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가? 2차 자료를 사용했는가? 해외 사무소가 실시했는가?
	예산 및 운영	1. 예산은 항목별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가? 2. 수원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이 기획되었는가? 3. 구속성 원조인가? 부분적 구속성인가? 비구속성인가?
	모니터링	1.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는가? 2. 모니터링이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가? 3. 모니터링이 지속적인가? (분기별 진행? 또는 연간? 단계별로 진행?) 4. 모니터링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5. 모니터링 전담 기관이 있는가? 6. 모니터링을 위한 권고사항이 있는가? 가. 모니터링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는가?

원조의 효과성	평가	1. 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가? 2. 평가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가. 수원국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가? (공동 평가기준이 있는가?) 3.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있는가? 가. 평가 전담 기관 나. 평가 전문 인력 다. 프레임웍 4.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이 평가에 반영되었는가? 5. 단기, 중기, 장기, 최종, 사후 단계의 각 프로그램 수행 경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가? 6. 수행 과정 중 발생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충돌 또는 비협조 사례와 같은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는가? 7.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파트너십	1.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가. 공여국은 원조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에게 공개 상담 또는 모니터링을 받는가? 나. 원조 사업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나누고 차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역량이 마련되었는가? 다. 공여국간 원조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합의에 의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는가? 2.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가. 공여국은 수원국의 특징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 목표를 수립했는가? 나. 공여국의 원조 정책 수립 과정에 수원국이 참여하여 조율할 수 있는가?
	공여국과의 정책 일관성	1. 관련한 기존 사업의 평가 또는 경험적 지식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2.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정책 틀을 따르고 있는가? 3. 수원국의 국가 정책을 고려하여 원조 정책을 수립하는가? 4. 공여국은 원조 정책 수립 시, 수원국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가? 5. 해당 프로젝트 수립에 있어, 사업의 장기적, 지속적인 사후영향력을 고려하는가? 6. 사업 종결 후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 사후수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가? 7. 개별원조사업의 평가에 대한 일관되고 공통된 형식의 보고절차를 활용하는가? 8. 해당 프로젝트의 집행과 재정 지원과 같은 유기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는가? 9. 원조 정책 수립 시, 관련된 자원 활용과 배치, 단계적 목표 설정, 성취도 평가, 사업 평가와 같은 통괄 사항을 고려하는가?

2) 원조의 질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원조의 질	구속성원조	1.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투명하게 집행되는가? 2.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에 관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3.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4.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가 전체 ODA 중 50% 이하인가? 5. 공여국은 수원국의 원조를 구속성에서 비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로 전환 시 수원국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하는가? 6. 양자구속성 원조에서 다자공여국의 개발프로그램, 정책 일관성을 강화해주는 다자구속성원조로 이행을 진행하고 있는가?
	비구속성원조	1. 수원국을 우선 고려한 비구속성 원조를 집행하는가? 2. OECD/DAC 규정 최빈국과 고채무 빈곤국가들에게 ODA를 비구속화 하는가? 3. 효과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지원을 위하여 공여국은 이해관계자 및 수원국과 협력하는가? 4. 비구속성 원조 집행의 모니터링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가?

3) 크로스커팅 이슈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크로스커팅 이슈	성 평등	1. 성 평등문제의 주류화 가. 수원국의 성/ 평등문제를 통합적으로 공여국의 모든 프로젝트의 분석과 체계화에 적용하였는가? 나. 수원국내 양성 평등정책을 위한 공여국의 직원 교육, 예산 및 집행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수원국의 예산 지원에 있어 성인지적 예산을 장려하는가? 라. 수원국내 양성평등 제도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가? 마. 성 주류화를 위해 공여국간 원조 방법의 조정이 현황분석, 정책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에서 이루어졌는가? 바. 공여국의 수원국내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성인지적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
	환경	1. 프로젝트의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EIA가 시행되었는가? 가. EIA시행 시 수원국의 국가 환경조사 및 전략(CESS)의 결과가 고려되었는가? 나.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부터 EIA를 고려하고 있는가? 다.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라.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의 여론을 반영했는가? 마. 모니터링과 사후감사가 이루어졌는가? 바. 공여국은 EIA 시행 시 수원국의 환경법과 규제를 따르는 한편 공여국의 개발협력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에 대한 파악을 하였는가?

크로스커팅 이슈		아. 위험시설과 관련한 프로젝트 진행 시 선별과정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고려되었는가? 자. 스코핑(scoping)을 통해 중대한 환경적 이슈와 평가시간, 범위를 파악했는가? 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원국이나 공여국의 평가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받았는가? 카. 공여국 내 EIA 보고서의 적절성과 질을 위해 환경평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관계부처를 두고 있는가? 타. 개발협력 프로젝트 승인 결정 과정에 EIA의 결과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가? 파. 평가의 정확성 및 미래의 개정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빈곤 친화적 성장	1. 사전영향성평가 가. 사전영향성평가를 실행하고 있는가? · 원조 제공시 수원국의 빈곤 감소 목표를 파악했는가? · 원조 및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 및 제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가? · 빈곤 감소 목표달성에 적합한 원조 전달경로를 채택하였는가? · 경제적, 인적, 정치적, 사회문화 및 안보적 역량이 평가되고 그 예상결과가 파악되었는가? · UN MDGs 및 다른 전략적 목표에 대한 장기적 결과가 파악되었는가? 나. 사전영향성평가의 결과가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는가? 다.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가? ·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원국 국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가? · 빈곤층의 인프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인프라에 대한 재정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 공여국 프로젝트에서 인프라 관련 4가지 원칙들의 이행여부가 모니터링/평가되고 있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가 OECD/DAC의 프레임웍을 따르고 있는가? · 평가의 내용이 프로젝트에 반영 되는가? 2. 민간분야 개발 가. 공여국의 민간분야 개발지원이 빈곤 친화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나. 수원국에 대한 민간분야 개발 지원이 수원국의 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하는가?
	UN MDGs	1. 해당 프로젝트가 UN MDGs 달성 목표 반영 정도에 대한 영향지표를 마련하였는가? 2. 원조를 실행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였는가? 3. 조사에 기반하여 UN MDG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수립하였는가? 4. 수립한 목표치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5. 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여타 활동들의 평가를 기획 단계에서 고려하였는가? 6. 해당 프로젝트의 집행 단계에서 관련 전문 NGO를 참여시키는가?

(2) 개별 프로젝트 평가지표

1) 빈곤 감소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빈곤 감소	사전영향성 평가	1. 사전영향성평가를 실행하고 있는가? 2. 원조 제공 시 수원국의 빈곤 감소 목표를 파악했는가? 3. 사전영향성평가의 결과가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는가?
	빈곤관련 분야	1. 인프라 가.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가? 나. 수원국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다. 빈곤층에 대한 인프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 모니터링과 평가가 OECD/DAC의 프레임웍을 따르고 있는가? 마. 평가의 내용이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는가? 2. 농업 가. 농업 분야의 생산성 증대와 시장 진입 강화가 이루어졌는가? 나. 농업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이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가? 3. 보건 가. 빈곤층에게 만연한 질병 치료에 집중하였는가? 나. 빈곤층을 위한 백신이나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가?
	개발확대	1. 민간부문 가. 민간부분의 개발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노력이 실행되고 있는가? 나. 국제경제와의 연계를 이용하는가? 다. 공여국내 기존의 민간분야를 활용하는가? 라. 수원국의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조성 · 공여국이 수원국의 규제 및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술원조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가? · 법치주의를 강화하는가? · 수원국의 회계감사 요건과 적정공시요건을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을 지원하는가? 마. 민영화와 공기업 개혁 · 공여국의 지원이 수원국의 전반적인 정책개혁과정과 민영화에 기반하고 있는가? 바. 기업개발 · 공여국은 수원국이 기업개발에 대한 자립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공여국의 기업개발관련 지식을 수원국과 공유하는가? 사. 제도적 개발 아. 수원국의 역량 감독 및 조정을 지원하는가? 자.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 내 민간분야가 자체적으로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가?

2) 성 평등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성 평등	제도 구축	1. 공여국 내 양성에 관하여 직원교육, 예산 및 집행에 투자 2. 전문가 양성 3. 수원국 내의 여성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이 있는가? 4. 수원국 내 제도 구축에 수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 성인지 예산 분석
	범분야적접근 (SWAps)	1. SWAps 사용에 있어 양성의 지위 및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가. 수원국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나. 성인지 예산 분석 다. 남녀의 고용 양상
	권한강화 (Empowerment)	1. 토지소유권과 재산권의 확대 가. 토지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조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가? 나. 토지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토지개혁 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는가? 다. 수원국 재정지원에 있어서 여성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가? 2. 성인지적 경제 거버넌스 가. 수원국의 예산 지원에 있어 성인지 예산을 장려하는가? 3. 자본시장 접근성 가. 여성의 자본시장에서의 취약성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3) 환경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1. 환경영향성평가(EIA) 가. 모든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EIA를 실시하고 있는가? 나. 프로젝트의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EIA가 시행되었는가? 다. EIA시행 시 수원국의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SS)의 결과가 고려되었는가? 라.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부터 EIA를 고려하고 있는가? 마.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바.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의 여론이 반영되었는가? 사. 모니터링과 사후감사가 이루어졌는가?

환경	이슈	1. 글로벌 이슈 가. 기후변화 · 연구 및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존 환경평가절차에 반영했는가? 나. 비자발적 이주 및 재정착 · 비자발적 이주와 재정착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 이주 및 재정착 대상 판정 전에 정책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가? · 이주자의 요구사항 및 환경보호가 정책 결정 과정 시 고려되었는가? 다. 오존감소 · 향후 몇 년 사이에 낙후될 기술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지원하는가? 라. 생물다양성 · 위협받는 동식물군의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가? · 효율적인 환경교육이나 대중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있는가? 마. 방재 · 공여국은 국가전략보고서 작성 시, 원조 및 투자프로그램에서 방재를 고려하였는가? · 방재를 고려한 원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별도의 긴급재해기관을 설립하였는가? 바. 습지 · 다음과 같은 상황이 (수질의 변화, 수인성 질병 위험, 생태계 교란 또는 훼손, 습지기능 상실)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EIA를 실시하였는가? 사. 해안 및 연안환경 · 연안 개발 및 자원사용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EIA를 실시하는가? · 해안 및 연안환경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을 구축하여, 지속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관련 정책 결정을 하였는가? 2. 국내이슈 가. 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처리과정 및 처리장소를 추적 및 보고시스템 구축을 보조하고 있는가? 나. 화학물질관리 · 사고방지를 위해 EIA를 사용하여 유해시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있는가? 다. 병해충 및 살충제 관리 · 병해충 억제책으로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도입 및 적용을 지원하는가? 3. 개발관련 가. 농 업 · 수원국 지역별로 각기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시장 농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가?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등고선농법,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녹비, 관개시설과 수자원관리기술, 쟁기를 사용한 농작법 및 농작물의 도입을 지원하는가? · 수원국 정부가 공공지와 공공수자원에 대한 분쟁이슈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수원국에 발생 가능한 극단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메커니즘의 개발을 지원하는가? · 수원국내의 농업관리 필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가?

		· 수원국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농공업활동의 개발을 지원하는가? 나. 삼림 · 수원국에 대한 삼림지원 프로그램 계획 시 삼림이 갖는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가치를 고려했는가? 다. 에너지 · 수원국이 친환경정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 전송 및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가?

4) 분쟁과 평화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분쟁과 평화	평화유지	1. 국가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안보, 건전한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지원이 있는가? 2. 안보시스템개혁을 지원하고 있는가? 3. 안보지출 관리
	테러방지 메커니즘	1.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 도모 가. 법치주의 마련 · 취약한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강화 · 청년층의 테러리즘 참여 방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을 위해 지원 나. 교육기회 제공 · 테러리즘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빈곤층의 사회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공개토론, 언론 등을 테러리즘과 폭력분쟁 방지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가? · 종교 및 문화그룹 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재자적 입장의 집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가? · 재정부의 역량강화 및 민간분야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는가?
	분쟁상황에 대한 단계적 접근	1. 분쟁상황 해결을 위해 다음 단계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가? 가. 분쟁 발생 전 · 경제성장, 빈곤 감소 및 민주화, 인권 보호 등과 같은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가? 나. 분쟁 중 · 분쟁 초기 단계에서 분쟁에 대한 분석 및 원인을 파악하여 수원국이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인도주의적 지원, 외교적 조치 및 정치,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준비 및 계획이 있는가? · 분쟁 중에도 장기적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 다. 과도기 · 단순한 인명구조를 넘어 취약상황에서 벗어나 지속적 평화 유지 체제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는가? · 새로운 분쟁 상황 예방을 위한 예방기제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가?

분쟁과 평화		라. 분쟁 후 ·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합법적인 정부 기관 및 제도의 재건을 지원하고 있는가?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및 갈등의 원인이었던 구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적, 법적, 행정적, 경제적 개혁을 지원하고 있는가? · 분쟁 후, 국가와 시민사회가 군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지원했는가? · 분쟁 당사자들 간 화해를 도왔는가? ·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지원 분야에서의 모니터링과 활동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안보시스템 개혁	1. 수원국의 안보를 위해 안보시스템개혁(SSR)을 지원하고 있는가? 가. 프로그램 디자인 · 지역감독기관 구성 등 지역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되고 있는가? ·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SSR의 초기단계부터 수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 안보 및 사법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 프로그램 이행 · SWAps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가? · 단기 및 특별 프로그램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 수원국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 고려하여 SSR을 시행하고 있는가? · SSR을 수원국 내 개발정책으로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5) 무역

OECD/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무역	종합적인 개발전략	1. 특정 지역 및 분야를 담당하는 무역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가? 2. 숙련된 노동자 공급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고 있는가? 3. 수원국의 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있는가? 4. 수원국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수원국 내 경쟁력 및 시장 접근성 향상	1. 수출세와 고환율, 자본 관리와 같은 무역 제약 정책을 제거하는데 협조하고 있는가? 2. 기본적 저 관세 및 무역 인프라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협조하고 있는가?
	수원국 주인의식 함양	1. 무역 정책 입안 시, 수원국의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기업인 등의 참여를 보장했는가?

6) 거버넌스

OECD/ DAC 이슈	평가대상	평가질문
거버넌스	법적환경조성/ 법률시스템강화	1. 공여국은 수원국내의 법치주의의 지원을 위하여 수원국내 상황을 파악했는가? 2. 수원국의 탈집중화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3. 수원국내에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존재하는가? 4. 합법적 대변 (legal advocacy) NGOs 지원 5. 정부기관 및 입법부에 법률개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권자 층 형성
	공공분야 관리	1. 법률과 정부활동에 대해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프레임웍 제공 2. 수원국내 공공지출의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 감사시스템의 도입 및 공공지출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는가? 3. 훈련, 기술지원 및 비용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감사기능 강화프로그램 4. 공공기관(civil services) 개혁
	부패 방지	1. 공여국은 수원국내 부패 기회의 감소와 부패 행위의 노출을 위한 부패방지 전략을 지원하는가? 2. 수원국 부패문제에 대한 진단, 지식 및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군비	1. 효과적/효율적 안보전략 개발로 군사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비용 절감을 돕는가? 2. 과도한 군사지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공여국은 수원국가별 국가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였는가? 3. 수원국내 지출 중 어떤 부분의 지출이 과도한 군사지출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가?
	민주화	1. 민주화에 대한 지원이 수원국가별 특정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가? 2. 언론 독립성을 위한 지원이 있는가? 3.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가?
	인권	1. 인권에 관련하여 수원국과 정책대화가 있는가? 2. 여성,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권리, HIV/AIDS관련 인권문제 등을 함께 지원하는가? 3. 인권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는가? 4.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는가?

IV. OECD/DAC 국가 분석

앞서 우리는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에 대한 포괄적 분석에 기반 하여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모델을 상정해 보고 OECD/DAC 문서 전수분석에 입각하여 이슈별 원조모델 적용지표를 도출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의 OECD/DAC 원조모델을 분석틀로 삼아 실제 회원국들의 원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먼저 DAC 동료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OECD/DAC 22개국의 원조행위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각 국가별로 어떠한 원조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실천방안 및 도구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원조 효과성, 특히 파리 선언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OECD/DAC 국가 전체 분석을 통해 OECD/DAC국가들의 원조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원조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모범 사례국으로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방문조사 결과 및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행위를 PCM 단계별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OECD/DAC 권고사항 적용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사례국들이 어떠한 실천방안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행위 분석은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KOICA에 대한 Action Plan의 분석틀로 사용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 더욱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1. OECD/DAC 국가 전체 분석

우리는 각 회원국별로 OECD/DAC의 가장 최근 동료심사 자료를 검토·분석함으로써 각 회원국들이 어떠한 원조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원조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출판된 가장 최근의 동료심사 자료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또한 동료심사 자료는 회원국의 원조행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평가한 자료[2]이기 때문에 각 원조 주제에 대한 심층 내용과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DAC 동료심사 자료 분석은 공여국이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원조 정책이나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원조 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OECD/DAC의 주요 원조 이슈, 즉,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거버넌스, 원조의 효과성 등에 대한 회원국의 적용 방안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료심사의 '특별 주제(special themes)'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별 주제는 OECD/DAC이 선정하며 DAC은 선정된 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원조 활동을 동료심사를 통해 평가한다. 특별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OECD/DAC이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이슈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적용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22개 OECD/DAC 회원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1) 영국[3]

1) 빈곤 감소

가) 중점 지원국 선정 지원

영국은 2002년 '국제개발법령(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을 통해 빈곤 감소를 영국개발원조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더욱 발전된 전략적 원조 사업을 위해 아프리카 16개국, 아시아 9개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비교적 소수의 국가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UN MDGs, 특히 빈곤 감소를 보다 더 전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나) 주제별 정책 보고서 및 이행 보고서의 활용

영국의 정책보고서는 각각 교육, 건강, 농업 등의 분야별 주제와 조건부 제한(Conditionality), 역량 개발, 수원국 주도의 접근 등 원조 운용 방법 및 이민, 사회적 배제 또는 빈곤 감시 시스템과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들에 대한 실천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분석과 자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조화'를 통한 원조 전략 수립은 수원국에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2) OECD/DAC 동료심사 내용과 구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첨부자료 1. DAC 동료심사 가이드> 참조.

3) OECD (2006) "United Kingdo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역할을 한다.

영국은 2005년 정책 보고서 '민간 분야와 함께 일하기(Working with the Private Sector)'를 통해 UN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층의 수입 증대와 교육, 보건관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수원국의 민간분야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다. DFID는 또한 OECD/DAC 권고사항에 따라 수원국의 투자 환경 조성, 시장 경쟁력 제고, 빈곤층의 민간 분야 접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DFID는 빈곤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Action Plan을 도입하여 집행하고 있다.

- 다양한 양자, 다자 개발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프로그램(Joint programmes) 실시
- 'FinMark 신용기금' 조성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Challenge Funds'를 통해 수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기업 발전 자문 제공
- '전문가 및 금융 지원(expertise and funding)' 조항을 만들어 민간 분야 개발과 빈곤 감소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2) 성 평등

지난 15년 동안 DFID는 성 평등 이슈에 있어 선진적 원조 모델을 제공해 왔으며, 성 평등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모범 원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DFID는 2000년에 발간한 '빈곤 퇴치와 여성의 권한 강화(Poverty Elimination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를 통해 원조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02년에는 DFID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의 성 주류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젠더 매뉴얼을 만들었다.

DFID는 또한 2003년 정책개발과 내에 젠더 자문가를 두어 국가지원계획과 빈곤 감소 전략에 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 평등 이슈와 원조집행 형태에 관한 지역별 평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젠더 자문가는 DFID 및 지역 집행 기관에 이르기까지 성 평등 이슈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조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국의 전체적인 원조 활동 평가뿐만 아니라 성 평등 관련 활동을 추적하고 이러한 결과가 예산 분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DFID는 DAC의 젠더 네트워크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3) 취약 국가

영국의 DFID는 취약국가 문제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빈곤 감소에 대한 주요한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이 DFID 원조 프로그램의 30%를 차지하는 등 영국은 취약 국가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영국은 '왜 우리는 취약국가에서 더 효과적인 원조활동을 추진해야 하는가?(Why We Need to Work More Effectively in Fragile States)'라는 정책 문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 정부와 DFID의 원조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동 정책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 취약국가에 대한 장기적 원조 배분 및 증대
- 취약국가 내의 원조 인력 증대
- 조기경보체제 활용을 통한 인도적 개발 지원
- 국제 사회 내의 다양한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

또한 DFID는 취약국가에 대한 안보시스템개혁(Security System Reform) 지원을 통하여 안보문제는 물론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취약국가 문제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 원조활동은 여러 조직 구성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영국에는 취약국가팀을 비롯하여, 안전개발팀, 분쟁팀, 인도적 안전개발팀, 사후분쟁 재건팀, 아프리카분쟁그룹 등 여러 취약국가 전담팀이 있으며 이들은 취약국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취약국가팀은 해당 취약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취약국가 지원에 대한 OECD 원칙과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OECD/DAC은 동료심사를 통해 정책과 집행 단계에서의 역할과 인력 담당을 보다 더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하며 자원 배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통해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 예측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 내 부서 및 정부 부처 간 상호교류 증대 노력 등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취약국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 스페인[4)]

1) 빈곤 감소

'마스터플랜 2005-2008'은 스페인 개발협력의 포괄적인 프레임웍과 스페인 원조 전반에 걸친 전략적 원조목표 및 원조 우선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2005-2008'은 또한 스페인의 중점 원조 분야 및 원조 우선 대상국 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동 정책문서는 스페인 원조체계 내의 다양한 원조 행위자와 기관들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은 빈곤 감소를 주요 원조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크로스커팅이슈로 삼아 원조행위 전반에 걸쳐 빈곤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DAC 동료심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스페인은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에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은 양자원조의 20% 이상을 이 지역 내 저개발국가에 할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부채경감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였다.

1998년 개발협력법을 제정함으로서 스페인의 개발협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개발협력정책의 실행을 감독하는 국회와 스페인의 ODA 전반을 진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대학, 사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기구인 Inter-Territorial 개발협력위원회와 부처 간 조정기구인 국제협력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및 중앙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 개발협력 정책을 조정하고 의논하는 개발협력이사회 와 같은 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조 효과성

스페인은 '마스터플랜 2005-2008'에 수원국의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명시하였으나 역량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페인은 성공적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 공공 정책 강화, 시민과 국가 간 소통 체계 정비, 민간 및 공공분야의 책임성 강화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스페인은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지역 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4) OECD (2007) "Spai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스페인은 또한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해 수원국 정부를 통한 원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원국에 상주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원국 상황을 이해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국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원조 사업은 아직까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며 정책 결정, 평가, 결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수원국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원조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OECD/DAC은 스페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분석적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거버넌스

스페인은 '마스터플랜 2005-2008'에서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민주 정권과 신뢰 관계를 형성, 강화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페인은 민주 정권, 시민 참여와 제도 개발을 우선 원조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공공 행정과 지역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란 시민 중심의 포괄적인 정치 참여라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본권과 다양한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해 스페인은 수원국 내의 민주정권 수립 및 행정 제도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 연대의 강화, 민주적 결정 과정 수립을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부패문제를 거버넌스와 다른 독립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부패 관리 기관의 역량 강화 등의 반부패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페인은 혼란스런 정치적 환경에서도 민주 정권을 수립한 국가로서 OECD/DAC은 민주화에 대한 스페인의 경험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원조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OECD/DAC의 동료심사는 스페인의 원조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문서화 되지 않아 정책과 실행 단계에서의 연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절한 평가제도 구축을 통해 스페인의 원조 결과 공유를 권고하고 있다.

(3) 핀란드[5)]

핀란드의 개발원조는 2004년에 출판된 '개발정책에 관한 정부결의안(2004 Government Resolution on Development Policy)'을 기본 지침으로 하고 있다. 본 결의안은 MDGs, 빈곤 감소, 정책 일관성, 지속가능한 개발,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 핀란드 정부는 새로운 정책성명서를 발간하였고, 여기에서는 빈곤 감소, MDGs 달성 이외에도 농촌 및 지역 개발, 원조 효과성, 원조 분담, 환경 및 기후변화, 분쟁예방, 평화 협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 환경, 성 평등

핀란드는 환경, 성 평등, 취약국가를 크로스커팅이슈로 지정하였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및 HIV/AIDS 대응, 정보 통신 기술 등도 주요 원조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이슈에 대하여 핀란드는 내부 정책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NGO 지원을 통해 상기 제시된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원조의 질

핀란드는 저개발국에 대한 모든 원조를 OECD/DAC 권고사항에 따라 비구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구속성 원조인 양허성 차관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03년 OECD/DAC 동료심사의 권고사항에 반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양허성 차관이 핀란드의 민간 분야가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원조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소득 국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원조 효과성

핀란드는 수원국의 역량 개발이 중장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결의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원국 역량개발을 핀란드의 주요 원조 개발 정책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OECD/DAC은 핀란드가 수원국의 역량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5) OECD (2007), "Fin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핀란드는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및 도구를 도입하려고 노력중이다. 한 예로 핀란드 외교부는 원조 정책 기획에 앞서 수원국의 역량을 충분히 분석, 파악한다는 방침을 강화했다. 또한 원조 집행 형태에 있어 프로젝트보다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협력과 교류 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핀란드는 수원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원국의 시민 단체 등 수원국 내 풀뿌리 조직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의 학생 및 교사의 교류 활동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이 핀란드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 하고 있다.

• 프로그래밍과 프로젝트 가이던스

핀란드 외교부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명확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에게 '제도 역량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Institutional Capacity Makes Change)'등의 역량 개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서를 통해 핀란드 외교부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관련한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규범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4) 취약국가

핀란드는 현재 8개의 취약국가를 1-3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전체 원조자금 중 약 1/5을 취약 국가 지원에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다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결의안'에서 핀란드는 취약국가와 폭력분쟁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또는 주요 목적과 측정 지표 등은 아직 부재하다.

가) 자원 분배

핀란드는 다자공여기구에 위임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접근을 통하여 취약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UN 및 EU, 적십자,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UNICEF 및 다양한 NGO를 통한 지원 등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의회는 UN 및 여타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한다. 이에 관하여, 정치적 불안정성, 사회통합 역량 부족 등과 같은 취약국가의 당면문제를 원조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나) 운영과 인력

취약국가 내 핀란드 대사관은 수원국의 지역시민조직을 위한 협력 자금을 구축하였지만 자금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대신 핀란드는 이미 존재하는 다자기구의 분석 전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이념을 가진 공여국 그룹(Like-Minded Donor Group)과 Nordic Plus 그룹과 같은 EU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 정보, 자원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4) 미국[6)]

1) 빈곤 감소

미국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빈곤 지표를 사용하여 수원 대상국을 선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빈곤의 정도로만 ODA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일례로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빈곤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 가이드가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국가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05년 G8 정상 회담에서 미국은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최 빈곤국 채무를 100% 변제해 줄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USAID를 비롯하여 국무부 및 여러 정부 부처가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국가에서의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무역부, 빈곤 감소사무국도 USAID와 협력하여 수원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빈곤 감소사무국은 수원국의 요구와 역량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UN MDGs 달성을 위한 USAID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USAID 개발정보평가센터는 USAID의 빈곤 감소 활동을 분석하여 차후 프로그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결과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통해 민간 분야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환율 왜곡, 취약한 금융 부문, 시장 가격 왜곡과 같이 경제성장의 방해요소 제거와 친시장정책을 통해 빈곤 감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 세계개발동맹(Global Development Alliance)

2001년 미국은 97개국의 국제, 지역 사업체, 민간 재단, 노동 단체, NGO와 정부 파트너를 포괄하는 세계개발동맹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폭 넓은 빈곤 감소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6) OECD (2006), "United State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나) 보건과 교육

미국은 USAID가 운영하는 아동생존과 보건 프로그램(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me)을 통해 수원국의 보건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조류독감,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다른 여러 질병들, 여성 및 어린이 보건, 가족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교육 발의안, 교사훈련센터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빈곤국의 수업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Fulbright 프로그램과 교육 문화 사업부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도네시아 교육 사업 지원은 교육부와 종교 사업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OECD/DAC은 미국에 대하여 다른 공여국과의 보건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무역

미국은 2005년 G7 정상회담과 World Trade Organization(WTO) 홍콩 장관급 회의에서 빈곤국가의 무역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를 선언했다. 또한 미국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을 제정하였으며, '아프리카 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TRADE)'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간 분야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USAID를 비롯하여 노동부, 농림부, US 무역 개발 기구 및 US 무역대표부 등이 수원국의 무역 역량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국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 활동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 성 평등

성 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USAID 내에 개발여성부(Office of Women in Development)를 두어 USAID의 성 평등 이슈와 관련한 전문기술과 리더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성 평등을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는 명백한 정책 자료는 없지만, USAID는 개발 과정에서 성 평등 이슈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원조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USAID 내의 개발여성부에서 성 평등문제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으며 (11명의 젠더 자문단 보유) 수원국 현지에도 다수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개발여성부는 또한 의회, 국제기구 및 NGO에게 성 평등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성 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부와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및 여타 부처들 또한 성 평등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4) 취약국가

2001년 9/11 사건이후 미 정부는 개도국의 빈곤과 취약한 제도 및 부패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취약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MCC 설립 – MCC는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발전을 보인 빈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설립됨.

-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S/CRS) 설립 – S/CRS는 분쟁이후 상황을 준비하고 분쟁이나 내전 전환기에 처한 국가들의 안정과 사회 재건을 돕기 위한 미국 시민들의 역량을 조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설립됨

- 2005년 미국은 '취약국가 전략(Strategy for Fragile States)'을 발간하였으며 분쟁관리 및 완화 부서(Office of Conflict Management and Mitigation: CMM)를 설립하여 분쟁완화가 USAID의 업무에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미국은 2005년 DAC이 발행한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개입의 원칙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미국의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안보 구축, 분쟁 감축 등의 이슈에 대한 제도적 틀로 삼고 있다. 미국은 또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국방과 개발, 그리고 인도주의 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 캐나다 [7)]

1) 원조 효과성

1995년 발행된 캐나다 외교정책보고서인 '캐나다와 세계(Canada and the World)'는 개발 프로그램은 인간 중심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개괄적인 정

7) OECD (2007), "Canad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책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CIDA(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와 함께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도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CIDA 역시 수원국의 역량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DRC는 수원국 역량개발을 위해 수원국의 개별 연구원 또는 연구팀을 지원하여 정보 공유, 기술 개발 및 정책결정자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DRC는 또한 역량개발에 관한 계획, 모니터링, 평가를 돕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프레임워크는 역량개발 방법, 역량개발이 필요한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취약국가

2002년부터 안보 문제는 캐나다 원조 자원의 지역적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캐나다 외교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CIDA는 OECD/DAC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캐나다의 취약국가에 대한 접근 방안을 공식화하기 위해 정책 문서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캐나다는 취약 국가 문제에 있어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복잡한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연방정부, 캐나다 기마경찰대, 재정부 등 여러 원조 관계 정부 부처들이 취약국가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취약국가에 대해 인간안보와 인도적 지원, 외교 교섭과 같은 전반적인 원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취약국가 원조에 있어서 건전한 거버넌스 지원, 안보 및 안정성 강화,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 평화와 안보 공동기금(Peace and Security Pool)으로 3억 83백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DFAI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와 CIDA는 취약국가에서의 원조 활동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고 위기대응 공동기금(Crisis Pool)으로 3억 33백만 캐나다 달러를 공동 출자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위기대응 공동기금은 내각의 승인 후 연방 부서로 배분된 수 있으며 군사 배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29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개발기금(Development Pool)은 CIDA의 지역적, 다자 또는 파트너십에 따라 장기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DFAIT와 CIDA는 개별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CIDA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수원국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원조를 제공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반면, DFAIT는 여러 정부 부서와 정책 조율 및 통합을 이끌며, 국제적 정치 채널을 통해 캐나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한다.

3) 성 평등

성 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양자원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성 평등 관련 원조 집행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CIDA는 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 평등 이슈를 범세계적인 정책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CIDA는 정책대화, 역량개발,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 활동 등의 분야에서도 성 평등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년 CIDA는 OECD 국가 최초로 크로스커팅이슈 평가도구인 '성 평등 평가 프레임웍'을 개발하였다.

(6) 독일[8)]

1) 빈곤 감소

독일은 OECD/DAC 회원국들 중 최초로 UN MDGs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빈곤감소에 대한 포괄적 정책 성명인 2015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2015, PA2015)을 공식 발표하였다. PA2015는 개발협력에 대한 어젠다를 선정하고 빈곤감소를 개발 협력과 모든 국가 정책에 주요 과제로 지정하고 있다. PA2015는 빈곤의 개념을 저소득(low income)에만 한정하지 않고 박탈(deprivation), 취약성(vulnerability), 불공평(injustice), 장래성 부족(lack of prospects)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독일은 10개의 우선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75개의 정부가 취해야 할 단계별 세부 대책을 구성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된 접근을 통해 빈곤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수원국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빈곤 감소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가) 민간 분야 개발

독일은 수원국의 빈곤감소 방안으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 정책을 재편성하고, 수원국의 민간 분야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곤 감소에 이바지하는 경제성장, 즉 '빈곤 친화적 성장'을 위하여, 독일은 OECD/DAC의 빈곤네트워크(POVNET)에서 빈곤 문제와 관련한 공여국 간의 협의 및 교류

8) OECD (2006), "German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민간 분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PPP를 민간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활용하여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돕는 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분쟁과 평화

독일은 분쟁 해결과 인간 안보를 10개의 우선 개발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삼고 해외 사무소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국방부 및 기타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분쟁 해결과 인간안보를 위한 160개의 활동을 원조 집행 단계에서 실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BMZ의 전략인 개발 원조를 통한 위기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 등의 내용을 통해 독일 원조 활동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쟁 방지와 평화 구축을 위해 독일은 10~15개국의 분쟁국가에 전문지식을 겸비한 현장직원을 파견하였으며 다양한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개발 서비스(German Development Service, DED)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폭력 사용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 평화 서비스(Civil Peace Service, CPS)를 운영하고 있으며, CPS는 BMZ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1999년 설립 이래로 CPS는 파트너 기관에 약 200명 이상의 시민 평화 운동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쟁 예방이나 분쟁 후 평화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3) 원조 효과성

BMZ는 2003년과 2004년 로마 선언의 원칙 이행을 위해 고안된 실행 계획 및 독일의 원조 성과 자가 평가안을 기초로 하여 원조 효과성에 관한 실천 방안인 'Operational Plan'을 수립하였으며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이행하고 파리선언의 원칙을 실제 원조 관리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BMZ는 또한 구체적인 활동 주제에 따라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실용 팀을 구성하여 모든 단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시스템은 주요 기관 및 관계자들의 협력 증진 및 절차의 간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네덜란드[9)]

1) 빈곤 감소

네덜란드의 정책 메모랜덤 '상호 이익, 상호 책임(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ies)'은 지속적 빈곤 감소가 네덜란드 개발 정책의 큰 틀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개발 정책 원칙은 빈곤 감소를 고려하여 세워진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수원 대상국 선정 기준으로 빈곤의 정도를 고려한다. 현재 네덜란드의 26개의 파트너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속하며 이들 중 16개국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1990년대 초 네덜란드는 'A World of Difference'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빈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네덜란드 양자원조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이 수원국 내의 대사관으로 재편성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범분야적 접근방법(SWAps)이 빈곤 감소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개발 협력을 이끄는 원칙으로 도입되었다. 네덜란드 양자 개발협력의 운용 원칙으로서 SWAps을 평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SWAps 정책은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SWAps을 통해 농촌지역의 보건 시설 개선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수원국 정부의 정책 내에서 빈곤이 더욱 강력한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2) 거버넌스

네덜란드는 건전한 거버넌스를 지속적 빈곤 감소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인권, 민주 원칙, 부패와의 전쟁, 사업 환경, 천연 자원 관리, 불법 이주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건전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또한 건전한 거버넌스와 수원국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민간 분야 개발

네덜란드는 활기찬 민간 분야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의 필수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수원국의 사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네덜란드는 부패와의 전쟁, 금융부문

9) OECD (2006), "Netherlan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과 무역 역량 강화, 거시경제 안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36개 수원국에 주재하고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들은 투자가능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파악하는 수원국 사업환경스캔(Business Climate Scan)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트랙 레코드로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민간투자의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향후 네덜란드 개발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수원국 국내 기업인들을 위한 사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자산이 해외직접투자보다 크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 종국적으로는 빈곤 감소에 더욱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내의 시장 환경 향상을 지원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개혁과 사업환경스캔을 통한 접근 뿐 아니라 네덜란드는 개도국 내의 네덜란드와 타국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파트너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지원은 네덜란드 전체 ODA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수출 거래 지원, 인프라와 소액금융(microfinance)에 대한 지원,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 수원국 금융부문 강화, 무역 기회 및 해외직접투자 증진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4) 성 평등

네덜란드는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 증진을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는 IFIs, UN 기관, 그리고 EC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DAC 성 평등 네트워크의 주요 회회원국 중 하나이다. 또한 '상호 이해, 상호 책임'에서도 젠더 주류화와 프로그램에 기반 한 원조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직접 지원과 네덜란드 NGO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인권조직과 현지 여성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성 평등 정책은 성 주류화와 여성 권한 강화라는 두 가지의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매우 성공적인 성 주류화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양성 간 평등한 기회를 다년간 전략 계획과 대사관의 연간 계획과 보고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무부에는 7.6명으로 구성된 젠더 전담반이 있다. 또한 17개 대사관에는 젠더 자문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지 출신이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성 평등과 주류화에 대한 워크숍 및 직원 훈련 등을 통해

네덜란드의 성 평등 분야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5) 원조 효과성

네덜란드는 2005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을 실행하고 있으며, 외무부는 원조 효과성 Action Plan을 곧 개발할 예정이다. 원조 효과성 고취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은 연간 예산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2006년 이래로 외무부 연간 예산에는 파리 선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파리 선언 원칙 실행 의무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있으며, 대사관은 다년간 전략계획(multi-year strategic plan)과 연간 계획을 통해 파리 선언의 내용을 집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네덜란드 개발협력은 파트너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을 통해서라는 원칙이 실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도 수원국 개발 어젠다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는 젠더 주류화를 주로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또한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와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일치(alignment)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05년 원조의 효과성 및 질 부서(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 DEK)가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는 재정경제부서에 원조조화 데스크를 설치했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원조조화 네트워크를 정비했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도구로는 SWAps과 예산 지원을 들 수 있다. 1999년 네덜란드 외무부는 네덜란드 양자개발협력의 운용 원칙으로 SWAps을 도입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수원국의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원조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네덜란드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MASPs(multi-annual strategic plans), 트랙 레코드 등을 사용하고 있다.

(8) 스위스[10)]

1) 빈곤 감소

스위스는 빈곤 감소를 원조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와 SECO(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를 통

10) OECD (2005), "Switzer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해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위스는 건전한 민간 분야가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식 하에 개도국 민간 분야 개발을 위해 투자, 중소기업 지원, 금융 시스템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 투자 촉진

1997년 설립된 스위스 투자촉진기구(Swiss Organization for Facilitating Investment, SOFI)는 민간 컨설팅 회사와 SECO의 합작회사이며 OECD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활동을 돕는다. 금융, 자문 외에도 SOFI는 수원국에 주재하는 50여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SECO는 또한 기술 · 재정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금융 분야 개발

스위스는 개인금융자산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의 비교 우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위스는 안정적인 거시 경제와 경쟁력 있는 금융 기관 설립을 통한 국가 금융 시스템 개발, 다자와 양자 협력을 통한 국제 금융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양자 금융 부문 지원은 대부분 개인금융, 상업금융과 같은 기술 노하우 전수, 조직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원조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 거버넌스

스위스는 자국의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시민사회-민간분야를 모두 고려한 수원국 내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으로 스위스는 지적재산권 규제 시스템 도입, 경쟁 정책, 법률 시스템 강화 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헌법 개혁과 인권 문제를 포괄한 공공행정개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민주적 행정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3) 성 평등

스위스는 2001년 동료심사이후 빈곤감소를 SDC와 SECO의 통합적 정책 목표로 설정

하였으며 SDC의 정책은 특히 빈곤과 젠더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SECO는 빈곤감소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성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지 직원 채용에서도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하는 등 여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무역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스위스는 경제 성장에 있어 무역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SECO는 개도국에 대하여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및 경쟁 정책 등과 같은 무역관련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 협상 절차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프레임웍과 훈련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이 WTO에서 적절한 협상 절차를 이끌 수 있도록 통계, 연구 등의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무역역량강화 훈련체계를 개발했다.

(9) 호주[11)]

1) 원조 효과성

호주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효과성사무소(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설치하였고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호주 외무부와 국회가 협력하고 있다.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호주는 'AusAID 2010'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의지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수원국과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과 성과 지향적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리포팅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호주는 군소 도서국이나 취약국가 내 파리 선언 이행 및 모니터링이 어려움을 인식하여 수원국의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 수원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 다른 공여국과 원조 전략을 공유하고, 수원국의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하면서 모든

11) OECD (2009), "Australi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자금원을 예산 수립 등에 확보함
· 공여국 간 원조 조정 및 팀워크, 공동 분석 및 역할 분담 실시
· 공공 재정관리 및 평가 감독 수행과 관련하여 수원국 시스템 강화 및 사용
· 수원국 역량 구축
· 수원국의 모니터링 및 지출시스템 사용
· 원조 집행 과정에서 수원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호주는 또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접근법을 원조 이행 및 계획 수립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원조전략 수립 과정에도 범정부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솔로몬 제도 원조에는 호주 연방경찰, 호주 외교통상과, AusAID, 재무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해 호주는 수원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맞게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역량 개발

호주는 수원국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원조 프로그램에서 역량 개발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수원국 역량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주류화 전략과 함께 호주는 해당 수원국에 대한 원조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수원국의 리더십 구축을 지원하고, 수원국 역량을 보장하는 등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여러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더불어 호주는 역량 개발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에 장학금 및 자금을 지원하며, 수원국 정부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역 역량 및 주인 의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3)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호주 개발 원조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AusAID의 Programme Enabling Division 내 반부패, 거버넌스 및 취약국가를 담당하는 거버넌스 및 역량개발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2002년 호주는 '성장과 안정성, 그리고 번영을 위한 투자'라는 정책 프레임

웍을 구축하여 1) 수원국 경제 및 재정관리 제도개선 2) 수원국 사법 체계 강화 3) 수원국 공공분야 효과성 증진 4) 수원국 시민사회 발전 5) 수원국 내 민주주의 강화의 5가지 행동 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빈곤 감소와 거버넌스를 연계시켜,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지원이 빈곤 감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 지원이 빈곤 감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기본 사회서비스를 조달하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2007년 호주는 기본 사회서비스 조달을 개선하고 수원국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교육과 정부 책임성, 시민사회 강화, 리더십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더불어 호주는 부패를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며 부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부패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 오스트리아[12)]

1) 원조 효과성

오스트리아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원조 효과성 원칙을 개발협력법령, 2007-2009 3개년 프로그램 및 2008-2010 국별 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오스트리아개발기구(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와 MFA(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MFA)는 원조 효과성에 과한 합동 실천 방안을 개발했다. ADA에서 원조효과성 실천 방안을 관리하며 협력 사무소에서 실천 방안을 집행한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스트리아는 수원국과 지원 분야의 수를 줄였으며 ADA 예산의 10-15%를 예산지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또한 ADA는 파리 선언 집행 방안을 보여주는 매트릭스를 개발했다.

2) 역량 개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법령은 역량 개발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05년 ADA는 역량 개발에 관한 질적 기준을 개발했으나 아직까지 주류화 되지는 못했다.

12) OECD (2009), "Austri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특히 오스트리아는 분산화(decentralization)와 민간부문협력을 통해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화 전략에 있어 역량 개발은 수원국의 자체 관리, 주인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강화시켜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역량 개발은 개발정책과 해외무역증진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현된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기술 지원을 통한 수원국 역량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07년 현재 오스트리아 ODA의 10% 정도가 기술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며 기술 지원에는 장학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3) 환경

오스트리아는 환경과 개발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발협력법령에서도 환경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환경법과 환경과 기후변화 전략은 주요 개발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교토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원칙과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전략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원조 프로그램 차원에서 오스트리아는 환경을 개발의 크로스커팅 요소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다음 4개의 우선 분야를 지정하여 환경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분야는 1) 지속적인 천연자원관리, 사막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존, 2) 기후변화 3) 물과 정화시스템, 4) 화학물질과 쓰레기 관리이다.

(11) 벨기에[13)]

1) 분쟁과 평화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의 여러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2002년 7월 DGDC(Directorate General of Development Cooperation)는 평화 구축에 관한 전략 페이퍼를 발간했다. 동 문서에 의하면 취약국가에 대한 벨기에의 ODA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을 둔다: 1) 국회제도와 민주문화 강화 지원, 2) 무장해제, 군대해체 및 재통합, 3) 분쟁 지역의 어린이에 대한 지원, 4) 대인지뢰와의 전쟁, 5) 소형 무기 확산 방지이다. 벨기에는 또한 인권 부문 향상을 위해 인권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삼아 지원하고 있다.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해 벨기에가 적용하고 있는 접근방식으로 우선 지역전략접근법을 들 수 있다. 2001년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에 관한 실천 방안을 만들었으며 해당 지

13) OECD (2005), "Belgiu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역에서 원조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아프리카 전문가를 고용하였다. 이는 벨기에 지역전략접근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취약국가에 대한 벨기에의 원조개입은 장기적 시각을 갖고 진행되며 해당 지역의 여러 상황 전개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입각한다. 동시에 벨기에는 취약국가의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제도 강화, 분쟁 예방 및 안보, 화해 및 인권, 경제 회생 및 커뮤니티 개발 부문에 대한 원조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지역 현지에 대한 직접적 원조와 더불어 벨기에는 취약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외교 대화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분쟁 지역에 대하여 지역전략접근방식, 현지 상황 분석에 따른 개입, 장기적 개입,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여타 주요 부문에 대한 원조 등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적용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벨기에는 여러 다양한 원조 채널을 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취약국가 국민들과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벨기에는 상황에 따라 직・간접 원조, 양자・다자 원조 등 원조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벨기에의 다양한 원조 채널을 통한 취약국가 지원은 벨기에 원조의 유연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연한 원조 채널에 기반 하여 벨기에는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같은 수원국에서 동시에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벨기에는 취약국가에 대해 다자간 제도를 통한 지원 방식을 지향한다. 2001년 12월 벨기에는 Multi-Country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MDRP)에 가입했다. 동 프로그램은 중앙아프리카 7개 취약국가를 포함하며 MDRP의 신용기금은 세계은행에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벨기에는 취약국가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교와 협력, 안보 관계를 긴밀히 조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과 부룬디에서 벨기에의 공동협력/안보 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부처와 정기 미팅을 통해 외교, 협력, 안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 환경

벨기에는 빈곤 감소와 환경보호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벨기에의 개발협력 전 단계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식수관리,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삼림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종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 기

후변화 방지 및 완화, 도시 및 교외지역의 생태계 관리를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보호를 위한 6가지 우선 사항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우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방의회(Feder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한 대중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3) 성 평등

2002년 벨기에는 성 평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수원국의 성 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및 NGOs와의 협력 도모 및 벨기에의 원조기관의 성 평등 관련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여성과 개발 위원회(Commission on Women and Development)를 설치하여 대중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조언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용하여 원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집행될 때 크로스커팅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크로스커팅이슈인 환경과 성 평등이 OECD/DAC이 제시한 영역과 함께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잘 융합되도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양성평등 분야에서 UNEP이나 UNIFEM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12) 덴마크[14)]

1) 원조 효과성

가) 수원국 역량개발

파리선언에서 수원국 역량개발을 강조하기 이전부터 덴마크는 수원국 역량개발을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로 인식해 왔으며 최근 덴마크는 개인 또는 개별기구의 역량강화에서 특정 분야 또는 정부의 제도적 · 조직적 역량강화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덴마크는 조직 내 역량개발 지원과 내 · 외부적인 역량개발양상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역량개발결과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기타 북유럽 공여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공유 및 개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원조 프로그램에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원조 집행 시 효과적 수원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안내서

14) OECD (2007), "Denmark: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도입 시 사전 역량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대사관 및 주무부처의 직원들을 위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계획 · 구성 · 평가 등의 단계별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 민간분야 개발

최근 덴마크는 수원국 내 민간분야 개발을 위해 원조 방향을 기존의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원조에서 여성과 빈곤층에게 동등한 기회와 이익을 제공하는 민간분야 환경 조성으로 전환하였다. 덴마크는 수원국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직업 창출과 금융서비스의 조달을 지원하는 혼합차관프로그램(Mixed Credits Programme)과 수원국 내 공공민간파트너십 등을 도입하여 민간분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는 또한 수원국 국민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채 경감, 다자원조 프로그램, 반부패 행동계획, 개발도상국산업화기금 등의 간접 수단으로 민간분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성 평등, 환경 및 거버넌스

덴마크는 크로스커팅 이슈들과 중점 주제들에 대해 강력한 정책 프레임웍을 개발하였다. 특히, 환경 문제의 주류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툴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 평등 문제를 위해 2004년에 양성평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었으며 2006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개발에 대한 약속– 덴마크 개발협력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최우선과제 2007–11(Commitment to Development–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2007–11)"의 3가지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외교부 장관 역시 이 부문에 강력한 역점을 두고 2006년 9월 외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역설하기도 했다. 성 평등은 덴마크의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 및 국가 전략 수립 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주요 원조목표가 되었으며 양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류화와 함께 성 평등에 대한 특별 개입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06년 11월 덴마크 외교부내에 성 평등팀이 도입되었다. 성 평등 팀은 덴마크 개발협력 정책에 있어서 성 평등 문제의 주류화를 촉진하고 성 평등 문제를 원조 효과성에 더욱 더 잘 연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팀에는 Danida 모든 부서 대표들과 모든 해외공관 및 다자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 정부는 건전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반부패 투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4년 이후 Danida 반부패 Action Plan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반부패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인 e-학습이 제공되었고 2005년 10월에는 모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또한 개설되어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3) 프랑스[15)]

1) 원조 효과성

2005년 3월, 프랑스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주최했고, 이 회담에서 파리 선언이 채택되었다. 프랑스는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한 Action Plan을 만들었고 2006년 12월에 Action Plan을 발표했다. 특히 수원국 주인의식, 원조 일치, 원조 조화를 위한 실행 도구로서 프랑스는 파트너십 프레임웍 다큐먼트(partnership framework documents: PFDs)를 도입했다. PFDs는 수원국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PFDs는 또한 분야별 실천 스케줄을 포함함으로서 프랑스 원조의 예측성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역량 구축

프랑스는 개발 원조를 시작한 이래 수원국의 역량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채택하고 원조 효과성과 거버넌스 제고를 통해 수원국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원조분야 또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원조행위를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 수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년 프랑스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원국의 역량구축을 프랑스 원조의 주요 원조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OECD/DAC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프랑스는 수원국의 역량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원국 역량 구축을 위한 ODA 비율을 증가시킴
- 다자원조에 활발히 참여하고 역량 구축 개발 프레임웍을 활용 함

15) OECD (2008), "Franc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 프랑스의 원조를 현대화하고 원조 목표를 다양화 함
• 수원국 기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개발 함
• 역량 구축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 냄

3)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프랑스는 평화 및 안보 이슈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분쟁 국가의 근본 원인을 취약한 거버넌스와 정치적 불안정성이라고 판단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취약국가와 관련한 프랑스 원조정책을 정리한 정책지침서를 출간하였다. 동 지침서에서 프랑스는 수원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붕괴 방지를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원조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했으며 취약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국가–사회관계회복을 통해 빈곤 감소를 달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취약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도 강조하였다.

취약국가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 프랑스는 원조 프로그램 집행 환경의 특색에 따른 맞춤 원조 패키지 마련, 국가 기능 복원 지원, 위기에 처한 국가 뿐 아니라 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조기 지원, 공동 분석, 체계적 정보 공유 및 위기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 구축,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개발에 있어 자문가의 조언 반영, 취약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 다자지원을 통한 취약국가 지원, 원조 소외국에 대한 지속적 양자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14) 그리스[16)]

1) 민간 분야 개발

그리스는 민간 분야 개발 부문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발칸 지역에 대한 그리스의 민간 투자는 증가했다. 수원국 민간 분야 개발을 위해 그리스는 양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파트너십과 공적개발원조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발칸 프로그램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스는 또한 수원국 민간분야 개발을 위해 Hellenic Republic Consultant 신탁 기금, Hellenic Republic – EBRD 기술 협력 기금, 기술협력특별기금과 같은 기술 원조 및 서비스에 구속되어 있는 신탁 기금을 설립했다.

16) OECD (2006), "Greec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2) 분쟁과 평화

그리스는 EU 및 NATO와 함께 이웃 수원 국가들의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알바니아 정부의 법치 강화와 국경 안보 정책을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는 알바니아 경찰에 대해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는 또한 수원국의 인신 매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는 부처 간 위원회를설립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수원국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었다.

(15) 아일랜드[17)]

1) 역량 개발

Irish Aid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국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수요중심의(demand-driven), 수원국 주인의식에 기반한 접근, 현지 관리와 기술 지원, 그리고 수원국 국가 시스템 사용 등을 통해 수원국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일랜드의 "불간섭(hands-off)" 접근방법은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시스템과 역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아일랜드는 또한 기술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Irish Aid는 초등 교사들의 교과내용 수정과 집행을 돕기 위해 1명의 전문가를 지원했으며 해당 전문가는 우간다 정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가전략에 시민사회지원을 포함함으로서 수원국 시민사회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아일랜드의 수원국 시민사회 역량 구축 활동에는 조직개발과 관리, 사업계획과 인프라 제공, 직원 훈련 등이 있다. 아일랜드는 또한 장학금, 훈련, 고등 교육 제도 지원 통해 수원국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수원국 역량개발을 위해 또한 Irish Aid는 2008년 10월부터 개발전문가 1명을 Policy, Planning, and Effectiveness 부에 배치하고 있다. 본 개발전문가는 역량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역량개발 정책과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DAC과 EU를 통해 역량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해당 개발 전문가는 아크라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역량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아일랜드 원조에 적용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17) OECD (2009), "Ire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2) 원조 효과성

아일랜드는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국별 프로그램에 원조 효과성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일랜드의 주요 메커니즘 및 수단에는 SWAps, 다른 공여국과의 공동접근, 그리고 수원국 비교우위분야식별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 '파리 선언 적용을 위한 아일랜드 원조의 Action Plan 2008-2010'에 의하면 아일랜드는 파리 선언을 아일랜드 원조의 MDGs 기여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동 실천 방안을 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크라 행동계획의 내용도 반영하기 위해 Action Plan을 수정 중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원조 효과성 향상과 파리 선언 적용을 위해 트랙 레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유동성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수원국 주인의식과 수원국의 개발 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수원국 주인의식 고취와 원조 일치를 위해 아일랜드는 수원국 환경 분석,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분석, 원조 분야별 전략과 정책 수립,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프레임웍 (예, 공동지원전략)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해당 수원국 상황에 맞는 원조를 위해 프로그램 국가 소재의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국별전략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보고서 IV. 2. OECD/DAC 권고사항 적용 모범 사례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부분 참조.) Irish Aid 본부가 다년간 국별전략에 대한 전반적 재정 범위를 결정하고, 아일랜드 국회에서 매년 이를 확정하면,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서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Irish Aid는 본부와 현장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아일랜드는 또한 전체 ODA의 84%를 프로그램에 기반 한 형태로 지원함으로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원조 일치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아일랜드는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원조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는 국별전략페이퍼를 개발할 때 해당 페이퍼가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계획 사이클과 타이밍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위해 우간다에서 Irish Aid는 HIV/AIDS, 교육, 그리고 치안(justice)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업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은 감소시켰다. 또한 아일랜드는 2007년 현재 22개 공동국가분석 대상 중 18개를 다른 공여국과 함께 수행했다. 더불어 공동 평가에 대한 Irish Aid의 구체적 정책과 가이드라인도 개발 중이다.

• 성과 지향적 관리와 상호 책임성 강화

성과 지향적 관리와 상호 책임성 강화 제고를 위해 아일랜드는 결과와 모니터링 프레임웍, 성과(performance) 측정 프레임웍, 위험 분석 매트릭스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험 분석 매트릭스는 아일랜드 개발 원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아일랜드는 또한 국가전략페이퍼에 성과 지향적 관리 접근을 도입하고 있다. 성과 지향적 관리 제고를 위해 아일랜드는 국가전략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성과에 대한 논의 증진, 2)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를 성과와 일치시킴, 3) 측정과 보고 체계를 간소화 함, 4)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위한 관리, 5) 성과 정보를 의사 결정에 반영함.

3)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아일랜드가 크로스커팅 이슈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원조 주제 중 하나이며 "거버넌스와 시민사회"분야의 지원은 Irish Aid 양자 원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버넌스, 반부패 및 상호 책임성에 관한 Irish Aid의 구체적 정책과 접근방법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Irish Aid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Building Good Governance)'에 의하면 Irish Aid는 "건전한 거버넌스" 개념을 다음 8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1)부패와의 전쟁, 2)민주적 시스템과 정부 건설, 3)서비스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구축, 4)인권 증진과 보호, 5)법치주의 강화, 6)튼튼한 시민사회 건설, 7)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8)글로벌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이다.

역량 개발과 마찬가지로 Irish Aid는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수원국 상황을 고려한 수원국 맞춤형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거버넌스의 주류화를 통해 거버넌스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Irish Aid의 모든 원조 프로그램에 거버넌스를 주류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더불어 Irish Aid는 시민사회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아일랜드는 DAC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등 국제무대에서도 거버넌스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는 거버넌스 전략을 집행하고, 거버넌스를 위한 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일관성을 보장하고,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교훈, 그리고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거버넌스 전담반 설치를 계획 중이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16) 이탈리아[18)]

1) 빈곤 감소

빈곤 감소는 오랜 동안 이탈리아 개발협력의 중심점이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는 1999년 '빈곤 감소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빈곤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세웠다.

- 수원국 거버넌스와 공공분야 관리 향상을 통해 빈곤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정치 및 행정의 분권화
- 분야별 접근과 통합된 현지 개발 접근(integrated local development approach)의 결합
- "이탈리아 시스템"내의 모든 관련 행위자와 다른 공여국과의 조정을 통한 원조 운용

특히 이탈리아는 통합 접근 방식을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헬(Sahel)에서의 이탈리아의 빈곤 감소 원조 활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헬의 빈곤 감소를 위해 먼저 이탈리아는 현지 행정가, 농촌 커뮤니티와 농민 단체가 이탈리아 NGO와 해외 농업기관이 지원하는 여러 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탈리아 원조 프로그램은 다부문 (multi-sectoral)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농촌 커뮤니티의 수입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이탈리아는 수원국 정부가 빈곤 감소 정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2) 성 평등

성 평등을 위해 이탈리아가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실행 도구는 주류화 정책이다. 1998년 이래 이탈리아 정부는 젠더의 주류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탈리아는 빈곤 감소 프로그

18) OECD (2004), "Ital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램에 성 평등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젠더 문제에 대한 정책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쟁 국가의 재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거버넌스 프로그램에도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DGCS(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는 "위기상황에서의 젠더(Gender in Emergencies)" 매뉴얼을 발간하여 인도적 지원에도 젠더의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HIV/AIDS

이탈리아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수원국 내 질병이나 HIV/AIDS 예방을 지원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또한 AIDS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GFATM)가 창설된 이래 이탈리아는 1억불의 기금을 약속함으로서 HIV/AIDS 퇴치에 대한 이탈리아의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였고 2000-2006년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금을 GFATM에 기부하였다. 현재 이탈리아는 GFATM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한 HIV/AIDS 퇴치에 국내 NGO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정부 대표는 시민사회와 함께 HIV/AIDS 퇴치와 관련한 다양한 회담에 참여하여 AIDS 퇴치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17) 일본[19)]

1) 빈곤 감소

일본 외무성은 원조 활동에 있어 빈곤 감소보다 수원국의 "경제 성장" 또는 "개발"을 강조해 왔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발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개발 경험을 원조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는 주로 ODA 차관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수원국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두어왔다. 일본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무역 및 투자 정책을 개발 협력과 연계시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일본 자체의 원조모델을 개발했다. 일본은 또한 수원국과 양자 또는 지역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분야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빈곤 감소에 대한 지구적 운동에 영향을 받아 JICA(Japanese Interna

19) OECD (2003), "Japa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tional Cooperation Agency)는 빈곤 감소를 위한 직접적 원조를 늘리고 있다. DAC의 빈곤 감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2년 JICA는 빈곤 감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빈곤 문제와 개념에 대한 정의, 빈곤 감소 원칙 및 전략, 그리고 빈곤 감소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와 중점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다. JICA가 개발한 동 빈곤 감소 가이드라인은 또한 경제 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교육, 보건 및 정치・사회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동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현장에서 빈곤 감소를 위해 적용해야 할 구체적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의 빈곤 감소를 위해 다루어야 할 각각의 중점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2) 분쟁과 평화

평화 구축은 빈곤 감소, 지속적 성장 등과 함께 일본의 주요 원조 목표 중 하나이다. 1998년 이래로 일본은 인간 안보를 개발 협력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 왔다. 일본은 특히 빈곤, 보건, 난민, 환경 및 평화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2001년 인간안보위원회 설립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인간 안보 분야의 UN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인간안보기금(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설립 운동에 앞장섰다.

2002년 5월 일본 수상이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평화 및 국가 건설을 위한 통합적 지원 강화"를 발표한 이래 평화 구축은 일본 개발협력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일본은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이라크에서의 안보,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및 재건을 지원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은 인프라 구축 외에 무장해제, 군사의 사회적응, 교육, 보건, 식수, 재정착 및 성 평등을 지원했다.

(18) 룩셈부르크[20)]

1) 빈곤 감소

룩셈부르크는 빈곤 감소를 개발 협력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과도한 채무와 정치적 의지 결여로 인해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기초 사회 분야에 원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빈곤 감소를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룩셈부르크는 소액금융을 도입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소액금융을 통해 빈곤층이 생산수단

20) OECD (2008), "Luxemburg: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에 더 쉽게 접근하고 수입 창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소액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정책 대화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내부에서도 수원국을 위한 소액금융에 관한 관심 및 재정적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OECD/DAC은 수원국 내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빈곤친화적인 성장을 권고하고 있으나 소액금융에 관한 실제적인 정의나 권고사항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소액금융 지원을 포함한 금융 분야 지원의 성공사례 공유 및 정리를 통해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자국 NGO를 활용하여 소액금융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2) 원조 효과성

룩셈부르크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룩셈부르크는 주인의식, 파트너 국의 개발 목표와 공여국의 원조 일치, 예측성 강화,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 조정을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다. 파리 선언 채택이후 개발협력 장관은 파리 선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룩셈부르크는 파리 선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먼저 외무부와 Lux-Development의 모든 직원들은 세미나를 통해 파리 선언의 내용을 교육받았으며, 파트너 국가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파리 선언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아직까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3) 역량 개발

룩셈부르크는 역량 개발을 성공적인 개발원조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동료심사를 위해 외무부가 준비한 메모랜덤에 의하면 룩셈부르크는 역량개발을 훈련, 기존 역량의 강화, 그리고 제도 강화의 3단계로 구분한다. 룩셈부르크의 모든 양자 프로젝트는 위의 3가지 형태의 역량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Lux-Development는 역량 개발을 방법론 가이드에 반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원조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부터 역량 개발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19) 뉴질랜드[21)]

1) 빈곤 감소

뉴질랜드의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NZAID(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21) OECD (2005), "New Zea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Development)는 2001년 설립될 당시 개발도상국 내 빈곤 감소를 뉴질랜드 원조의 궁극적 목표로 천명하였다. NZAID는 빈곤 감소를 위해 국가, 지역, 국제 차원에서의 정책 프레임 웍 개발을 지원하고 풀뿌리 조직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AZID는 빈곤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빈곤 상태를 구분한다.

-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 – 기본 생계수단이 부재한 상태
- 기회의 빈곤(poverty of opportunity) – 생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기회 및 인프라가 제한된 상태
- 빈곤의 위험이 있는 상태(vulnerability to poverty) – 개인, 커뮤니티, 또는 국가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기초 생활 수단의 영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상태

뉴질랜드는 또한 경제 성장 및 민간 분야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를 지향한다. 한 예로 뉴질랜드는 Asia Development Assistance Facility(ADAF)를 통해 민간분야 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공해 왔다. ADAF 기금은 뉴질랜드 파트너와 뉴질랜드 원조 기관이 뽑은 여러 개발 캠페인에 제공된다. 기금 수여 대상자는 개인, 컨설턴트, 기업, 또는 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 ADAF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서에는 해당 개발 캠페인이 어떻게 빈곤 감소와 성 평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제안서는 또한 환경 보호와 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2) 분쟁과 평화

뉴질랜드는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을 뉴질랜드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NAZID 원조의 근본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 '빈곤이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of free of poverty)'에 의하면 분쟁 예방과 취약국가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뉴질랜드는 다음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거버넌스를 지원하며 인권을 존중함
-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모든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함
- 기초사회서비스를 향상시킴
- 경제 개발을 촉구함

NAZID는 또한 리더십 개발, 여성권한 강화, 청소년 교육, HIV/AIDS예방, 사법 시스템 강화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 예방, 중재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현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솔로몬 섬에서 뉴질랜드는 경제 개혁과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통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태평양 아일랜드 포럼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솔로몬 섬의 평화 구축과 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3) 무역

뉴질랜드는 2001년 도하 장관회의에서 발족한 다자무역 협상의 결과를 개발협력에 반영하여 수원국 무역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국의 무역 증진을 위해 뉴질랜드는 수원국의 수출 지원, 수원국에 대한 특화된 대우 및 무역 역량 구축, 시장접근 개선, 우선과제 설정, 수원국의 무역활동 제약 및 취약점을 고려한 농업 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다. 더불어 NAZID는 개발도상국이 다자 무역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NZAID는 또한 물자 제약 문제가 개도국 무역 활동에 큰 방해 요소라는 분석하에 개발도상국에 수출 관련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20) 노르웨이[22)]

1)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구축, 인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성 평등, 깨끗한 에너지, 건전한 거버넌스 및 부패 척결, MDGs와 함께 노르웨이 정부의 원조 우선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4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생태 다양성과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식수 자원 및 위생 관리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깨끗한 에너지 도입
- 위험 물질 관리

노르웨이는 국별 프로그램에 환경을 포함하는 전략을 통해 수원국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우간다 국가삼림부를 지원했으며, 말리 정부의 델타 지역에

22) OECD (2008), "Norwa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서의 천연자원관리 분산화를 지원했고, 탄자니아의 삼림 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말라위 농업 프로그램에도 환경을 포함했다.

최근 들어 노르웨이는 기후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노르웨이는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아마존,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양자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와 관련한 연구, 기술 협력 및 민간부문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한 다자간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성 평등

노르웨이는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의 주창자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공여국이다. 노르웨이 외무부가 2004년 작성한 'Fighting Poverty Together'에는 다음과 같은 성 평등을 위한 노르웨이의 Action Plan이 포함되어 있다.

- 개발 협력에서의 여성 권리와 성 평등을 위한 실천 방안
-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의 적용을 위 한 실천 방안 (2006)
- 인신매매에 관한 세 번째 실천 방안 (2006)
- 여성 생식기 훼손에 관한 실천 방안 (~2010년까지)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보다 명확한 주류화 전략과 성 평등을 위한 충분한 자원 배분을 통해 수원국에서의 성 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또한 성 평등 대사(Gender Equality Ambassador)를 임명하고 UNIFEM에 대한 지원을 4배로 늘렸으며 DAC의 젠더 네트워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원조 효과성

노르웨이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대 이래로 노르웨이는 수원국 주인의식 고취,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를 통해 노르웨이 개발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추구해왔다. 먼저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르웨이는 일찌감치 분산화(decentralization) 정책을 도입했다. 2004년 노르웨이는 원조 시스템 분산화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노르웨이 양자 원조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주요 권한과 책무는 수원

국 현지 사무소가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주인의식을 매우 강조한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노르웨이는 수원국 주인의식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DAC 동료심사 팀이 작성한 탄자니아 현지방문 보고서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에 노르웨이 원조를 일치시켰으며 주요 원조 형태로 예산 지원을 도입했다. 아울러 예산 지원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르웨이는 반부패 운동과 공공재정관리를 지원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 특히 Nordic Plus 그룹 회원국 간의 원조 조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원조 조화를 위해 노르웨이가 개발한 구체적 도구이다.

- 공동 재정지원 가이드 (2004년 2월에 개발)
- 공동 조달 정책과 가이드 (2004년 11월에 개발)
- 공동 지원 전략 과정에서의 분업(division of labor)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성 원칙 개발 (2005년 11월에 개발)
- 위임 협력(delegated cooperation)에 관한 실용 가이드 (2006년 10월에 개발)

4) 역량 개발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빈곤 감소는 노르웨이 원조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역량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는 주류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분야별, 주제별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역량 개발의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수원국의 정부 기능 역량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는 수원국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늘리는 한편 예산 지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수원국 역량 개발을 위해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지원과 수원국이 선정한 주요 부문에 대한 원조 지원을 강조한다. 더불어 노르웨이는 또한 다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원국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OECD/DAC을 포함, 노르웨이는 역량 개발 정책과 접근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국제 네트워크와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거버넌스

노르웨이는 수원국 내의 부패 척결과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 메커니즘으로 노르웨이는 범정부적 접근과 지속적 정책 대화 및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다. 특히 부패 척결 분야에서 노르웨이는 선도 공여국 중 하나다. 수원국 정부 관료들의 부패 척결을 위해 노르웨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 및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 가난한 국가에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빼앗긴 공공 재산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빼앗긴 재산 되찾기 운동(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을 추진함
- 검사, 판사, 및 반부패 단체들의 대표들의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부패 헌터 네트워크(Corruption Hunter Network)에 대한 지속적 지원

더불어 노르웨이는 부패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회사들에 대해 이들 회사들이 가난한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반부패에 대한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자국 직원의 부패를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자국 직원의 부패에 대처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행동 수칙을 도입했으며 동 수칙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내부 감시반을 새로 설치했다.

(21) 포르투갈[23)]

1) 빈곤 감소

포르투갈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빈곤 감소를 포르투갈 개발협력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육, 보건, 농촌 개발, 환경 보호, 경제성장과 민간분야 개발을 통해 수원국의 빈곤 감소를 지원하고 있다. 각 주요 수원 대상국의 빈곤 감소를 위해 포르투갈은 우선 해당 수원국에 대한 포르투갈의 비교 우위 영역(언어, 역사적 관계, 유사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웍 등)을 파악한 다음, 이에 기반 하여 포르투갈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원조 분야를 선정하여 원조를 지원한다. 포르투갈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안보 영역에 대한 원조 지원 모두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또한 교육을 통해 빈곤 감소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기초 교육, 고등 교육의 질 강화 및 장학 프로그램의 보완 등을 통해 기존 교육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23) OECD (2006), "Portug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2) 취약국가

포르투갈은 분쟁예방, 평화구축 및 취약국가 지원에 관한 국제적 정책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는 수원국의 10개국 중 6개 국가, 그리고 6개의 우선 지원 국가 중 5개가 OECD/DAC에 의해 취약국가로 지정되었거나 분쟁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은 이들 취약상황에 있는 수원국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의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은 이러한 취약 상황에 있는 수원국에 대하여 통합된 다자 및 양자 지원, 국가 방어 구조 개혁, 방위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군대 개혁, 군사 훈련 및 국제법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행동 강령 마련, 인권 및 국제인권법 준수 등을 강조한 취약국가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OECD/DAC은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통해 9개 수원국에서 취약국가 지원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고 포르투갈은 기니비사우의 시험 실시를 자원하여 지원하였다. 포르투갈이 기니비사우에 지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지원과 원조 집행이 요구된다. 비록 비사우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포르투갈의 원조 과정이 늦추어지기는 했으나 기니비사우에 대한 포르투갈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기니비사우라는 국가의 취약상황과 필요사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은 또한 티모르-레스테의 취약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티모르-레스테에서 포르투갈은 취약국가에 대한 DAC의 국제개입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안했다. (DAC의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개입 원칙을 적용한 티모르-레스테에서의 포르투갈 원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OECD/DAC 2006, Portugal: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 p.45 (Box 4)을 참조.)

(22) 스웨덴[24)]

1) 빈곤 감소 및 MDGs

빈곤 감소는 오랫동안 스웨덴 개발 협력의 주요 목표였다. 최근에는 빈곤 감소와 함께 MDGs 또한 스웨덴 개발협력 정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 감소와 MDGs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웨덴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스웨덴은 MDGs 캠페인을 시작했고, ODA 양을 증액했으며, 원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

24) OECD (2005), "Swede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aris: OECD.

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개도국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 개방을 지원하며, 가난한 국가들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양자 및 다자 프로그램에 있어 보건 부문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특히 스웨덴의 MDGs 캠페인인 "일생일대의 기회(The Chance of a Lifetime)"는 UN MDGs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캠페인을 통해 스웨덴 정부는 UN MDGs 달성을 위해 시민 사회와 정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캠페인에서는 또한 글로벌 개발 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을 MDGs에 기반 한 국가 정책으로 정의했다. 동 캠페인을 통해 더욱 많은 스웨덴 국민들이 MDGs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으며 MDGs 달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2) 민간 부문 개발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의 필수 요소로서 민간부문 개발을 강조한다. 민간 부문 개발에 있어 스웨덴은 DAC 권고사항에 따라 빈곤 친화적 성장과 여성의 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Sida는 주류화 접근을 사용하여 개도국 민간 부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스웨덴은 "Open Trade Gate Sweden"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Open Trade Gate Sweden은 개도국 출신 기업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스웨덴과 EU 시장에 관한 무역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Open Trade Gate Sweden은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며 스웨덴 국가무역위원회에 속해 있다.

3) HIV/AIDS

스웨덴은 UN MDGs 중 하나인 HIV/AIDS 퇴치를 위해 2004년 스웨덴 특별 공약을 발표하고 성과 출산에 관한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를 대외원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이 정책에는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에이즈 확산을 초래하는 마약퇴치도 포함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스웨덴 외교부와 Sida는 정책 문서를 발간하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유엔에이즈계획(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및 기타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양자 원조를 통해 HIV/AIDS 퇴치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스웨덴은 주류화와 정책 대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HIV/AIDS 퇴치에 힘쓰고 있다.

4) 분쟁과 평화

스웨덴은 원조액, 원조 방법 및 집행 등 모든 측면에서 인도주의 원조 부문의 선진 공여국이다. Sida는 인도주의 원조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인도주의 조정자들을 이용한다. 스웨덴은 또한 국내외 NGO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원조를 집행한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원조 집행 도구로는 "신속대응기금(rapid response funds)"을 들 수 있겠다. 스웨덴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스웨덴 NGO에게 신속대응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스웨덴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 방법, 분쟁예방 및 개발협력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정책문서를 출간하였다. 스웨덴은 또한 분쟁 관리 접근법 개발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 예로 스웨덴은 발생 가능한 또는 진행 중인 폭력적 갈등상황이 개발협력 전략,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2004년 스웨덴 외무부에서는 'Stockholm Initiative on Disarmament, Demobilisation and Reintegration'을 발표하여 무장해제, 군사감축 및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제공했다.

(23) OECD/DAC 회원국가 비교 분석

<표2> OECD/DAC 회원국 동료심사 분석 결과

국가 / 이슈	영국	스페인	핀란드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웨덴
MDGs						○	○	○	○						○	○	○					○
빈곤	○			○		○	○	○	○			○		○	○	○	○	○	○	○	○	○
젠더	○			○			○	○			○			○	○		○					
환경					○					○	○			○	○		○					
분쟁과평화					○	○			○		○		○									
취약국가	○		○	○															○		○	
무역				○			○	○		○												
원조효과성		○	○				○		○	○		○	○							○		
원조의 질																						
거버넌스		○			○		○	○	○		○	○	○		○				○	○		

* 원조의 질은 OECD/DAC 동료심사 개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대신 OECD/DAC은 원조의 질을 전 이슈에 걸쳐 주요 권고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2〉는 앞의 OECD/DAC 국가 전체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표시는 동료심사 분석 결과 DAC의 특별 주제와 각 회원국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들을 표시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의 표는 OECD/DAC과 회원국들이 여러 원조 목표 중 어떤 이슈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보여줌으로서 전체적인 국제 원조 모델의 흐름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빈곤 감소는 16개국의 회원국들이 원조 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이슈이다. 거버넌스와 성 평등 이슈도 주요 원조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빈곤 감소는 또한 UN MDGs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많은 공여국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원조 목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국들은 각 이슈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 및 도구를 적용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OECD/DAC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류화, SWAps, 법정부적 접근법을 적용 메커니즘으로 도입하여 주요 원조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정책 선언이나 보고서를 통해 빈곤 감소, 성 평등, 거버넌스, 분쟁과 평화 등의 이슈를 주요 원조 목표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 동료심사를 살펴보면 OECD/DAC이 파리 선언에 기초한 원조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은 파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Action Plan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국별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 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최근 동료심사에 기초한 OECD/DAC 국가 전체 분석은 DAC이 지향하고 있는 원조 주제와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일반적 논의 수준에서 보여주는 데 그쳤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심층 사례국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팀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사례국으로 선정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위의 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는 비교적 다양한 이슈에 걸쳐 원조행위를 하고 있는 공여국으로서 OECD/DAC으로부터 선진 공여국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공여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에서 설정한 OECD/DAC 모범 원조모델에 가까운 사례로 네덜란드를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 또한 OECD/DAC 동료심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는 특히 한국과 비슷한 원조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제한된 원조 규모로 효과적이고 OECD/DAC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원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로 한국에 시사 하는바가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중 사례국으로 선정하였다.

2. OECD/DAC 권고사항 적용 모범 사례국 분석: 네덜란드, 아일랜드

본 장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사례국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OECD/DAC 이슈와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구체적 도구와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연구이다.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방안에 대한 두 선진원조기관들의 원조 운용과정 분석은 한국 원조의 선진화를 위한 Action Plan 도출에 필요한 분석틀로 사용될 것이다. 사례국 원조모델은 주로 2009년 5월에 있었던 사례국 방문 인터뷰 내용과 방문 연구조사 시 수집한 자료[25]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현장방문조사 내용은 〈첨부자료3〉을 참조하기 바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DAC의 모든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모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네덜란드는 원조의 체계와 원조 집행의 여러 내용이 모두 OECD/DAC 이상향에 가장 근접한 사례이다. 한편 아일랜드는 원조의 규모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원조 공여국 가운데 원조 집행이 전략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로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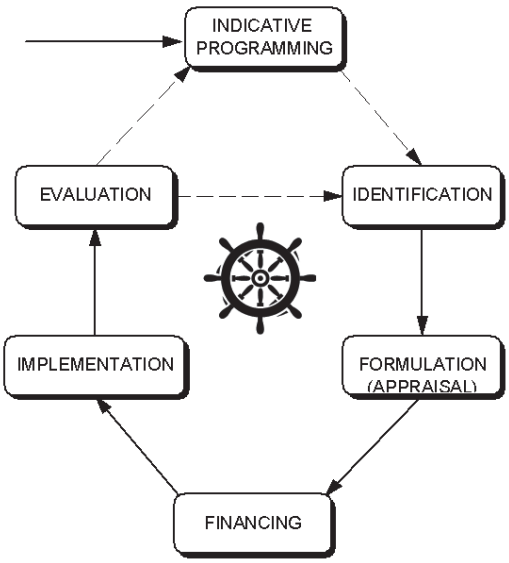
(1) 분석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OECD/DAC 권고사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사례국의 원조행위를 Project Cycle Management(PCM)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국들은 원조 목표, 계획, 집행, 평가의 각 단계별로 어떠한 OECD/DAC 권고사항을 지향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OECD/DAC 권고사항의 실행을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 및 도구를 실천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3 참조.) 아래 〈그림12〉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행위 설명을 위한 PCM 분석틀이다. 두 국가의 원조활동은 뚜렷한 원조목표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례국의 원조는 일반적 PCM 단계인 원조계획, 집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며, 평가 결과는 다시 원조 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우리는 이러한 PCM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PCM 단계별 어떠한 OECD/DAC 권고사항을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는 구체적 실용방안과 도구, 메커니즘, 그리고 정책협의 과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3〉의 OECD/DAC 이슈와 권고사항은 앞 장의 OECD/DAC 권고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각 PCM 단계별로 적용시켜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OECD/DAC 권고사항 적용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25) 수집자료 리스트는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음.

틀에 기반 하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방안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주요 실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그림12> 원조 Project Cycle Management



<표3> OECD/DAC 권고사항 적용방안: 네덜란드, 아일랜드

PCM 단계	OECD/DAC 이슈	OECD/DAC 권고사항	실행방안 및 도구
정책 입안	빈곤 감소	빈곤 친화적 성장 추구 민간분야로의 개발 영역 확대-사업자 및 민간투자 확대 전략	·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회사등록, 면세, 관세에 관한 제도 개선 (네) · 주류화전략(아일랜드의주류화전략의실행방안은 첨부자료참고) - 주류화자문그룹(Mainstreaming Reference Group) (아) - 외부컨설턴트와 전문가를 고용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OECD/DAC 젠더네트워크와 연계 (아) · 이견조정기구-Policy Coherence Unit(네) Coherence Group (아) ·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IDCD) (아) · Lion's Share of Dutch (유연한 단기 자금이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협조)
	성 평등	주류화 및 크로스커팅이슈화 공여국의 정책과 파리 선언 등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과 일치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주류화 및 크로스커팅이슈화	
	분쟁/평화/취약국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취약국가 장기접근전략 수립	
	UN MDGs	UN MDGs의 우선 목표정책으로 인식	

	원조의 효과성	국제사회의 목표에 부합한 전략 수립 장기적 ODA 예산확보 파트너십 강화 공여국 간 정책협의와 이를 반영한 공여정책 계획/집행/평가에 따른 수원국 중심 원조정책 수립	· 파리 선언 실행을 위해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와 Country Team 설치 (네) · White Paper principles (아) · Country Teams 설치 (네) · 공동지원전략(Joint Assistance Strategy) (네) · Multi-Annual Strategic Development Plans (네) · European Union'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네) · EU 공여국간 정책 조율 (네) · 수원국의 빈곤 감소 전략 계획에 부합하는 원조정책 수립 (네) · 프로파일 국가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원조목표 설정 (네) ·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네) · Institute for Multiparty Democracy (네) 프로젝트 사이클 리포트 (네) · Joint funding mechanism지원(아) · 수원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맞춘 정책 조정 (거시경제 제언지원) · 공정 · 개방 무역 시스템 구축 목표 · Irish Aid operational plan을 통해 원조의 질 향상 보장 (아)
	거버넌스	수원국 공공분야 역량강화 집중 정책 인권/민주화/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량강화 전략	
	무역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 정책네트워크 수립 (w/기타 공여국, 수원국 내 시민사회)	
	원조의질	비구속화/구속성 원조 비중 축소 (50%이하)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우선적 비구속화	
계획	빈곤 감소	사전영향평가의 실시와 활용	· 수원국 주재 대사관 내 개발협력 전문가 기안 · 빈곤 감소 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y) · 권한강화 프로젝트 위한 재정지원 확충 (네) · 성과 생식건강권 증진 전략 (네) · 영국, 세계은행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이점과 비용에 관한 다자연구 (네) · 청정개발정책 · General Budget Support ·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네) · Medium-Term Fiscal Framework (네) · Medium-Term Budget Framework (네) · SeniorManagementGroup(아):예산승인검토및권고 · OptionPaper(아):본부에서정식승인된이슈들을 발표 · 취약성 평가 · 4년 주기 원조 계획과 예산 (네) · Joint Financing Arrangement (네) · Guidelines for Financial Management (네) · Multi-Annual Strategic Plan (네) · 크로스커팅이슈의 경우 대부분(80%) 범분야적 접근을 통해 예산지원 (아) · Country Strategy Papers (CSP)를 통해 본부와 대사관에 전략방향성 제시 (아) · Result Frameworks (아) · 현지인 출신 개발협력 전문가를 대사관 직원으로 정식고용 (아) ·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principles 교육(아)
	성 평등	성인지적 예산 권한강화 프로젝트 기획	
	환경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와 활용 다양한 분야에 따른 계획 및 집행/평가 시스템 구축	
	UN MDGs	중장기 예산 수립 개별 목표를 target으로 한 프로젝트 목표 수립	
	분쟁/평화/취약국가	분쟁단계별접근 안보시스템 개혁지원	
	원조의 효과성	수원국 자원 활용 및 예산의 효과적 분배	
	거버넌스	수원국 내 법적/정부조직적 제도 파악 및 활용	
	무역	무역관련 원조의 장기적 예산 편성/계획 역량강화 기재 확보	

집행	빈곤감소	빈곤친화적 접근 (i.e.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 Area-based support · Country team이 2년마다 대사관으로 모니터링을 위해 파견됨 (네) · 평가는 IOB, 정책부서, 대사관의 책임 하에 실행 됨 (네) · Tack Records (네) · Multi-Annual Program System (MAPS)을 통해 NGOs 모니터링 – 시민사회가 운영 (아) · CSP Mid-Term Review (아) · CSP Support Team (아): 본부와 대사관에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 · Co-financing system(네) · Performance Assistance Framework (네) · Country Strategy Papers (CSP) Cycle (아) · Public Finance management Support Program (네) · 개도국 대상 원산지규칙의 유연한 적용 (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관련 수출 정책 (네) · Project Appraisal and Evaluation Group (PAEG) (아) · 개도국 우선 개방 정책
	성 평등	범분야적 접근법 도입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	범분야적 접근법 도입 Win-Win 전략 수원국 내 역량강화	
	UN MDGs	범정부적 접근 전문 NGOs 참여	
	분쟁/ 평화 취약국가	범정부적 접근	
	원조의 효과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원조 조화	
	거버넌스	거버넌스 인지강화 교육프로그램 제도개선	
	무역	공여국 내 제도개선 프로젝트 (무역장벽 철폐등)	
	원조의 질	(부분) 구속성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 모니터링 비구속화/구속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한 수원국과 협의 및 고지	
평가 및 환류	빈곤감소	빈곤층 역량강화 평가 친 시장적. 빈곤친화적 사회제도 및 인프라 구축	· Sector Review · Strategic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ssessment (네) · Joint Donor Evaluation (네) · OECD/DAC 평가 네트워크 (네) · IOB evaluation Guideline (네) –IOB: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 Joint Assistance Strategy · Irish Aid 내의 Evaluation and Audit Unit에서 평가과정 주도 (아) · 평가과정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Advisory Board for Irish Aid (ABIA) 설치 (아) · 내부 평가팀(80%)과 분사평가기관 (decentralized evaluation agencies) (20%)이 평가– 규모가 큰 주요 · 프로그램은 본부의 해당부서가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는 해당 집행기관이 평가 (네) · International Program in Development Training (IPDET)을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평가자 교육 (네) ·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평가팀이 참여 · 수원국과 공동평가 ·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의 평가 매뉴얼을 도입해서 사용 (아) · 평가 결과는 평가보고서와 대응보고서(Reaction Report)로 공개 됨 (네)
	성 평등	공여국 역량강화 수원국 내 권한강화 제도개선 수원국 내 양성 평등 의식 확산	
	환경	공여국 내부 역량 강화	
	UN MNGs	공여국 내 홍보활동 강화 이행사항 평가 통계지표에 따른 평가	
	거버넌스	수원국 내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조의 효과성	단계별 평가메커니즘의 구축 적절성,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영향력 반영한 평가 사후관리	

			· 평가보고서와 대응보고서는 매년 국회의 외무부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조사됨 (네) –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연관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조사 · 조정관을 두어 평가결과 공개 전 조정 (네) · 평가결과는 외무부의 Director General과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에 보고됨 (아) · 평가결과는 일관성 그룹 (coherence group)에서 논의되며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됨 (아) · resource workshop을 통해 정보 공유 (아)

(2)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행위 분석

1) 주류화

OECD/DAC은 빈곤, 환경, 성 평등 등의 주요 원조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류화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두 사례국들은 이러한 크로스커팅 이슈들의 달성을 포함하여 원조목표 달성을 위해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주류화 전략은 원조활동의 모든 단계, 다시 말해 원조의 계획, 실행, 평가 전 단계에 걸쳐 도입된다. 그렇다면 사례국들은 주류화 전략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특히 아일랜드의 주류화 전략을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OECD/DAC 권고를 지침으로 비교적 최근에 주류화 전략을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주류화 전략은 아일랜드 자국의 Irish Aid Director General과 주요 수원국의 개발협력 책임자(Head)들의 주도 하에 추진된다. 자국 내 Irish Aid Headquarter(HQ)에서는 전체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정책계획부서(Policy Planning Unit: PPU)에서 성 평등, 환경 지속성, HIV/AIDS, 건전한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4개 분야의 주류화가 모든 Irish Aid의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한다. 또한 Irish Aid 모든 부서에서 1-2명의 팀원들이 파견되어 주류화조언그룹(mainstreaming reference group)을 구성하며 이들은 주류화와 관련하여 PPU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그룹은 크로스커팅 이슈의 주류화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고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주류화에 대한 이해 향상뿐 아니라 주류화 전략을 원조 계획, 집행, 평가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아일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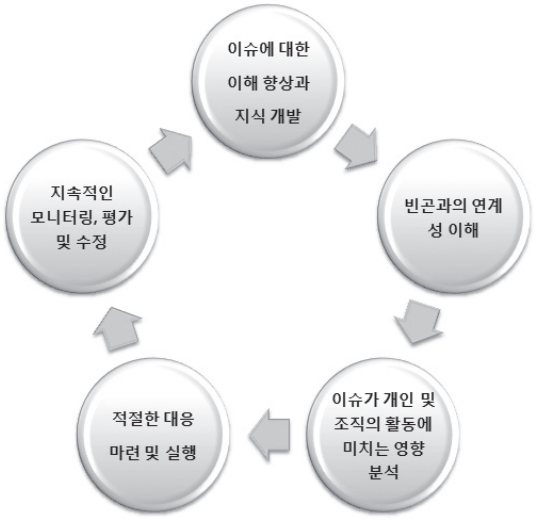
드 주류화 과정과 전략은 아래의 〈그림13〉과 〈표4〉, 〈표5〉를 참조.) Irish Aid의 주류화의 목적은 지속적 빈곤 감소를 위한 Irish Aid 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아일랜드는 2007년도에 2년 단위의 주류화 전략을 세웠으며 2007-2009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 목표로 성 평등, 환경 지속성, HIV/AIDS, 건전한 거버넌스 이슈의 주류화 추진을 위한 Irish Aid 전 단계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설정했다(Gaynor and Jennings, 2007).

<표4> HIV/AIDS의 주류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아일랜드

단계	접근법
글로벌	· UN Executive Board와 모든 보고서에서 HIV/AIDS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전체적 프레임웍을 제공하는 Irish Aid HIV/AIDS 전략 개발 · 다른 기관과의 협력
국가정책	· 모든 Irish Aid 국가 프로그램은 HIV/AIDS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 · 국가프로그램에는 HIV/AIDS 주류화를 위한 전문 기술가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전 프로그램에 걸쳐 HIV/AIDS의 대응방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	· Irish Aid는 NGO에 interim fund를 제공함으로서 HIV/AIDS 주류화에 대한 정책토론 활성화와 역량구축에 기여함 – 현재는 multi-annual NGO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출처: Gaynor & Jennings, 2007,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Irish Aid. p.6.

<그림13> 아일랜드의 주류화 과정



출처: Gaynor & Jennings, 2007,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Irish Aid. p.5.

<표5> 아일랜드 주류화 전략

원조조직	원조프로그램
◎ 직원역량개발 · 주류화에 대한 전문성 개발 · 4개 주요 분야에 대한 지식 개발 · 멘토링/지속적 지원 ◎ 시스템, 절차, 과정 · 평가과정, 국가 전략계획 기획을 위한 권고사항 기안, 보고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걸친 전 과정에 주류화 도입 ◎ 작업장 규정 · 친환경적 일터 형성을 위한 작업장 규정/절차 개발	◎ 프로그램 · 다수의 공여국이 지원하는 국가차원/분야별 프로그램에서 크로스커팅이슈에 대한 지속적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적 수준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주류화 역량 개발 지원 · 주요 이슈를 국가개발모니터링 프레임웍에 도입 ·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 – 크로스커팅 이슈에 대한 · 전략적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구축

출처: Gaynor & Jennings, 2007,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Irish Aid. p.6.

<표6> 아일랜드의 주류화 전략 모니터링 지표

목표	지표 & 달성목표치	지표측정방법
1. 주류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역량 향상	1. 주류화 교육에 참가했거나 멘토링을 통한 competency 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의 수와 비율 (목표치: 50-75%) 2. 각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Irish Aid 직원의 비율 (목표치: 50-75%) 3.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 배포 확산 4. 교훈과 사례연구에 대한 문서화와 배포	· Corporate Service에 대한 교육 일정과 보고서 검토 프로그램 국가로의 교육 일정과 보고서 검토 · Irish Aid 내에서의 지식 관리 주도 노력에 대한 검토 · 1년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 PMDS
2. 책임성 강화 수단 도입 – 구조와 시스템	5. PPU의 주도에 의한 주류화 노력이 있었는가? 6. HQ의 representative support team등 각 대사관과HQ에 주류화를 위한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7. Irish Aid의 가이드라인과 집행과정에서 주류화가 분명히 반영되었는가? (CSP, PAEG, MAPs) 8. Irish Aid의 업무관리, 모니터링, 감사, 평가, 원조의 질적 측면 전반에 걸쳐 주류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가? (주요 이슈의 주류화에 대한 명백한 강조) 9. CSP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프레임웍의 적당한 단계에서 주류화의 제도화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가? 10. 내부 그리고 인력자원 정책이 각 주요이슈에 대하여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HQ와 대사관은 적어도 1개의 주요 HR 정책을 개발/수정해서 실행)	· 대사관으로부터의 보고서 검토 · Irish Aid 가이드라인, 자금지원(funding)기준, 보고 요건 검토 · PAEG 메커니즘 사용 · Irish Aid terms of reference와 평가 보고서, 감사, HQ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원조의 질 관리 · Irish Aid 내부 HR 정책과 집행계획 검토 · Job description 검토 · 수원국과 HQ에서 작성한 연간 모니터링평가보고서 검토

3. 정책 결정과정에 주요 이슈에 대한 관련 분석 결과 반영	11.빈곤분석이 4개의 주요이슈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되는가? 12. CSP 기획단계와 Irish Aid 사업계획단계에서 4개의 주요 이슈의 관련성과 영향력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있는가? 13. 새로운 원조형태 (예를 들어, 조화, joint assistance 전략, 정책 대화 등과 관련하여)에 주요이슈에 대한 분석이 일치성을 갖고 적용되고 있는가?	· CSP 이슈 페이퍼와 background 자료 검토 · 주제(Thematic) 페이퍼 검토 · 위탁연구보고서 검토 · 2007 계획과 결과물 검토 · 새로운분야,형태,새롭게떠오르는이슈에대한 보고서 검토
4. Irish Aid 전반에 걸친주류화 활동을 밝혀내고 실행함	14. 주요 이슈의 주류화 기회와 entry points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기적 평가는 실시하고 있는가? 15. 주류화 활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일치된 기회를 추구, 감독, 보고했는가? 16. 글로벌, 정책,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주류화 활동 간에 일치성을 갖고 있는가?	·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연간 리포트 검토 · 고위급관리들에게 제출되는 주류화 진전에 대한 보고서 검토 · Best practice 벤치마킹, 기회점수 카드, 지출 · 추적/재정 평가, 또는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외에도 주류화 전략을 위해 Irish Aid가 운용할 재정적 인적자원의 수준도 측정대상 임. 여기에는 주류화를 위해 HQ와 프로그램 국가 내에 새로 고용할 직원, 주류화 전략의 계획,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추가 전문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 주요이슈의 주류화와 관련한 지식 교훈 학습과 지식 습득 등이 포함 됨 위 사항에 대한 정보는 연간리뷰와 보고서, 그리고 전략기간의 끝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시에 수집됨		

출처: Gaynor & Jennings, 2007,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Irish Aid. p.10-11.

〈표6〉은 아일랜드의 주류화전략 모니터링 지표이다. 아일랜드는 2007-2009 주류화전략의 구체적 목표로 1) 주류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역량향상, 2) Irish Aid 구조와 시스템 내에 주류화에 대한 책임성 강화 수단 도입, 3) 정책 결정과정에 주요 이슈에 대한 관련 분석결과 반영, 4) Irish Aid 전반에 걸친 주류화 활동을 밝혀내고 이를 실행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 달성 목표치를 세웠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표6〉의 마지막 열은 각각 지표의 측정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Irish Aid의 주류화전략은 목표설정이라는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 달성 목표치와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 지표 측정 방법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조의 효과성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전체 원조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원칙은 원조 효과성을 강조한 2005 파리 선언과 2008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이다. 원조 활동에 있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공여국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성과 지향적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를 강조한 2005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과 파리 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예측성(Predictability), 조건부(Conditionality) 제한, 언타잉(Untying)원칙을 선언한 2008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모두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도입한 원칙들이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러한 원칙을 적극적으로 모든 원조 활동 단계에 수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은 두 사례국의 원조활동과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2005 파리 선언 이전부터 위의 원칙들에 입각한 원조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실제로 선진 공여국인 네덜란드의 원조활동은 파리 선언 도입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방안을 도입하고 있는가? 네덜란드는 우선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harmonisation desk”와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DEK)”와 같은 특별 기구를 외무부에 설치하였다. 2002년 부서 내 조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조직된 “harmonisation desk”는 2003년 로마 선언과 2005년 파리 선언을 위한 준비 및 EU에서 조화 어젠다와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원조 효과성 촉진 및 권고 제공을 위해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DGIS)에 설치된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DEK)”는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파리 선언 실행에 있어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DEK는 리포팅과 모니터링 부서(DEK Reporting and Monitoring Division, RM), 정책 분석과 권고부서(DEK Policy Analysis and Advice Division, BA), 원조방식과 도구개발 부서(DEK Aid Modalities and Instrument Development Division, HI)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부서는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및 네덜란드 외교정책에 통합된 개발협력 관련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크로스커팅 이슈와 cross-country 이슈에 관한 정책 실행 도구 개발 및 제공, 대사관 지원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집행, 트랙 레코드와 다개년간 전략계획평가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외무부는 본부와 대사관에 파리 선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과 실행도구를 마련하였다.

○ 계획과 평가 도구: Track Record and Sector Track Record, Multi-Annual Strategic Plans (MASPs), Strategic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ssessment (SGACA),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 재정 프레임웍과 도구: Policy Documen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Nota Beheer en Toezicht), Procedural Guidelin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uidelines for Delegated Cooperation (Silent Partnerships)
○ 지원프로그램: Public Finance Management Support Programme (PFMPOP), Embassy Support Programme for Institutional and Capacity Development (SPICAD)

3) 원조목표와 정책

◎ OECD/DAC 권고사항에 따른 명확하고 실천적인 원조목표 설정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모두 빈곤 감소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조 목표로 천명하고 있으며 천년개발계획(UN MDGs)을 원조목표설정의 주요 논리와 근거로 도입하고 있다. 두 사례국은 또한 원조를 외교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5년에 출판된 Irish Aid 백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개발협력은 아일랜드 외교정책의 일부이다. 빈곤 감소,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Irish Aid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빈곤 감소라는 포괄적인 원조목표 아래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국별 원조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 수원국 별로 구체적인 원조 목표를 설정해서 집행하고 있다. 또한 사례국들은 원조 목표 설정 시 세계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특히 OECD/DAC 권고사항의 중점사항과 크로스커팅 이슈를 고려하여 빈곤 감소 외에도 안보와 개발, 성장과 공평한 분배, 인권 향상 및 여성권한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 에너지 분야 등에 초점을 두며, 교육, 개발, 환경과 물, AIDS 방지, 생식기 건강문제도 고려하여 국별 구체적 원조 목표를 설정한다.

분명하고 실천적인 원조목표의 설정은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강조하는 원조 효과성 제고라는 원조활동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뚜렷한 원조 정책과 실천적이며 계측 가능한 목표가 부재하면 원조활

동에서 일관성을 잃기 쉬우며 각 단계의 유기적 결합과 원조 효과성 제고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모든 주요 원조활동이 평가 단계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 해당 원조활동이 목표달성에 실패했거나 미흡했던 경우에는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목표달성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수원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여건에 기인하기 때문에 담당 원조 집행기관이나 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는 거의 없다.

◎ 수원국 선정

OECD의 개발협력은 빈곤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 선정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공여국은 빈곤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정치적 의지,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한다. 빈곤 감소라는 원조목표의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가장 중요한 수원국 선정 기준으로서 빈곤의 정도와 빈곤상태의 지속성을 고려한다. 사례국들은 주요 수원국 선정 시, 심각한 빈곤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국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수원국의 거버넌스 상태도 주요 수원국 선정 기준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주요 수원국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국가들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아일랜드의 선교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이 경우 과거의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수십 년간 혹은 백여 년 이상 다듬어 온 수원국과의 신뢰에 기반을 두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동안 넓혀놓은 네트워크 활용 등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원국이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를 원조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나라들은 주요 수원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거버넌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국가는 주요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원조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극심한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완전히 수원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주요" 수원국이 아닐 뿐 여전히 수원국에 속한다. 주요 수원국이 정해지면 국가별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각 수원국별로 좀 더 구체적인 원조 목표와 계획이 만들어진다.

네덜란드는 "국제개발협회 자격규정"으로 불리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차관을 위한 자격 조건, 세계은행의 국가 정책 및 제도 수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다른 공여국의 활동 및 원조 규모, 원조흡수 역량, 상호보완성, 집중도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원국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원국의

주요 특징, 상황, 네덜란드의 정책, 그리고 원조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원국을 3 유형(프로파일)으로 분류하였다. 동 프로파일에 따라 네덜란드는 원조 규모, 원조 전달 경로 및 협력 정도, 정책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

<표7> 네덜란드 수원국 프로파일

	프로파일 1 UN MDGs 달성의가속화	프로파일 2 개발과 안보	프로파일 3 폭넓은 관계
선정 기준	저소득 국가 취약성이 주요문제는 아님 수원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춤	취약성 또는 빈곤 감소를 방해하는 불평등	(예상되는) 중간 소득 국가 취약성이 주요문제는 아님
해당 국가	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리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예멘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 과테말라 코소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영토 수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리트레아 스리랑카	이집트 그루지야 인도네시아 몰다바 베트남 남아프리카 수리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카보베르데 마케도니아

출처: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Our Common Concern: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p.39.

◎ 외교-개발-국방이 상호 연결된 원조 정책

빈곤 감소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활동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원조가 포괄적인 외교활동의 일부이며 국위선양의 길이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선진적인 원조활동은 국제적 무대에서 자국의 힘과 위치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네덜란드의 3D 정책(Development, Diplomacy, and Defense), 즉 개발과 외교, 국방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두 국가 모두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 (네덜란드의 개발협력부와 아일랜드의 Irish Aid)를 외무부 직속 하에 두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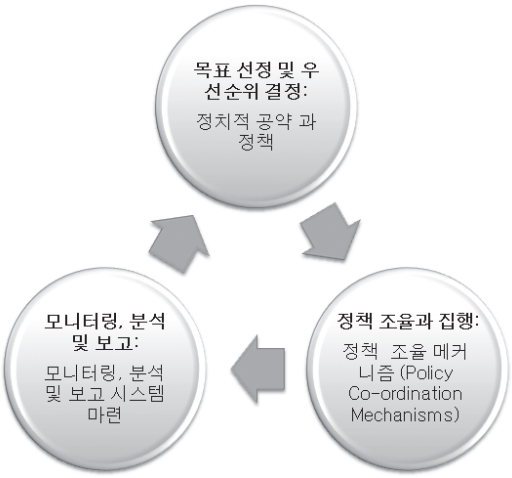
또한 원조가 외교와 안보와 중요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책적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위기로 원조의 양을 감축한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여전히 빈곤 감소가 원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원조가 외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경제위기로 인해 아일랜드는 제한된 원조규모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조활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 정책 일관성

OECD/DAC은 모든 주요 원조 목표와 분야에 있어 정책 일관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원조 정책 수립단계에서 OECD/DAC이 강조하는 정책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용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원조에 대한 부처 간 갈등이 거의 없고 외무부 내에서 원조담당부서와 다른 기관들의 관계도 매우 협력적이다. 원조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개발협력부, 아일랜드는 Irish Aid가 갖고 있으며 두 기관모두 외무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조 조직 구조는 일관적인 원조집행을 용이하게 해 주고 정부 부처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부처 간 원조 일관성 증진과 이견 조정을 위해 네덜란드는 Policy Coherence Unit(PCU), 아일랜드는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IDCD)라는 조정기구를 두고 있다. 먼저 네덜란드의 PCU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덜란드의 개발정책은 빈곤, 안보, 인권, 무역, 투자, 이민, 환경 등의 분야가 통합된 외교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일관화를 위해 네덜란드는 2002년 Policy Coherence Unit을 구성하였다. 네덜란드의 PCU는 관련 이슈에 있어서 각기 다른 부서들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EU 회의에서 네덜란드가 주요 공여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PCU는 외무부가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14> 정책 일관성 사이클: 네덜란드



출처: OECD, 2008.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p.4

OECD/DAC은 '개발정책 일관성에 관한 통합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동료심사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과 교훈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DAC은 정책일관성을 위해 공여국 정부는 정치적 공약과 정책을 지원하고 개발 문제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조율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OECD/DAC은 모니터링과 분석 및 투명한 결과 보고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네덜란드의 PCU는 이와 같은 OECD/DAC의 권고사항과 단계를 모두 따르고 있다.

<표8>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네덜란드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정책조율과 집행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요구사항	정치적 공약과 정책성명	정책조율 메커니즘 정비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교훈	대중의 인식향상을 위해 교육, 시민사회 등과의 연계필요	부서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공식적 업무 관례 인정	정책일관성 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해 필드차원의 자원과 국제적 파트너십 활용

	빈곤 감소와 국제적 동의를 얻은 개발목표에 대한 높은 정치적 수준의 공약 필요	개발과 외무부 이외의 모든 부서가 개발에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보장하고 부서 간 정책 조율 및 중재를 위해 고위급에서 공식적 메커니즘 구성	정책일관성 이슈와 진전 상황 분석을 위해 충분한 자원 지원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기별 우선화 행동 어젠다 공포	정책조율을 위해 개발기관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지정	개발협력 활동과 UN MDGs 달성 노력에 관한 보고의 일환으로 정책일관성 진행상황을 국회와 대중에 보고

출처: OECD, 2008.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p.6-7

네덜란드의 PCU와 같이 아일랜드는 OECD/DAC의 권고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위해 IDCD라는 조직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 IDCD는 2007년에 만들어진 정부 관료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해외개발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Irish Aid와 외무부 내의 간부급 관료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14개 정부 부서에서 1-2명의 간부급 관료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IDCD는 개발에 있어서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 일관성 향상을 위해 자문과 권고 역할을 담당하며 아일랜드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을 활용한다. 간부급 회의는 매 6개월마다 열리며 매년 정기적으로 권고사항 등을 외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IDCD에는 또한 2개의 하위 그룹, Multilateral Organizations와 Skill Sets이 있는데 이들 그룹은 IDCD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DCD의 하위 그룹과 고위급 회의에서는 정치적 부분과 개발원조가 결합되어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례국들은 이와 같이 OECD/DAC의 권고에 부응하여 정책일관성을 위한 기구들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정기구들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정부부처가 원조가 외교정책의 일부라는 기본 정책에 이미 합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은 정치적 리더십과 원조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지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원조활동에 대한 네덜란드의 오랜 전통과 역사에서 기인한다. 또한 오랜 원조활동 전통은 사례국가에서 원조 NGO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양 정부는 원조 활동을 하는 자국의 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NGO의 활동은 정부 원조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아일랜드는 예전부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교활동의 역사가 정부차원의 원조 활동 개발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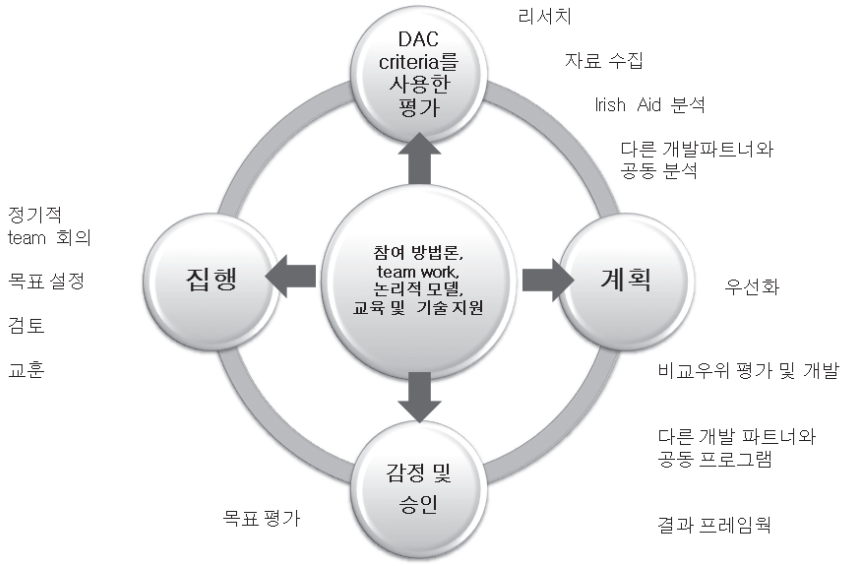
4) 원조계획 수립

OECD/DAC은 원조계획 단계에서 수원국 역량강화, 수원국 자원 활용 및 예산의 효과적 분배, 프로젝트 별 구체적 목표 수립, 분야별 원조계획 및 집행,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한다. 원조목표가 세워지고 주요 수원국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원조계획이 수립된다. 사례국들의 경우 각 수원국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 계획은 수원국 내의 대사관이 주도적으로 설립한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수원국 내의 대사관이 각 수원국에 대한 원조 계획, 집행, 평가에 걸친 전반적인 원조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 두 사례국을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가 아일랜드보다 원조활동에 관한 대사관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본국의 Irish Aid와 정부가 수원국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두 사례국 모두 수원국 주인의식이라는 파리 선언 원칙에 따라 수원국 정부를 통한 원조 집행을 기본 방침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원조집행 부문에서 더 설명하기로 한다.

원조 계획은 이전의 원조 프로그램 수행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된다. 각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개별 수원국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진단에 기반 하여 국별 프로그램 (네덜란드는 4년, 아일랜드는 5년)을 기안한다. 아크라 행동계획 원칙 중 하나인 예측성 강화를 위해 아일랜드는 최근 국별 프로그램의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켰다. 수원국 주재 대사관들이 이렇게 원조계획을 세우고 원조 활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각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서 일반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직 공무원 뿐 아니라 본국에서 파견된 개발협력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현지인 출신 개발협력전문가들도 아일랜드 대사관의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국의 현지 상황을 잘 반영한 원조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rish Aid의 국별 프로그램인 국가전략페이퍼(Country Strategy Papers (CSP))는 Irish Aid가 본부와 대사관 직원에게 원조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별 원조계획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Irish Aid는 국가전략페이퍼의 개발과정에 결과중심의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Irish Aid는 국가전략페이퍼 개발의 모든 단계, 즉, 평가(Evaluation), 계획(Planning), 감정 및 승인(Appraisal and Approval), 집행(Implementation)에 걸쳐 참여 방법론, 팀워크, 논리적 모델 제공, 교육 및 기술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도구 및 방법으로 자료수집, 공동분석, 우선화 전략,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15> 국가전략페이퍼에 대한 아일랜드의 성과 지향적 관리 접근법



출처: Irish Aid, 2008. "A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to Country Strategy Papers." p.32

5) 원조 집행

수원 대상국에 대한 원조 계획이 수립되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본국의 개발협력부와 Irish Aid를 통해 원조가 제공된다. 원조집행단계에서 두 국가모두 수원국 내 역량강화, 원조 조화, 수원국과 협의 등의 OECD/DAC 권고사항을 주요 방향지침으로 수용하고 있다. 사례국들의 경우 모든 원조는 외무부 안에 있는 개발협력부(네덜란드)와 Irish Aid(아일랜드)가 관리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사례국 모두 원조 집행은 각 수원국 내의 대사관들이 주도한다. 또한 원조집행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OECD/DAC 권고사항으로 두 사례국 모두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양자간 ODA를 수원국 정부와 협력하여 집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원조의 75%를 수원국 정부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조집행 결정권을 수원국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또한 두 사례국 모두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원조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본국의 본부 (네덜란드의 개발협력부와 아일랜드의 Irish Aid)는 주로 대사관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며 각 본부에는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담

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대사관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국의 국가 프로그램 담당 부서를 통해 신속하게 본부와 협력한다. 특히 비교적 작은 인력규모를 갖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대사관과 본부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1-2일 내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다. 문제 발생시, 해당 대사관의 개발협력 담당관은 본부의 국가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즉시 통보하며 담당자는 개발협력부 수장(Head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포함하여 본부 내의 관련 담당부서들과의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린 후 해당 대사관에 통보한다. 아일랜드의 작은 인력규모는 직원들 간의 활발한 공식・비공식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서 협력적인 조직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기구로서 네덜란드는 일관된 원조집행을 위해 본부에 국가 팀(country team)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각 팀은 재정경제부와 DEK를 포함한 부서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수원국의 대사관을 방문한다. 국가 팀은 또한 크로스커팅 이슈와 파리 선언 실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트랙 레코드(Track Records), 분야별 트랙 레코드(Sector Track Records), 연간・다년간 계획(annual and multi-annual plans)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원조 평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모두 원조 활동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을 매우 강조한다. 특히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와 감독 단계에서 투명성은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또한 두 사례국은 OECD/DAC 권고사항인 수원국 주도와 단계별 평가메커니즘, 그리고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영향력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주요 지향점으로 채택하여 원조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어떠한 실행방안을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원조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며 향후 원조 정책과 계획에 반영된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두 사례국 모두 전문 컨설턴트를 평가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수원국도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원칙적으로 분산평가시스템(disintegrated evaluation system)을 지향하고 있다. 분산평가시스템이란 중요한 원조 프로그램은 수원국 본국의 원조 담당 부처에서 수행하지만 그 외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수원국 주재 대사관내 원조집행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산평가시스템 원칙에 따라 사례국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국가프로그램전략)에 대한 평

가는 본국의 개발협력부와 Irish Aid에서 각각 수행하고 규모가 작은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해당 대사관과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평가는 개발협력 정책을 포함한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영향력과 실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정책과 활동 평가 부서(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가 ODA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투명한 평가를 위해 IOB의 재정권과 인사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동 기관의 독립성을 더욱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모든 원조활동의 80%에 대한 평가는 네덜란드 개별협력부의 내부 평가팀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20%에 대한 평가는 각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원조성과 평가에는 외부전문가와 평가팀이 함께 참여하며 평가는 원조 프로그램 기획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IOB는 공여국간 또는 수원국과의 공동 평가를 위해 수원국 및 다른 공여국의 평가부서와 협력하며 평가에는 트랙 레코드, 분야별 트랙 레코드 등이 있다. 트랙 레코드는 수원국의 정책, 기관, 개혁 등을 분석, 평가한 것으로 일관된 원조집행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야별 트랙 레코드는 트랙 레코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네덜란드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의 원조 집행을 보다 상세히 평가한다. 이는 현지 대사관에 의해 작성되며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다른 원조 계획과 모니터링 도구들과 연계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원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보고서(Evaluation Report)와 대응 보고서(Reaction Report)로 작성되며 이 보고서들은 매년 국회 외무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 연관성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평가결과는 대중에 공개되며 공개에 앞서 ODA의 의미가 손상되거나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두어 보고서에 대한 순화작업을 거친다. 네덜란드는 1996년에 전반적인 ODA 조직을 개편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가의 독립성 보장과 평가기관의 위상 강화가 강조되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IOB는 원조 평가와 함께 행정부 내의 다른 부처에 대한 평가도 수행함으로서 그 위상과 독립성이 높은 기관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Irish Aid 내의 평가담당 부서는 규모가 작고 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실제 원조 평가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규모가 작은 Irish Aid는 잦은 순환 근무제로 인해 평가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다년간(multi-annual) 프로그램 평가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현장실무자를 평가에도 참여시킴으로서 현

실적인 시각을 평가과정에 확보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아일랜드 역시 평가 과정에서의 수원국의 참여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원국이 원조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 지도력 부재 등 거버넌스에 문제가 심각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아일랜드의 중점 원조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구체적 도구와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특히 두 사례국의 원조행위를 PCM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각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는 주요 OECD/DAC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권고사항, 그리고 이러한 권고사항의 실행을 위해 사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실청방안과 도구,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국 원조행위를 분석했다. 본 장의 분석결과는 다음 연구단계인 한국의 ODA 체계 분석의 분석틀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6장에서 한국 ODA를 PCM 단계로 나누어 보고 각 단계별 한국의 ODA 현황 분석과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원조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제언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먼저 OECD/DAC 권고사항 적용을 위한 KOICA의 현황파악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포함, OECD/DAC 선진 원조 공여국들은 OECD/DAC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조 체제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리 선언이후 OECD/DAC은 원조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파리 선언의 원칙들을 원조 시스템 전반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공여국들은 OECD/DAC과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DAC 내의 여러 작업반 활동을 통해 국제원조 레짐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공여국의 OECD/DAC 내에서의 활동은 최근 DAC에 가입한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선진 공여국들은 OECD/DAC의 권고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원조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효율적인 원조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 공여국들은 앞의 III장에서 논의된 OECD/DAC의 모범 원조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원조 역사, 원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기관, 관련 정부 부처와 시민 사회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등이 선진 공여국들이 OECD/DAC이 지향하는 원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자 강점일 것이다. 이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공여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 원조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모델을 모두 수용하여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선진화된 한국 원조 활동을 위해 한국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V.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을 위한 KOICA의 현황과 당면과제

1.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IV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OECD/DAC가입을 앞두고 있는 KOICA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KOICA의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의 적용현황과 그 적용방식에 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장에 나올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 좌담회, 웹서베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대상	방법	일시	조사 목표
임직원 전체	웹서베이	6. 30 – 7. 6	– 향후 KOICA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한 직원설문을 통해 직원의 수요 파악 – 효과적으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습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메커니즘 제공을 위한 조사자료 확보
임원	심층면접	7. 7	– 의사결정집단의 문제의식 파악 – 당면과제와 정책적 접근에 관한 의견 취합 –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의 활용을 위한 의견 파악
직무–직급별 대표그룹	심층면접 및 좌담회	6. 30 – 7. 2	– 각 직무–직급별 대표그룹 좌담회를 통해 그룹별 문제의식 파악 – 당면과제와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우선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 및 구성에 관한 수요조사를 6월 30일 – 7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다. KOICA 단내 조사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약 190여명의 정규직원 중 72명 (38% 참여율)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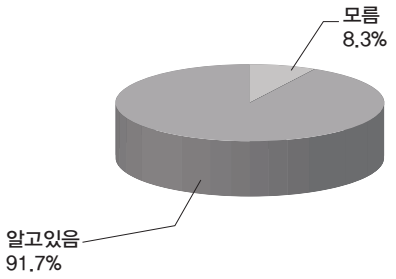
본 연구팀은 KOICA 임직원들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KOICA의 당면과제와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집단인 이사급 이상의 임원진 (이사장 포함)과 실・부장

이하 직원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심층면접과 직무직급별 대표그룹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직무직급별 대표그룹은 전체 직원을 3개의 직급과 7개의 직무로 구분하여 이들 중 대표그룹으로 총 6회의 좌담회와 6회의 심층면접을 6월 30일 – 7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각 좌담회는 직급과 직무가 유사한 4-5인의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중간관리자인 부장급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직원 좌담회와 심층면접에 참여한 직원은 총 24명으로 직급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임원진 심층면접은 7월 7일 하루 동안 이사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임직원과 단독 심층면접 형태로 4회 실시되었으며, 의사결정집단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수요와 임원진 의견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제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다.

2. 웹 서베이 결과

2009년 6월 30일-7월 6일까지 진행된 웹서베이[26]에는 해외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KOICA 190여명의 임직원 중 총 72명이 참여하였다.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ECD/DAC 가입 이후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KOICA 사업 집행 과정에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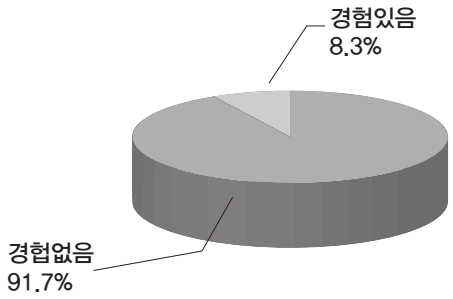


91.7%에 해당하는 66명이 OECD/DAC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KOICA의 업무에 적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KOICA 임직원들은 한국의 OECD/DAC의 가입으로 인한 업무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3%는 OECD/DAC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의 수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하여 향후 OECD/DAC 가입의 의미와 그에 따른 업무변화에 대한 내부

26) 웹서베이 전체 설문문항은 첨부자료<4>를 참조.

논의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OECD/DAC 가입 이후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여부 (지난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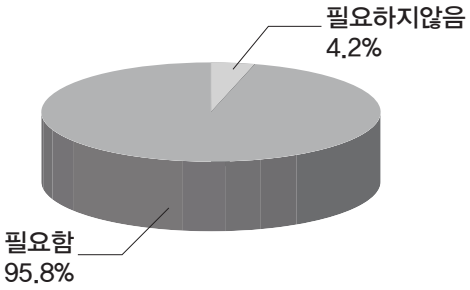


지난 1년간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 (1)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교하여 보면, 대다수의 KOICA 직원들은 OECD/DAC 가입 후 KOICA 내부에 변화가 있어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KOICA 내・외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없었다고 답변함으로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8.3%에 해당하는 6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일시, 주관 기관,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6명 중 2명만이 참가했던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었고 4명은 KOICA 내부의 세미나 또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확한 날짜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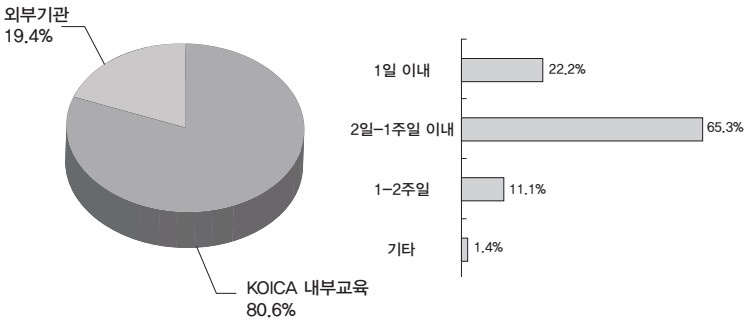
본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실제 지난 1년간 KOICA에서는 OECD/DAC 가이드라인과 연관된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들로서 PCM, Logical Framework Approach, 환경가이드라인, DAC 동료심사 사례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 바 있고, KOICA의 지원으로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문의 응답결과에서 기회제공의 부족과 참여율 부족, 실제 업무와의 괴리감으로 인한 활용부족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직무・직급별 심층 면접과 좌담회의 결과와 함께 분석, 고려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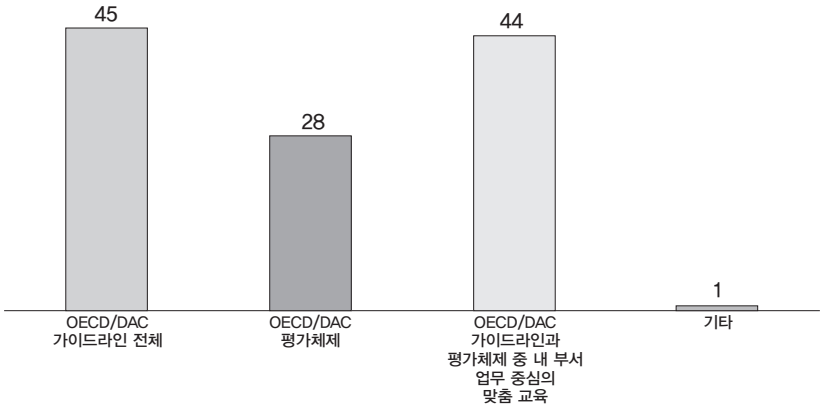
대다수의 응답자가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2%에 해당하는 2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위의 1번 문항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면, KOICA 내부에 OECD/DAC 가입과 그 의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방법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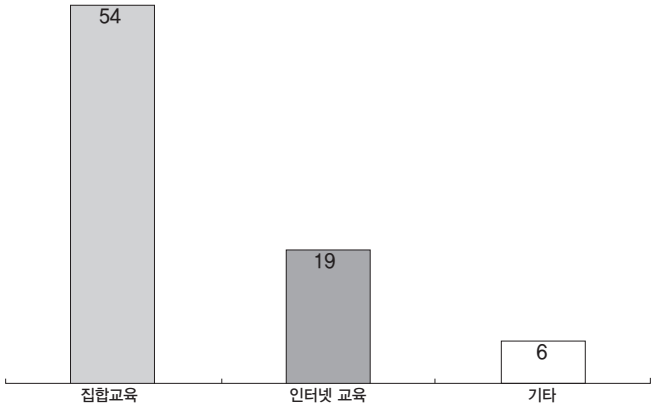
서베이 결과 KOICA 직원들의 80% 이상이 KOICA 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 OECD/DAC 사무국 또는 다른 선진원조기관의 실무자가 강사가 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KOICA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는 국내의 외부 전문가는 OECD/DAC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여도 KOICA 내부의 현황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 및 훈

련"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답변과 위의 답변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해보면, OECD/DAC 가입 후 필요한 KOICA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KOICA 내부의 강사가 각 부서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교육을 임원진이 하게 되면, 임원진은 OECD/DAC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더 깊이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내부의 조직과 업무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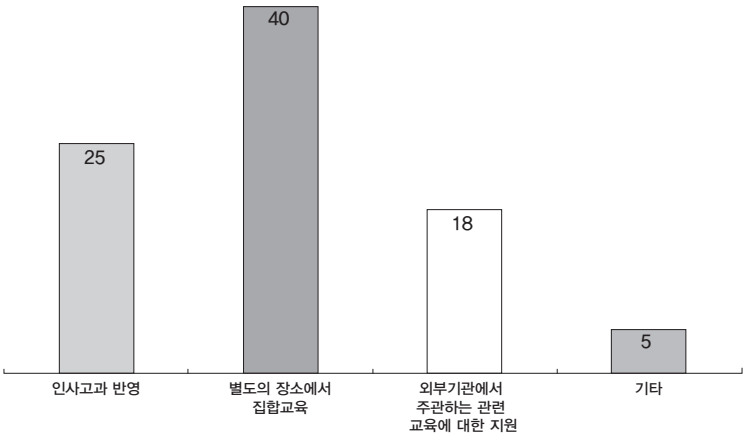
KOICA 직원들은 또한 OECD/DAC 가이드라인 전체의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맞춤형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를 업무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의 설문 응답내용과 연결 지어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KOICA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개괄적인 학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및 시스템의 활용법에 관한 실무적인 교육 및 훈련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기타 의견으로 부서업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되 개별적인 관심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어 (예: 교육 담당자로 본인의 희망 시행정제도 분야 등 청강 가능) 실제로 지나치게 업무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기회를 놓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을 을 수 있었다.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KOICA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연찬회 등을 비롯한 집합교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5%, 복수응답 가능). 사업부서별, 직제별로 차별화된 집합교육을 선호한다는 의견과 종일교육으로 인한 교육 집중도의 저하 및 업무처리 시간의 부족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교육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부가적으로 개진되었다. 또한 인터넷 교육의 활용에 관해서는 기본교육은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정리 및 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의견 중에는 OECD/DAC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선진 공여기관의 사업에 파견 및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실제 선진국의 원조활동과 그 적용방안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차원에서의 지원 수요



KOICA 직원들은 조직 차원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5.6%, 복수응답 가능). 특히 현재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시시각각 벌어지는 업무상황에 직면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업무상황에서 벗어난 별도의 장소에서의 집합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참여 동인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의견으로는 해외사무소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세부 이슈를 제시하고 KOICA에의 적용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연구 및 발표회를 실시하여 우수자를 포상하는 방안, 개발협력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OICA 직원들은 대체로 OECD/DAC 가입 이후 그 권고사항과 평가체제를 KOICA에 적용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과 그 결과의 업무 적용을 동시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고과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반영하는 등 조직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KOICA 내부 강사진에 의한 직무 연계도가 높은 교육 및 해외 선진공여 기관의 방문 탐방 교육과 연수 등으로 구성하여 선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임원진 심층면접 결과

KOICA 임원진에 대한 심층면접은 2009년 7월 7일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은 연구대표가 각 1인의 임원에 대하여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질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웹 서베이의 결과와 직무・직급별 심층면접과 집중좌담회의 조사 결과의 예비 분석내용을 공유하였다.

(1) OECD/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그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의견

KOICA 임원진 대부분이 OECD/DAC 가입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체제의 도입이나

그 적용방안에 대한 고민 보다는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원조의 모델로서 그 논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피력되었다. 임원진들은 특히 한국이 가진 공여국으로서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ODA가 실제 수원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잘 하고 있는 우리식의 원조모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의견 개진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OECD/DAC 가입 후 그 권고사항과 평가체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일 것인데 이에 대한 임원진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DAC 가입과 동시에 곧 준비해야 하는 동료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보다는 OECD/DAC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제고에는 중요하지만, 당면과제인 동료심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하여 임원들은 각자의 고유 영역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과 인식의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OECD/DAC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공통된 의견 또는 문제의식이 부족했다. 이는 KOICA 임원진의 문제라기보다는 KOICA와 외교통상부, 더 나아가 한국 정부 전체 ODA 정책 차원에서 ODA에 대한 범정부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집단인 일부 임원진에서 OECD/DAC 가입 이후의 장기적인 한국의 역할에 치중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거나 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으로서 KOICA의 조직문화를 고려해 볼 때, OECD/DAC의 다양한 권고에 대해 KOICA 직원들마저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KOICA 임원진은 한국의 OECD/DAC 가입의 의의에 대하여 합의된 시각을 가져야 하며, OECD/DAC 가입이 한국 원조의 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원조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KOICA는 선진 원조 규범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ODA 모델로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OECD/DAC의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OECD/DAC 권고사항들에 대한 KOICA의 입장/역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임원진은 KOICA나 한국이 OECD/DAC 가입 후 OECD/DAC 내에서의 논의를 주도해가야 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강했으나,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OECD/DAC 권고사항, 파리 선언, 아크라 행동 계획 등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한국과 KOICA가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일부 비판적인 의견으로는 OECD/DAC 권고사항들이 대체로 선진국의 식민통치 경험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수립된 것들로 한국의 원조와는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실시될 OECD/DAC 동료심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에 따른 KOICA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가 부족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KOICA와 한국 ODA 전체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KOICA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ODA 전문교육 및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교육 미실시, 업무과중, 직무-직급별 역량 차이 등으로 OECD/DAC 권고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OECD/DAC 권고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했다. 또한 한국 전체로 보았을 때 전문 ODA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개발도상국 ODA 사업 경험이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있고, 사업 책임자가 파견될 때 세계시민의식 교육 등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며, 대국민 홍보 및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전문가 부재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한국에서 OECD/DAC 권고사항을 단기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DAC 가입 이후 KOICA의 사업에 DAC 권고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면과제로 임원진은 1) 직원역량 개발과 인사개선, 2) KOICA의 직제 개편을 꼽았다. 직원역량 개발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현재의 시스템도 좋으나 이는 개인적인 활동이 조직의 활동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층 면접 시 연구자가 피력했다. 임원진들은 직원인사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승진 적체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했다. 퇴직 후 교수직 진출, 해외 주요기관 연수 파견 등 직원들에게 승진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OECD/DAC의 2008년 한국 특별 심사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높은 이직률 (35%)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렇게 역량이 강화된 직원들이 오

랜 시간 안정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KOICA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KOICA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과 활용의 문제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DAC 권고사항 적용방안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음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쳐 의사결정집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당면과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OICA의 현재 기능별 직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임원진들은 OECD/DAC 국가들이 지역중심의 편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KOICA가 지역별 편제로 운영했을 때의 실패 경험과 절대적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능별, 지역별 접근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별 특별과제팀(task force team)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과제팀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KOICA의 시스템과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간의 괴리에 대해서는 임원진 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나,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는 대부분 업무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실제 제도적인 보완 노력에 대해 언급한 임원은 한명에 그쳐 제도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변화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임원진들은 외교부가 개발협력정책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OECD/DAC 권고사항 적용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KOICA가 사업집행시 정책적용을 하도록 적극적인 정책가이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KOICA나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한국의 원조활동에 대해 범정부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ICA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의 각계의 논의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3) KOICA의 변화와 각 직급별 역할에 대한 의견

우선 임원 이상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에 대해 KOICA 임원진들은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에 대해 임원진들이 학습하고 숙지하여 이를 KOICA 내부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임원들이 KOICA 내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

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와 동시에 본인의 학습을 꾀하는 CEO 강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임원진이 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본인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부족한 편이었다.

임원진들은 또한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혁신의지를 지원하고 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동급 관리자들 간의 지식 및 원조철학에 관한 격차를 줄이고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통한 "교훈"의 도출과 이를 환류체계로 정착시키는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실무진을 비롯하여 KOICA 전 직원이 각자의 직급에서 선진 공여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원들은 KOICA 이외에 한국 내에서 ODA 전문가를 위시하여 정부 내 관련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여론형성자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4. 직원 집단좌담회 결과 요약

실・부장급 중간관리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은 2009년 6월 30일 – 7월 1일 양일간, 직원 집단 좌담회는 6월 30일 – 7월 2일 (3일간) 진행되었다. 좌담회 참가자 그룹은 직급과 업무내용 (소속 부서)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2명에서 6명까지 그룹마다 다양한 참가인원으로 구성되었다.

(1) OECD/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그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한 부서의 입장

좌담회 참가자 대부분이 부서차원에서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별적으로는 원조의 효과성/비구속성 원조 등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이 역시 업무와 연관되거나 관련된 일이 있을 경우에만 단편적으로 살펴본 지식이라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심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을 뿐 업무와 연계하려는 동인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개인적인 관심 수준에서 특정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무진에서는 부서차원에서 OECD/DAC 이슈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KOICA 직원들은 또한 OECD/DAC 이슈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단내의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있고 실무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지침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관심이나 학습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원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인 제도정비와 이의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KOICA 직원들은 OECD/DAC 이슈 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거나 동인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진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KOICA 임직원들이 모두 각자의 직무에서 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실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과 KOICA의 역량

KOICA 직원들은 20여 년간의 경험과 젊은 직원의 역량을 KOICA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급이 높을수록 KOICA의 원조활동을 "경험" 및 "노하우"라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이 낮을수록 이전의 KOICA 사업경험을 "관행"이나 "목적과 행위가 전도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중간관리자급 내에서는 한국식의 원조가 OECD/DAC에서 권고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표현과 홍보"의 문제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 때문에 사업추진력이 선진국에 비해 뛰어나고 최근 채용된 젊은 직원들의 역량이 높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현재 KOICA가 개선해야 할 부족한 점으로 많은 KOICA 직원들이 DAC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ODA 전문가는 KOICA 직원뿐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며, 기타 분야의 "개발" 또는 "발전" 전문가들이 ODA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DAC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은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으나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KOICA가 OECD/DAC 가입 이후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파편적인 지식이 전부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너무 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다수 있어 OECD/DAC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실제 업무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응

답이 많았다. 좌담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저항감이 많을 수 있고 실제 업무와 권고사항을 비롯한 선진 원조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결국 교육 따로・업무 따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기회가 적었다기 보다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는 앞의 임원진이 업무 시간 이외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과 매우 상반된 의견으로 실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당장의 업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임원진과 중간관리자, 직원들 사이에 업무와 제도개선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인 의견으로는 OECD/DAC 가입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 권고사항의 적용에 대한 직원 간 합의과정이 부족하여 가입 결정은 정부가 한 것이고 KOICA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KOICA 내부에서 아직도 OECD/DAC 가입과 그에 따른 업무의 변화에 대한 내부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권고사항의 적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현재 KOICA의 시스템과 OECD/DAC 권고사항의 적용

직원 집단좌담회 결과 전반적으로 조직편제의 개편 요구가 많았다. 현재의 시스템이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KOICA 전체의 조직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사업 중심의 체계와 지역정책의 분리로 인해 국별지원전략(CAS)등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편제와 독립된 평가조직, 정책기능의 강화, KOICA 단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독립된 부서의 설치 등을 세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의 top-down 방식의 위계적 구조 하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주요 이슈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권한을 갖는 평가시스템과 OECD/DAC 권고사항 등을 전담해서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조직 내 독립 기구의 설치를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실제 과거의 독립 위원회 및 task force team이 개개인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버렸던 경험을 들어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다.

소수의견으로 조직의 개편과 함께 KOICA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과감하게 세부사업 (예: 봉사단 및 연수사업 등)은 아웃소싱하고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선진국형 기관으로 KOICA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나, KOICA 내부에서는 사업의 아웃소싱이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지역 중심의 편제 개편에 대해서 임원진들은 인적역량의 부족과 과거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인 반면 직원들의 경우는 실무에서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조사연구,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조직 내 각 집단들의(실무진, 중간관리자, 임원급, 이사장 등) 역할

임원 이상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임원진들이 선진 공여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숙지하고 그 변화과정들을 파악함으로써 KOICA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직원들은 현재 KOICA와 같은 위계적 조직 내에서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임원들이 KOICA가 선진적인 원조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고 그 의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대외적으로 KOICA와 외교통상부의 업무분담 사항을 공론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직원들은 임원진에게 기대하고 있었다. 자유무역협정 등은 정부차원에서 협상단/대책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반해 OECD/DAC 가입은 그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기타 정부차원의 대응이 없는 현실 속에서 OECD/DAC 가입이 KOICA 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OICA 혼자만 모든 준비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KOICA 내부에서 존재한다. 실무진들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대응 및 전체 ODA 체계에서 풀어가야 할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사안들을 공론화하고 이슈화하는 대외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KOICA의 시스템 변화를 위한 임원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또한 중간관리자들을 학습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KOICA 실무자들은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중간관리자들이 실무진들의 혁신의지를 지지하고 스스로의 직무교육을 통해 동급 관리자들 간의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실무자의 학습 및 교육 기회를 장려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관리자들을 현재의 시스템을 고수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비구속성 원조" 도입 시 중간 관리자급의 반발이 가장 심했음을 실무자 그룹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실무자 집단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습/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고 업무와 연계되도록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단조롭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 동기부여가 어렵고 이에 따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개발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는 달리 중간관리자 및 임원진들에서는 실무자들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업무를 개선하려는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결국 시스템 변화의 중심에는 실무자들의 의견 개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5) OECD/DAC 권고사항들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과 활용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은 제도 및 지침의 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지금까지 있어왔던 업무 따로・교육 따로 식의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제도와 규범을 만들고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중간관리자급에서 실무자들의 권고사항 적용을 장려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떤 근거로 사업에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무자급에서도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사업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참여율과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 직원들은 중간관리자의 이해부족, 업무 우선, 시간적 제약,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마일리지제도 등 인센티브가 있으나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단

내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국의 외부전문가 특강보다는 선진원조 기관 실무자들의 강연이나 교육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웹 서베이 결과와 매우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마지막 정책제언 장에서는 본 장의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체계 도입문제와 관련 KOICA 현황 파악에 기반 하여 DAC 권고사항의 적용을 위한 한국원조에 대한 일반적 정책제언과 함께 원조사업 단계별 KOICA의 Action Plan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VI.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진 원조기관의 적용방법을 살펴보고 현재 KOICA의 당면과제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향후 OECD/DAC 권고사항과 평가체제를 원조사업에 적용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한국 ODA 체계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의 중장기 원조체계의 변화에 따른 KOICA의 새로운 역할을 살펴보고 사업의 단계에 따른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및 장치를 제언한다. 이어 앞서 KOICA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직원 역량강화 기제의 개편을 제안하고 아울러 무상원조 중심 기관으로서 KOICA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센터 구축 및 전략적 OECD/DAC 동료심사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OICA는 오는 2010년 ODA 교육원을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DAC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국내 ODA 파트너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ODA 교육원은 KOICA의 역량강화와 함께 한국 ODA의 선진화와 체계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한국 ODA체계와 분야별 원조정책의 방향성 제고

OECD/DAC에 가입하는 것과 그 권고사항 및 평가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어느 특정 기관의 내부 시스템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조직상의 분절과 위계질서가 얽혀져 있는 복잡다단한 체계 안에서는 ODA 정책 및 사업 구조의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KOICA에 대한 정책제언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 ODA 체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이슈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우선 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국별지원전략(CAS)의 공유와 활용이다. 현재 KOICA와 EDCF가 각각의 중점지원국을 상정하고 있고, 이외의 기관은 중점지원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KOICA와 기획재정부-EDCF가 함께 한국 원조의 전략으로서 공동의 국별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하나의 전략적 토대를 공유하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만을 따로 살펴보면 형식상 외교부가 전체 원조의 기본 정책 틀을 제공하고 KOICA가 무상원조의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외교부 단독으로 국별지원전략을 포함,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많다. 이에 우리는 KOICA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원조정책과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는 외교부-KOICA 공동원조정책 구도를 제안한다. 또한 수립된 정책과 국별지원전략을 통해 외교부는 PCD를 전담하고 KOICA는 원조실행을 전담하는 체제가 보다 더 현실적인 구조라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원조정책결정은 외교부가, 집행은 KOICA가 담당하는 분리된 구조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원조정책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원조집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외교부와 KOICA 양 기관 간에 한국무상원조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국별지원전략의 공동 개발과 공유는 OECD/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또는 지역 및 국가별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장차관급에서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개발협력의 이슈들은 원조 주무 1개 기관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이 있거나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또는 범분야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활동도 분쟁과 평화,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와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조의 효과를 증대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무상 공동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OECD/DAC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 일관성을 통한 원조 효과성 증진을 뜻한다. 즉, 유관 기관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 아래 협력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서 원조 규모 대비 원조 목표 달성치를 높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 발굴

유・무상, 부처 간 협력 및 국별지원전략 공유와 함께 현재 사업 발굴 및 기획의 과정에 있어 KOICA와 외교부 (재외공관) 간의 역할분담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 사업은 KOICA 사무소를 통해 발굴되며 원조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도 KOICA가 담당하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대 수원국 정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원조사업의 수요를 파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외교부에 있다. 다시 말해, 외교부에서 KOICA가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리뷰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수행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집중지원국가 선정과 국별지원전략에 따른 사업기획 또는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개발 및 공여기관 간 협력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OECD/DAC의 권고사항 및 평가체제가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현재 한국의 원조사업 발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KOICA의 노력만으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 연구팀은 사업 발굴 단계 뿐 아니라 사업 수행 결정 과정에서도 KOICA의 권한을 강화하여 외교부-KOICA가 공동협의를 통하여 발굴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에 부합하는 원조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외교부 대사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 KOICA 현지 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외교부와 KOICA는 상하관계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KOICA 현지 사무소도 대사관의 산하조직으로 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 한국의 지도적 역할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하구조를 탈피하여 외교부-KOICA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여러 선진 공여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과 다른 외교부 직원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와 KOICA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진정한 협력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부 직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전문지식을 쌓는데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KOICA는 앞에서 언급된 ODA

교육원을 통해 외교부 직원을 포함, 우리 정부 관계부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외교부 재외공관과 KOICA간의 역할의 재분배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OICA 임원진들이 상위 정책결정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업무의 분담과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3) ODA 법 제정

마지막으로 한국 원조정책입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ODA 법이 통과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이 세워져서, 외교통상부와 KOICA, 기획재정부와 EDCF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개발협력관련 부서들이 개발협력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인식을 갖고 각자의 개발협력 업무와 개별 정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일 것이다. 통일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원조 사업들이 정책 일관성을 갖고 실행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KOICA의 정책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원조 모델에 대한 개념 정의와 비교우위 분야 연구는 한국형 원조 모델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일된 모델을 제공해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KOICA가 앞으로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각종 워크숍과 미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정부부처와 학계,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여 해당 연구가 KOICA내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 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계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KOICA 연구결과를 여러 국제저널 등에 개재하면 국제적 선진 ODA 시각이 반영된 한국의 ODA 정책과 방향성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KOICA의 원조사업 단계별 Action Plan

우리는 앞의 II장에서 각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을 분류, 정리해 보았다. 또한 OECD/DAC 모범 사례 연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 행위 분석을 통하여 PCM 단계별로 두 선진 공여국의 원조관행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II장의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PCM 단계별 주요 OECD/DAC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OECD/DAC 권고사항 적용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KOICA의 단계별 OECD/DAC 권고사항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특히 최근 국제개발협력분야와 ODA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KOICA의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앞의 한국 ODA체계와 분야별 원조정책의 방향성에서는 거시적 정책적 단계에서 한국의 선진적 ODA 틀 또는 레짐 형성을 위한 KOICA의 역할 및 Action Plan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원조사업 프로젝트 단계인 원조사업계획, 집행, 평가에 대한 단계별 KOICA의 Action Plan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계별 원조 이슈에 대한 OECD/DAC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국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는 PCM 단계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원조활동 사이클을 KOICA의 프로젝트 사이클과 비교해 보고, 각 단계별로 보다 선진적인, OECD/DAC 권고사항에 더욱 부합하는 원조 체제 수립을 위해 KOICA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Action Plan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KOICA 사업집행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원조 정책 입안 단계에서 각 이슈별 OECD/DAC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1 참조). 먼저 빈곤 감소를 위해 OECD/DAC은 원조 정책입안 단계에서 빈곤 친화적 성장, 민간분야의 참여를 강조하고, 성 평등과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주류화 정책 도입을 권고한다. 또한 효과적 원조를 위해 OECD/DAC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파트너십 강화, 공여국간 원조 조화, 수원국 중심의 원조정책, 수원국 역량강화, 정책 일관성 등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의 내용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며 원조의 질 제고를 위해 원조의 비구속화, 특히 고채무빈국에 대한 우선적 비구속화를 강조한다.

<표9> 정책입안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OECD/DAC 이슈	주요 권고사항
빈곤 감소	빈곤 친화적 성장 추구 민간분야로의 개발 영역 확대-사업자 및 민간투자 확대 전략
성 평등	주류화 및 크로스커팅 이슈 공여국의 정책과 파리선언 등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과 일치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주류화 및 크로스커팅 이슈
분쟁/평화/취약국가	정책일관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취약국가 장기적 접근 전략 수립

UN MDGs	UN MDGs의 우선 목표정책으로 인식
원조의 효과성	국제사회의 목표에 부합한 전략 수립 장기적 ODA 예산확보 파트너십 강화 공여국 간 정책협의와 이를 반영한 공여 정책 계획/집행/평가에 따른 수원국 중심 원조정책 수립
거버넌스	수원국 공공분야 역량강화 집중 정책 인권/민주화/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량강화 전략
무역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정책네트워크 수립 (w/기타 공여국, 수원국 내 시민사회)
원조의 질	비구속화/구속성 원조 비중 축소 (50%이하)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우선적 비구속화

우리는 원조정책입안 단계에서 이러한 OECD/DAC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KOICA 실행방안으로서 특히 빈곤, 주류화, 원조 효과성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사례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1) 빈곤 감소

OECD/DAC이 크로스커팅 이슈로 강조하고 있는 빈곤, 환경, 성 평등 등의 이슈 중 빈곤 감소는 다른 주요 이슈에 비해 국내에서 공론화가 가장 부족한 부문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간분야의 성장을 빈곤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여겼던 신자유주의적 ODA 정책을 비판하며 빈곤 친화적성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모든 원조집행에서 빈곤평가(poverty assessment)를 의무화하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빈곤 감소를 가장 중요한 원조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있으며 모든 원조사업이 빈곤 감소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빈곤을 주요 이슈로 삼아 모든 원조사업에 대한 빈곤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이 모든 원조사업정책 수립 시 빈곤을 고려하여 한국의 원조사업이 국제개발원조의 근본 목적인 세계 빈곤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2) 주류화

원칙적으로 주류화 정책은 KOICA 사업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반 원조 정책의 일환

으로 외교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 연구팀은 외교부-KOICA의 공동 원조정책을 제안하며, 이러한 구조의 가정 하에 KOICA가 주류화 정책 도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로 한다.

앞의 사례국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Irish Aid 내에 주류화자문그룹(mainstreaming reference group)을 두어 환경과 성 평등 등 크로스커팅 이슈의 주류화와 관련하여 Policy Planning Unit(PPU)에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KOICA 내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을 두어 크로스커팅 이슈의 주류화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며 주류화에 대한 KOICA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류화자문그룹은 각 부서에서 1-2명의 팀원들로 구성하며 주류화에 대한 이해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KOICA 직원 뿐 아니라 주류화 그룹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ICA 직원들은 주류화자문그룹이 개발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업무에 주류화 전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KOICA 주류화 그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 (예를 들어 빈곤, 환경, 성 평등 등)의 주류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주류화 성공 사례와 한국적 활용방안 분석
- OECD/DAC 내의 젠더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ODA 체제에서 성공적인 주류화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인 단계적 목표를 세워 추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공여국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주류화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차원에서 주류화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KOICA 주류화그룹은 주류화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KOICA 임・직원뿐 아니라 외교부와 재정부 등 원조 관련 주요 정부기관, 시민사회, 학계,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원조 효과성

2008 한국에 대한 DAC 특별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한국은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하며 원조 조화를 위해 다른 공여기관과 원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외교부 내에 "harmonization desk"와 "Effectiveness and Quality Department" 같은 특별 기구를 두어 네덜란드 원조행위가 파리선언의 원칙에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외교부와 함께 한국의 무상원조 집행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KOICA가 한국의 원조행위가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 원칙, 특히 파리선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다른 국제 양자・다자 원조기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공동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네덜란드와 같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를 KOICA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KOICA의 인력상황이나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새로운 부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사업 발굴, 계획, 대외관계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의 정책기획팀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담당하는 기능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KOICA 정책 기획팀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KOICA의 정책기획팀은 원조 효과성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함으로서 한국의 원조행위가 원조 효과성에대한 국제원칙을 따르며 다른 원조기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해지는가를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조사업계획 단계

동 연구팀은 한국의 원조사업 계획 단계를 CAS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레벨과 KOICA 프로젝트 레벨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해당 OECD/DAC 권고사항을 밝히고 이에 따른 KOICA의 Action Plan을 도출해 보기로 하겠다. 아래 표는 원조 계획 단계에서 이슈별 OECD/DAC이 권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한 것이다.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DAC은 빈곤 감소를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계획 단계에 포함할 것, 그리고, 양성 평등을 위해 성인지적 예산과 여성권한강화 프로젝트 기획을 권고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원조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며 분쟁과 취약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의 단계별 접근과 안보시스템 개혁지원을 원조계획단계에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수원국의 법과 제도 파악 및 활용을 고려한 원조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그리고 원조 효과성 고취를 위해 OECD/DAC은 수원국 자원 활용과 예산의 효과적

분배를 강조한다.

<표10> 원조사업계획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OECD/DAC 이슈	주요 권고사항
빈곤 감소	사전영향평가의 실시와 활용
성 평등	성인지적 예산 권한강화 프로젝트 기획
환경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와 활용 다양한 분야에 따른 계획 및 집행/평가 시스템 구축
UN MDGs	중장기 예산 수립 개별 목표를 target으로 한 프로젝트 목표 수립
분쟁/평화/ 취약국가	분쟁단계별접근 안보시스템 개혁지원
원조의 효과성	수원국 자원 활용 및 예산의 효과적 분배
거버넌스	수원국 내 법적/정부조직 제도 파악 및 활용
무역	무역관련 원조의 장기적 예산편성/계획 역량강화 기제 확보

1) 국별지원전략(CAS) 계획 단계

2008 한국에 대한 '한국 특별심사' 보고서에서 OECD/DAC은 일관된 의사결정과 조화로운 ODA 활동을 위해 한국이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KOICA 정책연구실에서는 분절된 한국의 원조체제 안에서 통합된 CAS를 세우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특히 몽골과 에티오피아에서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권고사항을 실행전략으로 적용한 선진적인 CAS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DAC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한국 ODA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CAS 개발에 대한 KOICA 노력의 한 일환으로 원조프로젝트와 CAS 계획 단계에서 수원 대상 지역의 시민들의 관점과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여러 대외원조분야 학자들은 공여국이 생각하는 수원국의 '필요(needs)'와 수원 대상국 관점에서의 '필요'는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원조의 기준점을 필요성에 기반(need-based)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다 (Pritchett and Woolcock 2008). 왜

냐하면 '필요(needs)'와 '원하는 것(want)'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수혜자들이 원하는 원조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여국 시각에만 입각하여 수원 대상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결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면 수원 대상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원조가 아니었기에 원조 산출물의 유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며, 이는 결국 원조 효과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Pritchett and Woolcock 2008).

CAS 원조 계획 수립 시, KOICA는 다음과 같은 DAC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 수원국, 정확하게는 수원 대상 지역 시민들이 필요한 부문,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DAC이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권고사항인 수원국의 제도수행 역량 파악에 기반한원조계획이 CAS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CAS는 빈곤 감소와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취약국가와 분쟁 상황에 처한 수원국에 대해서는 수원국의 안보시스템 개혁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분쟁 단계별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CAS 사업계획은 KOICA의 각 소관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며 해외사무소와 재외공관은 CAS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원조집행기관인 현지 외무부 대사관이 주도해서 세운다. 이는 파리 선언의 주요 정신이며 OECD/DAC이 지향하고 있는 '수원국 상황에 맞는 원조' 라는 국제적 원조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원조사업계획은 공여국 본국의 외무부가 아닌 수원국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대사관이 수원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앞에서 KOICA의 해외사무소 역량 강화를 통해 KOICA의 사업 발굴 및 기획 권한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동 연구팀은 수원국 주재 KOICA 해외 사무소 내 개발협력 전문가 파견 및 보충을 제안한다. 현재 KOICA 해외 사무소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원국 현지 상황에 맞는 원조 사업 발굴과 기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KOICA 해외 사무소의 인력 보강,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개발협력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Irish Aid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원국 현지인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여 아일랜드 국별지원전략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 현지 사정과 환경을 고려한 원

조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개발협력전문가를 갖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우리는 또한 KOICA 현지 사무소의 역할 강화 뿐 아니라 KOICA 현지 사무소와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아일랜드와 같이 KOICA 본부에 country program 담당 부서를 두어 KOICA 해외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KOICA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KOICA 본부에서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계획, 사업실행은 각각 기획예산팀, 지역팀, 여러 섹터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수원국에 대한 일관적 정책방향 제시와 성과관리가 어렵게 한다. 따라서 동 연구팀은 지역팀/섹터팀의 기능을 country program 담당부서로 통합하여 KOICA 조직을 보다 더 지역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KOICA의 조직 개편은 KOICA의 고유의 역할인 민간의 섹터 전문성과 DAC등의 정책기관과의 다리 역할 강화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KOICA 단위 프로젝트사업 기획 단계

KOICA는 현재 여러 OECD/DAC의 권고사항을 프로젝트 계획단계에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현재 프로젝트 수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성 평등 이슈의 주류화를 위한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계획단계에서 위의 DAC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KOICA 차원이 아닌, 정책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여러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환경 이슈는 범분야적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나 폭넓은 전략적 환경평가는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27]. 환경 이슈에 대한 한국 ODA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환경레짐의 역량강화와 함께 한국 ODA 정책결정자들이 환경 이슈를 범분야적 이슈로 인식하여 모든 원조사업에서 환경주류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최성호, 정유아, 이현주 2009). 우리는 앞의 KOICA 주류화자문그룹의 역할로서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류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정책입안 단계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사업계획단계에서 DAC의 여러 권고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는 또한 OECD/DAC이 성 평등을 위해 원조사업계획

27) 현재 pilot으로 진행되는 2개의 CAS에서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도 중에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단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성권한강화 프로젝트의 기획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빈곤영향평가는 CAS 뿐 아니라 모든 KOICA 프로젝트 레벨에서 도입하여 실행해야 한다.

(3) 원조사업집행 단계

원조사업집행 단계에서 OECD/DAC은 빈곤 감소를 위한 빈곤 친화적 접근, 양성 평등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범분야적 접근법, 그리고 원조 효과성 증진과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원조조화, 원조의 비구속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원조집행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원조사업이 계획안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조사업집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본국 외무부에서 Country team이 2년 마다 현지 대사관에 파견되어 원조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아일랜드도 CAS에 대한 중반기 평가를 시행함으로서 원조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표11> 원조집행 단계의 주요 OECD/DAC 권고사항

OECD/DAC 이슈	주요 권고사항
빈곤 감소	빈곤 친화적 접근 (i.e.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성 평등	범분야적 접근법사용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	범분야적 접근법 도입 Win-Win 전략 수원국 내 역량강화
UN MDGs	범정부적 접근 전문 NGOs 참여
분쟁/평화/취약국가	범정부적 접근
원조의 효과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원조 조화
거버넌스	거버넌스 인지강화 교육프로그램 제도개선
무역	공여국 내 제도개선 프로젝트 (무역장벽 철폐 등)
원조의 질	(부분) 구속성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 모니터링 비구속화/구속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한 수원국과 협의 및 고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원조 집행은 주로 현지 대사관이, 그리고 모니터링은 본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연수사업을 제외한 무상원조에 대한 사업집행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외사무소와 KOICA 본부에서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사무소를 통한 원조사업 진행은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거리 집행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정보피드백문제(information feedback loophole)'[28]를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KOICA 사업 집행의 문제는 프로젝트 관리의 큰 업무를 차지하는 조달 및 계약관리 업무가 수원국 현지가 아닌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국 현지에서 조달 및 계약관리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 제언인 KOICA 해외사무소 역량강화와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OECD/DAC이 강조하고 있듯이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서 KOICA는 현지 사무소 인력의 전문성과 보다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KOICA 본부에서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원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국별지원전략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와 같이 중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원조사업집행 형태로서 OECD/DAC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역량강화를 위해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원조 집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가장 주요한 원조형태로 budget support를 도입하고 있다. 향후 KOICA에서도 원조형태로서 budget support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에 있으며 이는 OECD/DAC이 지향하는 선진적 원조집행 형태로 전환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29] 우리는 이러한 budget support 방식 도입에 있어 KOICA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수원국 정부의 역량, 특히 조달 시스템에 대한 수원국의 역량 파악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정권이 매우 불안하여 수원국 정부가 일반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주요 수원대상국에서 제외한다. 한국도 원조 집행 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수원국 정부의 역량

28) Jakob Sevensson (2008)은 납세자와 원조 공여자들간의 지리적・정치적 분리로 인해 국제 ODA 체제에서 "broken information feedback loop"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즉 납세자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ODA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수혜자들도 원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여국 납세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29) 현제 KOICA에서는 CAS를 통한 변형된 SWAps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과 정치적 환경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KOICA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CAS 사업과제에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수원국의 행정역량 파악을 포함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해당 수원국에 대한 구체적 원조사업계획과 집행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원조의 질 향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KOICA의 Action Plan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OECD/DAC이 지적한 바대로 한국은 비교적 높은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모두 원칙적으로 모든 원조를 비구속 원조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Irish Aid가 처음 설립된 시점에서부터 모든 원조는 비구속 원조 형태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두 선진 공여국들이 모든 원조를 비구속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빈곤 감소라는 뚜렷한 원조 목표를 모든 정책 기관, NGO,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는 원조의 목적은 경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적 목적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튼튼히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원조 지원 목표로서 인도주의가 아직까지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국민의 원조에 대한 인식과 지지 확산을 위해서는 인도주의보다는 원조사업을 통해 한국이 국제공공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향일 것이다.

동 연구팀은 한국의 구속성 원조의 비중감소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 원조의 방향성과 목적을 위와 같이 뚜렷하게 정립하여 관련 집행기관들이 일치성을 갖고 OECD/DAC이 지향하는 형태로 원조를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 제안한다. 이러한 원조 정책과 선진 원조레짐 형성을 위해 KOICA는 일반 대중들과 원조 정책 입안가들을 대상으로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 왜 구속성 원조가 원조 효과성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주최함으로서 한국의 선진적 원조 레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Project Design Matrix: PDM)에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MDGs, 거버넌스, 원조의 효과성 등 주요 DAC 이슈별 indicators pool을 개발하여 원조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KOICA의 원조 사업이 DAC의 권고사항에 더욱 부합하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표11〉의 각 이슈별 DAC 주요 권고사항의 내용을 indicators pool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 및 환류 단계

<표12> 원조 평가 단계의 OECD/DAC 주요 권고사항

OECD/DAC 이슈	주요 권고사항
빈곤 감소	빈곤층 역량강화 평가 친 시장적. 빈곤친화적 사회제도 및 인프라 구축
성 평등	공여국 내부 역량강화 수원국 내 권한강화 제도개선 수원국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환경	공여국 내부 역량 강화
UN MDGS	공여국 내 홍보활동 강화 이행사항 평가 통계지표에 따른 평가
거버넌스	수원국 내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조의 효과성	단계별 평가메커니즘의 구축 적절성,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영향력을 반영한 평가 사후관리

평가 단계에서 OECD/DAC의 각 이슈별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빈곤감소를 위해 DAC은 빈곤층 역량강화 평가사용을 권고하며, 성 평등과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역량강화를 주요 평가 척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과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영향력을 반영한 평가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종합하면 원조 평가 단계에서 DAC은 무엇보다 수원국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연구팀은 한국이 평가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슈별 OECD/DAC 권고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CAS 수립 시 평가 척도로 해당 사업의 크로스커팅 이슈인 빈곤 감소, 성 평등,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위의 OECD/DAC 권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OECD/DAC은 거버넌스를 위해 수원국 내 거버넌스 역량강화 및 제도 구축을 주요 평가 기

준으로 적용할 것과 동시에 수원국 거버넌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수원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좀 더 선진화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KOICA가 다른 공여국과 국제원조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당 수원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을 제안한다.

2008년도에 KOICA는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의 3차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OICA는 OECD/DAC에서 권장하고 있는 평가 기준, 즉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기준으로 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OICA의 평가 매뉴얼은 DAC 가 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선진 공여국의 매뉴얼을 분석하여 한국 실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만들어졌다. 현재 KOICA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KOICA의 사업평가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KOICA에서도 분산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종료평가를 실시하며 사업평가실에서는 연간종합평가계획 수립을 통해 KOICA 평가계획을 총괄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평가실은 사업 종료 후에 섹터별・사업별・국별 교훈 도출을 위한 사후평가 대상을 선정,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2009년 초부터는 'KOICA의 파리 선인 이행 정책 평가'등 개별 사업의 사이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의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KOICA 원조평가시스템 선진화 노력은 DAC 권고사항을 한국 원조평가시스템에 반영하려는 적극적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더 선진적인 원조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사례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KOICA의 Action Plan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먼저, 평가팀의 독립성 강화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부서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분리함으로서 평가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평기부서에 대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어 재정 또는 인사로 인한 압력행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을 높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평가는 원조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보다 더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사업대상 선정과 보고서 작성에서 KOICA 사업평가실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단계에서 수원국의 입장, 그리고 다른 공여국과의 협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트랙 레코드, 분야별 트랙 레코드 등을 통해 수원국 원조 시스템을 평가하고 원조 평가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트랙 레코드는 수원국의 정책, 기관, 제도 등을 분석, 평가

한 자료로 수원국 원조 시스템 평가의 기본 자료로 쓰인다. 분야별 트랙 레코드는 트랙 레코드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네덜란드가 참여하고 있는 특정 원조 분야에 대한 수원국 원조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평가한 자료이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KOICA는 수원국 현지 상황을 반영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실무자의 평가과정 참여 강화를 제안한다. 사무소 직원, 본부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 실행에 있어 용역 계약으로 참여한 전문가들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아일랜드는 현실적인 시각을 평가 과정에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수원국 현실에 맞는 ODA 사업 평가와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팀은 한국 ODA에서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가 원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CAS를 포함한 원조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한국 ODA 사업의 평가는 많은 경우 일단 사업이 시작된 후에 평가 기준과 방법이 도입되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KOICA 역량강화 정책제언

(1) 직원 역량강화 기제 개편

제도적인 개편과 동시에 KOICA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KOICA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편하여 이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논의 동향과 OECD/DAC 권고사항 및 이슈들에 관한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워크숍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OECD/DAC 가입과 권고사항의 준수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그 적용에 따른 내부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부서별 또는 직원 개인별로 진행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배가하고 참여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기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분석결과를 분기별 연찬회 등 집합 교육에서 발표하고 우수한 발표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개별 포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유발에 힘써야 한다. 앞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KOICA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찬회 등 집합 교육은 가급적 단기속성 과정으로 KOICA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여 그 참여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원진, 중간관리자, 실무진들이 업무 규정과 지침 이외에도 직급 간 이해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업무개선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OECD/DAC 권고사항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OECD/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실무자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원진 프로그램에서는 각 임원별로 OECD/DAC 권고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의 입장과 이에 따른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CEO 포럼 형식을 도입하여 단기적으로는 문제의식을 함양하고 장기적으로는 KOICA가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개선해 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임원진들은 한국 ODA의 방향성에 대한 통일된 시각과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동 연구팀은 KOICA 임원진 포럼에 자문위원이나 국제개발협력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OECD/DAC 권고사항이 탁상공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원조활동에 적용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KOICA 내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선진공여기관 실무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체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메커니즘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강연회 또는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이러한 실무 워크숍을 통해 KOICA 직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 여성 등 크로스커팅 이슈에 대한 업무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팀별로 gender champion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주류화자문그룹을 두어 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업무에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DAC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KOICA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제안한다. 현재 직원들의 석사 및 박사학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대부분 행정학, 정치학, 개발학 등 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여성학, 환경정책, 교육정책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관련 학위 취득을 장려함으로써 원조전문가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매년 선발하는 지원자들 중 일정 비율로 quota를 정해 전문분야 학위과정 및 연수과정(certificate program)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

토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행정학 등을 제외하고는 야간대학원이 없어서 학위 이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업무를 하면서 주간 수업을 듣는 것은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 KOICA 직원들은 행정대학원에서 환경, 교육, 여성정책 등을 논문주제로 잡아 연구하고 있다. KOICA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학계의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KOICA 직원에 대한 이러한 교육지원방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전문가가 단내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조직 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과 투자가 KOICA 직원 개개인을 비롯한 조직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직차원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해당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전문지식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원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참여가 쉽지 않고, 활용방안이 없는 지원은 조직 차원에서도 인력과 재원의 낭비로 지적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KOICA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KOICA 정책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할 것이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비전제시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OECD/DAC 이슈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센터 구현

KOICA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한국의 다른 여러 무상 원조기관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한국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 전략의 공유와 확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조 유관 부처들은 개도국 원조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CAS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KOICA가 OECD/DAC의 이슈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KOICA의 정보센터는 국내외 원조 활동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원조 사업 간의 조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정보센터는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KOICA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포함,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KOICA 정보센터가 선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변화 경향과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인력양성센터의 기능도 겸비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센터를 통해 KOICA는 무상원조 주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중심적 위치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ICA 정보센터는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한 reporting system에 대한 정부 실무자 워크숍을 주최하고 CAS의 확산과 수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센터를 통해 DAC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기타 기관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OECD/DAC 동료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OECD/DAC 동료 심사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현재 OECD/DAC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본 장에서 한국 ODA 체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과 OECD/DAC의 이슈별 DAC 권고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KOICA의 대응방향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국의 원조 PCM 단계를 프레임웍으로 도입하여 논의해 보았다. OECD/DAC 가입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개편과 함께 도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는 OECD/DAC 동료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OECD/DAC은 매 4-5년 마다 각 회원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OECD/DAC의 동료심사는 회원국의 원조활동 성과 뿐 아니라 회원국의 원조 정책과 집행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OECD/DAC 동료심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회원국의 개발협력활동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합된 시각과 기준의 도출이라 하겠다. (OECD/DAC 동료심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DAC 동료심사 내용 가이드〉 참조.)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나라로 한국의 경험은 다른 개도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개발 역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무대에서 한국은 앞으로 선진 공여국으로서 개발 프레임웍을 만들어나가고 개혁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개혁에 앞서 우선 현재 국제개발협력 레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OECD/DAC의 활동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이를 따르려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OECD/DAC 동료심사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의 각 부서들은 OECD/DAC 동료심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ECD/DAC 동료심사는 원조 전략 방향, 정책 통합성, ODA 규모, 채널 및 배분, 기구 및 운영, 원조 효과성 등의 주제로 평

가를 실시한다. 또한 각 항목별로 OECD/DAC은 원조 공여국 본부에 대한 평가 질문과 수원국 현지의 해외 공관 (또는 사무소)에 대한 평가 질문을 구분하고 있다. 각 항목별 상세한 OECD/DAC 동료심사 평가 질문 내용은 첨부자료 〈DAC 동료심사 내용 가이드〉를 참조하기 바란다.

KOICA는 동료심사의 질문들의 항목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8 OECD/DAC의 한국 특별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체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웍 마련
- 현재 한국의 분절된 원조 시스템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일
- 양허성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의 비율 제고
- 정책 일관성을 높여 원조 조화를 달성
- 각 수원국에 대해 통일된 CAS를 마련
- 다른 공여국들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달성
- 원조의 비구속화
- 인도적 목적의 원조는 필요성에 근거해야 하며 국제적 틀 안에서 제공

물론 위의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KOICA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주요 원조정책결정기구와 조직들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원조체제를 국제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KOICA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의 주요 원조 정책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OECD/DAC 동료심사를 대비하는데 있어 KOICA의 주요 역할은 OECD/DAC 동료심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한국이 준비해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KOICA는 ODA 정보센터를 통해 개발협력의 국제적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OECD/DAC 동료심사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다른 원조 기관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진적인 공여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길은 현재의 국제적 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한국의 기여 부문을 찾아 점진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틀을 개혁해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선욱. 199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한국여성개발원. 11(1):43-73.

김은미. 2009.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임강택. 김규륜. 박영호. 전병곤. 이조원. 2008.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통일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국제협력단.

국외문헌

Asian Development Bank. 2008. "Reconstructing a Fragile State." Manila: Philippines

Irish Aid. 2008. A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to Country Strategy Papers

Irish Aid. 2008.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First Annual Report

Netherlands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3. "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ies: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en route to 2015."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Our Common Concern: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8. “Ahead of the Crowd?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Case study: the Netherlands.”

Lant Pritchett & Michael Woolcock. 2008. "Solutions When the Solution

Is the Problem: Arraying the Disarray in Development" in William Easterly (ed.) Reinventing Foreign Aid. Cambridge, Massachusettes: The MIT Press.

Svensson, Jakob. 2008. "Absorption Capacity and Disbursement Constraints" in William Easterly (ed.) Reinventing Foreign Aid. Cambridge, Massachusettes: The MIT Press.

OECD/DAC 문서

2009 Gender Equality in Sector Wide Approaches

2009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

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Compendium of Country Examples and Lessons Learned from Applying the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national Procurement System

2008 Concepts and Dilemmas of State Building in Fragile Situations

2008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2008 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8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2008 Governance, Taxation and Accountability

2008 Incentives for Aid Effectiveness in Donor Agencies : Good Practice and Self Assessment Tool

2008 Making Aid More Effective Through Gender, Rights And Inclusion

2008 Reconci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 Goals: Measuring the Impact of Policies

2008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2008 Service Delivery in Fragile Situation

2008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2008 The Report on the Use of Country System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2008 Trade-Related Assistance: What Do Recent Evaluations Tell Us?

2007 Enhancing the Delivery of Justice and Security: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2007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7 Gender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2007 Gender Equality and Aid Delivery: 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

2007 Policy Paper and Principles on Anti-Corruption: Setting an Agenda for Collective Action

2007 Practical Guide to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2007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2007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2007 Promoting Pro-Poor Growth: Practical Guide to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2007 The OECD DAC Handbook on SSR: Supporting Security and Justice

2006 Aid for Trade: Making It Effective

2006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6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6 Armed Violence Reduction: Enabling Development

2006 Development Gateway Special Report: Aid Harmonization - What Will it Take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6 Enhancing Women's Market Access and Promoting Pro-poor Growth

2006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6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2006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Donor Approaches, Experiences and Challenges

2006 Paris Declaration Commitments and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6 Policy Commitment an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2006 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Harmonizing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Infrastructure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to Donors - Key policy messages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Statement

2006 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6 Removing Barriers to Formalization

2006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2006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to Fragile States

2005 Bridge Over Troubled Waters: Link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2005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Building: What Counts as ODA?

2005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Africa

2005 Making Poverty Reduction Work: OECD's Role in Development Partnership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wnership, Harmonization, Alignment, Result, and Mutual Accountability

2005 Policy Lessons on the Role of ODA in Mobilising Private Investment

2005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

2005 Trade and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2004 Accelerating Pro-Poor Growth through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4 ODA Eligibility Issues for Expenditure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2004 Poverty and Health: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Documents

2004 Translating the Monterrey Consensus into Practice: the Contribution by the European Union

2004 Why Gender Matters in Infrastructure

2003 A Development Co-operation Lens on Terrorism Prevention: Key Entry Points for Action

2003 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Inte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

2003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3 Map-Making and Analysis of the Main International Initiatives on Developing Indicators on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2002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2002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1 DAC Guidelines on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1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2001 Poverty-Environment-Gender Linkages

2001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Sustainable Development: Critical Issues
2001	The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0	A Better World for All
1999	DAC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1999	DAC Scoping Study of Donor Poverty Reduction Policies and Practice
1999	Policy Statement: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1999	The Tying of Aid
1999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Matters
1998	DAC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
1997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1997	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1997	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2
1997	The Design and Use of Capacity Development Indicators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5	DAC Guidelines: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1995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1995	Sustainable Use of Wetlands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1994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7: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Disaster Mitigation
1994	Guidelines on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1994 Guidelines on Pest and Pesticide Management

1993 Guidelines on Chemicals Management

1992 DAC Guideline on Aid and Environment no.4

1992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s

1992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1: 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1992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Good Practices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1987 DAC Guiding Principles

OECD/DAC 동료심사 자료

2009 Austri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9 Ire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8 Australi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8 Franc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8 Japa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8 Luxemburg: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8 Norwa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7 Spai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7 Fin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7 Canad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7 Denmark: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Greec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United Kingdo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United State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German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Netherlan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6 Portug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5 Switzer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5 Belgiu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5 New Zeal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5 Swede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04 Ital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네덜란드 방문 수집자료

BZ Evaluation Programme 2006-2011 - An Overview of Evaluations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morandum for the mid-term review of the 2006 Peer Review of Dutch Development Policy

Our Common Concern: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2007

Results in development: Report 2005-2006

Glossary: Budget Support, 2008

Agricultur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2008

Policy Memorandum: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2008

아일랜드 방문 수집자료

White Paper on Irish Aid 2005

Irish Aid: Annual Report 2007

Rapid Response Initiative: Enhancing Humanitarian Emergency Response 2005

Hunger Task Force: Report to the Government of Ireland 2008

Support to Tsunami Affected Countries 2008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First Annual Report, 2008

Ireland Peer Review 2008

Our Common Concern -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Results in Development Report 2005-2006

Agricultur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2008

HIV 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Ireland Today 2008

The Right to be Safe: Improving maternal health and health equity in Tanzania 2008

The Irish Aid and Attitudes to Development Issues Omnibus Research 2008

Environment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8

Country Strategy Paper - Tanzania, Vietnam, Zambia

Irish Aid Tanzania Fact Sheets - Ireland's engagement in Tanzania, Gender, General Budget Support, Supporting the Reduction of Poverty, Civil Society, Social Development,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ural Livelihoods and Growth

A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to Country Strategy Papers

Civil Society Policy

Ireland an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A Summary of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ance

2007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2007-2009

인터넷 자료

ODA Korea 웹사이트 〈http://www.odakorea.go.kr〉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stp.or.kr〉

〈첨부자료1〉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동료심사 가이드
(DAC Peer Review Content Guide)

2008년 10월 30일

* 본 DAC 동료심사 가이드는 2008년 10월 2일과 16일에 열린 DAC 동료심사 방법론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참고해서 수정된 것임. 1장-6장의 내용은 10월 16일 DAC 회의에서 승인 받았으며 2009-2010년 동료심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DAC 동료심사 가이드

배경

1.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매 4-5년마다 각 회원국의 개발 협력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는 동료심사를 위한 분석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료심사의 개념적 틀을 개발 ·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DAC 동료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회원국이 DAC에서 합의한, 그리고 국 · 내외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정책에 맞추어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함
   - 상호 학습을 통해 DAC 회원국들이 개개의, 그리고 공동의 원조성과를 향상시키도록 도움
   - 모범 사례를 밝혀내고 조정을 촉진시킴

2. 동료심사는 회원국의 원조 활동성과를 평가 하며 (원조 기관의 성과뿐 아니라 전반적 성과) 회원국의 원조 정책과 원조 집행을 조사한다. 동료심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DAC 모범 사례(good practice) 연구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능한 경우 국내의 선별된 평가기준도 참고로 한다. 또한 OECD/DAC 동료심사는 평가 대상 회원국의 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된, 전체 시스템적 시각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u>본 가이드의 목적</u>

3. 본 가이드는 모든 동료심사에 대한 프레임웍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가이드는 동료심사의 표준적인 구성에 맞추어 각 장마다 주요 질문을 제시하며, 또한 여러 동료심사의 일반적 또는 주제별 학습을 위한 프레임웍을 제공한다. 본 가이드는 동료심사 보고서의 장(chapter)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료심사의 절차와 각 참가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Information Note on the DAC Peer Review Process (2007)와 함께 읽어야 한다.

4. 본 가이드의 가치는 여러 원조 활동을 통해 얻어진 교훈을 DAC에 보고하는데 필요한 공통된 분석적 틀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DAC은 2년의 심사 주기 시작 시점에서 특별 관심 분야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심사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열리는 위원회 발표에 맞추어 회원국이 필요한 준비와 정보를 미리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5. 본 가이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사 전 국가 메모랜덤(country memorandum)을 준비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조사단과 심사 대상국으로 하여금 본부와 현장에서의 토론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줌.
- 개별 심사 이후 얻어진 교훈을 밝혀내는 작업을 도우며 연속 심사 이후 에는 주제별 또는 이슈 별 종합・정리 작업을 지원함.

제 1장 전략적 방향

주요 참고 문서

-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DAC Guidelines (1999).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Millennium Declaration (2000).
- Poverty Reduction, DAC Guidelines (2001).
-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C Guidelines (2001).
- Monterrey Consensus (2002).
-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2003).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EU국가해당: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5), 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ction (2007).
- 2006년 4월5일 DAC HLM에서 의결된 Promoting Pro-poor Growth 정책 문서 (2006).
- 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for Donors 및 DAC 가이드라인/참고 시리즈 (2006).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2006).
-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DAC 가이드라인 (2001).
- The OECD/DAC Handbook on Security System Reform: Supporting Security and Justice (2007).
-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007).

목적

6. 원조프로그램의 조사 및 평가는 먼저 전반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의 내용을 구성하고 결정짓는 정책적 지침, 정책 및 전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할 본 장에서는 회원국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의 원조 시스템의 진화, 법적 근거,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 및 현재 비전 등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 공식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해외 원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여부, 그리고 개발협력 정책에 있어서의 의회의 역할 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 동료심사에서 제시된 DAC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부 관련 이슈들

- 개발협력의 역사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개발협력이 어떻게 외교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 내에서 개발협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동료심사 이후에 정책 문서, 주요 개발협력 활동 등에 있어서 일어난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 현재 국가의 개발협력 비전은 무엇이며 노력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 비전이 어떻게 정책 문서나 연례 보고에 반영되고 있는가? 국가 외교정책 이익과 명시된 개발 목표 간의 눈에 띄는 갈등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 국가 시스템 내에서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 리더십의 구심점은 어디인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의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자문 여부 및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가? 개발협력 자문기구와 강령이 있는가? 어떤 공공 모니터링, 책임 메커니즘 및 조치들이 있는가?

- 파트너 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국가 선정에 있어 효과성/영향력/심사 대상국가의 우선순위와의 정책 일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가? 취약성 및 갈등 분석 등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정과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적정 파트너국가의 수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비 파트너국가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파트너 또는 비 파트너국가에서의 활동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은 있는가?

- 원조의 주요 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들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주제들이 세부 분야(sectors)분야로 선정되며 어떤 주제들을 크로스커팅한 주제로 보는가?

- 몬테레이 합의, MDGs, 파리 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 등의 국제 협약이 개발 협력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우선순위 선정 및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 감소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 촉진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 빈곤 감소에 대한 DAC 가이드라인이 정책 및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의 DAC 원칙이 기업 우선 과제 선정에 반영되었는가? 이러한 원칙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다음과 같은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i)취약 국가; ii)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iii)갈등을 고려한 개발; iv) 안보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분쟁 후 관리. 이러한 분야가 개발 기구의 거버넌스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심사대상국에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이 분야의 활동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가? 개발 기구가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및 취약 국가 등의 용어에 대해 합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긴급구호, 분쟁예방, 평화 구축 및 취약 국가 등의 활동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 분쟁 또는 국가 취약성에 관한 조기 경고에 조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취약국가 및 분쟁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등의 역학관계, 통합된 기획, 전략적 평화구축 프레임웍의 개발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형성되어 있는가? 분쟁 또는 국가 취약성에 관한 조기 경고에 반응하기 위해 정책, 안보 및 사회-경제 방면에 있어 파트너 국가와의 대화를 가이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처 간 정책이 있는가?

- 역량 개발 및 특별 주제 (제6장 참조)가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웍 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프레임웍 내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 양성 평등, 건전한 거버넌스, 인권, HIV/AIDS,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기타 크로스커팅한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가 있는가? 이들이 어떻게 분야별 정책 및 전략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이슈들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주류화, 특별 프로젝트, 분야/주제별 프로그램) 이를 위해 특별한 자원이 배당되고 있는가? 이러한 이슈들이 심사대상국의 취약 및 분쟁 국가에서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EU 회원국: 해당 회원국들이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5), 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ction (2007) 등의 협력 사항을 국가 정책 프레임웍에 반영하고 있는가?

- 개발 기구는 양자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지역개발 차원을 다루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역 협력을 소수의 수원국에게 집중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적 원조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같은 지역의 수원국들에서 활동하는 단위간의 조정 메커니즘이 본부 차원에서 존재하는가? 지역 역량 구축 및 지역 기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

- Sub-national 정부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국가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Sub-national 정부가 개발 원조를 제공한다면 이는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가? Sub-national 정부의 활동이 국가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부합하도록 얼마나 권고 또는 강제하고 있는가?

- 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얼마나 되는가? 개발 이슈 및 개발협력 결과를 어떻게 국민에게 고지하고 있는가? 일반 국민의 인식고취와 비전의 소통을 위한 전략 및 예산이 있는가? 시민사회 기구가 국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 해외공관/현지 사무소들이 개발 기구의 전반적인 정책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본부의 정책이 현지의 실제 상황 및 필요에 근거하고 있는가? 본부의 정책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 개발의 현지 이슈들에 대한 cross-government적 접근을 도출해내기 위해 외교와 개발 관점의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취약 국가 및 분쟁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전략이 어떻게 국가 전략 및 프레임웍에 통합되어 있는가? 개발 기구는 취약 상황에서 어떻게 목표를 결정하는가? 파트너정부와 대화할 때, 국가 구축 및 분쟁 이슈와 MDGs 달성을 위한 진전 간의 긴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DAC의 취약 국가 및 갈등 예방에 관한 문서들이 얼마나 잘,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 파트너국가들이 심사 대상국의 정책, 전략 및 수원국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파트너국가 정부에 제공되고 있는가? 본부 정책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상시키고 있는가?

- 지역 내의 해외공관들이 정치, 경제, 환경, 무역, 이주, 및 안보 분야에서의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지역 내의 해외공관 간의 수평적 연계가 지역의 통합 및 지역 갈등 예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양자 차원에서 지역적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가? 수원국 내 공여국 현지 사무소가 얼마나 수원국 지역 기구를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지원 활동을 하는가?

- 심사 대상국의 정책, 전략 및 수원국 내에서의 활동에 시민 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시민사회는 어떻게 프로그램의 구성, 시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가?

제 2장 정책 일관성

주요 참고 문서

- Poverty Reduction, DAC Guidelines (2001).
- 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08).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The Development Dimension (2005).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2007).
-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to Fragile States, DAC (2007).
-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DAC Guidelines (2001).
-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5).

목적

7. 원조 자체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과 빈곤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조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공여국 및 파트너 정부의 정책이 개발 목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DAC 회원국들이 어떻게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동료심사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된다. 이 프레임웍을 통해 동료심사 심사자는 개발 정책의 일관성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심사대상국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국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지 차원에서는 공여국들과 파트너 정부 간의 일관성 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부 관련 이슈들

정치적 약속

- 정부는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개발 정책의 일관성 진전을 위한 행동 계획의 시한이 명시된 일정표를 발표했는가? 정부 최고위층에서 개발 및 일관성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선 분야는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정책 일관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및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협력 메커니즘

- 정책 형성 과정에 누가 참여하며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정책 옵션에 관한 국가의 입장을 형성하고 자문하며 정책 갈등이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범-제도적(cross-institutional) 협력 메커니즘이 있는가? 정책 간 중재를 위한 명확한 강령과 책임사항이 이들 메커니즘에 명시되어 있는가? 업무 수행이 비공식적일 때 부처 간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에서 개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고 있는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량 및 모니터링

- 일관성 관련 이슈들을 정의하고 분석하여 정책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수인력 등을 포함한 충분한 역량과 적절한 자원이 정부 내에 있는가? 심사대상국이 외부의 (비원조) 정책이 특정 국가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위해 파트너 국가 내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였는가?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이 개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있는가?

- 제도적 구조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어떤 절차(보고, 벤치마킹 등)이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러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까지 투명성을 보증하며 정책 일관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생산해 내고 있는가? 의회 및 일반 국민에게 보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심사대상국이 환경/기후변화, 무역 및 이주 문제 중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제도적 구조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더 일관적인 정책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는가?

현지차원의 이슈들

- 심사대상국은 파트너 국가 내에서의 개발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정치, 무역, 개발협력 및 이주 또는 양국 관계의 여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있는가?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파트너국가에서의 이벤트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해외공관/현지사무소 내의 범정부적 접근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는가?

- 심사대상국은 파트너국 정부, 시민사회 및 현지 직원으로부터 정책 일관성/정책 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와 의견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 현지 직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수집하도록 장려되고 있는가? 해외공관/현지사무소가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 국가 내에서의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공여국과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 3장 ODA 규모, 채널 및 배당

주요 참고 문서

- Monterrey Consensus (2002).
- 몬테레이에서 2002년 재확인된 유엔의 ODA/GNI 0.7% 목표 및 기타 협약들 (예: European Council Presidency Conclusion [2005년 6월 16-17]).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목적

8. 공여국 정부들은 원조의 수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이에 대한 이행 약속을 천명한다. 국내 및 국제 목표들이 때로는 상이할 수 있으나 DAC 회원국들의 목표 달성 여부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원조의 효율적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 및 집행 방식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규모와 파트너국의 특성이 다양한 채

널과 도구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할 것인지 결정짓는 요인이다.

9. 따라서 동료심사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i) 국내적, 국제적 이행 약속에 비추어 해당국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ii) 원조 배당이 국가의 정책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예: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배당 상황을 정책 성명서와 비교해 봄); iii) 어떤 원조형식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는지 고려하며 (예: 유 · 무상 지원, 또는 다양한 재정 도구 등); iv) 기존에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 또는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원조 수준에 있어서의 중대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 관련 이슈들

전반적인 원조 규모

- 회원국의 ODA 목표는 무엇인가? ODA/GNI 목표치는 있는가? ODA/GN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회원국의 원조 추이는 어떠하며 ODA 규모의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 ODA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예산 지원, 부채탕감, 혁신적 자원 등). 만일 부채탕감이 ODA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ODA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부채가 완전히 탕감되었을 시에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원조 채널 및 도구(instrument)에 의한 ODA의 전반적인 분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취약 국가 및 분쟁 국가를 위한 사업은 어떻게 재정 지원되고 있는가? 이 부문이 인도주의적 예산과 별도인가 아니면 인도주의적 예산의 일부분인가? 심사대상국이 취약 또는 분쟁 사회에서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서 말한 예산 또는 다른 기금들의 신속한 지불을 허가하는 절차가 있는가?

- 공여국이 파트너국에게 향후 3-5년간의 원조 예산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취약국가에 대한 다개년 원조 계획은 어느 정도 있는가? 원조를 적게 받고 있는 원조 소외국가에 대한 문제가 예산 분배에 고려되고 있는가?

• 분쟁 후 재건 프로그램에 특별히 따로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가? 긴급구호와 재건구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프로그램을 위한 분배가 시의 적절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지원이 초기 및 지속적인 재건에 적합하고 기타 양자 및 다자 기구들의 원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가?

양자 채널

• 빈곤 감소를 위한 이행 약속이 원조 분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파트너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인가? (기준, DAC 자료상의 최대 수원국가들, 소득수준, 지역, 원조국의 수, 경향 및 집중도 등). 파트너국가가 불안정해졌을 때에도 양자 지원금의 수준을 유지했는가 아니면 축소시켰는가?

• 원조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으며, 주요한 도구 및 원조 방식은 무엇인가? 예산 분배에 ODA의 부문별/주제별 우선순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선 원조부문, 비율, DAC 평균, 전반적인 경향, 정책, 기초 사회 서비스들, 정부 및 시민 사회, HIV/AIDS, 양성 평등, 지속가능한 개발, 취약국가/평화-구축, 긴급구호 등) 국가별 원조 배당을 결정할 때 현지 공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지방 정부가 집행한 원조의 통계는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가?

NGO 및 시민 사회

• 정부 및 개도국 시민사회 기구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책 프레임웍이 있는가? 특정 파트너국 또는 원조 효과성을 포함하는 특정한 부문/주제로 NGO 프로그래밍을 유도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는가? 아크라 행동계획에 따라 CSO의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CSO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가?

• 국내, 국제 및 개도국 NGO/시민사회 그룹의 총 지출은 얼마인가? NGO및 다른 ODA 지원 단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무엇이며 이 같은 지원이 다년간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발 프로세스와 긴급구호 프로세스는 별개인가? NGO들이 어떻게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고 있는가?

다자 채널

- 다자 원조 전략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다자 및 양자 지원간의 일관성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다자 원조 전략이 다른 섹터와 크로스커팅 우선과제들과 관련된 국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다자 원조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어디이며 다른 양자 원조 지원 부처와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회원국이 다자 기구 내에서의 원조 효과성을 어떻게 지원, 장려하고 있는가? (MDBs를 포함한) 다자 기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자 원조 수행에 대해 현지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 다자 기구로의 원조 배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비율, 순위 및 경향)? 예를 들어 UN, EU,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등 기구별로 어떻게 배당되고 있는가? 원조의 어떤 부분이 중점 예산에 속하고 어떤 부분이 주제별 기금 및 예산에 속하는가? 기구별 배당은 어떻게 결정되며 이것이 활동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 GAVI나 GFATM등과 같은 글로벌 기금이나 수직 기금에 대한 지원, 이들 기금의 역할, 지원 수준, 기존의 도구 및 기구들과의 보완관계와 관련하여 평가대상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 원조는 어떻게 배당되고 있으며 주요 도구 및 방식은 무엇인가? 양자,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떤 도구 (예를 들어 예산 지원, 프로젝트 자금지원, 기술 지원 등)가 사용되며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지원된 원조금액에 변화가 있는지, 또 만일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 변화를 일으켰는가?

- 개도국에 지원되는 원조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현지 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원조 금액이 센터나 주제별로 어떻게 배당되는가? 국가 주도의 업무 분담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 현지 사무소에서 어떻게 글로벌 기금 및 수직 기금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양자 프로그램과 보완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제 4장 조직 및 운영

주요 참고 문서

-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5).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DAC Guidelines (2001).
-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8).

목적

10.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기획 및 집행을 위해서는 건실한 조직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은 심사대상국가의 원조 행정과 조직이 원조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주요 지침이 될 것이다. DAC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건실한 조직운영 원칙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 충분한 역량, 자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 권한의 위임, 세심한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본부 관련 이슈들

조직

- 해당 개발협력 조직과 운영 시스템의 역사적, 법률적 기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역사적, 법률적 기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확고한 근거와 충분한 융통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가?

- 개발협력에 관여하는 기구나 조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각 기구의 책임은 무엇인가? 기구들은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있는가? 어떤 기구가 주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해당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분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가?

- 개발협력기구는 정부의 정책 지침과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어떻게 조직의 강령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 확정하기 위한 어떤 사업 기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업 기획은 각 부서의 직원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는가? 향후 요구될 인적자원이 통합적인 기획 과정과 예산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 개발협력기구가 원조 효과성 제고노력에 발맞추어 현지 위주의 원조 운영을 집행할 수 있게 적절히 구성 되어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원조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권한을 현지에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협력 기구가 분권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본부와 현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충분하며 현지의 필요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부가 구성되어 있는가? 원조 결정이 분권화된 정도는 어떠한가?

- 리더십과 운영 책임, 기술 역량,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크로스커팅한 이슈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적 구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가?

<u>운영</u>

- 프로그램 실행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파트너국가의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지역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가? 본부에서는 국가 프로그램이 파트너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어떤 식으로 참조하기를 기대하는가? 개발협력기구가 성과 지향적 관리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공여기구의 결과 프레임웍 목표를 준수하고 원조 효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가? 결과 집행, (단위별/개인별) 성과 평가 및 자금 지원 간에 관계는 있는가? 개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예를 들어 1년 단위 또는 몇 해 단위)? 예산은 어떻게 기획, 승인 그리고 운영되는가? 예산 사이클의 어떤 부분이 현지 사무소로 분권화되고 있는가?

•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개발 계획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긴급구호, 재건, 평화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개발협력 간에 제도적, 기능적 장애물이 있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 공여 기구/기관이 행정적 비용을 어떻게 보고하는가? 행정비용 대비 프로그램 지출의 비율은 무엇인가?

• 전반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에 어떤 인적 자원 (규모, skill mix, 근무지 등)이 활용되며 그 구성이 적합하다고 보이는가? 개발협력에 있어 주무 부처(parent ministry) 또는 전체 정부 내에서 충분한 인력(critical mass)이 있는가? 미래의 전략 방향과 관련하여 중기 직원채용 및 직원 개발 계획이 있는가? 경험 있는 개발관련 전문가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개발 전문가를 위한 직종/진로가 갖추어져 있는가? 직원 운영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 결과 및 원조 효과성 성취와 연계되어 있는가?

• 능력 있는 현지 및 제3국 직원의 채용에 관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공여국이 파트너 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갖춘 충분한 수의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있는가?

• 심사대상국은 취약 또는/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직원 또는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취약국가나 분쟁국가에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나 운영절차를 활용하고 있는가?

<u>평가</u>

• 투명성과 책임감: 심사대상국의 평가 정책은 무엇인가? 조직 내에서 그 정책은 잘 인지되고 있으며 잘 수행되고 있는가? 평가 계획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평가 과정이 관리자층과 정치지도층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외부 감독관의 눈에도 평가 과정이 신뢰성 있고 적법하다고 여겨지고 있는가? 원조 효과성 목표에 비추어 본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최근의 평가들은 심사대상국 프로그램의 개발 영향력과 원조 효과성에 대해 어떠한 평을 하고 있는가?

• 자원: 평가를 위해 어떠한 재정적, 인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가? 평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이 예산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가? 평가 직원들은 전문가인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차출된 직원들인가? 기구 안팎에서 누가 평가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는 꾸준히 공개되고 있는가?

- 학습: 심사대상국은 자국 및 파트너 기구와의 협력 활동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평가가 결과 및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평가 과정에서 크로스커팅 한 이슈들이 고려되고 있는가? 평가 결과와 권고사항들이 정책 결정 및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조직

- 현지 사무소가 프로그램 개발, 예산 배당 및 결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적절하다고 보여 지는가? 또한 규정된 정책에 부합하는가? 본부 및 현지 사무소와의 책임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부와 현지 사무소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적절한가? 예를 들어 본부가 현지 사무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현지사무소는 시급한 정보를 본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해외공관이나 현지 사무소 내에서의 원조 프로그램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외공관/사무소는 충분한 협상, 프로그램, 분석 및 운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운영

- 파트너국과의 정부 간 협상 및 자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당 파트너국가와의 양자 개발협력을 위해 어떤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프레임웍 협약, 프로젝트 관련 협약, 또는 문서(notes) 교환)

- 파트너국에서 원조 프로그램 집행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직원 순환근무를 가정할 때 어떻게 업무연속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강도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가? 현지 및 제3국 전문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운영의 효과성은 어떻게 또 얼마나 자주 측정되고 있는가? 실행 수단의 선택이 본부가 설정한 전반적인 전략/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평화 지원 사업 참여자를 비롯한 현지직원들을 위해 취약 및 분쟁상황, 평화 구축 등에 관한 파견 전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훈련을 자국 정부 및 다른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평가

• 현지사무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때 이 중 본부의 명령에 의한 것은 얼마나 되며 현지의 결정에 의한 것은 얼마나 되나? 평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평가 자료의 최종 사용자는 누구인가?

• 평가는 현지 평가자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트너 국가의 제3의 평가자에 의존하고 있는가? 파트너 주도의 평가 또는 공여국 공동 평가의 범위는 무엇인가? 현지사무소는 다른 공여국들이 수행한 평가에서 얻어진 정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 평가가 결과 및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영향을 주는가? 최근의 평가는 프로그램 영향력과 개발 및 원조 효과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중요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전체 조직 차원의 학습과 책임에 반영되는가?

•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SSR에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취약 상황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특별한 지표가 있는가?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을 평가하는 DAC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가? 공여국은 현장에서 얻어진 교훈과 경험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제 5장 원조 효과성

주요 참고문헌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DAC Recommendation (2001).
-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 1), (Vol. II),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6).
- Emerging Good Practices i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Source Book (2006).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목적

11. 다음의 프레임웍은 동료심사자가 공여국이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합의된 원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빈곤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OECD/DAC은 취약한 거버넌스 및 분쟁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또는 일시적 취약상황에 처한 국가에서 원조를 집행 하고 있는 공여국을 위해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라는 파리선언에 대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출판하기도 했다. 동료심사 심사자들은 심사대상국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측정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공여국의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이다.

    본 섹션에서 얻어진 심사결과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DAC 작업반 및 분쟁과 취약성에 관한 DAC 네트워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공여국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원조를 실행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이들 작업반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다 적절하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 관련 이슈들

- 파리선언의 후속조치 겸 아크라 행동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조직차원의 행동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개발기구는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개혁이나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러한 변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가? 프로그램 중심 접근법으로 원조의 66%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국가신탁 시스템을 통해 정부 대 정부 지원의 50%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공여국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 실행계획을 국민 대중, 의회 및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 공여기관과 공유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조직이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공약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협력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 개발협력 인력은 원조 효과성,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 계획과 그 실행의 함의(특히 수원국 내에서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협력 인력이 공여국의 실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 가이드라인 또는 운영지침을 배포한 적이 있는가? 개발협력 임직원이 공여국간 원조조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일치, 결과중심의 원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본부에서는 어떤 내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는가?

- 취약국가 및 분쟁국에서의 원조효과성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접근법은 안정적 환경에서의 접근법과 어떻게 다른가? 심사대상국은 상위분석, 합동평가, 합동 전략 및 취약국가에서의 정치적 참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분쟁 분석의 제도화와 정기적 업데이트를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심사대상국은 다공여국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을 지원하고 있는가? 공여국은 프로젝트별 별도 행정조직(parallel structure)이 장기간 자리 잡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수원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심사대상국은 큰 손실을 가져올 국가 붕괴와 무력 분쟁을 피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장려하는가? 심사대상국은 무력 분쟁이 만연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에도 분쟁 예방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는가?

- 2001년 원조 비구속화에 대한 DAC 권고사항, 2006년 coverage threshold에 대한 폐지 결정, 2001년의 원조 비구속화 권고사항을 비-최빈국 HIPCs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던 2008년 HLM 결의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아크라 행동계획에 따라 원조의 비구속화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지지하는 파트너국가에 상호평가검토를 도입하기 위해 공여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공여국은 파트너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여국 내 부패 행위를 추적 및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는가?

- 조건부 제한에 대한 공여국의 접근법은 아크라 행동계획의 약속을 만족시키는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수원국의 주인의식

- 파트너 국가가 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에 관해 리더십을 행사하는가? 파트너 국가가 국가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는가? 해외공관은 국가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가? 양자 및 다자 공여국은 수원국이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떠한 공동의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심사대상국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십 발휘 및 빈곤 감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한 역량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수원국이 활용 가능한 국가 개발전략, 개발목표 및 신뢰할만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심사대상국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수원국의 노력을 (개별적으로든 혹은 다른 공여국과 협력해서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

- 공여국은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정기적 대화를 갖고 있는가? 공여국이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기타 비정부 행위자와 제휴하거나 이들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취약상황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은 (여성의 보호 및 참여를 포함한) 평화구축과 국가건설에 대한 현실적 목표들에 합의를 보았는가? 무엇이 취약상황에서의 파트너십의 선택을 결정하는가? 공여국은 취약성과 분쟁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간에 일관성 및 공동작업을 증진시키려는 수원국의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u>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u>

• 공여국의 전략(예: 국가 프로그램, 분야별/주제별 전략)은 어떻게 고안되었는가? 공여국의 전략은 파트너 국가 스스로의 개발전략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싸이클이 다양할 경우 어떻게 실제로 원조 일치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 공여국은 공공재정관리, 회계, 회계감사, 결과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해 수원국의 시스템과 절차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만약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이 여의치 않다면 공여국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시키기 위한 보호수단 및 측정법이 있는가? 공여국은 수원국의 시스템이 상호 합의된 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접근법에 있어 다른 공여국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공여국은 어떻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 지방 및 지역적 조달의 사용을 제고하는가?

• 수원국 주재 사무소는 일과 운영 및 원조로 수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일관된 실행 구조를 어느 정도 또 왜 두고 있는가?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정부 기구에 통합되거나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가? 만약 국가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수원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공여국은 어떻게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가?

• 공여국이 다년(multi-annual)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원조공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원조 자금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집행되는가? 원조 흐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정부에 제공되고 있는가? 공여국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제약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 예산에 프로젝트 재정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여국은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원조를 집행하기 위해 다자 공여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하며 예측 가능한 지원을 실시하는가?

• 거버넌스가 특별히 약하거나 정부가 분쟁에 휘말려 있어 정부 주도의 전략에 맞춘 원조일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지 사무소는 어떻게 현지의 우선순위를 찾아내어 원조일치를 실현하는가? 분야 또는 준 국가 차원에서 정부 기관과의 부분적 원조일치를 이룬 예가 있는가? 준 국가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 공여국은 현지의 우선순위 및 계획과의 원조일치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 심사대상국이 원조 조정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의 현지 사무소는 이 메커니즘 내에서 수원국 정부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까지 장려하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양자 및 다자 기관의 원조 활동 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공여국 간의 공동 합의를 장려하고 있는가?

• 심사대상국의 현지 사무소는 본국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원조활동들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가? 또한 그들과 조정 시도를 하고 있는가?

• 원조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정책대화, 기획,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지 사무소는 수원국 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기획, 자금 제공, 지출,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공여국 활동과 원조 흐름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조화롭고 공동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현지사무소는 이런 합의를 따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업무 분담에 관해서는 현지 사무소는 국가차원의 원조사업에 관해 결정할 때 자신들과 다른 나라들의 비교우위가 각각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현지 사무소가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원조 목표나 주제가 있는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원조활동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공여국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는가? 어떤 임무와 권한을 위임했는가?

• 프로그램과 분야별 접근, 예산 지원, 다자 신용기금 증진을 위한 노력에 현지사무소가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현지 사무소는 절차의 조화와 개발 커뮤니티 내 교훈의 공유를 위해 다른 공여국과 어느 정도나 협력하고 사업을 조정하는가? 현지사무

소는 환경, 양성 평등, 분쟁 및 취약성, 인권 등의 크로스커팅 이슈에 관한 분석 작업이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야 및 주제들과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성과의 집행 및 책임

- 수원국이 국가개발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부 및 외부 파트너는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만일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공여국이 수원국의 통계역량과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만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공여국은 자신들의 성과중심적 관리체계 또는 성과모니터링 체계를 수원국의 자체 성과평가 프레임웍 및 결과중심 보고 체계와 일치되도록 하고 있는가? 공여국이 수원국의 통계,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경우, 현지사무소는 수원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공여국이 표준화된 보고체계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는가?

- 모든 수원국에 대한 개발효과성 평가 프레임웍이 존재하는가? (다른 공여국들과 더불어) 현지사무소는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수원국과 어느 정도 협력하였는가? 현지사무소가 다른 공여국 및 수원국과 함께 정기적인 상호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성

(다음질문들은수원국정부와시민사회및다른공여국들의현지사무소를대상으로함)

- 심사대상국의 목표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집행과 개발성과에 대한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사대상국의 전반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 원조 효과성 아젠다의 이행이 원조 집행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으며 공여국 간 상호보완성 및 원조 분업의 합리화에는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원조 효과성이 수원국 내 전반적인 원조시스템의 일관성과 원조집행의 개별적인 채널 수의 감소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

• 원조 효과성 아젠다의 이행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시스템의 사용 증가와 개발 자원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키우는 데 얼마나 공헌하였는가?

제 6장 특별 이슈들

목적 및 배경

12. 본 장의 목적은 OECD/DAC이 개발 협력의 현재 추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선정한 이슈들에 관한 지식의 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 주제들은 2009-2010년부터 2년 주기로 모든 동료심사에서 적용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가 DAC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2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모든 동료심사에서 평가토록 할 것이며, 두 번째 심사 주제는 심사대상국과 OECD/DAC 심사자들이 사무국과 협의하여 소수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13. MDGs 달성을 위해 현재 기울이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제외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가역량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현재 수원국과 공여기관 모두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는 주제이다. 이와 같이 역량 개발은 OECD/DAC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심사대상국의 '역량개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모든 동료심사 보고서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다.

14. 2009-2010년 동료심사의 두 번째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는 농업, 식량 가격 폭등 및 이에 관한 공여국의 대응이며 둘째는 환경과 기후변화이다. 예외적으로, OECD/DAC 심사자들과 사무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국이 다른 주제를 제시 할 수도 있다. 다만, 제시된 주제는 위원회에 귀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공여국 커뮤니티 내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역량개발

주요 참고 문헌

-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DAC
-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6).
-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2, Chapter 3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e Management),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6).
- Bonn Workshop Consensus (2008).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15. 국가 역량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역량'이란 개인, 조직, 사회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모두 역량에 포함된다. 즉, 역량 개발은 기술 협력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이며, input 이 아니라 output 으로 여겨져야 한다.

- 역량개발은 수원국의 주요 책임이다. 공여국의 책임은 수원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국가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조정 · 제공하는 것이다.

- 역량개발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역량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맞춤식 접근법"은 특정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개인 및 조직 관련 이슈들에 주목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우호적 환경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 국가 구조에서 빈곤 감소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기능을 제공하고 국민의 안보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그 국가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개입은 협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부 관련 이슈들

- 역량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공여국의 역할에 관해 합의된 이해 및 정의가 있는가?

- 전체 개발 행위자의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그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1) 수원국이 자신들의 개발정책 및 전략에 관해 효과적인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할 것 2) 수원국의 역량개발 목표 및 전략에 공여국의 지원을 일치시킬 것 3) 역량개발을 위한 원조의 조화를 이룰 것 4) 국가시스템(특히 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및 시스템평가(성과프레임웍,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5) 개발정책대화에서 비정부행위자(의회, 시민사회, 연구기관, 언론, 민간 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

- 공여국의 전략은 취약한 거버넌스가 역량개발을 방해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을 다루고 있는가? 공여국은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에 역량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공여국은 취약 상황 시에 국가 핵심 기능의 복원 및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어떻게 역량개발 지원을 수요주도적이고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제공하는가?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적 성과 제출에 대한 압력과 장기적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 사이에 내재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 공여국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인센티브, 기술 프로파일, 운영절차, 도구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양성 평등, 환경, 인권 등과 같은 크로스커팅 이슈가 역량 개발 활동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수원국의 목표 및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가? 역량개발 지원이 수원국 정부와 공여국이 국가, sub-national, 분야, 주제 등의 전차원에 걸친 요구에 대해 내린 공동평가에서 어느 정도나 도출되고 있는가?

- 현지사무소의 역량개발 지원이 수요 주도적이며 다른 공여국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공동출자기금을 포함한 공여국의 지원 조정의 예가 있는가?

- 현지 사무소는 역량개발에 대해 어떤 접근법(예: 기술협력, 트레이닝, 남-남 또는 삼각 협력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가? 수원국 내 기관 및 인력의 역량을 구축함에 있어 외국의 기술지원의 비용과 그 역할은 무엇인가? 기술협력은 어떻게 기획, 관리되며 또한 지역 내 자원에 의한 기술적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장려되고 있는가? 역량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대신에 지역 컨설턴트나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역량개발 지원이 시민사회 및 민간 분야에서도 이뤄졌는가?

-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가 시스템 평가와 신뢰성에 필수적인 역량 지원에 참여했는가? 이에는 시스템의 성과, 투명성, 책임성은 물론 조달 및 공공재정관리를 위한 합의와 절차도 포함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지원이 어떻게 제공되며, 어느 정도까지 수원국이 주도하고 있는가?

-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에 대해 효과적인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가? (예: 조달, 공공재정관리, 성과 프레임웍,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 역량개발 지원의 결과가 어떻게 평가, 측정, 모니터링 되는가? 여기서 얻어진 교훈을 프로그램 관리 및 미래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피드백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농업, 식량가격 폭등 및 공여국의 대응

주요 참고 문헌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Promoting Pro-Poor Growth: Key Policy Messages (2006).
-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2006).

목적 및 배경

16. 대부분의 빈곤 국가에서 농업은 개인 소득 및 고용, 그리고 국가 수입 및 수출 수익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농업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감소 방법인 가공업, 제조업 및 3차 산업 활동으로의 경제적 변환을 위한 촉진제로서의 제 역할은 해내지 못하고 있다.

17. 식량가격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과거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08년 HLM에서 원조부처 장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빈곤 국가들의 성장과 빈곤 감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높은 연료비용 및 재정위기, 높은 인구 성장률 및 기후변화를 비롯한 기타 요소들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8. 빈곤친화적 성장 및 농업에 관한 POVNET의 정책 지침 사항은 빈곤 완화 목표사항과 농업분야의 성장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 가격 상승에 관한 OECD의 horizontal project(DCD와 TAD가 조정하고 있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식량 가격 상승을 통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조치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다음의 프레임웍은 앞서 언급한 POVNET의 지침 중 빈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농업 지원방식으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 동료심사자가 공여국의 정책 및 재정 할당에 대해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사자들은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이 방면의 원조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습목적으로 동료심사자들은 공여국이 식량 가격 이슈를 농업 분야 활동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통합시켰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여국이 어떻게 이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적응하고 있으며, 공여자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촉진제가 주어지는지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부 관련 이슈들

- 심사대상국은 어떻게 농업개발에 대한 현 OECD/DAC의 지침을 자국의 정책 프레임웍에 통합시키고 있는가? 경제성장, 거버넌스, 역량개발, 인프라, 농촌개발 등 정책 프레임웍의 기타 요소들이 공여국의 농업 부문 목표와 적절하게 교차참조(cross-referenced) 되어있는가?

- 공여국은 농업 및 식량 가격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가? 농업분야의 성과를 증명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공여국은 어떻게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을 입수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자체 역량으로 입수 가능하며, 어느 정도까지 외부에서 조달하는가?

- 공여국은 어떻게 식량가격 및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여러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을 아울러 전략적 결정을 도출해내며 어떻게 대화를 촉진시키는가? 심사대상국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은 수원국 내 식량 가격에 대한 개발 협력 시스템의 접근방식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 심사대상국은 식량위기(문단: 29)에 대응하기 위해 아크라행동계획에서 요청된 농업과 식량에 관한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의 개발 및 이행을 어떻게 진척시키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의 정책 방향성 면에서 현재 식량가격 현황에 대해 공여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평가가 공여국 정책 조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식량안보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 농업의 공급과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현지차원의 이슈들

- 현지사무소는 그들의 활동을 국가정책 입안절차와 어떻게 일치시키며, 성과 달성을 위한 역량 개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공여국은 식량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수원국의 정책 리더쉽을 (역량 평가를 포함하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공여국의 접근법

이 수원국의 전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현지사무소는 식량 가격의 변화와 농업 정책 실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 · 모니터링 · 평가하는 수원국의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공여국은 수원국이 단기 또는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 또는 급성적인 식량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는가?

- 심사대상국은 수원국이 농업 및 식량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정부기관과 각 부처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분산을 줄이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런 지원을 다른 공여국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는가?

- 공여국은 비국가행위자들의 정책대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들 비국가행위자들은 공공-민간파트너십을 지원하는가?

환경 및 기후변화

주요 참고 문서

- DAC Guidelines on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Biodiversity, Desertification and Climate Change)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Environmental Fiscal Reform for Poverty Reduction (2005).
-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06).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목적 및 배경

19. 기후변화의 위협, 바이오연료 관련 이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식량 가격 상승은 최근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건전한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 이슈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은 빈곤감소와 개발을 위한 건전한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공여국이 범세계적인 환경이슈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 이에 따라 OECD/DAC은 환경과 개발 간의 연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참고문헌 참조). DAC은 또한 "Rio Markers"를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리우협약 이행을 위한 공여국들의 재정 지원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이들 marker에 대한 공여국의 보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프레임웍은 동료심사자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여국 정책을 평가하고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와 같은 도구의 사용과 필수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부 관련 이슈들

- 기후변화 적응, 완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UNFCCC)의 준수가 개발 협력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가? 기후 변화를 개발 협력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고위급 정책 공약이 이 목표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개발협력 목표는 완화와 적응을 구분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이 있는가? 기후변화가 상호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구의 정책에 (예: 지속가능한 개발, 재난 위험 감소, 정책 일관성 등) 포함되어 있는가? 에너지, 교통, 농업, 교육, 건강, 신용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지역적, 국가적 전략에 기후변화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 기후변화가 사막화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여타 범세계적 환경 문제와 어느 정도나 연관되어 다뤄지고 있는가?

- 공여기관은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려운 점에 관해 정책결정자, 국회,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 NGO, 연구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형식이 확립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기구들이 공여기관의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 기후변화와 관련한 단독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완화와 적응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두었는가? 그 예산 중 얼마만큼이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공여기관의 총 예산 중 얼마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사용되었는가? 공여기관의 직원은 통계 보고 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명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가?

- 전략적 환경평가(SEA)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필수요구사항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특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후변화를 직접적 예산지원과 분야별 예산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도구와 연관지어 고려하기 위해 전략적 환경평가가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모든 프로젝트에 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요건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앞서 제시된 각 사항의 이행상황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공약에 대한 지지가 명백하게 고려되는가? 현지 차원의 실천에도 변화가 있었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돕고 다자환경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정책, 방법, 도구의 개발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후변화 부서가 설립되었는가? 직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직원의 참여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공여기관 직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현지 차원의 이슈들

- 국가, 분야,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의 주류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돕고 다자환경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 현지 차원의 분야별 예산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도구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를 참작하기 위해 SEA가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본부의 지침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 앞서 제시된 각 분야의 이행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가? 현지에서의 관행이 변화되었는가? 기후변화 및 환경지속가능성에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는가?

첨부 A
인도주의적 지원

주요 참고 문서

-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2003).
-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2007).
- 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in Disaster Relief (2007년 11월).
- 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to Support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ctivities in Complex Emergencies (2003).
- The 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ction (2007).

1. 2004년, OECD/DAC은 긴급구호 평가를 위한 프레임웍(DIR(2004)11)에 합의하였다. 이 프레임웍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모범(GHD)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분류 한다:

• **인도주의적 정책**: 인도주의 활동 전략에 관련된 정의, 목표, 일반 원칙 및 정책 프레임웍 등을 포함

• **재정지원**: 우선순위 결정, 재정 계획수립, 예측성, 유연성 및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분담금의 증가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

- **기준 권장과 이행의 강화**: 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국제 인도주의 법과 인도주의적 가이드라인 및 원칙과의 일치를 보장

- **학습 및 책임성**: 보고, 평가 및 학습 시스템의 투명성을 포함

2. 이 개정된 프레임웍은 기존 프레임웍을 이용하여 실시된 16개의 동료심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된 프레임웍에 따른 2009-2010년의 동료심사에서는 앞에 소개된 그룹 분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두 그룹(비GHD)에 대한 평가를 추가한다.

   - **인도주의적 활동의 조직 및 관리**: 개발협력 시스템 내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 예산 및 기능상의 조치들과 미디어 관계에 초점을 맞춤

   - **크로스커팅 이슈**: 젠더, HIV/AIDS 및 환경을 포함

제1부 – 인도주의적 정책

a) 심사대상국은 공적 인도주의 활동의 목표 및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러한 목표 및 목적은 개발 협력 시스템의 광범위한 목표와 명확하게 연계되었는가? 심사대상국은 인도주의적 목표와 목적을 지지하고 국제적 공약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는가? 구체적 목표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GHD와 일치하는가?

b) 어떠한 활동이 인도주의적 행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가? 특히, GHD의 보호 약속이 인도주의적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는가? 위기-위험 감소 관점(crisis-risk reduction perspectives)이 인도주의적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EU 회원국이라면 정책 프레임웍이 *European Consensus on Humanitarian Action* 에서 제시된 전략적 기초를 반영하는가?

c) 정책 프레임웍이 심사대상국으로 하여금 인도주의의 핵심 원칙[30]을 지킴으로써 인도주

30) GHD 원칙 2항에 정의되었듯이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리킴.

의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는가? 국제 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31] 및 여타 법령[32]에 대한 심사대상국의 약속 이행이 어떤 정도로 국내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가?

d) 정책 프레임웍이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재원 배분을 촉진을 위한 심사대상국의 내부 체계와 관행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가? 정책 프레임웍이 심사대상국으로 하여금 실제 필요에 맞춘 자원 배분 비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가?

e) 심사대상국이 인도주의적 대응의 기획,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수혜자도 참여할 것을 권장하도록 정책 프레임웍이 명시하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이행 파트너에 수혜자를 포함시킬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f) 위기에 처한 국가와 지역 커뮤니티가 응급상황을 방지 · 대비 · 완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GHD의 공약이 정책 프레임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의 약속을 반영하는가? 심사대상국은 재난위기 감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가?

g) 위기에 처한 커뮤니티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계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적당한 지원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GHD의 공약이 정책 프레임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덧붙여 심사대상국의 전반적 정책 프레임웍에서 다뤄졌던 downstream 개발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정책 프레임웍에 원조 효과성 아젠다 (특히, 파리선언의 38, 39 조항)와 *DAC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와 관련된 접근법을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전환국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위한 별도의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가?

31) 국제 인도주의 법(IHL)이란 전시에 적대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참여를 멈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의 집합이다. IHL의 주요 목적은 무력분쟁 시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1949년에 발표된 4개의 제네바 협약과 1977년에 추가된 두 개의 첨부서가 인도주의 법을 구성하는 주요 도구이다.

3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refugee law, CEDAW, CROC 등.

h)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리더쉽과 조정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 UN이 담당하는 역할과 국제 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 부여된 특별 권한이 정책 프레임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제 2부 – 인도주의적 활동의 재정지원에 대한 원칙

i) 심사대상국은 인도주의적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심사대상국은 현재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한 재정이 신규 또는 중대 긴급 상황 발생할 시에 전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중요한 사건,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추가적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가?

j)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유연성 있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위한 능률적인 예산 허가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여국은 유연성과 시기적절성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는가? 공여국은 이들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어떻게 추적하는가? 공여국은 수원국으로의 재정지원 흐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k) 용도가 지정된(earmarked) 예산과 지정되지 않은(unearmarked) 예산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공여국은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의 할당을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논거를 가지고 있는가? 공여국은 CERF, 공동 출자, 개별기구 준비금, 기타 예비 배당된 재정 메커니즘에 기여하고 있는가?

l) 심사대상국 인도주의 활동 중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s과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ppeals을 통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심사대상국이 이러한 매커니즘 이외의 방법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공여국은 (a)다자 및 양자 원조 채널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고 (b)국제 및 지역 시민사회 그룹 사이에 자원을 배분할 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논거를 가지고 있는가?

제 3부 – 기준 권장 및 이행 강화

m) 공여국은 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s(CHAPs)의 수립에 참여하는가? 가능하다면 공여국은 원조를 CHAPs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일치시키는가?

n) 공여국은 개발협력기관이 올바른 관행을 따르고 인도주의 행위의 신뢰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실행 파트너들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의 관련 가이드라인(예를 들어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등) 및 1994년의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in Disaster Relief*를 적용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o) 심사대상국은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한 조직의 역량 강화와 비상계획 마련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가?

p) 필요에 기초한 지원, 중립적이며 공정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실현을 위한 외교 · 안보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심사대상국은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는가? 심사대상국은 인도주의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지원하였는가?

q) 공여국은 인도주의적 활동 이행에 있어 민간 기구의 주요 위치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 이 원칙이 내부 정책 프레임웍과 다른 정부부처의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r) 심사대상국의 군사력과 자산이 인도주의적 활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 심사대상국은 이것이 IHL 및 인도주의 원칙을 따르며 인도주의적 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s) 재난 구호 상황에서의 군사 및 시민 방어력의 사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in Disaster Relief) 및 복잡한 긴급 상황에서의 유엔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및 시민 방어력의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to Support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ctivities in Complex Emergencies)이 어떻게 권장되고 있는가?

제 4부 – 학습 및 신뢰

t) 인도주의적 활동의 평가 범위는 무엇인가?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어떻게(그리고 누구에게) 배부하는가? 평가 결과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정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기관 간의 학습을 보장하는가? 공여국은 인도주의적 활동의 평가 체계를 기획하고 및 결과를 분석할 때 DAC 평가 질적 기준(Evaluation Quality Standards) 또는 이와 유사한 질적 기준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공여국은 공여국의 성과 평가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의 공동 평가를 어떻게 지지 · 지원하며 어떻게 이 평가에 참여하는가?

u) 공여국은 피드백과 책임성의 근거로 이행 파트너의 표준화된 보고 포맷을 도입하였는가? 심사대상국은 DAC, OCHA 재정 추적 시스템 및 ECHO 14-포인트 인도주의 보고 시스템에 인도주의적 비용 지출에 대한 적절하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만약 해당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가?

제 5부 – 인도주의적 활동의 조직 및 관리

v) 공식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결정은 어떠한 조직 구조와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인도주의적 단위와 개발 파트너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구조 또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w) 인도주의적 행위를 담당하는 조직의 직원 충원 정도는 어떠한가? 주요 위기상황에서 직원 충원률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직원들의 인도주의적 분야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훈련이 제공되는가?

x) 심사대상국은 위기상황에서 언론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언론홍보 전략을 통해 어떻게 재난 관리 문제의 다양한 문제(예: 의존성 감소, 토착민의 역량 지원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는가?

제 6부 –크로스커팅 이슈

y) 심사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정책 프레임웍은 인도주의적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인도주의적 행위의 환경영향성에 관한 데이터가 프로그램/프로젝트 주기의 주요 결정 시점에 맞춰 정기적으로 분석되고 있는가? 공여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에 관해 결정할 때, 위기 지역의 천연 자원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z) 심사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정책 프레임웍은 인도주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양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양성 평등에 관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예: UNSCR 1325)? 성별로 구분된 자료(sex-disaggregated data)가 프로그램 주기의 주요 결정 시점에 맞추어 분석되고 있는가? 이행기관은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aa) 심사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정책 프레임웍은 심사대상국이 인도주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HIV/AIDS 환자의 특별한 취약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심사대상국은 위기 상황에서의 PLWHA의 보호필요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PLWHA에 관한 구분된 자료가 프로그램 주기의 주요 결정 시점에 맞추어 분석되고 있는가? 이행기관은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첨부 B
파리선언 진행 지표

* 아래의 지표는 국가별로 측정되며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받음

<table>
<tr><th colspan="2">주인의식 (Ownership)</th><th colspan="2">2010년까지의 목표치</th></tr>
<tr><td>1</td><td>파트너가 운용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음 – 국가 발전 전략 (PRSs 포함)을 갖고 있으며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기 지출 프레임웍에 연결시키고 연간 예산에 반영한 국가의 수</td><td colspan="2">최소 75%의 파트너국들이 운용 가능한 개발 전략을 갖고 있음</td></tr>
<tr><td colspan="2">원조 일치(Alignment)</td><td colspan="2">2010년까지의 목표치</td></tr>
<tr><td rowspan="2">2</td><td rowspan="2">신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 (a)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범 관행에 부합하거나 (b) 이러한 모범 관행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는 조달시스템 및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파트너 국가의 수</td><td colspan="2">(a) 공공재정관리 – 파트너국들 중 1/2이 PFM/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성과 척도에서 적어도 한 단위 (즉, 0.5점) 상승함</td></tr>
<tr><td colspan="2">(b) 조달 – 파트너국들 중 1/3이 본 지표의 성과도를 평가하기 위한 4 포인트 스케일에서 적어도 한 단위 상승함. (예를 들어, D에서 C, C에서 B, 또는 B에서 A로)</td></tr>
<tr><td>3</td><td>원조 흐름이 국가별 우선순위와 일치함 – 정부 부문에 제공된 원조 중 수원국의 국가 예산에 보고되는 비율</td><td colspan="2">갭을 반으로 줄임 – 정부 부문에 제공되는 원조 중 정부 예산에 보고되지 않는 원조의 비중을 반으로 줄임 (적어도 85%가 예산에 보고되어야 함)</td></tr>
<tr><td>4</td><td>조정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중 파트너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일치하는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역량개발 지원의 비율</td><td colspan="2">기술협력 지원의 50%가 국가개발전략에 일치하는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됨</td></tr>
<tr><td rowspan="8">5a</td><td rowspan="8">국가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사용 – (a) 일반적으로 수용된 모범사례에 부합하거나 (b) 이러한 모범 사례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는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여국의 비율 및 이에 대한 원조의 비율</td><td colspan="2">공여국 비율</td></tr>
<tr><td>점수</td><td>목표치</td></tr>
<tr><td>5+</td><td>모든 공여국들이 파트너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td></tr>
<tr><td>3.5 – 4.5</td><td>공여국의 90%가 파트너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td></tr>
<tr><td colspan="2">원조 비율</td></tr>
<tr><td>점수</td><td>목표치</td></tr>
<tr><td>5+</td><td>파트너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 비율이 2/3 감소</td></tr>
<tr><td>3.5–4.5</td><td>파트너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 비율이 1/3 감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5b</td><td rowspan="6">국가 조달시스템의 사용 – (a) 일반적으로 수용된 모범사례에 부합하거나 (b) 이러한 모범 사례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는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여국의 비율 및 이에 대한 원조의 비율</td><td colspan="2">공여국 비율</td></tr>
<tr><td>점수</td><td>목표치</td></tr>
<tr><td>A</td><td>모든 공여국이 파트너국의 조달 시스템을 사용</td></tr>
<tr><td>B</td><td>90%의 공여국이 파트너국의 조달 시스템을 사용</td></tr>
<tr><td colspan="2">원조 비율</td></tr>
<tr><td>점수</td><td>목표치</td></tr>
<tr><td>A</td><td>파트너국의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 비율이 2/3 감소</td></tr>
<tr><td>B</td><td>파트너국의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 비율이 1/3 감소</td></tr>
<tr><td>6</td><td>병행하는(parallel) 집행 구조를 피함으로서 역량 강화 –한 국가 당 병행하는 프로젝트 집행단위(PIUs)의 개수</td><td colspan="2">병행하는 프로젝트 집행단위개수 2/3 감소</td></tr>
<tr><td>7</td><td>예측 가능한 원조 – 연간 또는 다년간 프레임웍에 나와 있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된 원조의 비율</td><td colspan="2">갭을 반으로 줄임 – 예정된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지 않은 원조의 비율을 반으로 줄임</td></tr>
<tr><td>8</td><td>비구속성 원조 – 구속성이 없는 양자 원조의 비율</td><td colspan="2">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 진전을 보임</td></tr>
<tr><td colspan="2">원조조화 (Harmonization)</td><td colspan="2">2010년까지의 목표치</td></tr>
<tr><td>9</td><td>공통된 합의 또는 절차의 사용 – 프로그램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제공된 원조의 비율</td><td colspan="2">원조의 66%가 프로그램 기반의 접근방식의 맥락에서 제공됨</td></tr>
<tr><td rowspan="2">10</td><td rowspan="2">공동 분석의 장려 – 진단을 위한 리뷰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진행되는 (a) 현장 미션 및 (b) 국가 분석 작업의 비율</td><td colspan="2">(a) 현장에 제공되는 공여국 미션의 40%가 공동으로 이루어짐</td></tr>
<tr><td colspan="2">(b) 국가 분석 작업의 66%가 공동으로 이루어짐</td></tr>
<tr><td colspan="2">성과 지향적 관리
(Managing for Results)</td><td colspan="2">2010년까지의 목표치</td></tr>
<tr><td>11</td><td>결과 중심 프레임웍 – (a) 국가개발전략 및 (b) 분야별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감독 가능한 성과평가 프레임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td><td colspan="2">갭을 1/3 감소시킴 – 투명하고 감독 가능한 성과평가 프레임웍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들을 1/3 감소시킴.</td></tr>
<tr><td colspan="2">상호 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td><td colspan="2">2010년까지의 목표치</td></tr>
<tr><td>12</td><td>상호 책임성 – 파리 선언에서 제시된 사항을 포함,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에 대한 상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파트너국의 수</td><td colspan="2">모든 파트너 국가들이 상호 평가 리뷰를 갖추고 있음</td></tr>
</table>

* 지표 5: 지표 5의 점수는 위의 지표 2의 조달 및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의 질적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됨

〈첨부자료2〉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서 리스트

	Title	Category	Issue	문서번호 (Issue-doc type-no)
1	A Development Co-operation Lens on Terrorism Prevention: Key Entry Points for Action	G	Conflict and Peace	CP-G-1
2	DAC Policy Statement: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G	Conflict and Peace	CP-G-2
3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G	Conflict and Peace	CP-G-3
4	Enhancing the Delivery of Justice and Security: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R	Conflict and Peace	CP-R-1
5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Building: What counts as ODA?	M	Conflict and Peace	CP-M-1
6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	G	Conflict and Peace	CP-G-4
7	The OECD DAC Handbook on SSR: Supporting Security and Justice	M	Conflict and Peace	CP-M-2
8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G	Aid Effectiveness	E-G-1
9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ume 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G	Aid Effectiveness	E-G-2
10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G	Aid Effectiveness	E-G-3
11	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 Inte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	R	Aid Effectiveness	E-R-1
12	Translating the Monterrey Consensus into Practice: the Contribution by the European Union	R	Aid Effectiveness	E-R-2
13	Development Gateway Special Report: Aid Harmonization – What Will it Take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	Aid Effectiveness	E-R-3
14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Africa – Promise and Performance: Applying Mutual Accountability	R	Aid Effectiveness	E-R-4
15	The Report on the Use of Country System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	Aid Effectiveness	E-R-5

16	Incentives for Aid Effectiveness in Donor Agencies: Good Practice and Self-Assessment Tool	R	Aid Effectiveness	E-R-6
17	Compendium of Country Examples and Lessons Learned from Applying the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National Procurement System	R	Aid Effectiveness	E-R-7
1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R	Aid Effectiveness	E-R-8
19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s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G	Environment	EN-G-1
20	Environmental Fiscal Reform for Poverty Reduction	G	Environment	EN-G-2
21	ODA Eligibility Issues for Expenditures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G	Environment	EN-G-3
22	Sustainable Development: Critical Issues	G	Environment	EN-G-4
23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G	Environment	EN-G-5
24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	Environment	EN-G-6
25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25.1 ~ 25.9가 포함된 문서임)	G	Environment	
25.1	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G	Environment	EN-G-7
25.2	Good Practices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G	Environment	EN-G-8
25.3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G	Environment	EN-G-9
25.4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G	Environment	EN-G-10
25.5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Chemicals Management	G	Environment	EN-G-11
25.6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Pest and Pesticide Management	G	Environment	EN-G-12
25.7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Disaster Mitigation	G	Environment	EN-G-13
25.8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G	Environment	EN-G-14
25.9	Guidelines for Aid Agencies for Improve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and Sub-Tropical Wetlands	G	Environment	EN-G-15
26	Reconci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als: Measuring the Impact of Policies	P	Environment	EN-P-1

27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nd Ecosystem Services	M	Environment	EN-M-1
28	Comparative Analysis of OECD/DAC Guidance and Other Internationally Important SEA Regimes	M	Environment	EN-M-2
29	Bridge Over Troubled Waters: Link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M	Environment	EN-M-3
30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6-2007	R	Fragile States	F-R-1
31	Policy Commitment an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R	Fragile States	F-R-2
32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R	Fragile States	F-R-3
33	Concepts and Dilemmas of State Building in Fragile Situations	P	Fragile States	F-P-1
34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P	Fragile States	F-P-2
35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in Fragile States	P	Fragile States	F-P-3
36	Service Delivery in Fragile Situations: Key Concepts, Findings and Lessons	P	Fragile States	F-P-4
37	DAC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G	Gender	G-G-1
38	Gender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R	Gender	G-R-1
39	Gender Equality and Aid Delivery: 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	R	Gender	G-R-2
40	Paris Declaration Commitments and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R	Gender	G-R-3
41	Enhancing Women'¡¯s Market Access and Promoting Pro-poor Growth	M	Gender	G-M-1
42	Why Gender Matters in Infrastructure	R	Gender	G-R-4
43	DAC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	M	Gender	G-M-2
44	Poverty-Environment-Gender Linkages	M	Gender	G-M-3
45	Making Aid More Effective Through Gender, Rights and Inclusion	P	Gender	G-P-1
46	Gender Equality in Sector Wide Approaches	P	Gender	G-P-2
47	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 I	G	Governance	GV-G-1

48	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 2	G	Governance	GV-G-2
49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G	Governance	GV-G-3
50	The Design and Use of Capacity Development Indicators	R	Governance	GV-R-1
51	Governance, Taxation and Accountability: Issues and Practice	P	Governance	GV-P-1
52	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	P	Governance	GV-P-2
53	Map-Making and Analysis of the Main International Initiatives on Developing Indicators on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P	Governance	GV-P-3
54	The Development Dimensi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Donor Approaches, Experiences and Challenges	P	Governance	GV-P-4
55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P	Governance	GV-P-5
56	Policy Paper and Principles on Anti-corruption: Setting an Agenda for Collective Action	P	Governance	GV-P-6
57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G	MDGs	M-G-1
58	Making Poverty Reduction Work: OECD'¡¯s Role in Development Partnership - FINAL REPORT	R	MDGs	M-R-1
59	A Better World for All	R	MDGs	M-R-2
60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	G	Poverty	P-G-1
61	Promoting Pro-Poor Growth	G	Poverty	P-G-2
62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G	Poverty	P-G-3
63	DAC Guidelines: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G	Poverty	P-G-4
64	Promoting Pro-Poor Growth: Harmozing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R	Poverty	P-R-1
65	Hot Topic paper: Removing Barriers to Formalisation	R	Poverty	P-R-2
66	DAC Scoping Study of Donor Poverty Reduction Policies and Practices	R	Poverty	P-R-3
67	Practical Guide to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M	Poverty	P-M-1
68	Policy Lessons on the Role of ODA in Mobilising Private Investment	P	Poverty	P-P-1

69	Accelerating Pro-poor Growth through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P	Poverty	P-P-2
70	Poverty and Health	G	Poverty	P-G-5
71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R	Poverty	P-R-4
72	Promoting Pro-poor Growth: Infrastructure	R	Poverty	P-R-5
73	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R	Poverty	P-R-6
74	DAC Guiding Principles	G	Quality of Aid	QA-G-1
75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	Quality of Aid	QA-L-1
76	The Tying of Aid	P	Quality of Aid	QA-P-1
77	Trade and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R	Trade	T-R-1
78	DAC Guidelines on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G	Trade	T-G-1
79	Aid for Trade: Making it Effective	P	Trade	T-P-1
80	Trade-Related Assistance: What Do Recent Evaluations Tell Us?	P	Trade	T-P-
81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Matters	P	Trade	T-P-3

* G: 가이드라인, M: 매뉴얼, R: 리포트, P: 퍼블리케이션

〈첨부자료3〉
네덜란드 · 아일랜드 현지방문조사 인터뷰 내용

네덜란드 인터뷰

일시: 2009년 4월 28일

장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헤이그)
10:00 – 10:30 Ms. Nathalie Veenman (OECD/DAC coordinator)
10:30 – 11:30 Mr. Ted Kliest (Senior Evaluator)
11:30 – 12:10 Ms. Sonia E. van Nispen tot Sevenaer
(Senior Policy Advisor Aid Effectiveness and Harmonization)

수집자료:

- BZ Evaluation Programme 2006–2011 – An Overview of Evaluations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 Memorandum for the mid-term review of the 2006 Peer Review of Dutch Development Policy
- The Netherlands Peer Review 2006
- Our Common Concern: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2007
- Results in development: Report 2005–2006
- Glossary: Budget Support, 2008
- Agricultur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2008
- Policy Memorandum: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2008

주요 인터뷰 내용:

질문1: 네덜란드 국민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OD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해외원조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네덜란드에는 종교에 기반 한 4개의 주요 시민 그룹이 있고 각각의 그룹을 대표하는 4개의 NGO가 있다. 이들 NGO는 정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국민들은 ODA 분야에서 네덜란드가 글로벌 리더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질문2: 수원국 주재 대사관과 네덜란드 NGO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NGO를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네덜란드 대사관과 NGO는 해당 수원국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대사관이 중앙 정부와 주로 일을 하는 반면 NGO들은 주로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원조 활동을 한다. 또한 NGO는 네덜란드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취약국가에서 다양한 원조 활동을 해 왔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정부도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노력 중이다.

질문3: 한국 ODA 시스템을 보면 30여개의 다른 부서들이 ODA를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ODA 조직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관계 부서 간의 충돌이나 일관성 문제 등은 없는가?
답변: ODA는 개발협력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외무부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며 협력 또한 잘 되고 있다.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4: 외무부(MFA)와 개발협력부(MDC)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1960년대부터 개발협력부가 활동해 왔으며 외무부와 통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개발협력부 장관이 차관급으로 격하된 적도 잠시 있으나 1996년 구조조정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외무부 장관과 개발협력 장관 모두 내각 위원이며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외무부와 개발협력부는 OD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한다. 또한 별도의 ODA 집행기구는 두고 있지 않다. 개발협력부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ODA 정책을 만들며, 외무부로부터 조언을 구하지만 개발협력부 장관이 네덜란드 개발원조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 다자간 원조와 NGO 활동은 개발협력부내에서 조정되며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서 원조 집행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질문5: 수원국 주재 대사관과 네덜란드 본부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실제로 대사관과 본부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긴장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개발협력부 내에는 Country Team이 있다. Country Team은 주제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주로 본부와 대사관 간에 생길 수 있는 이견을 처리하고 있다.

질문6: 개발협력 부 내에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가?
답변: 평가는 네덜란드 ODA의 주요 부분이며 평가부서는 개발협력부의 주요한 부서 중 하나이다. 1996년부터 평가부서에서는 외무부와 ODA에 대한 평가를 실행해 오고 있다. ODA 프로젝트의 80%는 내부 평가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는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분산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평가체제는 DAC 평가네트워크가 설립될 당시 중요한 사례로 사용되었다.

질문7: 누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가?
답변: 13명의 전문적인 직원들이 평가부서에 있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또는 평가 팀이 참여하기도 한다. 최근 공동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원들은 다양한 background를 갖고 있으며 사회과학, 평가, 통계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우리는 평가위원을 고용할 때 외부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품, 평가를 위해서는 여행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체력, 연구 또는 평가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한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고용된 이후에도 훈련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Ottawa University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International Program in Development Training (IPDET)"라는 평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질문8: 평가 결과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답변: 평가 결과는 평가 리포트와 대응(Reaction) 리포트로 작성되며 공개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면 평가 후 미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서로 질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평가결과가 비판적인 경우에는 미디어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

질문9: 새로운 공여국인 한국에 조언을 해준다면?
답변: "파리 선언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18-20개국이 이미 파리 선언 평가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될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OECD 포럼에서 발표될 것이다.

질문10: 네덜란드의 ODA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변: "개발협력"은 네덜란드 ODA의 주요 목표이다. 네덜란드 ODA 시스템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에 걸친 관리와 정보 시스템; (2)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

질문11: 수원국 프로파일 따라 원조 초점을 달리하여 접근하는데 이러한 프로파일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프로파일 1 국가 – MDGs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파트너 국가들, 프로파일 2 국가 – 취약국 또는 분쟁 국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안정적 제도 구축을 강조함), 프로파일 3 국가 – 양자 개발협력은 줄여나가야 하며 무역 등 다른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파트너 국가들

질문12: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가?
답변: 상당수가 개발협력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질문13: 네덜란드는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답변: 아크라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모든 원조 활동에 민간 분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는 고위급 포럼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아일랜드 인터뷰

일시: 2009년 4월 29일

장소: Irish Aid Volunteering & Information Centre in Dublin, Ireland
2:30 – 4:00 Mr. Owen Feeney (Communications Officer)
Mr. Frank Flood (Assistant Principal Officer)
수집자료:

- White Paper on Irish Aid 2005
- Irish Aid: Annual Report 2007
- Rapid Response Initiative: Enhancing Humanitarian Emergency Response 2005
- Hunger Task Force: Report to the Government of Ireland 2008
- Support to Tsunami Affected Countries 2008

일시: 2009년 4월 30일

장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n Dublin, Ireland
10:00 – 11:00 Irish Aid Audit and Evaluation Section
Mr. Fintan Farrelly and Mr. Donal Murray
(Development Specialist)
1:00 – 2:00 Mr. Eamonn Mckee (Director of Conflict Resolution Unit)
2:15 – 3:30 Policy, Planning and Effectiveness Section
Ms. Liz Higgins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nd Effectiveness Section) and Mr.
Kevin Colgan (Senior Development Specialist)
4:00 – 4:45 Mr. Kevin Carroll (Governance Adviser and Chair of the Taxation sub-group in DAC's GOVNET)

수집자료:

-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First Annual Report, 2008
- Ireland Peer Review 2008
- Our Common Concern – Investing in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 Results in Development Report 2005-2006
- Agricultur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2008
- HIV 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Ireland Today 2008
- The Right to be Safe: Improving maternal health and health equity in Tanzania 2008
- The Irish Aid and Attitudes to Development Issues Omnibus Research 2008
- Environment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8

일시: 2009년 5월 1일

장소: 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n Limerick, Ireland
10:00 – 11:00 Policy, Planning and Effectiveness Section
Mr. Brendan McGrath (Senior Development Specialist)
11:00 – 12:00 Policy Coherence
Ms. Carol Hannon (Multilateral-EU Section)
12:00 – 1:00 Mr. Damien Cole (Counsellor, Director programme Countries II)
3:00 – 3:30 Mr. Michael Gaffey (Deputy Director General)

수집자료:

- Country Strategy Paper – Tanzania, Vietnam, Zambia
- Irish Aid Tanzania Fact Sheets – Ireland's engagement in Tanzania, Gender, General Budget Support, Supporting the Reduction of Poverty, Civil Society, Social Development,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ural Livelihoods and Growth
- A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to Country Strategy Papers
- Civil Society Policy
- Ireland an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 A Summary of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ance

주요 인터뷰 내용:

질문1: Irish Aid와 Irish Aid Volunteering Information Center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답변: Irish Aid는 개발 협력부서 아래 있으며 약 130명가량의 직원이 있다. Irish Aid는 아일랜드 정부의 "원조 프로그램"을 지칭하나 전반적인 아일랜드 원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블린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Irish Aid Volunteering Information Centre는 아일랜드원조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 증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센터에서는 국내외 개발관련 자원봉사 및 개인의 개별적 원조의 활성화를 위해 원조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2: ODA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변: 우리는 일반 대중의 원조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원조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Africa Day'를 지정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문화 등을 소개하여 대중이 아프리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악 축제, TV/라디오, 신문 광고, 농업 컨퍼런스, Facebook page 운영, 사진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3: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는가?
답변: Irish Aid Volunteering Information Centre 자체가 원조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파급력이 큰 TV와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과 학교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었다.

질문4: OECD/DAC은 Irish Aid의 직원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은 직원 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가?
답변: 먼저 직원들이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순환배치(rotation)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나 순환배치 없이 직원들이 본부 또는 수원국 현지에만 있을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서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직원 수가 적다보니 조직이 유연하며 빠른 의사소통 및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직원 간의 관계도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비공식 의사소통도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5: Irish Aid와 다른 부서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답변: 정부 부처 간 일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IDCD)를 2007년에 개설하였다. IDCD는 정부 관료로 구성되어있는데 Minister of State for Overseas Development가 의장직을 맡으며 Irish Aid와 외무부의 고관(senior official)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4개의 정부 부서에서 1-2명의 고관을 파견한다.

질문6: Peer review (2003)에 Irish Review Committee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조직인가?
답변: Irish Review Committee는 Irish Aid Advisor Board로 바뀌었으며 정부 원조 프로그램의 전략 등에 있어 외무부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질문7: 정부와 NGOs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사실 경쟁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다.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ODA보다 Oxfam과 같은 NGO를 더 지지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역사 깊은 선교사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NGO와 기부가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선교사 전통은 아일랜드 원조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선교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와 역사적 교류가 오늘 아일랜드-아프리카 관계의 시발점이 되었다.

질문8: NGO를 정부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는가? 예를 들어 크로스커팅 이슈 등에 있어 NGO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답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주로 budget support로 NGO를 지원하고 있다.

질문9: 1990년대 아일랜드 원조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답변: 경제성장, 선교사 전통, NGO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질문10: 최근 아일랜드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원조를 줄인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ODA 전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답변: 원조의 규모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나 원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원조의 효과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턴쉽,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첨부자료4〉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웹서베이 설문지

본 서베이는 2009년 1월부터 진행되어 온 KOICA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선진 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의 일부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2010년 OECD/DAC 가입과 그에 따른 한국의 ODA 체계의 변화방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KOICA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OECD/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선진원조공여국의 ODA체계를 연구하여 OECD/DAC의 권고사항과 평가지표의 다양한 수용 및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문헌연구와 더불어 해외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OECD/DAC의 주제별 권고사항이 함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철학(scheme)과 이를 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해 왔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국 ODA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OICA가 OECD/DAC 가입 후 정기적으로 실시될 OECD/DAC 동료심사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선진적인 원조 체제의 도입과 함께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조직 변화 및 적용 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KOICA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KOICA 직원분들에게 간단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내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진해 주시는 의견은 최종 결과 보고서에 무기명으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개별의견이 아닌 직원들의 의견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조사 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

1. OECD/DAC 가입 이후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KOICA에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고 계시는지요?

(1) 예 (2) 아니오

2. OECD/DAC 가입 이후 어떻게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를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지난 1년 사이에 (2008.6-2009.6)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경우 다음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1) 기관: _____

(2) 일시: 시작 [____년/__월/__일] -- 종료 [____년/__월/__일]

(3) 내용: _____

(4) 외부기관의 교육인 경우, KOICA의 지원 여부:

[1] 있었다 [2] 없었다

4.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5.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1) 주관 기관: [1] KOICA [2] 외부기관: _____

(2) 기간: [1] 1일 이내 [2] 2일-1주일 이내 [3] 1-2주일

[4] 기타: _____

(3) 내용: 해당 사항이 하나 이상이면 모두 고르십시오.

[1] OECD/DAC 가이드라인 전체

[2] OECD/DAC 평가체제

[3] OECD/DAC 가이드라인과 평가체제 중 내 부서 업무 중심의 맞춤 교육

[4] 기타:_____

(4) 교육 방법: 해당 사항이 하나이상이면 모두 고르십시오.

[1] 집합 교육 – 연찬회 등

[2] 인터넷교육

[3] 기타: _____

6. 위의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KOICA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보다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참석율이 높아지며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정하여 주십시오).

(1) 인사고과 반영

(2) 별도의 장소에서 집합교육

(3)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

(4) 기타: _____

2010년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선진적인 원조에 앞장서고 계신 KOICA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실시한 본 서베이에 바쁜 시간을 내어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답변과 저희 연구는 OECD/DAC 가입과정과 가입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될 OECD/DAC의 동료 심사시 KOICA가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면접 및 결과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은미교수(emkim@ewha.ac.kr, 02-3277-3669, 010-6323-288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ECD/DAC 권고사항 문서 요약

<table>
<tr><td>제목</td><td>개발협력 시각에서 본 테러리즘 예방: 주요 실천사항(A Development Co-operation Lens on Terrorism Prevention: Key Entry Points for Action)</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CP-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테러리즘 예방(Terrorism Prevention), 테러리즘 경고 지표(Terrorism-warning Indicator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테러리즘 예방을 위해 수원국의 장기적 · 구조적 안정화를 지원함
2. 수원국 내 테러리즘의 수용 방지를 지원함
3. 개인이나 단체의 테러 수단 취득 방지를 지원함
4.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국제 협력을 도모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테러리즘 예방을 위하여 수원국의 장기적 · 구조적 안정화를 지원함
가.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관련 OECD/DAC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수원국 내 소외계층 발생을 최소화하며 구조 적 안정화를 지원함
나. 수원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만, 사회 · 정치적 역학관계 및 취약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장치를 개발하고 사전경고체제를 도입 · 활용하도록 지원함
다. 수원국의 취약한 통치체제 개선, 분쟁 방지, 테러리즘 대응 전략이 국제적 인권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함
라. 수원국 내 교육 분야 지원 등을 통한 장기적 · 구조적 안정화를 지원 함
2. 수원국 내 테러리즘의 수용 방지를 지원함
가. 공여국은 수원국이 정보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도록 지원함
• 수원국 사회계층의 포용을 위한 수원국 지도자의 정보통신 기술 습득을 지원함
• 테러리스트가 미디어를 테러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존중 등의 긍정적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수원국 내 미디어를 지원함
나. 수원국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층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경제적 기회 박탈 등 사회 내 빈부격차를 인식하여 얻어지는 좌절감 및 절망감으로 인해 테러리즘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을 방지함
다. 빈곤감소 등 사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킴
3. 개인이나 단체의 테러 수단 취득 방지를 지원함
가.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구축을 지원함
• 근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
• 분쟁방지, 건전한 거버넌스, 안보체제개혁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정치개혁 가능성을 진단 및 지원
• 공여국 간 공식적 원조가 어려운 취약국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지원
나. 수원국내 법치주의 강화를 지원함
•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조약의 비준 지원
• 수원국 내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지원
• 차별방지 시스템 개발을 통해 극단적인 폭력행태 감소 지원
다. 통치체제와 공공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재정부문 관리체제의 강화를 지원함
4. 일관되고 포괄적인 국제 협력을 지원함
가. 일관된 국가 정책을 위해 무역, 상업, 개발, 안보와 외교 정책 등의 분야가 정책 수립과 적용 단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폭력분쟁 및 테러리즘을 양산할 수 있는 무기 거래를 방지하는 등 테러리즘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지원
나. 수원국의 정확한 상황평가 및 분석을 위한 공여국 정부 및 부처 간 정보교환을 지원함
•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테러리즘 경고 지표(Terrorism-warning Indicators)를 기존의 초기경고 메커니즘 및 분쟁분석에 도입</td></tr>
</table>

주요개념	1. 수원국 국민은 사회적 배타, 무지, 선입견, 불의, 소외, 좌절감 등으로 인해 테러리즘을 지지하게 됨 2. 수원국내 견고한 정치 · 경제 체제 수립, 사회 정의 및 평화 달성, 수원국내외의 배제 · 소외층 발생 방지를 통해 테러리즘을 예방할 수 있음 3. 테러리즘은 폭력 분쟁의 한 형태이며 분쟁 방지는 빈곤 감소를 위한 주요 조건이 될 수 있음		
배경과 역사	1. 가이드라인의 목적 가. OECD/DAC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테러리즘과 개발의 연관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 나. 테러리즘 예방과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제안 2. 개발 협력과 테러리즘의 관계 가. 개발협력은 테러리스트 개인 및 그 집단과의 전투가 목적이 아님 나. 개발협력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테러 및 폭력 분쟁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 시킬 수 있음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3.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2001) 2. Shaping the 21st Century Strategy (1996) 3.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2001) 4. Strategies for Sustained Development 5.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6. DAC Orientations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7.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8.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3 (2009. 2. 16)	페이지 수	24
기타	1. 본 문서는 DAC High Level Meeting (2003)에서 채택되었음		

<table>
<tr><td>제목</td><td>21세기의 분쟁, 평화 그리고 개발 협력
(DAC Policy Statement: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CP-G-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분쟁 방지(Conflict Prevention), 취약국가(Fragile States), 평화구축(Peace Building)</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분쟁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회 내 분쟁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분쟁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단계별 접근을 도입함
가. 분쟁 발생 전
• 분쟁 방지 및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민주적 사회 안정 촉진을 지원함
• 수원국의 구조적 안정을 지속적인 개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평화구축 및 분쟁 방지를 목표로 함
• 수원국 내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의 민주화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성장, 빈곤감소, 민주화, 건전한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을 지원함
나. 분쟁 중
• 분쟁 초기 단계에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 및 파악하여 수원국의 평화구축 및 분쟁 방지를 지원함
• 분쟁 중에는 인도주의적 지원, 외교적 조치 및 정치경제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분쟁 후 국가의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실시함
• 분쟁 국가에 대한 주변 지역의 지원을 독려함다.
다. 분쟁 종결 단계
•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취약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하며 화해 모색 및 새로운 폭력적 갈등 사태의 방지를 지원함
라. 분쟁 후
• 수원국 내 제도 및 재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가재건 및 개발협력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함
• 물리적인 재건 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법적 경제적 · 행정적 개혁을 통해 합법적인 정부 기관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함
• 공여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및 원칙에 따라 긴급구호 및 재건 활동을 이행함
• 수원국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대화를 지원함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함</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td></tr>
<tr><td>배경과 역사</td><td colspan="5">1. 전쟁은 수원국 개발의 장애물이며 지나친 군사비용은 공공분야에 대한 지원을 저해함
2. 분쟁의 방지, 해소 및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3. OECD/DAC은 1997년 5월 개발협력 고위급 회담을 통해 본 정책 보고서를 발표함</td></tr>
<tr><td>평가지표</td><td colspan="5">–</td></tr>
<tr><td>관련 DAC 주제</td><td colspan="5">1. 취약국가(Fragile States)
2. 거버넌스(Governance)</td></tr>
<tr><td>관련 DAC 문서</td><td colspan="5">1. DAC Guidelines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td></tr>
<tr><td>문서작성일 (번역일)</td><td colspan="2">1997. 5. 5 ~ 6 (2009. 2. 10)</td><td>페이지 수</td><td colspan="2">4</td></tr>
<tr><td>기타</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제목</td><td>폭력분쟁 방지 지원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CP-G-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폭력분쟁(Violent Conflict),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평화구축(Peace Building),
분쟁방지 기준(Conflict Prevention Len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분쟁 상황에서의 공여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원칙을 준수함
2. 분쟁방지를 위해 공여국간 통합된 협력 기준을 도입함
3. 안보와 개발의 연계를 통한 평화구축을 도모함
4. 수원국의 평화구축절차를 지원함
5. 평화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함
6. 비즈니스와 개발을 연계하여 평화 증진을 지원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분쟁 상황에서 공여국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원칙
가. 공여국은 협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의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함
나. 공여국의 개발활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평화구축 및 사회 안정을 우선 목표로 함
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호 신뢰 향상과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책임자와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을 지원함
라. 다양한 행위자의 포괄적인 참여를 통한 대화를 장려함
• 8공여국과 국제 미디어는 공개토론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함
마. 공여국은 수원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함
• 공여국은 수원국 고유의 평화구축 역량과 여성 기관 등 잠재적 매개체를 지원함
바. 여성문제를 폭력분쟁 방지 및 평화구축 관점에서 이해함
사. 전쟁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함
• 전쟁 피해 아동 대상 지원프로그램 도입 시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보호, 교육, 건강, 아동 권리 등의 이슈를 포함함
아. 복잡한 분쟁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사회 안정 및 복구에 기여함
자. 공여국간의 원조조화를 통해 수원국 내 분쟁 완화 및 평화 증진을 지원함
• 공여국 간 원조 정책 및 집행의 조화
• 공여국이 공동으로 원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공동 평가도구를 개발
차. 공여국간 통합되고 일관된 활동 및 정책을 수립함
• 분쟁 방지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개발 정책 수립 시 무역, 금융, 투자, 외교, 개발협력, 국방 분야의 정책을 포함함
• 정책 통합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함
• 폭력분쟁의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책에 반영함
카. 지역 협력 강화를 지원함
• 지역 협력을 통해 평화 건설, 인권보호, 민주화 건설을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 안보 개혁, 공공재 공급 문제의 해결 및 빈곤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음
• 공여국은 지역외교와 지역 내 소구역 조직을 통해 지역연계 및 지역역량의 강화를 지원함
• 인권 및 평화 증진 관련 활동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간의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지원함
2. 공여국은 분쟁방지 기준을 원조 활동에 도입함
가. 수원국의 사회 안정을 위해 분쟁방지와 평화구축을 원조 지원의 목표로 설정함
• 다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간의 이해와 상호의존을 높이고 다문화주의의 확산을 지원함
나. 분쟁과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 요인과 대안을 파악하고 주류화를 통해 기타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함
•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폭력분쟁 방지문화 형성과 평화와 분쟁의 영향력 평가 등 심층 분석을 실시함</td></tr>
</table>

	• 분쟁 시 인권에 기초한 원조활동의 잠재적 영향력 분석을 실시함 • 경제상황과 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안보, 경제 안정 및 개발에 상호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는 포괄적으로 하며 원조프로젝트는 해당 분야를 모두 반영하도록 기획 함 • 폭력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개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함 • 수원국이 경험과 분석을 통해 폭력분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회복을 위한 장기적 후속 조치를 지원함 • 공여국은 수원국과 함께 분쟁방지 기준을 모든 개발 활동에 통합함 3. 안보문제와 개발의 연계를 통한 평화증진을 지원함 가. 군사 적 방어의 의미를 넘어 복지, 인권 및 재산권 보호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안보체계의 개혁은 분쟁의 재발 방지를 통해 경제개발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건전한 거버넌스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함 • 공여국 내 안보 관련 기관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함 나. 안보는 건전한 거버넌스와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개발협력 이니셔티브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함 다. 개발도상국의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체계(국방, 사법 등) 구축을 지원함 • 관련 법률 제정과 소형무기 문제와 연계하여 국가적, 지역적 자문 및 지원 메커니즘을 개발함 라. 무장해제와 무력 분쟁 수단의 유통(불법밀매, 지뢰, 소형무기) 방지를 지원함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소형무기의 유통 방지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지원함 • 전투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절차, 군비축소, 무기 제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4. 수원국의 평화 구축 절차를 지원함 가. 공여국은 분쟁의 완화, 억제, 해결 과정에서 원조와 연계된 목표를 명확히 함 나. 시민사회, 종교집단, 전문가 협회, 여성그룹, 학회 등이 평화구축에 대해 건설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수원국 내 시민사회 및 모든 정당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함 다. 수원국의 역량 강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라. 공여국은 평화구축에서의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함 • 분쟁 복구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 공여국은 분쟁기간 동안 여성기관 및 여성조직이 평화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여국은 분쟁 후 조정 및 사회 재건 과정에서 여성이 법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지원하며 교육 및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함 • 공여국은 여성과 함께 청소년과 아동을 고려함 • 공여국은 양성평등 원칙에 기초한 성인지적 접근을 도입함 마. 민주화를 통한 평화구축을 지원함 • 공여국은 폭력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수원국의 국제규범준수 및 민주적 체계 도입을 지원함 바. 효과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여기관은 분쟁 상황의 종료 후에도 수원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함 • 비폭력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형무기방지, 평화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 • 수원국 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평화정착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강화를 통해 분쟁 원인의 제거 및 경감을 지원함 5. 공여국은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를 통해 평화 증진을 도모함 가. 수원국의 역량 및 건전한 거버넌스 개발을 지원하고 신뢰관계를 강화 함 • 수원국과 공여국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공동 분석,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정보 공유와 정책의 조화를 강화함 나. 공여국은 수원국 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 다.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공여국 간의 정책 일관성과 협력을 강화함 • 분쟁국가에서의 원조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준을 명확히 함

	6. 비즈니스와 개발을 연계하여 평화 증진을 지원함 가. 공여국은 수원국내 사회 안정화와 무력분쟁 방지에 기여하는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원함 • 농업분야 협력, 소규모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자본을 확충함 • 포럼 개최를 통해 산업, 정부, NGOs 등 주요 행위자 간의 지속적 대화를 지원함 • 수원국의 국가 세입 증대를 위해 재정 개혁을 지원함		
주요개념	1. 폭력분쟁 방지는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요소임 2. 폭력분쟁의 원인을 고려한 원조는 분쟁 방지에 효과적임		
배경과 역사	–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2009. 2. 15)	페이지 수	155
기타	1. Part I.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Orientations for External Partners (2001) (p.13-77) 2. Part II.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1997) (p.78-155)		

<table>
<tr><td>제목</td><td>사법체계와 안보 강화: 거버넌스, 평화, 안보 (Enhancing the Delivery of Justice and Security: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CP-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안보(Security), 사법체계(Justice), 취약국가(Fragile State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취약국가 및 분쟁 중인 국가의 사법체계와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취약국가 내 사법체계 및 안보의 중요성
가. 사법체계와 안보: 체포, 기소, 감금 또는 기타 법적 제재를 통해 폭력, 범죄 및 혼란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위를 일컬음
나. 취약국가 내 혼란, 불안정 및 불법행위는 개발 저해 요인임
2. 취약국가 내 사법체계 및 안전보장을 위한 원조의 목표
가. 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과 책임성이 필수적임을 인식
나. 거버넌스 구축 뿐 아니라 인력 및 재정 자원의 지속성, 문화적 적합성, 제도적 구조의 확립 등 취약국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다.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함
3. 사법체계 및 안보에 관한 정치경제학
가. 취약국가 내 부정부패와 사회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지원과 달리 사법체계 및 안보와 같은 공공재 지원은 사회 안정을 가져다 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취약국가 지원 시 다면적 접근(Multi-layered Approaches)이 필요함
가. 취약국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함(예: 관련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 변호사협회의 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와 진술 남용 모니터링, 법률상담소의 설립,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 분쟁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취약국가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동은 '사회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협력과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분쟁 중에서도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여성단체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인권 강화에 기여해야 함
• 사법제도 및 입법체계의 개혁을 통한 취약국가 안보 전략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나. 붕괴된 취약 국가(Collapsed Fragile States)에 관한 지원
• '누가' 사법체계 및 안보에 관한 원조를 어디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제공 할 것 인가(정부, 비정부 포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국제적 기준보다 수원국이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당면 문제들을 인식 후 정치적 상황,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현실적이며 총체적인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해야 함
•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NGO와의 협력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해 성공 여부와 개선점을 파악해야 함
• 전문가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다. 재건 중인 취약국가(Recovering Fragile States)에 관한 지원
•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 국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 사법체계 및 안보에 관한 쟁점들(군축, 비무장화, 안보체계개혁)을 국가 개발 목표와 프레임웍에 통합하도록 지원해야 함
• 공여국 간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 : 원조 집행 성과와 영향성에 대한 평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공여국 간 공식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야 함</td></tr>
<tr><td>향후 연구방향</td><td colspan="5">–</td></tr>
</table>

관련 DAC 주제	1. 취약국가(Fragile States) 2. 거버넌스(Governance) 3.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on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 (2004)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2. 11)	페이지 수	51
기타	–		

<table>
<tr><td>제목</td><td colspan="2">분쟁방지와 평화구축: 무엇이 ODA로 규정되는가?(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Building: What Counts as ODA?)</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 colspan="5"></td><td>문서번호</td><td>CP-M-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6">분쟁방지(Conflict Prevention), 평화구축(Peace Building),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범정부적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6">1. OECD 회원국은 수원국과 그 국민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실시함
2. ODA로 분류될 수 있는 공여국의 국제 방위 활동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6">1. ODA의 목표에 따른 분류
가. ODA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어야 함
나. 군사장비와 서비스 및 폭동 진압을 위한 군 인력에 대한 지원은 ODA에서 제외됨</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6">1. 2005년 3월 3일 DAC 공여기구 고위급회담(DAC High Level Meeting of Ministers of Heads of Aid Agencies)에서 안보 관련 지원 중 다음의 6개 사항에 해당해야 ODA로 규정할 수 있음을 확인
가. 안보지출 관리 지원
• 안보 지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감독 강화와 예산 책정, 관리, 회계에 대한 관리 지원
나. 안보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지원
•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안보체계의 민주적 규범과 책임, 투명성과 거버넌스 개선 원칙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다. 소년병 징집 금지법 제정 지원
라.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제도 개선을 위한 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지원
마. 평화 구축, 분쟁 방지,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바. 경 · 소형무기 확산 예방, 감소, 제한 지원
2. 다음과 같은 활동이 ODA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군의 교육훈련(예: 인권교육)
• 평화유지활동의 포함</td></tr>
<tr><td>보고체계</td><td colspan="6">–</td></tr>
<tr><td>평가 및 Feedback</td><td colspan="6">–</td></tr>
<tr><td>관련 DAC 주제</td><td colspan="6">1. 거버넌스(Governance)</td></tr>
<tr><td>관련 DAC 문서</td><td colspan="6">1. Factsheet: Is it ODA? (2008)</td></tr>
<tr><td>문서작성일 (번역일)</td><td colspan="3">2005.03.03 (2009.01.22)</td><td>페이지 수</td><td colspan="2">1</td></tr>
<tr><td>기타</td><td colspan="6">–</td></tr>
</table>

<table>
<tr><td>제목</td><td>안보체계개혁과 거버넌스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CP-G-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SSR), 거버넌스(Governance),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안보와 개발의 통합을 지원함
2. 수원국 주도의 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SSR)을 지원함
3. SSR 정책실행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안보와 개발을 통합함
가. 효과적인 SSR을 위한 방침
• SSR의 핵심 가치는 인간 중심으로 이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하에 민주주의적 규범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원칙 및 법치주의에 기초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수원국 주도 하에 시민 사회와 공동으로 외교, 법, 경제, 안보 및 정치 정책 수단을 통합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함
• 수원국의 SSR 시행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공여국은 기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공여국의 개발 전략에 대한 합의를 통해 수원국의 전략적 프레임웍 구축을 지원함
나. 안보를 중요 공공 정책이슈로 삼고 기타 정책과의 일관성을 도모함
•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SSR과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함
• SSR 전략 실행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채택하고 공동평가제도, 사례학습연구 등을 통해 전략 개발을 도모함
다. 수원국의 SSR을 지원하는 공여국 및 공여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함
2. 수원국 상황에 적합한 SSR을 지원함
가. 수원국의 개혁 의지가 결여된 경우 시민사회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함
나. 포괄적인 제도 및 규범 프레임웍 구축과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
다.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제도 및 규범 프레임웍 구축을 비롯한 국가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안보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안보체계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광범위한 공공지출 관리 차원에서 안보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도모함
• 안보체계에 대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안보체계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며 법적 규제를 통해 안보병력을 국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활용함
• 수원국은 인권 관련 국제 원칙에 따라 규범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적인 역량 개발을 도모함
• 양성평등 이슈, 전쟁 시 사용된 자원의 전후 전환과 전투병들의 사회 귀환 문제, 소년병 문제 등 평화 재건 및 비무장화 조치가 안보체계 관리 향상에 부합하도록 함
라. 수원국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SSR 접근 방법을 개발함
• 공여국은 민간 사회와 안보체계 내 행위자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여 SSR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마. 공여국은 수원국이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수원국의 안보체계 내 다양한 분야 간의 개발 및 여러 원조 유형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이해를 지원함
• 원조 집행 시 개별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SSR 접근법 및 출발점을 마련하고 전 분야에 걸쳐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함
• 전후 국가의 경우 SSR의 향후 과제를 예상하여 평화협정 마련을 지원함
• 안보 불안 국가의 경우 정치 상황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바. 수원국의 개혁의지 강화를 지원함
사. 지역 차원의 공동 안보 필요성 인식과 지역적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책과 집행의 조화를 모색함</td></tr>
</table>

	• 소형 무기 확산, 소년병 문제 등 초국경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과 지역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른 SSR의 목표와 우선 고려사항을 파악함 •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지역적 관계가 SSR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함 3. SSR 정책실행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 가.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및 구조적인 틀로서 SSR 활용을 지원함 나. 수원국 정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수원국내 문제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파악하고 일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마련을 지원함 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 패러다임을 반영한 SSR 접근 방식을 도입함
주요개념	1. 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SSR) 가. 개발, 빈곤 감소 및 민주주의에 이바지 하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보체제의 전환 과정 나. SSR의 과제 • 개발과 안보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의 공유 • 행정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SSR 의 기반 마련 • 개발프로그램으로의 SSR 통합 2. 인간안보 의제는 국가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안보 상황과 민간인의 보호를 기초로 함
배경과 역사	1. SSR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 하에 개발된 인간안보 의제의 주요 요소임 2. 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변화로 통합된 정책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과 안보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A Development Co-operation Lens on Terrorism Prevention: Key Entry Points for Action (2003) 2. DAC Guideline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998) 3. DAC guideline on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02.09) / 페이지 수: 141
기타	1. 부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 동남부 유럽, 독립국 연합(CIS), 발트 지역 등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table>
<tr><td>제목</td><td>안보체계개혁에 관한 OECD/DAC 핸드북
(The OECD DAC Handbook on SSR:
Supporting Security and Justice)</td><td>DAC
문서
주제</td><td>Conflict
and
Peace</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CP-M-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SSR), 안보체계개혁 이행프레임웍(Implementation Framework for SSR, IF-SSR), 국가정보 및 안보서비스(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ISS),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 전환결과검토(Transitional Results Matrices, TRMs), 전후 수요평가(Post-conflict Needs Assessments, PCNA)</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효과적인 안보체계개혁(Security System Reform, SSR)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대화를 통한 현황 분석과 이해, 수원국 내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
2. SSR 프로그램은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장기적으로 설계 및 집행되어야 하며 공여국은 이를 위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3. SSR은 수원국의 국가, 안보, 개발전략과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공여국의 적절한 개입 시점의 선택이 중요함
4. SSR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안보체계의 구성
가. 핵심안보기관
• 군대, 경찰, 헌병, 국경수비대, 세관, 입국관리, 지식 및 안보 서비스
나. 안보관리기관 및 감독기관
• 국방부, 금융관리기관, 고충처리위원회
다. 사법강제기관
• 사법부, 사법제도, 교도소, 검찰
라. 비법정 안보기관
• 사설안보기관, 게릴라, 민병대</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SSR을 위한 공여국의 원조 지침
가. 대화를 통한 상황의 이해 및 정치적 의지 구축 지원
• SSR 집행 시 공여국은 기초 안보와 사법서비스 제공, 효과적인 정부 및 감독기관 및 체계의 구축, 지역사회의 리더십과 주인의식 개선 및 안보체계의 역량 개발의 지원을 목표로 함
• SSR을 위한 기술 지원은 SSR과 관련 기관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함
• SSR에 대한 초기 투자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함
나. SSR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감독기관의 재구성 및 주인의식을 강화를 목표로 기획함
• 공여국은 수원국 주도로 SSR이 진행되도록 지원함
•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안보 및 사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기획함
• 장단기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SSR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다. 프로그램 집행
• SSR 프로그램은 범정부적 접근과 같은 전략적 개입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 및 집행되어야 함
• 기본적인 안보와 사법 서비스의 최종적인 결과 산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SSR의 중점적 목표로 함
• 수원국의 개별 상황에 따라 SSR을 집행함
라. 공여국 간의 협력 및 공동 정책수립
• SSR을 수원국의 국내 개발정책에 포함하도록 지원함
• SSR은 전환결과검토(Transitional Results Matrices, TRMs), 전후 수요평가(Post-conflict Needs Assessments, PCNA), UN 활동 관련 정책수립 프레임웍과 같은 기타 프로젝트의 프레임웍에도 포함되어야함
• SSR은 전후 상황 개선정책 및 평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함</td></tr>
</table>

세부 매뉴얼	마. 적절한 개입 시점의 선택과 광범위한 시스템 개편을 유도함 • IF-SSR을 활용하여 민간에 대한 감독 및 책임, 국가방위 개편, 국가정보 및 안보체계 개편, 국경관리, 경찰, 사법체계 개편, 교도소, 사설안보 및 민병대, 시민사회 등의 세부분야 개편을 지원함 2. 수원국 내 분야별 개편 방안 가. 무장병력과 국방정책에 관한 헌법상의 제재 및 민주적 감독권한의 제정지원 나. 국가 방위 개편 지원 • 안보 위협 감지 및 대처 역량 강화 • 국내 치안은 경찰병력에 일임하고 군 병력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 국방비, 인력수요계획, 국방부 자산관리와 안보체계정책의 통합 • 국방체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시민 의식 제고 및 참여 유도 • 군인 대상 훈련개혁, 직업전환을 위한 커리어 개발, 퇴역 후 재정착 계획 지원의 활성화 • 국방부 내 인종적, 사회적 평등성 개선 정책 활성화 • 지역별 협력 강화 다. ISS 개편 지원 •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ISS 규제 법규 마련 • ISS 구조변화를 위한 투자, 채용정책 및 훈련기회의 형평성 개선을 통해 ISS의 효율성 증대 • 대통령 및 입법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 개선 • 실무자의 전문성 및 업무윤리 강화 • ISS의 역할과 필요성에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라. 통합적 국경관리 체계 개편 지원 • 민주주의적 국경관리전략 수립 • 안전 보장을 위한 출입국의 통제 및 허용 간의 균형 확립 • 국경을 통과하는 국민과 상품 보호 • 투명한 국경관리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 마약밀매, 조직적인 범죄, 테러 등 국경 지역의 범죄 척결 • 국가 내 모든 국경관리서비스의 연결망 구축을 위한 체제 정비 • 국경 통제와 통관규제간의 조화 및 국경 간 협력 마. 경찰체계 개편 지원 • 인권보호 및 법치 확립 • 경찰과 시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 경찰의 독립성 확보 • 경찰 훈련 프로그램 및 경찰 구조의 검토 및 개선 바. 사법체계 개편 지원 • 사법체계가 기타 분야의 개발 정책과 통합되도록 지원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법률 제정 •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집행과 분쟁조정 메커니즘의 개발 • 법적 절차 확립 및 보호를 통해 사법기관의 활동 보장 • 정부와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 강화 • 재판절차의 문서화를 통해 자료 집계 관리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 사. 교정기관 개편 지원 • 죄수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비무장, 전문 인력에 의한 민영교도소 운영 •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도소 운영 법규 제정 • 재판 전 구금 축소, 경범죄의 경우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를 시행하며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여성, 미성년자, 정신질환 수감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조치 제공 • 독립적 감독 체계와 국제적 교도소 모니터링 도입 • 사법 및 안보기관, 행정부의 사회복지, 교육, 보건 담당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계획 수립

	아. 사설안보기관 및 민병대 개편 지원 • 사설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전문 인력을 통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사설안보기관의 개입은 공공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곳으로 한정하고 기관 간의 협력 제고 •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관리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경보, 응급조치 등의 전문 운영기준에 맞는 관리 지원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1. 모니터링 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를 시행함 2. 평가 가. 효과적인 SSR 지원을 위해 공여국과 공여국 내 담당 부처 간의 공동평가를 실시함 나. 공동분석을 통해 SSR의 목표와 문제점을 공유함 다. 권력관계 변화와 전략적 갈등 분석을 통해 안보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함 라. IF-SSR이 정치적 분석, 안보, 거버넌스, 시민의 안보 및 사법 정의의 필요성을 다루는 평가도구를 제공하도록 함 마. IF-SSR은 안보기관의 기술적 역량 제한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함 바. 2004 OECD/DAC SSR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야하며 결과뿐 아니라 전략적 목표와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함 3. SSR 평가체계 수립 체크리스트 가. 다수의 원조기관의 공동평가를 시행하였는가? 나. 수원국 정부와 공동으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집행하였는가? 다. 수원국 및 다수의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정립한 평가기준이 각 기관 및 각 분야 간의 연계성과 안보체계 개혁의 우선순위 파악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가? 라. 평가 범위와 내용이 수원국의 정치, 경제, 국가의 안보, 지역사회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가? 마. 평가가 단기간에 시행된 경우 후속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사. 여러 분야에 걸친 평가 팀을 활용하고 있는가?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3.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DA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2.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3.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4.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2. 16)	페이지 수	255
기타	1. 본 가이드라인은 2년 동안 시행된 IF-SSR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2.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 안보, 법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 개발 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table>
<tr><td>제목</td><td>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공여국의 원조 조화(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 수요평가조사(Needs Assessment Survey), 국가분석작업(Country Analytic Work)</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공여국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웍을 구축해야 함
2. 수원국가별 분석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 계획을 시행해야 함
3. 수원국의 효과적인 공공 재정 관리 지원
4. 원조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및 결과의 보고와 공유
5. 재정 보고와 회계 감사의 도입
6.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을 통한 수원국 지원</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수원국과 공여국 또는 공여국 간의 원조 목표와 이해관계의 상충은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협력 프레임웍을 구축해 유연한 정책 개발과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해야 함
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목표와 이해관계의 상충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강화를 저해함
• 수원국 주도의 개발 목표 수립 및 공유, 중장기적 원조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공통의 수행척도 사용, 수원국에 원조 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수원국 정부의 리더십과 주인의식 지지, 수원국의 예산 관리와 시기에 따른 원조 지원, 원조 지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함
나. 공여국 간 공통의 원조 체계와 절차를 수립해 비용 감소를 꾀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함
• 수원국 정부와 일관된 의사소통, 정보 공유,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절차 표준화를 통한 수원국의 행정비용 부담 감소시켜야 함
다. 개별 공여국 내 원조 체계 정비를 통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원조 정책 및 실행의 조화를 도모함
•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또는 공여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분권화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시 수원국 주재 현지 사무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조 집행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2. 수원국 분석 연구는 해당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개발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여국은 보다 정확한 국가 분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의 개발 및 적용하고 결과의 보급과 활용을 장려해야 함
가. 진단도구의 개발: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력 하에 필요한 분석 도구를 파악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함
나. 분석 연구 결과의 보급 및 사용: 모든 분석연구 결과는 완전히 공유되어야 함(단, 수원국내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함)
다. 공여국은 정책개발과 혁신을 위해 국가 분석 작업의 범위, 조화, 투명성을 증진시켜야함
3. 수원국의 효과적인 공공재정관리는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수원국의 책임성 및 주인의식 증진과 공여국의 투명한 재정 지원에 기여함
4. 원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결과 보고는 개발정책 및 전략의 성과를 파악하고 추후 정책 개발에 활용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가. 수원국 내 빈곤완화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에 맞춰 원조를 집행함
나. 공여국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해야 함
다.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장려해야 함
5. 자원 활용 내역에 대한 재정보고를 실시하고 외부 감사관을 통한 회계감사를 도입해야 함
6.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은 주공여국이 복수의 기타 공여국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원조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를 도모해야 함
가. 위임협력은 수원국의 빈곤 완화 전략과 일치해야 함
나. 공여국 간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 활용해야 함</td></tr>
</table>

주요개념	1. 국가분석작업(Country Analytic Work): 인구조사 · 생산 · 가격 · 통화 · 국고 자료의 통계와 각 분야(특히, 보건 및 교육)에 관한 수행척도의 수집 및 분석 작업으로 수원국의 정책개발에 기초하여 특정한 원조중재가 있을 시에 정황, 전략, 우선사항을 제공하므로 각 수원국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는데 필요함		
배경과 역사	1. 2003년 2월 28개의 수원국을 대표하는 장관, 원조기관장과 약 40여개의 공여기관은 원조조화를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달성을 약속하는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에 동의함 2. 특별대책본부(Task Force)가 11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수요평가조사(Needs Assessment Survey)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공여국 중심적인 원조 체계와 공여국 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조 행정절차가 수원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나. 원조 조화가 필요한 중심 분야: 공여국의 원조 정책 및 집행, 절차의 간소화,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긴밀한 협력활동, 원조 집행의 절차·보고·평가의 투명성		
평가지표	1. 공여국과 수원국 또는 공여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평가(Note 1.1) 가. 공여국-수원국 간의 공통 원조집행지표가 만들어졌는가? 나. 공여국 간의 원조 체계와 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부담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중 수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2. 수원국 분석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 계획 평가(Note 2.1) 가. 국가 분석 작업 후 수원국의 참여를 유도했는가? 나. 분석 연구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분석 작업의 질, 범위, 보급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가? 다. 분석 작업의 보급과 활용에 있어서 경험적 연구를 적용하였는가? 라. 확인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3.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평가(Note 3.1) 가.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공재정관리수행 기준이 일치하는가? 4. 원조 집행의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결과의 보고와 공유 평가(Note 4.1) 가.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의 조정 및 단순화는 이루어졌는가? 나. 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되었는가? 다.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공유되는가? 라. 효과적인 체계 운영에 관한 장기적 결과가 측정가능한가? 5. 재정 보고와 회계 감사의 도입 평가(Note 5.1) 가. 개발 프로젝트 마다 통일된 재정 및 회계 감사 보고서가 있는가? 나. 공여국에 제공되는 재정보고서 감사 비중은 증가하였는가? 6. 공여국 간의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의 실시 평가(Note 6.1) 가. 위임협력 시 수원국을 고려대상에 포함했는가?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3 (2008. 1. 22)	페이지 수	124
기타	1. Needs Assessment Survey결과(p.101 부록참조)		

<table>
<tr><td rowspan="2">제목</td><td rowspan="2">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원조조화: Vol. 2 예산 지원, SWAPs 및 공공재정관리 역량개발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 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td><td rowspan="2">DAC
문서 주제</td><td rowspan="2">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문서번호</td><td>E-G-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예산지원(Budget Support), 분야별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수원국 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 지원 방안 제고
2. 개발 정책의 효과성 증대 및 수원국의 공공분야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원조지원(Sector-Wide Approaches, SWAPs)을 도입
3.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수원국 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 지원 방안 제고
가.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예산 지원
• 수원국과의 예산 목표 및 관련 예산 할당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함
나. 수원국의 PFM 시스템 강화 지원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및 신탁기금 관리를 위해 수원국의 PFM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
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원국 자체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원
라. 예측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예산지원
• 공여국은 수원국이 예산지원의 규모, 집행 시기, 조건 등에 대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예산 지원의 규모와 집행 시기 등을 파악하여 변동성을 최소화함
2. 개발 정책의 효과성 및 수원국의 공공분야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WAPs 도입
가.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과 리더십 강화 지원
• 상호 책임성에 근거한 공여국-수원국의 파트너십을 구축함
• 수원국의 상황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원함
나. 수원국의 제도 및 책임성 강화 지원
• 공여국은 수원국의 시스템과 절차를 최대한 고려하며 수원국 정부와 협력하여 파악된 취약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함
다. 수원국 전체를 고려한 SWAPs 도입 지원
• 수원국의 PFM 시스템, 주무 부서 및 협력 부서의 역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등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환경, 젠더, HIV/AIDS 등의 이슈들을 포함함
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의 지원
• SWAPs은 대체로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사업 이며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함
• SWAPs은 장기적인 제도와 조직의 변화와 개발을 필요로 하므로 공여국은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원 투입을 계획함
마.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집행
• 수원국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비용 및 이익을 측정해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
3. 수원국의 PFM 역량 개발 지원 방안
가. 수원국의 리더십과 자립심 지원을 핵심으로 함
• 수원국의 기존 재무 시스템을 강화 · 개선하도록 하며 새로운 목표 수립 및 전략 집행의 지시를 지양함
나. 수원국 역량 개발의 기획과 집행은 수원국의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표준화 된 일방적인 해결책 강요를 지양함</td></tr>
</table>

	• 수원국 기존의 제도 하에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공여국의 개입은 수원국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하도록 함 • 역량 개발은 추후 PF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됨 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수원국의 역량개발이 제도적 · 조직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함 • 수원국의 정치적, 제도적, 구조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역량개발을 지원함 •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 · 정치적인 환경, 인력 자원 정책, 및 공공 서비스 등을 보완함 라. 통합적 ·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PFM 역량 개발을 지원함 • 공여국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모든 과정에서 집행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지원함 • 다수의 공여국이 프로그램을 집행 시 경쟁이나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 • PFM 역량 개발 지원은 수원국가의 개발 목표에 기반함		
주요개념	1. 예측성(Predictability) 가. 수원국이 공여국의 개발원조의 규모와 지원 시기에 대해 확실성을 확보하여 향후 개발계획과 집행을 가능하도록 함 2. SWAPs 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관점 • 전통적인 프로젝트 접근법(Project Approaches): 협의의 목표 달성에 있어 수원국이 일방적인 책임을 짐 • SWAPs: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 그리고 책임 공유를 추구 3. PFM 가. 예산 수립을 위한 기구와 제도, 수입 운영, 소비 지출, 내부 조정과 감사, 부채 운영, 회계와 보고, 외부 감사, 법률, 그리고 회계 분산 등을 포함함		
배경과 역사	–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High-level Forum on Harmonisation, Rome (2003)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1. 22)	페이지 수	86
기타	–		

<table>
<tr><td>제목</td><td>개발 원조 평가에 대한 OECD/DAC 원칙(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G-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원조평가(Evaluation)</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원조집행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함
2. 원조 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실용성을 확보함
3. 원조 평가에 수원국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함
4. 원조의 평가, 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원조집행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함
가. 수원국내 원조 집행 제도 구축에 원조 평가 지침 및 정책 개발을 포함하도록 지원함
나. 향후 정책 및 개발 활동에 원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지원함
2.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가. 원조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며 독립성은 원조 평가에 합법성을 부여해 향후 정책 입안자간의 분쟁 가능성을 낮춤
나. 원조 평가 기능을 개발원조 기획 및 관리 담당 부서와 분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함
3. 원조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함
가. 원조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평가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나. 수원국은 신뢰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함
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함
4. 원조 평가의 실용성을 제고함
가. 개발 협력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관심 및 요구사항을 원조 평가시 반영하여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함
나. 평가는 사후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조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이루어져 정책결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함
다. 모니터링은 실무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함
5. 공여국과 수원국의 참여 및 협력을 확대함
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의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함
나. 원조 평가 책임의 범위에 공여국과 수원국의 고려사항을 명시함
다. 공여기관은 수원국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함
라. 공여국은 수원국의 원조 평가 방법의 개발, 정보 공유 및 원조 평가 결과의 공개를 위해 협력함
마. 수원국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 평가를 실시함
6. 원조 평가
가. 평가 기관이 전반적인 원조 평가의 기획, 지침, 지표를 마련함
나. 원조목표의 우선사항을 평가 항목과 기획에 반영함
다. 개발 원조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각 평가 항목을 구성함
라. 간부급 직원의 특별 요구사항을 원조 평가에 반영함
마. 원조 평가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주제, 주요 이슈 및 절차와 관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바. 원조 평가에 대한 간부급 직원의 지원과 승인을 받도록 함
7. 원조의 평가 방법
가. 원조정책과 집행 결과의 평가와 환류 및 공여국의 경험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함
나. 효율적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관리 제도를 구축함
다. 독립된 평가 담당 부서와 전문적인 평가 책임자를 도입함</td></tr>
</table>

	라. 평가 담당 직원은 원조집행의 기획단계에서 평가 조항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참고함 8. 원조 평가 결과 보고 및 환류 가. 원조 평가 결과의 보고는 요약본, 원조 평가 개요, 평가 방법, 및 결과, 시사점, 결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함 나. 평가의 권고사항 및 시사점을 통해 원조 평가의 결과가 향후 정책 및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평가 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원조 평가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보급되도록 지원함
주요개념	1. 원조 평가 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구조적 ·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함 나. 평가를 통해 개발 목표, 효율성, 효과, 목표 및 원조 지속성의 타당성과 그 이행정도를 파악함 다. 평가는 원조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며 경험의 공유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추후 개발협력의 초석을 마련함 2. 평가의 목적 가. 원조의 규모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의 질 향상 나. 다양한 원조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확대 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련 참여기관의 책임 증대 라. 성공적인 개발원조에 제약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원조에 반영
배경과 역사	–
평가지표	1. 원조 평가 기획 시 고려사항 가. 원조 평가의 목적과 평가 범위, 지표, 방법 및 대상 수원국을 명시함 나. 원조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원조 배경, 목표, 지출, 원조 효과, 원조 평가 시간과 수단 등의 정보를 명시함 다. 원조 평가 중에 제기되는 문제 또는 질문들을 명시함 라. 해당 개발원조의 필요성, 목표에 대한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함 마. 전반적인 평가 결과, 지속성, 시사점 및 개선책 등을 명시함 2. 원조 평가의 집행 가. 원조평가 기획 • 원조 평가의 목적과 평가 범위, 평가 지표, 평가 방법, 프로그램 평가 기준, 평가에 소요된 시간과 자원 등을 명시함 • 원조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정량적 · 정성적 기술을 모두 포함함 • 해당 개발원조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원조의 영향과 효과 평가의 정확성을 높임 3. 원조 평가의 주요 이슈 가. 평가의 주요 이슈는 원조 평가 중에 제기되는 문제로 평가절차를 위한 프레임웍을 제공하고 결론과 향후 정책제언의 기초가 됨 나. 평가 이슈의 고려 사항 • 필요성(Rationale): 해당 원조 실행은 타당한가? 원조 목표는 적절하며 실현가능한가? • 목표와 달성: 기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목표의 달성과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영향과 효과: 직접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다른 개발 지표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를 포함하는가? 예상된 결과 및 의도되지 않은 결과도 평가에 고려되었는가? 정책 변화, 경제 및 재정 상황 등 외부요인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도 함께 포함되었는가? • 전반적인 결과: 원조활동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정당한가?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주요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지속성: 원조 성과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대안: 원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 시사점: 향후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The Principles for Project Appraisal 2. The Principles for Programme Assistance 3. The Principles for New Orientations in Technical Co-operation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8. 1. 20)	페이지 수	11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원조효과성과 선택성: 원조 재원 배분 시 다중 목표의 통합(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Inte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원조 선택성(Aid Selectivity), 원조 배분(Aid Allocations), 빈곤 효율적 배분(Poverty-efficient Allocations), 새천년과제기금(New-Millennium Challenge Account)</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분쟁 위험성, 사회경제적 의존성, 정치적 안정성,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가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침
2. 원조의 배분에 있어 빈곤 감소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과거 공여국은 원조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개발 또는 인도주의적 요소는 원조 배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음
2. 개발원조에 있어 공여국과의 무역 확대 등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목표가 공여국의 우선순위로 남아있음
3. 공여국과 국제공여기구가 효과적인 원조 배분을 위한 제도와 기준의 도입을 통해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가. 미국
• 새천년과제기금
• 수원국은 원조 지원을 받기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 국민에 대한 투자 및 경제개혁 촉진의 세 가지 정책영역 내 16개 실행지표 내 각 정책영역 지표 중 절반 이상에서 평균 이상으로 이행해야 함
나. 네덜란드
• 수원국의 빈곤 수준, 사회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원조 분배에 있어 주요 기준임
• 이외에도 현재 수원국이 맺고 있는 양자 협력의 규모와 질, 다른 공여국에 비해 네덜란드가 갖는 비교우위, 분야별 원조방법의 활용 가능성, 해당 지역에서의 수원국의 정치적 역할 또한 기준요소가 됨
• 원조 성과와 원조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가들 안에서 원조 배분을 결정함
다. 세계은행
• 원조 수원국 선정의 세 가지 기본 기준: 1)국민총생산 기준선(USD 875) 이하의 상대적 빈곤 상태, 2)대출 신용도의 부족으로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할 해외재원이 필요한 상태, 3)세계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발정책이행성과
• 외부의 충격여부와 부채 지속성 등과 같은 정책, 빈곤 수준 그리고 인구 등이 원조 배분 결정시 고려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빈곤 효율적 배분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가.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기초한 원조 제공
• 공여국은 공여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보다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기초해 원조를 제공함
나. 수원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채널
• 원조의 효과성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빈곤 감소는 원조 이외의 다른 다양한 지원과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음
• 예: 빈곤 친화적 공공지출에 대한 원조
• 수원국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구조, 원조의 배분 및 지속성을 포함한 개발협력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함
다. 무역충격과 원조효과성, 구조적 취약성, 정치적 불안, 분쟁 후 행동계획, 민주주의, 개발협력 지원 경로, 원조 효과성의 수확체감 등도 함께 고려함
2. 원조 선택성
가. 수원국 선정 시 수원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함
• 1인당 국민 소득 수준, 빈곤인구 규모, 거버넌스의 건전성, 분쟁 후 상황 여부, 구조적 취약성, 민주주의 또는 안정된 정치체제 유지 여부 등</td></tr>
</table>

향후 연구방향	1. 양자 및 다자 원조의 배분 연구		
관련 DAC 주제	1.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2. 거버넌스(Governance) 3. 빈곤(Poverty) 4. 무역(Trade)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3 (2009.1.22)	페이지 수	37
기타	–		

제목	몬테레이합의의 실제적용: 유럽연합의 기고문(Translating the Monterrey Consensus into Practice: the Contribution by the European Union)	DAC 문서 주제	Aid Effectivenes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E-R-2
DB 키워드	몬테레이합의(Monterrey Consensus),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부채경감(Debt Relief), 원조의 비구속화(Untying of Aid), 무역관련원조(Trade Related Assistance, TRA),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주제	1. 몬테레이합의 이행의 모니터링 2. 향후 EU회원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주요 연구결과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위한 재정확충노력 가. EU회원국은 2006년까지 GNI 대비 ODA 비중을 최소 0.33%로 확대하고, 몬테레이합의에 따라 그 비중을 0.7% 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나. 2001. 9. 11 이후 테러공격에 대한 긴급원조 및 인도적 차원의 원조로 인해 2002년 이후 미국의 ODA 비율이 증가함 2. EU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조화 가. 회원국 합의 하에 프레임웍이 개발되었지만, 회원국의 양자원조 프로그램에서 프레임웍을 위한 국가전략기획서 및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지는 않았음 3. 몬테레이합의를 통해 공여국은 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원조 효과성 증대에 합의함 4. 무역관련원조 가. EU 회원국 및 여타 공여국간 협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무역관련원조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EU, WTO 및 OECD 차원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5. 국제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가. 몬테레이합의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따라 국제 공공재 공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주요 정책제언	1. EU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조화를 위해 노력함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원조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나. 정책조정 및 조화를 통해 EU 대외원조의 일관성을 높이고 새로운 공여국이 효율적으로 원조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협력함 2. 원조의 비구속화를 위해 노력함 가.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에 관한 OECD/DAC 권고사항을 이행함 나. 양자 구속적 원조에서 다자비구속적원조로 전환함 3. 무역관련원조를 지원함 가. 수원국의 장기적인 무역역량 및 생산역량 개발을 지원함 나. 개도국의 무역협상 역량 및 관련 기술 강화를 지원함 4. 국제 조세 메커니즘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과 고채무빈국의 부채경감을 지원함 5. UN, 국제금융기구 및 WTO등의 국제의사결정과정에서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를 지원함 6. EU는 고채무빈국에 대한 부채경감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의 질(Quality of Aid) 2. 무역(Trade)				
관련 DAC 문서	1. EU follow – up to the Barcelona Commitments and Operationalization of the Monterey Consensus (2004)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4. 3. 5 (2009. 1. 23)		페이지 수	20	

기타	1. 몬테레이합의 가.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발금융국제회의에서 이뤄진 합의 나. 무역, 개발, 금융 재정 간 상호관계를 강조함 다. 개발도상국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세계빈곤인구 감소 • 공여국의 무역장벽 완화 • 공여국 GDP의 0.7%까지 ODA 확대 • 고채무빈국의 부채조정

<table>
<tr><td>제목</td><td>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조화 (Development Gateway Special Report: Aid Harmonization – What Will it Take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R-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
2.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MDGs 채택 및 이행과정
가. 2005년 UN은 수원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및 부채경감을 MDGs로 채택
나. 2015년까지 빈곤 감소를 위해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 촉구
다. 2005년 3월 OECD 회의에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파리선언 채택
라. 2006년 UN 총회에서 원조조화에 관한 보고서 발표
2. MDGs의 달성현황
가. 공여국의 원조 약속 및 집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의 MDGs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나. 2006년부터 원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M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여국은 원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획함
2. 공여국은 효과적인 원조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함
3.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 수원국 지역정부조직 구축 및 역량개발이 선행되어야 함</td></tr>
<tr><td>향후 연구방향</td><td colspan="5">–</td></tr>
<tr><td>관련 DAC 주제</td><td colspan="5">1. 천년개발목표(MDGs)</td></tr>
<tr><td>관련 DAC 문서</td><td colspan="5">1. Global meetings leading up to the MDG+5 Summit in September 2005
2. MDGs 2006 Global Monitoring Report</td></tr>
<tr><td>문서작성일 (번역일)</td><td colspan="2">2006. 9. 8 (2009. 1. 23)</td><td>페이지 수</td><td colspan="2">1</td></tr>
<tr><td>기타</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제목</td><td>아프리카 개발의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in Africa – Promise and Performance: Applying Mutual Accountability)</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R-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아프리카 역량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PACT)</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아프리카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와 OECD 회원국이 도입과 실행을 합의한 아프리카 개발효과에 대한 상호검토의 이행사항을 점검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OECD 회원국이 아프리카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아프리카 개발효과에 대한 상호 검토는 다음의 정책 지침을 따르기로 함
가. MDGs의 달성
나. 아프리카 농업 및 무역 분야의 개발 지원
다.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경제적 체제 개혁 및 개선 지원
라. 아프리카 국가의 역량 개발 지원
마.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규모 확대 및 질적 개선
바. 아프리카와 OECD 회원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 제고
2. 아프리카 개발효과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 시장 확대, 정부 보조금 정책, 부채 및 물가 조정 등 전반적인 경제 제도와 정책의 개선
나. 정책 일관성 제고 및 원조조화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원조의 성과에 대한 아프리카와 공여기구의 책임성 제고</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아프리카와 OECD 회원국의 아프리카 개발효과에 대한 상호 검토의 구체적인 정책 지침
가. MDGs 달성
• 빈곤감소를 주요 목표로서 장기적인 차세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차별 없는 개발을 추구함
•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법과 질서, 평화 구축, 부정부패 척결을 지원함
•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기반하여 교육의 기회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지원함
• 여성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치·경제적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함
• 빈곤층의 보건 관리 대책 및 HIV/AIDS,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함
• 수로, 수질, 전력, 교통, 통신망 등 아프리카 내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의 기반의 구축을 지원함
•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함
나. 농업개발 투자를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
• 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영양 관련 교육 확대, 농산물 물가안정 및 재해보험 제도 구축, 공공-민간의 협력 강화 및 국제 농업분야 협력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지원함
• 시장 확대, 수출 보조금 지급, 국내 생산 보조금 지급등을 포함한 농업 개혁을 지원함
다.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한 국가 기능 강화 지원
• 법제 개혁과 함께 시민단체, 여성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성화를 장려해 민주화를 지원함
• 아프리카 정치경제 개발 및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한 아프리카의 지역적 협력관계 강화를 지원함
• 해외투자, 기업지배구조, 금융시장, 조세, 경쟁정책 개발을 통한 수원국의 국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지원함
라. 국가 역량 개발
• 아프리카 역량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가 역량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함
• 국가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함</td></tr>
</table>

	마. 개발 원조의 규모 확대 및 질적 개선 • 국내 자원동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중장기 재정확대와 단 · 중기적 개발원조 유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재정적 독립을 유도함 • 고채무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통해 반복적인 재정 상환을 방지함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을 권고함 바. 아프리카와 OECD 회원국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 도모 • 다양한 공여국과 기구 간의 비 일관적인 원조, 무역, 채무 관련 정책 및 부패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정 및 제도를 구축함 • 주요 국제포럼 및 행사에서 아프리카의 참여 및 발언권 강화를 지원함 •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7월 결정문(July Package) 및 OECD뇌물방지협정(OECD Anti-Bribery Convention)에 의거한 공정한 원조정책 개발을 유도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거버넌스(Governance) 3.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1. New Orientations for Technical Assistance (1992) 2. Aid Supply to Africa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11 (2009.1.23)	페이지 수	73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에 대한 보고서(The Report on the Use of Country System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R-5</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공공지출 및 재정 모니터링 프레임웍(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Monitoring Framework, PEFA),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시스템 활용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과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 지원
2. 수원국내 PFM 시스템 활용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2010년 목표 달성 노력을 촉구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원조효과성과 PFM 시스템의 활용
가. PFM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 수원국의 개발 중점 정책 과정과 원조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공여국과 수원국의 PFM 시스템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통합하여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음
• 원조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공여국의 시스템 유지비용을 감소시킴
•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재정 관리를 지원하여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높임
•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제고에 기여함
나. 원조 양식과 PFM 시스템의 활용
• 공여국의 PFM 시스템 활용은 원조의 지원 양식과 목표에 따라 달라짐
•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경우 수원국의 예산 절차에 따라 원조 자금이 사용되므로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지만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는 특정 원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PFM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다. PFM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구 결과
• 수원국 PFM 체계 활용 관련 파리 선언의 공약에 대한 공여국의 이행이 미미한 정도에 그침
• 공여국의 기술지원, 원조의 지속성과 예측성 제고, PF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내부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예산 관리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2. PFM 시스템의 강화
가. PFM 개혁을 위한 주요 요소
•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정부 주도의 전략 수립, 관련 기관과 조직의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개발
• 공여국의 협력: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관된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중장기적 공동 원조 프로그램 실행
• 수원국이 개혁 중점 사안과 우선 사항을 인지하고 결정함
3. 수원국 PFM 시스템 활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PFM 시스템 활용의 기본사항
• PFM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 재정 시스템 역량에 대한 우려, 원조 자금에 대한 지자체 법령의 상이성, 각 중앙 부서들의 재정 할당에 대한 반감 등에 기인한 PFM 활용에 대한 수원국의 입장
• 공여국의 수원국 정부의 부패에 대한 인지도
• PFM 활용에 대한 공여국의 선호도
나.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 집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 신탁위기(Fiduciary Risk): 원조 지원이 다른 의도로 사용될 위험
• 개발위기(Development Risk): 원조가 궁극적 목표를 상실할 위험
• 평판위기(Reputation Risk): 공여국의 향후 원조지원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 사건이 발생할 위험
다. PFM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많지 않음</td></tr>
</table>

	4. PFM 시스템 활용성과에 대한 평가 가. 공공지출 및 재정 모니터링 프레임웍(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Monitoring Framework, PEFA) • PEFA는 OECD/DAC과 아프리카 전략 파트너십의 공동합작으로 개발되었으며 PEFA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PFM 수행 평가 시스템임 • PEFA를 통한 PFM 시스템에 대한 수행 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공여국의 PFM 활용 결정 시 유용하게 사용됨 • PEFA의 위험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PFM 분석 관련 수원국의 업무 부담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나. PEFA의 도입 현황 • 파리 선언 참여 공여국들이 공식적으로 PEFA를 사용함으로써 개별적인 PFM 평가가 감소함 • PEFA를 통한 PFM 평가 시행을 내부적으로 규정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수가 증가했음
주요 정책제언	1. PFM 시스템 강화 가. PFM 시스템 개혁 • 수원국 정부 주도의 PFM 개혁 전략 및 계획 수립과 역량 개발을 지원함 • 수원국은 PFM의 국가 시스템 개혁을 공공 분야 개혁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실행함 • 수원국은 PFM 시스템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중점분야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실행함 • 수원국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혁 성과와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회와 최고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 시민사회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단위 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공여국은 국가 별 상황에 맞는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원국 간의 상호학습을 지원함 • 수원국이 개혁 과정의 진행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의회나 시민사회 등의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PFM 시스템 활용 증진 • 공여국의 위험 평가 능력 향상: 포괄적인 위험 평가와 결과 공유 기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도모함 • 공여국의 위험 관리 능력 향상: 위기 완화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후평가를 실시,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통해 위험 관리를 개선함 • 공여국은 PFM 활용에 대한 운영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 PFM 시스템 성과의 평가 • 정기적인 PFM 시스템 분석과 PEFA 프레임웍 평가를 통해 PFM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파악 • PFM 시스템 개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데이터가 필요함 • PFM 시스템 평가 시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를 활용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원국 역량 개발을 지원함 • 공여국 간의 조정과 조화를 통해 PFM 평가를 지원함 2. PEFA 프레임웍의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 가. 수원국의 참여 활성화 나. PFM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다. PFM 절차 개선 라. 공여국 및 공여기관 간의 협력 증진
향후 연구방향	1. PFM 개혁의 다양한 성공 및 실패 요인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 예산 지원 이외의 원조 방식에서 PFM 체제의 사용이 주는 이익과 위험 분석 연구 3. 계약 이행사항의 파악을 위한 PEFA 평가 역량 확인 연구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OECD DAC Guidelines on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9. 01. 23)	페이지 수	51
기타	–		

제목	공여기관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우수사례와 자가평가도구(Incentives for Aid Effectiveness in Donor Agencies: Good Practice and Self- Assessment Tool)	DAC 문서 주제	Aid Effectivenes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E-R-6
DB 키워드	자가평가도구(Self Assessment Tool)				
주제	1.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공여기관의 운영 개선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				
주요 정책제언	1.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기관의 운영 개선을 도모해야 함 가. 리더십(Leadership) • 원조지원 약속(Commitment): 원조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실행해야 함 • 원조기관 내 · 외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기관 내부 및 외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조 효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원조기관 내 원조 효과성을 주류화와 인식 제고를 통해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요구 됨 • 수원국의 특성에 따른 개발전략 수립: 원조집행에 관한 2003년 OECD/DAC 가이드라인은 공통의 원조집행 절차를 채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취약국가에서는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수원국가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활용해야 함 나. 인력관리(Staffing) • 전문 인력을 고용과 적절한 배치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이 중요함 다. 정책과 절차(Policy and Procedure)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라. 예산과 보고(Budgeting and Reporting) • 원조 집행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적절한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도모해야 함 2. 자가평가도구(Self Assessment Tool)를 통해 원조 효과성 증진 노력에 있어서의 공여기관의 강점 및 약점을 자가 평가할 수 있음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직적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움 • 자가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천년개발목표(MDGs) 2. 원조의 질(Quality of Aid)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9. 2 ~ 4 (2009. 2. 15)	페이지 수	52		
기타	1.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2. 자가평가도구(Self Assessment Tool) (세부평가사항은 p.28이후 참고) 가. Part A 직원 조사(Staff Survey): 파리선언에 대한 인식, 리더십, 직원 관리, 정책과 절차, 예산과 보고, 직원 프로필을 조사 나. Part B 조직 진단(Organizational Diagnostic): 기관 내 리더십, 직원관리, 정책과 절차, 예산 및 보고에 대한 조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 할 수 있는 세세한 사항을 각 기관 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다. Part C 보고(Report): 직원 조사와 조직 진단 결과를 합한 뒤 내부평가의 목적으로 쓰임				

<table>
<tr><td>제목</td><td>정부조달시스템 평가를 위한 방법론 실시 경험 국가의 사례 및 시사점(Compendium of Country Examples and Lessons Learned from Applying the Methodology for Assessment of National Procurement System)</td><td>DAC 문서 주제</td><td>Aid Effectivenes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R-7</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정부조달시스템(Procurement System),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수행 평가지표(Compliance and Performance Indicators, CPIs), 기준평가지표(Baseline Indicator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 22개 국가에서 정부 조달시스템의 평가방법의 시험 활용 결과를 통해 수원국의 정부 조달 시스템 역량 개발을 위한 평가 방안 모색</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정부조달시스템 평가 방법은 수원국이 정부 조달 역량 개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 의식이 중요함
가. 정부 조달시스템 평가 방법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조달 역량 강화에 대한 OECD/DAC과 세계은행 회의에서 개발되었음
나. 정부조달시스템 평가 방법은 22개 국가들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음
다. 정부조달시스템 평가 방법은 정부조달시스템의 질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개발 계획을 형성, 실행, 감독하는 기본 원리로서 수원국 및 공여국에게 공동 평가 기제를 제공함
2. 시험 대상 국가의 평가 전략 및 기획 단계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분석
가. 여러 시험 대상 국가들이 자체 평가 제도를 선택 실시함
나. 효율적인 정부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조달 시스템의 모든 차원의 주요 담당 및 관련 기관(정부 재정기관, NGO, 상공회 등) 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 많은 대상 국가들이 평가 시 다양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 분권화로 인해 참여 기관의 유형이 다양해짐
라. 시험 대상 국가들이 평가 과정의 업무량을 과소평가하여 기획된 평가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평가 방법 적용의 결과 분석
가. 대다수 국가가 기준평가지표를 활용하고 두 번째 단계로 수행 평가지표 측정을 실행해왔으며 두 가지 지표 모두 정부 조달시스템의 철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나. 많은 경우 정부조달 관련 통계 시스템의 부재 및 미비로 인해 수행 평가지표의 측정 및 검토가 지연됨
다. 자료 수집 과정이 복잡하고 수집기간이 부족하며 관련 문서가 분실된 경우가 많아 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어려움
4. 평가방법 적용 시 정부조달시스템의 강점 및 약점 파악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대상 국가들이 수원국의 역량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활용함
5.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시스템과 정부조달 정책의 통합에 대한 분석
가. 정부조달 담당 인력이 부재하거나, 정책 대화 참여가 어려워 PFM와 국가 시스템과의 통합 시 정부조달 체제를 대변하기 어려움
나. PFM과 정부조달 정책의 의제나 개혁 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다. 정부조달 관련 예산체계가 미비하며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평가의 조정 및 기획 단계에서 평가의 범위, 주요 관련기관의 참여 정도, 평가 팀의 역량, 기준평가지표와 수행평가지표 측정 위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등 주요사항에 대한 예비 목록을 마련함
2. 평가 기획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함
가. 기준선 평가지표와 54개 세부 항목 지표에 대한 평가 작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분담과 정규업무 경감, 인터뷰 및 설문지 준비와 회의 기획을 시도할 수 있음
나. 수행평가지표를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함
다. 평가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정부조달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함</td></tr>
</table>

	라. 기준선 평가지표 측정과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내부 담당기관을 마련하고 기준선 평가지표와 수행 평가지표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함 3. 개혁프로그램 기획 시 자료수집 및 관리와 분석 강화를 중점 목표로 정부조달 관련 통계체계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함 4. 수원국의 역량 개발 계획을 면밀히 감독하고 융통성 있게 관리하며 모니터링 결과 보고 체계 및 합의된 수행 지표를 마련함 5. 향후 개혁의 성공을 위해 역량 개발의 초기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높임 6. 정부 조달과 PFM의 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혁의제를 선정하고 실행함		
향후 연구 방향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200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9.02.12)	페이지 수	57
기타	1. 부록 A: 정부 조달 시스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시험사용 국가 목록		

제목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보고서(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DAC 문서 주제	Aid Effectivenes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E-R-8
DB 키워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국가별 정책 및 제도적 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주제	1.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점검 2. 파리선언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제언				
주요 연구결과	1. 파리선언의 이행 상황 점검 가. 운영개발전략을 도입한 국가가 13%에서 20%로 증가되었으나 목표치인 75%에 도달하지 못함 • 국가전략과 정책우선사항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체계 구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세계은행의 국가별 정책 및 제도적 평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조사 대상국의 36%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의 질이 높아졌음 •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스템의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다. 수원국의 국가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음 라. 원조 예측성은 46%에 이르렀으나 파리선언의 목표치인 71%에 도달하지 못했음 • 공여국의 과도한 지출 및 수원국의 원조 예산 기록 역량 부족이 저조한 예측성의 원인으로 지목됨 마. 수원국이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주요 정책제언	1.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체계적이며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함 가. 운영개발전략 • 공여국은 수원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개발전략을 실행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국가시스템의 활용 • 공여국은 수원국이 PFM에 관한 자가 평가 및 개혁을 실시하고 원조관리전략에 이를 도입하도록 지원함 • 수원국 주도의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함 • 실무자들의 국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수원국 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원조프로젝트 이행을 제한하는 절차나 제도 등을 완화함 다. 정책대화를 통해 역량개발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2. 개발자원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함 가. 책임성과 개발자원의 예측성 제고 • 수원국은 공여국의 지원 자금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 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의 구축을 지원함 • 공여국은 정부회계년도, 예산 계획 및 예산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나. 공여국 및 수원국은 합의된 수행평가프레임웍을 통해 상호 책임성을 강화함 3. 원조관리의 비용효율을 제고함				
향후 연구 방향	1. 환경 및 상황에 부합하는 파리선언 채택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Lesson (2006)				

문서 작성일 (번역일)	2008 (2009. 2. 15)	페이지 수	152
기타	1. 본 보고서는 5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OECD/DAC 회원국의 2003년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함 2. Appendix A 국가별 데이터 3. Appendix B/C 공여국 데이터		

<table>
<tr><td>제목</td><td>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s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 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Environment), 정책, 계획, 프로그램(Policy, Plan and Programme, PPP)</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환경문제의 주류화를 위하여 환경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Policy, Plan and Programme, PPP) 수립 시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도입
2. SEA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역량개발</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SEA의 제도적 측면 분석을 통해 제도 강화 지원
가. 제도적 역량의 분석
• 국가의 환경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 구축 역량 분석,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지원
나. 환경에 대한 영향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강화
• 사회적 책임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및 강화와 지속적인 SEA 활용 지원
2. 계획 및 프로그램 단계에서의 SEA 도입
가. SEA의 필요성 검토 후 착수
• 스크리닝, 목표설정 및 이해관계자분석
나. SEA의 도입 단계
• SEA의 범주 결정
•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참여적 방법 구축
• 기초정보수집
•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제안 및 대안에 대한 영향성 분석
• 긍정적 결과를 향상시키고 발생 가능한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확인
• SEA 도입 결과의 보고서 초안 작성
• SEA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검토 제공
• 민간의 SEA 보고서의 초안 검토참여
• 최종보고서 작성
다. SEA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의사결정들을 위한 권고 작성
라. 최종결정의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도입여부, 이행결과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모두 평가하고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개정을 위한 환류에 대한 지원
2. SEA의 도입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가. 효과적인 SEA 도입을 위한 역량개발 원칙
• 개발결과중심(Development Outcome/Result Orientation): 전체적 개발의 목표인 빈곤감소, 삶의 질 향상의 달성을 목표로 함
• 시스템중심(System Orientation): 역량개발은 개인의 기술개발에 제한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함께 공여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학습중심(Learning Orientation): 역량개발은 모니터링, 평가 및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빈곤감소, 삶의 질 향상의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함
• 신뢰구축(Trust-building): SEA의 도입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은 SEA도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SEA
가. 경제 · 사회적 요인과의 환경의 상호연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위한 분석적 방법
• SEA는 관련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초기 단계에서 그 잠재적인 효과 및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td></tr>
</table>

	2. SEA의 활용의 장점 가. SEA의 활용을 통해 빈곤층의 의존이 높은 환경 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 및 개발을 도움 나. SEA의 활용은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 할 수 있으며 다음을 통하여 개발의 결과를 향상시킴 • 환경과 개발 이슈의 통합 • 환경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 지원 • 긍정적 가능성의 모색 •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 •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의 참여확대 • 광역적 협력의 촉진
배경과 역사	1. SEA의 도입을 위한 지침 가. 2001년 환경에 대한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유럽지침(European Directive) • 국가, 지역, 지방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환경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 나. 2003년 Espoo 협약의 SEA 의정서 • 모든 정책과 법률에서의 SEA 사용 권장 2. 프로젝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지속적 결과와 환경자원에 대한 위험의 감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어 의사 결정에서 전략적 수준의 분석 과정의 중요성이 대두됨 3.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준에서 활용 될 수 있는 SEA는 다양한 개발원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개발 결과와 환경적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음
평가지표	1. SEA를 위한 점검 지표 가. 원칙과 범위 • SEA를 정의하기 위한 적절한 원칙, 기준, 지표가 있는가? • SEA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적절하게 정의되었는가? • SEA를 이행함에 있어 공여협조의 수요·기회가 있는가? • 제안된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이 확인, 고려되었는가? 나. 다른 전략, 정책, 계획과의 연계성 • 모든 관련된 전략, 정책과 계획이 검토되고, 분석된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가 그 목표를 지지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 분쟁이 고려되었는가? 다. 영향 • 제안된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직 · 간접, 점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단기·중기·장기)이 예측되고 분석되었는가? • 구체적인 이행 도구가 영향에 대한 대응 · 완화책을 포함하고 대안적으로 다른 국가정책 · 프로그램들이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응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기회의 최대화가 이뤄졌는가? • 분석의 질이 독립적으로 검토되었는가? 라. 이해관계자들의 연계성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SEA의 과정에 포함 하였는가? • 시민사회에 대한 시각이 반영 되었는가? •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가? 마. 역량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제도와 기관이 특정한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를 이행, 관리 및 규제하고 있는가? •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 환경 영향, 주요 환경자원정책 등의 실패를 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 환경정책구조 및 입법권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바. 데이터, 정보, 모니터링 • 데이터, 정보의 결함과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모니터링을 위한 실행도구가 제안되었으며 명확하고 실행가능하며 평가지표와 SEA의 목표가 연계되고, 책임성이 분명한가?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3.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2.16)	페이지 수	162
기타	1. SEA 용어집(p.145) 2. 빈곤감소전략에 SEA 적용(사례연구: 우간다, 르완다, 가나) (p.74) 3. 정책 개혁 및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 SEA 적용(사례연구: 탄자니아, 콜롬비아) (p.77) 4. 분야별 PPP(사례연구: 케냐,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p.83) 5. 인프라투자 계획 및 프로그램(사례연구: 아르헨티나) (p.88) 6. National and Sub-national Spatial 계발 계획 및 프로그램(사례연구: 나미비아, 중국) (p.91) 7. Trans-national Plans and Programmes(사례연구: 나일강 유역, 메콩강 유역 개발) (p.95) 8. SEA를 위한 분석 및 의사결정 도구(p.153)		

<table>
<tr><td>제목</td><td>빈곤감소를 위한 환경세제개혁
(Environmental Fiscal Reform for Poverty Reduction, EFR)</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환경세제개혁(Environmental Fiscal Reform, EFR),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공공지출관리(Public Expenditure Management)</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빈곤감소를 위한 수원국의 환경세제개혁을 지원함
2. 환경세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지원이 필요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빈곤감소를 위한 환경세제개혁
가. 빈곤국가의 생계와 보건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개발정책을 통해 개선하여 빈곤감소와 함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및 기타 환경 친화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2. 환경세제개혁의 주요 수단
가. 천연자원추출에 대한 세금 부과
•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산업개발을 위한 천연자원 추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감소 및 재정자원 확보를 도모함
나. 생산보조금 및 세금
• 산업개발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지나친 산업생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에너지 관련 산업생산, 화학비료, 배터리, 살충제 등의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책임에 세금을 부과함
다. 대기오염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
• 경제활동 중 시장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소(대기오염배출 등)에 세금을 부과함
라. 서비스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 전기, 수도, 공공위생관리, 폐기물 및 산업오염물 처리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을 사용자에게 과세함
마. 포괄적인 환경세제개혁(Comprehensive/Cross-sectoral EFR)
• 법인세, 감가상각충당금(Depreciation Allowance) 등 종합적인 조세정책 마련을 지원함
3. 환경세제개혁의 내용 및 특성
가. 환경세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천연자원 개발의 투명하고 참여적인 관리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나. 환경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 환경보호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 및 기관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세 규모를 책정함
• 조세 수익은 환경보호와 관리 목적에 맞게 배분함
• 국제적으로 협의된 재정 관리 기준을 따름
• 역량을 고려하여 환경세제개혁의 주요 수단을 결정함
다. 환경세제개혁의 고려사항
• 공정성(Equity): 환경세제개혁을 통한 직·간접적 영향력과 환경 및 천연 자원 활용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조세와 보조금을 책정함
• 재정 및 환경적 효과성(Fiscal an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개혁을 통한 수익 증가 및 환경 보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함
• 행정관리 가능성 및 효율성(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Efficiency): 정책 실행역량을 강화해 개혁의 효과성 개선을 도모함
•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친환경 정책 및 개혁의 정치적 반대 및 반발 세력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td></tr>
</table>

	4. 환경세제개혁을 위한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단계별 역할 가. 의제 설립 단계 • 각 수원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한 공여국의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리서치를 지원함 나. 정책 개발 단계 • 모든 조세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과 함께 개혁에 대한 반대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함께 고안함 다. 의견교환 및 정보보급 단계 • 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 및 대중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 지원 및 대화와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한 지지활동이 필요함 라. 실행 단계 • 시기적절한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함 • 개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높은 빈곤국가에 대한 지원과 정치적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및 정책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 단계 • 개혁 실행 시 예상하지 못한 결과와 개혁으로 인한 수익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공공지출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담당 기관의 강화를 지원함		
주요개념	1. 환경세제개혁 가. 환경 문제 개선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 및 물가 정책을 칭함 나. MDGs의 절대 빈곤감소 및 환경 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배경과 역사	1. 2002년 UN 개발재원회의(UN Summit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정상회의(UN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에서 MDGs 달성을 위해 환경세제개혁의 도입에 합의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1. 25)	페이지 수	114
기타	1. 다수의 OECD 회원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04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OECD 논의(OECD Discussion on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제목	청정개발메커니즘에 대한 지원금의 ODA 적절성 이슈(ODA Eligibility Issues for Expenditure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DAC 문서 주제	Environment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EN-G-3
DB 키워드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주요 권고사항	1. 200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합의한 대로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프로젝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 권고사항	1. OECD 회원국은 2001년 Marrakesh 합의에 따라 CDM을 위한 공여국의 재정지원은 수원국을 위한 개발원조의 지원 목적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OECD 회원국은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를 위한 지출 또한 ODA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OECD 회원국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판매 또는 보유와 관계없이 그 경제적 가치를 OECD에 보고함				
주요개념	1. CDM 가. 교토의정서의 준수와 함께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여국의 대기오염 가스 배출 감소 및 제한 협약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				
배경과 역사	1. 환경과 개발협력에 관한 DAC 네트워크(DAC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ENVIRONET)와 DAC 통계 실무작업반 (DAC Working Party on Statistics)은 OECD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과 UN 기후변화에 대한 프레임웍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과 함께 CDM개발메커니즘 프로젝트 지원금의 ODA 인정 여부에 대해 연구해왔음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4. 4. 30 (2009. 2. 10)	페이지 수	4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지속가능한 개발: 주요 이슈
(Sustainable Development: Critical Issue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시장 중심적인 규제 및 기술정책과 같은 제도 구축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활용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결정 강화
4.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분야별 정책의 통합
5.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모색</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시장중심 및 규제, 기술정책과 같은 제도 구축
가. 시장가격은 부적절한 보조금 제도로 인한 시장왜곡을 바로잡는 효율적인 제도이며 가격은 환경파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함
나. 오염물질 배출 또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세금을 부과함
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등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및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 및 확대함
2. 과학과 기술의 활용
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의 연결고리를 분리시킴
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함(예: 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정책결정 강화
가. 경제, 사회, 환경 목표를 정책 개발 및 결정 단계에 통합시킴
나. 정부 부처 간의 통합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됨
다.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적 환경과 요인(건강한 생태계, 환경 및 사회 통합 등)을 보호함
4.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분야별 정책의 통합
가. 에너지와 운송 분야는 경제 및 사회개발의 필수조건이지만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운송과 국토개발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농업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 (예: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등)
5. 국제적 차원의 협력
가. 경제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둔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협으로 간주됨
•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예방 함
나. 국제적 협력 제고
• 세계화에 의해 증가한 경제적 이익을 주요 환경 이슈 및 사회에 적극 투자·활용함
• 불평등한 무역과 환경 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 철폐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 공동의 이익을 제고함
• 회원국은 투자와 시장 확대, 역량 개발, 기술이전 및 효율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세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6. 주요 고려사항
가. 기후 시스템 및 천연자원의 관리
• 재산권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천연자원에 적용하여 자원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함
나. 기술 개발, 제도 개혁, 시장중심의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개입</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지속가능한 개발
가. 미래세대가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함
나. 경제의 효율성 향상, 사회 개발 및 환경 보호의 조화로운 목표 수 립 및 인간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을 수반함
다. 경제 및 천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함</td></tr>
</table>

배경과 역사	1. 세계화로 인한 경제 활동의 확대는 기후 시스템을 포함한 세계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음 2. 인구증가와 불평등한 경제 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애요인이 됨 3.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 4. 환경 및 재생 가능 자원의 재생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위협이 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2009. 1. 23)	페이지 수	8
기타	–		

<table>
<tr><td>제목</td><td>리우협약과 개발협력(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5</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리우협약(Rio Conventions),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 생물종의다양성(Bio-diversity), 사막화(Desertification)</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지구환경위협이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함
2.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를 고려한 개발정책의 제정과 실행</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시작점
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에 장·단기 개발목표를 조화시켜 국가 개발 우선사항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정내용에 통합해야 함
나. 공여국과 수원국, 환경과 개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주요 공여기관의 투명하고 폭넓은 참여가 요구됨
다. 환경과 개발 분야의 통합을 위한 접근과 방법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개발 측면을 살펴야 함
• 생태계의 주요 기능과 관계가 깊은 토지 사용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
• 전략적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지역사회에 기초한 천연자원관리(Community-based Natural Source Management)등을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통합된 역량 개발이 필요함
2. 리우협약(Rio Conventions)과 개발협력
가. 국제적 차원의 일관된 접근을 통한 협약 이행 지원
• 사무국과 UN 및 관련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강화
•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 환경 관련 국제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함
나. 공여국 차원의 협약 이행 노력
• 개발과 환경보호 목표의 통합을 위한 책임성 강화
• 환경 및 관련 분야 기관과 부처 간의 연계성 강화
• 빈곤감소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책임 기관의 문제 분석과 정책 집행 능력 강화
• 환경 이슈를 관련분야와 통합(예: 기후 변화 관련: 에너지, 산업, 농업, 해변지역관리 등/ 사막화 관련: 농업, 수자원 관리, 에너지, 가축 등/ 생물종의다양성: 농업, 해안지역관리, 어업 등)
• 국가 개발계획(Country Programming)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조
• 분야별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 실시를 통해 공여국의 정책 일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다. 수원국 차원의 협약 이행 노력
• 아젠다21(Agenda 21)과 같은 리우협약의 합의 사항을 국가적 비전 및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프레임웍으로 통합하도록 지원해야 함
• 역량개발을 통한 수원국 기관 내 정책 통합을 촉진: 리우협약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세계적 환경 위협에 대응한 보호 전략,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웍의 개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장벽의 축소, 거버넌스 등 역량 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3. 분야별 개발 전략과 국제적 환경문제
가. 지구환경 위협 방지를 위한 윈-윈(Win-win) 접근
• 빈곤감소를 위해 단기적인 자원 및 토지 개발목표와 장기적인 자원 및 환경 보호 목표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예측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td></tr>
</table>

	나. 농업개발정책 • 농촌 빈민의 금융자원의 접근성 강화 지원 • 환경 조건에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고부가가치 작물에 집중하도록 장려 •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과 작물 보급과 활용 지원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개발 • 교통, 마케팅, 정보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다. 삼림개발정책 • 현황 조사를 통해 벌채, 개발, 생태학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 구분 • 장기적인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 형태의 구분(예: 취약지와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구분) • 벌목 관련 정책의 체계화 라. 에너지 개발정책 • 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해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약 생산방식과 프로그램을 확대 장려 • 전력공급 구조와 시장 개혁: 공공 독점형태에서 민간 투자로의 전환 • 시골 지역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연료의 활용 촉진		
주요개념	1.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2.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환경 보호 관련 이슈를 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에 통합시키는 체계 3.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개발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함		
배경과 역사	1. 1992년 모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구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을 위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리우협약(Rio Convention)을 체결함 2. 기후변화와 생물종다양성의 손실, 사막화 등의 지구 환경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음 3.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체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환경변화에 가장 취약하기에 리우협약이 개발협력 정책에 통합되어 지구환경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과 각 국가의 개발 목표가 일치해야 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Report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2 (2009. 2. 14)	페이지 수	104
기타	–		

제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C 문서 주제	Environment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EN-G-6
DB 키워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 IDG)				
주요 권고사항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조 전략 수립 2.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한 공여기관의 지원				
세부 권고사항	1.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 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원칙 • 수원국의 주도적 참여 • 장기적 목표와 기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 수원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의 일치 •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개발전략 이행을 위한 수원국 정부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 개발전략의 이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현황분석 • 예산집행계획 범위 내의 전략 수립 •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집행 • 명확한 지표를 활용한 전략 이행의 감독 및 평가 •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다수의 이해관계자, 민간부분 및 시민 등 사회 전체의 참여 2.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 가. 현재 활용 중인 개발전략의 목표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함 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파악함 다. 개발전략의 이행 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개설함 라. 전략 수립 절차 전반에 필요한 규제를 제정함 마. 전략 수립에 사용될 메커니즘을 구축함 • 현행 전략에 사용된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바. 전 분야에 걸친 정기적 토론과 분석을 시행함 사. 전략 이행 일정을 확정함 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자.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함 차. 전략 이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함 3. 공여기관의 역할 가. 개발 프로그램 간의 조정 • 정부와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장기적 목표를 설정함 • 기관 내부적 정책 개발 역량, 인력자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국가차원에서 개발협력 전략이 수원국 내 사회, 경제, 정치 분야의 개발 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함 • 이행단계에서 장단기 전략의 조화 및 관리 도구,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발을 도모함 나. 수원국 주도의 개발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 다. 수원국의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참여 지원 • 수원국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 • 수원국내 이해집단의 참여를 유도함 라. 전략분석 역량 강화 •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정책 효과 개선을 위해 정책분석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빈곤, 환경,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함				

	마. 전략관리시스템의 개선 • 모든 개발전략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 • 미디어 활용을 통해 전략관리 시스템을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다수 이해집단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기관의 양성, 국내분쟁기관의 역할 강화 지원 • 국내외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 강화 바. 모니터링 전략 • 수원국 내 자체적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지원함 •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및 분석적 역량 강화를 지원함 사. 전략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 프로젝트의 수립, 집행, 재정지출이 국가개발전략과 예산에 맞추어 이행되어야 함 • 관련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주요개념	1.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 2.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지속적인 개발 과정을 장 · 단기 경제 및 환경 목표와 통합시키는 전략
배경과 역사	1.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채택 2. 1996년 OECD에서 개발협력 전략으로 Shaping the 21st Century 채택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유엔새천년선언에서 재확인됨 4. 개발도상국에서 극심한 빈곤, 정치적 불안정, 인구 증가, 에이즈 및 말라리아 등의 질병, 환경오염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애 요인이 됨
평가지표	1. 공여기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이행 평가 지표 가. 공여기관의 전략이 수원국 내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통합되었는가? 나. 공여기관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가? 다. 공여기관의 개발 전략은 수원국 역량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작업에 수원국과 공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는가? 라. 공여기관과 수원국 개발전략 간의 상호보완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마. 분야별 원조 제공 시 각 분야별 연관성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는가? 바. 수원국 내의 다른 원조 활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사. 공여기관간의 정책 조화를 위해 노력했는가? 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있는가? 자. 공여기관 내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내부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가? 차. 지속가능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이행하여 공여기관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카. 전략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타.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장기적 재정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고 있는가? 파. 공여기관의 재정이 수원국의 국가예산과 연계되어 있는가? 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국 주도의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가?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모니터링 가.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다면 공여기관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원조 프로그램의 평가를 시행함 나. OECD/DAC회원국 간 평가는 기타 공여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정기 OECD/DAC 내부 평가를 통해서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2 (2009. 2. 14)	페이지 수	73
기타	1. IDG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적 정보관리는 각국에서 UN에 제출하는 리포트, 국제동료검토(International Peer Review),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1: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제언(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 1: 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N-G-7</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CES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입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EIA는 프로젝트 기획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기획의 초기 단계에 도입하여 각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조기에 파악함
가. 프로젝트 선별과정에 EIA를 도입하여 환경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초기 과정 배제시킬 수 있음
나. 잠재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활용하게 될 시에는 프로젝트의 선별과정에서 보건 및 안전 관련 위험요소들을 고려함
2. EIA에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 및 반영하여 실행함
가. 수원국 내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CESS)이 존재한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진행함
• 원조 흐름도(Flow Diagram)의 활용을 통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복합적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반영함
나. 모든 결과보고에는 환경 및 관련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별도의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하며,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야 함
다. 프로젝트의 EIA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며 기획의 전 단계에 걸쳐 시행 되어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상황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국의 환경 관련 조사나 전략 수립을 위해 활발한 협력을 통해 현지 전문 인력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함
3. 다음 분야의 프로젝트에서 EIA를 반드시 실행함
가. 재활용 자원 및 농 ·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나. 수자원과 인프라 활용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 및 산업 활동
다. 천연자원 추출 산업
라.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프로젝트
4. 평가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환경 관련 전문가에 위임함
나. 내부적으로는 공여기관에서 환경 평가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비상근으로 둔 중앙 주무부서를 설치함
다.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EIA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5. EIA 보고서의 내용
가. 프로젝트의 환경 및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기술
나. 수자원, 에너지, 천연 자원 등의 공급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다. 여성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수원국 국민에 대한 영향
라. 폐수 및 오물 등의 방출에 대한 영향 평가
마.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환경적 영향
바. 수원국 내 관련 환경 기준 등을 포함한 법률 및 정책적 프레임웍
사. 환경과 관련된 세금 및 보조금에 대한 평가
아. 평가의 기준에 대한 명시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자.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안에 대한 검토
차. 부정적 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대안
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비용, 지역 환경에 대한 적합성 여부 평가</td></tr>
</table>

	타. 피해 집단의 보호 및 재정착 조치와 관련한 제안서에 대한 피해 집단의 반응 파. EIA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장소 및 방법에 대한 문제 및 권고사항		
주요개념	1. EIA 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 기획에 반영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함 나. EIA 절차와 규정은 환경 분야가 수원국, 공여 기관, 기타 관련 기관의 개발협력 결정 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EIA는 개발 프로젝트의 선별, 기획, 집행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로서 실시·활용되어야 함 라. Council Recommendation (1985)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 유형에 EIA를 도입함 마. EIA 과정은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프로젝트 유형, 기초 데이터의 유무 등에 따라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사. EIA 집행 비용은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도에 따라 총 투자비용의 0.1–2.0% 정도가 사용됨 2. OECD/DAC 선진 공여국의 경험 가. 일부 OECD/DAC 회원국들이 공식적이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채택함 나. 기타 회원들은 비공식적, 임시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다. EIA 도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음		
배경과 역사	1. OECD 회원국들은 개발 원조 프로젝트가 성격, 규모 및 시행 장소의 특성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와 기획, 실행 및 감독의 모든 과정에서 파악할 것을 결의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s 2.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1985) 3.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Measur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1986) 4. Recommendation concerning an Environmental Checklist for Possible Use by High–Level Decision–Maker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Institutions (1989)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2 (2009. 1. 24)	페이지 수	15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2: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2: Good Practices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N-G-8</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국가환경조사 및 전략(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CESS),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CES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공여기관 및 개발도상국의 정부, NGO는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CESS)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정책을 개발해야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CESS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의 개발 및 실행의 촉진을 중점목표로 함
2. CESS는 정책, 우선과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력 초기단기에서부터 도입함
3. CESS는 관련 공여국 및 공여기관 간의 대화를 통한 정책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4. 평가 범위 선정 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데이터, 참여가 요구되는 NGO 등과 같은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 시에는 사회적 환경 및 거시경제와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함
5. CESS는 수원국의 주요 환경 이슈, 데이터, 분석적인 접근법, 보완 정책, 새로운 기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무 기관을 지정하여 정부기구 간 협력 메커니즘 및 기술팀을 구성하고 국민 참여 시기 등에 대한 책임이 요구됨
6. 공여기관에서 국가경제개발 계획에 환경적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CESS를 운영할 수 있는 지속력이 있어야함
7. 국가개발기획부처가 환경부 및 유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계획을 개발 정책과 연계함
8. 비정부 및 정부 기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CESS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10. CESS를 위한 전문 인력은 다른 기구 및 NGO에서 충당될 수 있음
11. NGO 또는 민간분야를 참여시켜 환경 문제의 성격 및 각각의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한계점을 제시하도록 함
12.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CESS의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비정부 기구가 참석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함</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
가. 특정 국가의 환경 이슈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며 일반적인 환경 현황과 천연자원의 활용, 관련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이슈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 자원 보호와 천연자원 활용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실천의 기초를 제공하며 이 결과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결정 과정에 통합함
• CESS는 주로 토지, 수자원, 자원, 숲과 바다 자원의 활용을 제시하고 공원과 야생동물의 보호, 도시화 문제, 대기 및 수자원 오염, 위생 및 폐수 등의 문제를 검토하며 이들 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측정하여 환경 기획과 운영의 정책적, 제도적 기본 틀을 분석함
• CESS는 환경의 현황, 자원 활용의 패턴, 주요 경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조사해야하며 CESS의 활용을 통해 보조금, 세금, 수출 인센티브 및 다른 정책들이 환경 훼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
나. CESS의 주요 목적은 데이터 수집, 환경 영향 모니터링, 정책 기획 및 정책결정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분석적 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제도적인 메커니즘 수립임
다. CESS는 환경 및 천연 자원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라. 보통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개별 국가마다 변동이 큼</td></tr>
<tr><td>배경과 역사</td><td colspan="5">1. 1991년 OECD 환경개발 장관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올바른 관행(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등을 비롯한 4개의 가이드라인에 합의</td></tr>
</table>

평가지표	1. CESS의 핵심요소 및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요소가 CESS의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가. 통합적인 자원 활용의 측정 및 특정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의 환경 기초 데이터 수집 여부 나. 전체 인구에 비례한 자원의 중요성과 연관성에 대한 성인지 분석 다. 환경의 질 및 천연자원의 활용 경향 분석 라. 국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연 천연자원 정보 시스템 마. 자연 천연자원의 운영과 관련 법률적, 경제적, 제도적 이슈 평가 바. 환경 악화와 자연의 잘못된 활용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환경적 환경의 영향력을 사안 별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아. 개발도상국의 자연 천연자원 기획, 운영,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자. 환경의 현황과 천연자원의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차. 정책 개혁, 제도의 구조 조정, 훈련 및 교육, 연구와 모니터링에 대한 자본 및 장기적인 투자 카. 특정한 투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경제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타. 수원국의 책임 하의 공여기관의 협력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DAC Chairman's Report Development Co-operation (1990)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2 (2009. 1. 24)	페이지 수	15
기타	1.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과 천연 자원 보호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CESS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방법을 파악 함 2. 사례 연구(미국, 캐나다) 가. US AID: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가개발전략문서(Country Develop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천연자원평가(Natural Resource Assessments)를 실시함 나.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CIDA): 환경전략문서(Environmental Strategy Papers)를 개별 국가 분석 문서에 포함시킴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3:
개발도상국 내 비자발적 이주 및 재정착에 관한 지원기구 지침(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3: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ing Countrie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N-G-9</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비자발적 이주 및 재정착(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재정착 계획(Resettlement Planning)</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공여국의 개발 프로젝트 집행 시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계획과 올바른 정책 및 운영 지침 제공</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재정착 계획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정책사항
가. 비자발적 이주 인구의 재정착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주민의 개발수요 및 환경보호가 고려되어야 함
나. 모든 비자발적 재정착 계획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재정착 인구에 대해 주거지 변화에 따른 손실 보상, 이동 및 인계기간 동안의 지원, 생산력의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함
다. 재정착 계획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여성을 포함한 환경기관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정착에 대한 기존의 사회 및 문화조직을 활용함
라. 재정착 인구 수용 지역 및 사회에 대해 해당 인구의 재정착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역효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법적 토지소유권이 없는 원주민 및 인종적 소수인구에 대해 충분한 토지 및 인프라 등의 보상을 제공함
바. 해당 인구 내 여성의 필요와 선호사항을 고려함
사. 재정착 계획은 반드시 효과적인 감독 하에 실행함
2. 재정착에 대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주요 역할
가. 재정착 정책, 전략, 법률 및 규정, 세부계획의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지원
나.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원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다. 재정착 투자비용을 위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
라. 정부와 수원국 간의 협력관계 적극 장려 및 재정착 인구 및 원주민을 대표하는 NGO 지원
3. 프로젝트 운영 단계 별 고려사항
가. 프로젝트 기획(Project Identification)
• 조직적 책임감, 사회경제적인 조사 분석, 지역사회 참여 및 수용 사회와의 통합, 법적 프레임웍, 손실자산에 대한 보상, 토지 및 생산기반 재건설, 재정착 인구의 교육 및 고용, 환경보호 및 관리, 프로그램 일정, 모니터링 및 평가
• 기획단계에서 재정착 부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도시지역의 재정착 인구에게는 고용, 인프라, 서비스 및 생산기회 등이 가능한 부지를 지역을 제공하고 시외 재정착 인구에게 상실한 토지에 상응하는 토지 제공
• 재정착 계획과 지원 예산은 경제, 사회 및 생태학적 비용과 재정착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을 고려해 책정함
• 재정착의 규모, 접근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전 평가
• 수원국 및 이주 인구에게 정책 가이드라인과 기획 참여방법
• 과거 재정착 사례 검토
• 재정착 관련 기관들과 정책, 계획, 법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논의
• 수원국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
나. 프로젝트 준비
• 여성을 포함한 재정착 인구 및 수용 지역 인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된 재정착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 초안 및 주요 투자 프로젝트 총 비용을 포함한 예산 책정에 의거하여 재정착 전략을 수립함</td></tr>
</table>

다. 평가 및 협상(Appraisal and negotiations)
- 비자발적 재정착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 재정착을 위한 일정, 예산, 보상, 토지 등의 타당성
- 계획 실행준비의 타당성
- 수혜자의 범위

라. 실행 및 감독
- 재정착 계획의 실행 및 사후 감독이 필요하고 재검토는 경제, 사회 및 기술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통해 집행함

마. 사후 평가
- 프로젝트 완성 보고서를 통해 재정착 결과와 재정착 및 수용인구의 생활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함

4. 분야별 고려사항

가. 조직적 책임(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
- 재정착 관리를 위한 조직적인 프레임웍은 반드시 담당 기관의 개발프로젝트 준비 및 재정지원 과정 중에 구축되어야 함
- 프로젝트 기획, 실행, 재정착 모니터링 과정에 NGO단체를 포함함

나. 사회경제적 조사(Socio-economic Survey)
- 이주의 규모와 특징, 해당 재정착 인구의 재원,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 재산 손실 범위, 재정착 지역의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제도, 공식 및 비공식 재정착 프로그램 실행 지원 기관, 재정착 방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해당인구의 필명제로 실시하고 보상 대상 예외 인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함

다. 지역사회의 참여 및 수용 사회와의 통합
- 재정착 준비 과정 중 해당 수용사회와 재정착인구의 수요와 선호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자문을 받아야 함
- 책임 있는 환경 및 인프라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함
- 여성, 소수 인종, 빈곤층 등 소외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재정착인구를 수용하는 사회의 여건 개선을 통해 수용사회가 재정착 인구와 조화로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라. 법적 프레임웍
- 토지 수용 범위 및 손실자산 평가를 위한 규제, 재정착 관련 불평신고사항 접수 등을 포함한 법률 및 행정 절차, 토지 소유 및 등록 절차, 재정착 프로그램 담당 운영 기관에 대한 규제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착 운영 관련 법적 프레임웍을 분석함

마. 손실자산에 대한 보상
- 손실자산 중 공공서비스, 어업, 목초지, 산림지 등에 대한 자원 접근성의 손실은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자원 및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바. 토지획득 및 생산적 재건
- 재정착 계획은 수용토지(Condemned Land)의 공평한 분배 및 문화적 유산 보존 등을 포함함
- 토지를 기초로 하는 생산 전략은 농가의 사회경제적 재정착을 위해 용수로 개발 및 식목 계획 등을 포함함
- 공공 토지나 빈곤층의 필요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사. 고용 및 직업 교육
- 재정착 계획은 특히 재정착 인구 중 비농업인구를 위해 고용 및 직업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어업 및 수산업 개발 투자를 통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함
- 재정착 인구의 사회 · 경제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거지,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해야 함

아. 환경보호 및 관리
- 재정착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환경 영향 및 인구 규모가 수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재정착 부지를 모색함

	자. 프로그램 실행 일정과 모니터링 및 평가 • 재정착 시기는 재정착 계획을 위한 주요 지원 및 투자 실행 시점에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착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 준비되어야 함 •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준비 기간 중 수원국 내 담당기관이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함		
주요개념	1. 재정착 계획을 통해 이주의 역효과를 예방 및 완화하며 해당 인구에게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 2. 적절한 재정착 계획의 실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지연 및 비용 상승 방지, 사회 복지비용 감소,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재정착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배경과 역사	1. OECD/DAC은 개발과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1991년 12월에 OECD 환경개발협력 장관(OECD Minister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승인 하에 동 지침서를 제공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Good Practic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2. Good Practice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3. Guidelines for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2 (2009. 2. 1)	페이지 수	12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관한 DAC 가이드라인 4: 세계 환경문제와 원조기관의 역할
(DAC Guideline on Aid and Environment No. 4: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0</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기후변화(Climate Change), 오존층파괴(Ozone Depletion), 생물종의 다양성(Biodiversity),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공여국은 개도국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가.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과 기술 부족 문제,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타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도국과 협력함
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기후변화 관련 분야별 고려사항
가. 에너지
• 모든 유형의 에너지 활용에 대한 개도국의 종합적인 계획, 감독 및 평가 체계의 수립을 장려하고 지원함
•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발협력의 우선사항으로 고려함
• 개도국의 에너지 분석 및 규정 마련을 지원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함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산림
• 개도국의 산림 벌채와 재조림 문제를 임업분야 투자와 개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양자 원조를 산림 관련 다자협력활동과 조화시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열대지역 국가들의 목표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표와 상충하지 않도록 지원함
•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실시며 기술협력을 통해 교육 및 현장 경험 축적을 통한 개도국의 재정 및 인력자원 개발을 지원함
• 프로젝트 준비 및 승인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와 데이터 수집 관리 관련 개도국 역량 보완과 강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장기간의 조사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열대 산림종을 포용하도록 지원함
다. 해수면 상승
• 개도국의 연안지역 관리 프로그램과 규제 체계를 마련 등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연안 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함
라. 오존층 파괴물질
• 개도국이 사전예방 노력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 하도록 지원하고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함
• 대안기술 사용 장려 및 새로운 기술 개발로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지원함
• 공여기관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학발전소의 설립 및 재건 자금 제공계획의 검토를 통한 중단을 지원함
마. 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감독 및 통제를 지원함
•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 관련 비용을 산정하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함
• 오염방지, 자연회복 및 폐기물축소 기술 활용을 지원함
• 유해폐기물 방출 기업에 대한 감사와 유해물질 관련사고 방지와 대책을 위해 검사관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함</td></tr>
</table>

	바. 생물다양성 • 위협받는 동식물군의 보존과 경제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생물다양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 개도국의 환경 및 천연자원관련 지역 관리 역량 개발을 지원함 • 개도국의 보존활동 효율성 제고 전략 개발을 지원함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함
주요개념	1. 오존층 파괴 가. 1989년 발효한 몬트리올 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는 5개의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s)과 3개의 할론가스를 주요 오존파괴물질(ODS)로 규정함 2. 유해폐기물 가. 부적절하게 관리되었을 때 생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유독성, 부식성, 폭발성 또는 가연성이 있는 폐기물 나. 1988년 OECD 회원국들이 44개의 잠재적인 유해폐기물을 확인함
배경과 역사	1. 기후변화 가. 1988년 경제협력개발기구(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와 세계기상기구(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의 주도 하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 설립되었음 2. 오존층 파괴 가.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은 오존층 파괴의 사전예방을 위한 개념과 방안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함 3. 유해폐기물 가. 1989년 3월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f 22 March 1989)이 60여개 국가에 의해 승인됨 4. 생물 종의 다양성 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14차 UNEP의 집행 위원회에서 대처방안에 대한 우산협약(Umbrella Convention)을 채택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Reconci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 Goals: Measuring the Impact of Policies (2008)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2 (2009.02.16) / 페이지 수 / 62
기타	1. 세계 환경문제와 원조기관의 역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 가. 선진국들이 황사 문제와 같은 국제적 ·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도록 함 2. 세계 환경문제와 원조기관의 역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의의 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 함께 개도국의 우선적인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5: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5: Guidelines on Chemicals Management)</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EN-G-1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화학물질 관리(Chemicals Management),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Chemicals Management Program),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2. 공여기관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지침 활용</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가. OECD 회원국은 주요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국으로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나. 공여국간 연계를 통한 수원국의 화학물질 관리 지원
•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생산 및 활용 범위에 따른 원조 지원 요청사항 평가를 위해 수원국과 협력 연구
• 화학물질 규제 및 행정 인프라 개발 지원
•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화학물질 관리와 기타 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육성 지원
• 컴퓨터, 실험실, 응급의료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
•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 승인절차 도입
• 원조 프로그램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영향 여부 조사
• 유해한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조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술이 안전 기술 및 지식, 운영관리 등을 수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도입 지원
다. 화학물질 관련 원조 프로그램의 개혁
• 화학물질 관리 관련 지원은 주로 살충제 분야의 사용법 훈련 및 정보 제공, 최소 유해물질 선택 권장, 안전 관리법 및 표기법 교육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 왔으나 시간제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의 부족, 수원국 여건과의 부조화, 수원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원조 프로그램의 개혁이 필요함
2. 원조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활용
가.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우선사항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함
• 해당 원조 지원은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공여국의 경험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연계하여 집행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 규모의 지원을 제공함
• 원조 프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타 원조기관 및 NGO 단체 등과 협력함
나.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특정 화학물질 사용의 필요성, 특성 및 활용 범위 등의 측정을 지원함
• 화학물질 관리 교육, 화학물품에 대한 정보, 기술자문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화학물질 및 유해시설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화학물질의 위험성 통제를 위한 위험방지 및 대처 조치 등의 화학물질 규제 조치를 시행함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및 행정 제도 강화를 지원함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기법, 모니터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
다. 원조기관은 화학물질의 사용 및 조달을 위한 원조를 중지함
라. 유해성 기술의 양도 및 이전을 방지함</td></tr>
</table>

	마.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화학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주요개념	1. 화학물질과 개발의 연계성 및 문제점 가. 연계성 • 개발도상국의 활발하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개발을 도모할 수 있음 나. 문제점 • 첨단기술 개발로 점차 고도화되는 소비자 기호와 산업 생산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학물질의 대량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주로 일반 산업 화학물질, 인공섬유, 플라스틱, 화학비료, 합성고무 등의 저기술 생산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사용도가 높음 • 유해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인체 및 환경 문제가 야기됨		
배경과 역사	1. 화학물질은 산업, 농업, 서비스 등 포괄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함 2. 관련 지식과 기술, 전문 인력 및 법적 · 행정 규제, 재정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화학물질 활용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인체 및 환경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함 가. 1991년 12월 런던 가이드라인에서 선진 화학물질 규제 프로그램 보유 국가는 본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더불어 타 국가의 인프라 개발 및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원조의 제공을 강조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3 (2009. 2. 12)	페이지 수	36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6: 병해충 및 살충제 관리에 관한 지침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6: Guidelines on Pest and Pesticide Management)</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병해충억제(Pest Control),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원조정책을 위한 병해충 및 살충제 관리 지침을 제공
가. 병해충억제책으로서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도입
나. 개발도상국의 살충제 관리 정책 구축 및 관련 역량 지원의 강화
다. 원조정책집행 시 제공된 살충제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 지원
2. 원조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공여국 간의 협력을 증진</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IPM 활용을 촉진
가. 농작물 보호를 위한 원조정책은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농작물 보호 서비스, 농업 종사자를 위한 IPM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국가적 · 지역적 IPM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재정지원을 통해 IPM의 도입과 적용을 지원
다. 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의 IPM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원
라. IPM 관점의 평가를 위해 농업 강화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
• IPM 전략 연구
•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비교적 안전한 살충제 개발
• 범국가적인 IPM 복합 교육 운영위원회 조성
• 각종 IPM 관련 지역적 포럼 및 워크샵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및 기술협력 촉진
마. 공여국은 긴급 운영 외의 목적으로 지원된 살충제가 수원국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도록 수원국 정부와 협력
2. 개발도상국의 살충제 관리 정책 수립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가. 국제적 살충제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내 살충제 관리 정책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살충제의 가격 정책 개발 지원
다. 비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
라. 살충제 관리에 대한 협력을 위한 지역적 이니셔티브 구축
마. IPM 관련 분야 담당자와 유해물질 감소를 위한 살충제 사용 관련 교육 ·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바. 유해물 폐기 관리 및 살충제 보관 시설 설립
3. 원조정책 하에 제공된 살충제의 안전하고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검토함
4. 원조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공여국 간 협력 강화
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기타 국제 혹은 지역 기관과 IPM이나 살충제 관리 정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FAO와 긴급지원을 관리
다. IPM 촉진, 병해충 억제 긴급 운영, 살충제 폐기물 처분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체계 구축을 장려</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개발도상국의 병해충 억제 및 살충제 사용 목적
가. 병해충에 따른 농작물 수확 전후 손실, 동식물 손실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여 농작물 생산을 증진
2. 살충제 사용의 부작용의 주요 원인
가. 소규모 농장에 적합하지 않은 살충제 사용
나. OECD에서 인체 유해성의 이유로 사용금지한 살충제 사용
다. 사용 설명서 및 표기 부정확, 살충제 사용법 위반 및 보호용 의류 및 도구 부족 문제 등
라. 불법 소매상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포장
마. 유해 살충제 피해 사고 발생 시 의학적 대응 조치에 대한 지식 부족</td></tr>
<tr><td>배경과 역사</td><td colspan="5">1. 개발도상국의 살충제 사용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원조 기관은 병해충 억제 프로그램, 병해충 종합관리 등을 실시 지원함</td></tr>
</table>

평가지표	1. 원조정책 하에 제공된 살충제의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 지원을 위한 검토 사항 가. 살충제 사용 목적 및 비화학물질 사용 대안의 여부 나. 해당 살충제 선택의 타당성을 알기 위한 효과성, 환경 및 인체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다. 살충제의 정량 사용 여부 라. 규정된 포장 용기, 재질, 규격 및 언어 사용 여부 마.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인식의 정도, 보호 도구 및 수단 존재 여부, 위험 노출 시의 해독 가능성, 상품 사용 후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유무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4 (2009. 2. 13)	페이지 수	44
기타	1. 살충제 공급을 위한 체크리스트(p.21)		

<table>
<tr><td>제목</td><td>원조와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7: 원조기관의 재해피해경감에 대한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 7: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Disaster Mitigation)</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재해피해경감(Disaster Mitigation), 재해방지(Disaster Prevention), 재해대비(Disaster Preparedness), 위험성평가(Hazard Assessment), 취약성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원조기관의 재해피해경감 접근방안
2. 국가별 재해피해경감 접근방법
3. 국가별 재해피해경감 구체적 방안</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재해피해경감을 위한 원조기관의 조직적 접근
가. 원조기관은 위험성과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조와 투자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통합함
나. 원조 프로젝트의 선정 단계에서 유해성과 취약성 평가를 실시함
•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평가과정에 반영함
다. 프로젝트 심사 및 설계 단계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함
라. 별도의 긴급재해대책기관의 설립을 통해 원조프로그램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마. 재해피해경감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OECD/DAC 회원국 내 개발협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해의 영향, 재해 및 취약성평가의 준비 및 적용 교육을 실시함
2. 국가별 재해피해경감 접근방법
가. 공여국의 재해피해경감 활동은 해당 수원국에서 활동 중인 재해피해대책 및 경감 기관의 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함
나. 관련 공여기관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함
다. 공여국은 해당 수원국의 재해대책 관련 국가 정책 및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라. 공여국은 재해경감 활동의 민간분야의 참여를 제고함
• 민간분야의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함
• 민간분야의 재해경감 활동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마. 효과적인 재해경감 활동을 위해 지역 조직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협력을 지원함
바. 재해보험의 보상 한도의 확대를 모색함
•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통해 생계유지 지원 및 주택 및 생계수단의 복구를 지원함
3. 국가별 재해피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 방안
가.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나. 토지용도 지역제의 도입을 통해 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
다. 건물의 설계 및 건축 시 특정 재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하는 건축법 제정
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재해경감 조치 유도
마.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산 및 수단의 무료 또는 저가 제공
바. 재해발생 대처 캠페인을 통해 재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대처 훈련 유도</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자연재해
가. 기상, 지변 등의 급격한 자연 변동으로 인한 재난을 말하며, 자연현상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함
2. 재해피해경감(Disaster Mitigation)
가. 재해로 인한 물리적 손실, 사회적 혼란,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재해 발생 방지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준비하는 재해대책 모두를 일컬음
나. 재해방지(Disaster Prevention): 재해 발생 억제와 붕괴 및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재해대비(Disaster Preparedness): 재해 발생 시 사회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3. 재해는 재해 발생 경고 기간에 따라 돌발충격과 완만한 충격으로 구분됨</td></tr>
</table>

배경과 역사	1. 1988년 UN 국제자연재해경감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이 1990년부터 10년간 활동해 왔음		
평가지표	1. 유해성 평가(Hazard Assessment) 가. 자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영향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발생 가능한 모든 잠재적 위험과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함 2.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가. 유해성 평가에서 파악된 위험에 대한 물리적 · 사회적 취약성을 평가함 • 물리적 취약성 평가는 자연 재해로 인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의 저항성의 정도를, 사회적 취약성 평가는 사회구조나 생계구조의 저항성의 정도를 평가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4 (2009. 2. 13)	페이지 수	56
기타	1. 자연재해의 종류 및 특징(p.25) 2. 자연재해의 영향(p.43) 3. 자연재해에 관한 통계(p.47)		

<table>
<tr><td>제목</td><td>원조 및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8: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발전과 보호에 대한 국제 및 지역적 관점 지침 지역적, 국제적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 8: Guidelines on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해양 및 연안 환경(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통합적 해양 및 연안 관리(Integrated Marine and Coastal Area Management Plan),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해양 및 연안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권고사항을 제공</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해안 및 연안 환경 보호 지원
가. 해안 및 연안 환경보호에 대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한 대중 인식 제고
• 대중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원인, 관련 질병위험 정보를 제공 하며 환경보호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전달
나. 통합적 연안구역 관리
• 통합적 연안구역 관리는 강 유역 종합관리(Watershed Management)로서 해양 및 연안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임
• 해상무역운송 및 어업 시 환경 보호를 고려한 원조 집행을 증진함
• 연안 개발 및 자원 활용에 의한 환경 파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를 활용함
• 항구입점시설 운영, 연안구역의 석유생산 플랫폼의 폐관, 해안 및 연안 사고 처리시설 운영, 유해폐기물 육로 및 해로 운송 등에 대한 관리 실행 등 토지 및 해양 기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리 정책 실행
다. 제도적 측면
• 해양 및 연안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술, 전문가 및 수단을 통해 지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관련 정책을 결정
라. 경제적 · 재정적 측면
• 해양 및 연안의 자원 사용 및 유해폐기물 방출에 대해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정책 집행
• 정부는 환경 관련 예산 책정을 통해 환경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
마. 기술적 측면
• 장기적인 해양 및 연안 환경보호 정책 및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조사 및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
바. 법적 기반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협의를 통해 해양 및 연안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 조항 및 프로그램을 구축함
사. 국제적 협력 기반
• 다자 프로그램 집행을 통해 제도화를 강화 지원
2. 공여 활동을 위한 권고사항
가. 개발활동 및 환경보호와 해양문제의 통합
• 해양 및 연안구역 환경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발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통합
• 통합적 환경관리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지속적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 · 사회 · 경제적 개발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획 및 집행
• 공여기관은 프로젝트 지원 이전에 해양 및 연안구역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 지역적 컨벤션 및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관련 조항에 부합되도록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td></tr>
</table>

	나. 기술 및 재정원조 • 통합적 해양 및 연안 관리를 위해 해당 해양 및 연안의 자연적 특성 및 변천사항, 생태학적 주요 이슈, 인구통계학 및 개발 패턴, 사용자 간 분쟁 및 관리 우선사항 등을 조사 분석 다. 연안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우선 고려 • 각종 폐기물의 기술적 관리, 하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설 설립, 각종 산업 및 공업 오폐수의 특별관리, 인체에 해로운 독성 · 발암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과 합성 및 금속성 혼합물 등의 관리, 연안 및 강가로의 각종 화학물질 유입 방지 프로젝트, 지역 및 범국가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라. 각 연안, 내륙 및 해안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사항 • 해양 및 연안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더불어 각종 산·공업 폐기물 처분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을 설립 • 런던컨벤션에 따른 해양지역 처분에 적합한 폐기물 판별법을 도입 • 원조기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으로의 폐기물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 모색을 지원 • 항구수용시설(Port Reception Facilities)을 설립하여 이곳을 통해 수집된 폐기물이 육지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통합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결과는 지역적 오염 방지 관리 및 프로그램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류 •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활용 • 긴급 해양 오염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마. 향후 원조 지원 시 우선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해양 환경오염 방지책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자립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구수용시설 및 이에 관련한 폐기물 처분법, 응급 상황 대비 시설 및 인력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 항구 운영 및 개발의 환경 여건, 국제적 교류로 인해 훼손된 해양구역에 대한 항해 안전 대책, 국제적인 전문해양교육 센터 설립을 위한 통신교육, 수자원 밸러스트(Ballast water) 및 선내 관제시설 개발 등에서 협력을 약속함
주요개념	1. 외양(Open Ocean) 가. 인간의 개발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나 핵연료 및 유해 화학물질 등의 폐기물 처리장소로서 이용되고 새로운 개척 및 탐구 대상이 되어 점차 어업자원, 해양 포유류, 해양 대기 등에 위협이 되고 있음 2. 연안지역 가. 토지와 해양 사이의 접점지역으로 중요한 해양자원이 공급되는 곳으로 인간의 개발활동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각종 유해성 쓰레기로 인해 대기 및 토지 오염, 생태계 위협 및 변종,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증가함 나. 연안지역의 정착 위협,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의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배경과 역사	1. 지속적인 연안지역 건설 및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생태계 위협 및 자원 고갈, 해양 및 토지 오염 등 환경피해가 점차 커짐 2. OECD/DAC은 제도적 접근을 통한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 함 가. OECD DAC은 개발 및 환경문제의 통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DAC 개발지원 및 환경 실무작업반(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Environment)을 통해 원조 및 환경 관련 지침을 마련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4 (2009. 2. 14)	페이지 수	51
기타	–		

<table>
<tr><td>주제</td><td>원조 및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9: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9: Guidelines for Aid Agencies for Improve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and Sub-Tropical Wetland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G-15</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평가과정(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구시로 람사르 총회(Kushiro Ramsar Conference)</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정책과 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의 통합
2. 습지와 환경평가과정의 연계
3.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습지 피해와 충격 완화 조치 도입
4. 습지 보호 중심 프로젝트의 개발</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정책과 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의 통합
가. 국가습지정책
• 습지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 관리기관 및 제도 제정
• 습지 및 습지의 가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 습지 현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우선 보호 순위 정립
• 국가의 중요 습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나. 분야별 경제 정책수립
• 환경 · 경제적 요인 간의 비용편익분석,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통해 각 분야별 개발과 습지 보존 간의 효과 분석 및 검토
다.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과 수립
•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시 습지 및 주변 지역 인구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수단 마련
• 해당 습지 관련 기관, 주변 지역 주민, NGO 단체와의 협의
라. 도시계획 수립
• 도시 계획 시 생태계와 하천의 배수지역 등의 자연 보존
• 지역 내 소규모의 습지 네트워크가 존재할 경우 배수관리 규정을 정책에 도입
마. 지역별 개발 원조 프로젝트 수립
• 프로젝트 기획 시 습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고려
• 지역 커뮤니티와 습지 자원 활용 인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바. 공여기관 내부의 습지정책
• 공여기관의 환경 및 개발전략에 습지 관련 내용 포함
• 개발프로그램의 각 단계에서 습지 보호에 대한 고려사항 및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평가과정 및 프로젝트 검토
• 환경 및 개발에 대한 보고에 습지의 가치와 보존방안 포함
• 습지 보존 및 지속적 활용에 대한 모듈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포함
•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집행 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통해 습지 관련 이슈 반영
• 환경관련 재정의 일부를 습지 보존을 위해 활용
• 국가습지정책과 전략의 공식화 및 이행의 활성화
• 바람직한 습지 활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습지의 파괴 행위 지양
• 환경 및 보건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습지 관련 이슈에 적합한 정책수립 및 이행의 보장
• 공여기관 내 습지와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2. 습지와 환경평가과정의 연계
가. 다음의 경우 EIA 활용을 통해 습지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td></tr>
</table>

	• 해당 습지가 습지보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문관리체계의 변화, 수질의 변화, 관련 질병 위험 변화, 생태계의 교란, 습지기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민감 지역에 속하는 경우 SEA를 실시하여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점증적 충격에 대한 저항 능력을 예측 다. 습지의 가치에 대한 환경 경제평가, 습지의 활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EIA에 포함 라. 습지손실 완화조치, 이행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사후 조치를 EIA에 포함 마.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수원국은 습지손실 완화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 3.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습지 피해 완화 가. 개발프로젝트 시행 시 습지의 보호 및 피해 완화조치 시행 • 습지 개발로 인한 습지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면적 보다 큰 규모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도록 하는 습지총량제의 도입, 주변지역 환경 회복을 위한 방안 권고 • 습지의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인접지역에 대체 습지 조성 또는 복원을 통해 손실 완화 조치 도입 4. 습지 보호 중심 프로젝트의 개발 가. 습지 중심 원조 프로젝트를 설계 및 이행 시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 • 생태학적, 수문학적 연구 및 사회경제적 연구 • 국가 및 지역정부, NGO단체, 지역주민사이의 공동관리 조치 •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 및 지역주민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나.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습지관련 기관 간의 제도적 조직 및 협력 다. 훈련과 교육 확대 및 인식제고 지원 • 습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습지관리전문가의 양성 • 습지의 보전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 실행 라. 바람직한 습지 활용을 위한 장기적 재원 마련 • 입장료 징수, 어업권 과세, 습지 자원개발 및 이용에 따른 이익 환수, 친환경 펀드 조성, 환경 대 채무 스와프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 마련 • 지역주민이 재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습지 관리 및 보호 유도
주요개념	1. 습지 가. 1993년 구시로 람사르 총회(Kushiro Ramsar Conference)의 습지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인간의 활용, 상류의 흐름 변화와 같은 외부 원인, 기후변화, 퇴적과 침전 등의 자연 원인에 의한 습지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및 관리 시행 나.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을 통해 자연 · 인공, 영구 · 임시, 담수 · 기수 · 염수 여부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이루어진 지역 및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습지로 정의 다. 습지 소실은 환경오염, 사냥, 거주지 건설, 농업관개, 어업 등은 물론 벌채, 유역손실, 토양침식, 토사퇴적, 해수면 상승 등 인간에 의한 직 · 간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자연에 의한 영향으로 인함 라. 습지의 종류 • 해안습지, 연안습지에는 하구, 갯벌, 해안, 산호초를 포함 • 내륙습지는 범람원, 삼각주, 늪, 소택지, 호수, 연못, 이탄지, 습지 숲을 포함 • 인공습지 마. 습지의 기능 및 역할 • 수문학적 조절 기능 담당(홍수 및 가뭄 방지) • 침식으로부터 토양보호(산사태 방지) • 정화기능 • 수원 및 에너지원 • 생태학 자원의 보고

배경과 역사	1. 개발활동으로 인해 습지의 급격한 소실이 진행 2.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 손실을 억제하고자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 체결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5. 6. 15 (2009. 2. 5)	페이지 수	69
기타	1. 습지정책의 분야별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p.22) 2. 특정장소에서 시행 될 습지정책을 위한 체크리스트(p.27) 3. 프로젝트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시의 습지정책 개입시점 체크리스트(p.32) 4. 개발활동의 영향 및 완화조치(p.49)		

<table>
<tr><td>제목</td><td>개발과 환경 목표의 조화: 정책 영향성 측정(Reconci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als: Measuring the Impact of Policie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P-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OECD 2030년 환경전망(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EO), 기준선 예측(Baseline Scenario),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정책 일관성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 효과 향상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 성과를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향상</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OECD 2030년 환경전망(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EO)에서의 기준선 예측 (Baseline Scenario)
가. 새로운 정책 또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요인이 없을 경우 향후 경제 및 환경의 변화를 예측
2. 노동 투입, 기술 진보, 생산요소 이동 등의 경제 성장 요소 변화 예측
가. UN의 2004년 중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이동에 의해 세계 노동 분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 분야에서 높고 서비스 분야에서 낮을 것으로 예측됨
다. 자본 대비 노동 희소성이 증가하여 GDP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됨
라. 세계적으로 무역 및 운송 규모가 크게 증가해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3. 전력 에너지원 수요, 산업, 에너지 분야의 변화 예측
가. 2030년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 비해 2배 증가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나. 토지활용의 증가로 농작물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부분적으로 감소하지만 농업활동에 의해 총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OECD 회원국에서는 농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서부 아프리카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다. 세계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및 강우량의 변화는 농업 생산량과 작물의 지역적 분포에 영향을 주며 적도부근 지역은 기온이 보다 고온건조화 될 것으로 예측됨
라.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황산은 OECD 회원국들의 엄격한 자동차운행 규제에 의한 감소가 예측됨
마. 질산은 운송 및 발전소 운영에 의해 발생하며 최근 관련 기술 발달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분야에서의 질소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감소 또는 현 수준 유지가 예측됨
바.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개도국에서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피해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사. 세계적으로 지표수 및 연안지역 수질에 대한 질소의 영향이 증가하고 천연림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4. 단일 정책 시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의 영향
가. OECD 회원국의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감소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섬유 및 쌀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며 농업 분야의 비중이 낮아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함
• 환경적 영향: 토지 활용, 화학제품의 수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함
나. OECD 회원국의 농산품 수입 관세 축소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보조금 감소 정책에 비해 여러 농산품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나 생산방식도 변화하게 되어 전 세계 GDP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함
다. 최빈국 대상 ODA 확대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기준선 예측 결과 보다 사하라이남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OECD 회원국의 소득이전 효과는 미미함</td></tr>
</table>

	• 환경적 영향: 환경지속성이 향상되었으나 GDP 증가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함 라. 임업 및 어업분야의 환경마크제도 정책의 영향성 • 경제적 영향: 기준선 예측 결과 보다 수출량이 감소하며 OECD 회원국에 비해 개도국에서의 축소 규모가 큼 • 환경적 영향: GDP의 감소와 임 · 어업분야 에너지의 수요 감소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나 기준선예측 결과보다 감소 규모가 작음 마. 석유 수입 관세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대체에너지 활용의 증가로 인해 석유 수출이 기준선 예측 결과 보다 감소하며 개도국에서의 GDP 감소가 큼 • 환경적 영향: GDP와 가계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선 예측 결과 보다 감소함 바. OECD 회원국에서의 노동참여 증가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기준선 예측 결과에 비해 OECD 회원국에서 노동공급의 증가, 상대적 임금 감소, 산업 경쟁력 향상, GDP 상승, 가계 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그 정도가 미미함 • 환경적 영향: 토지 활용, 화학제품의 수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변수들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OECD 회원국에서는 증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함 사. 개도국의 거시경제 정책 개선의 영향 • 경제적 영향: 개도국의 GDP는 증가하나 OECD 회원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함 • 환경적 영향: 개도국 내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함 아. 개도국의 구조개혁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개도국의 GDP의 증가 및 가계 소비 증가 • 환경적 영향: GDP 증가와 함께 공업제품 생산이 증가하여 부정적 영향 증가 자. 개도국의 환경 정책의 영향 • 경제적 영향: 수자원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총 생산성 증가가 낮아 개도국에서 GDP의 증가가 미미함 • 환경적 영향: 식수 공급과 위생 상태 개선이 예상되지만 추가 개발지원에 따른 운송 활동 증가로 이산화탄소의 미세한 증가가 예상됨 5. 통합적 정책 시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정책 영향성 평가 가. 공여국 내부적 일관성 개선 정책(원조와 무역의 결합)과 수원국 일관성 개선(환경정책의 개선)의 통합적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과 • 무역자유화보다 개발원조의 확대가 GDP 증가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OECD 회원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음 나. 공여국 내부적 일관성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경제목표와 무역개발 증진 목표 간의 일관성 개선) • 환경정책이 개도국의 수출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나 최빈국에서의 환경 및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로 상쇄될 수 있음
주요 정책제언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원조와 환경 문제의 통합이 필요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도록 정책 일관성을 개선함 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정책은 의도치 않게 환경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개선 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 정책의 보완을 지원함 나. 임 · 어업 분야의 환경마크제도 시행은 선진국의 환경 보호 부담을 덜어주지만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도국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함 다.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수요 증진 정책이 석유 수출 개도국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석유 수출 국가 중 빈곤 국가에 대한 보상정책을 마련함 라. OECD 회원국의 노동참여 증가 정책은 개도국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개도국의 무역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함 마. 개도국의 거시경제정책의 개선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 정책이 함께 실행되어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의 환경정책 개선을 지원함 바. 수원국은 구조 개혁 정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이 개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개도국의 GDP 향상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개발원조와 무역정책은 환경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개발의 성과를 환경 보호에 투자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9.02.17)	페이지 수	120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전략적 환경평가와 생태계 서비스(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M-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생태계 서비스 이슈를 SEA의 형성과 실행 단계에 포함함</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가. 인류가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
•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에 포함되는 생태계 서비스로는 양식, 목재, 수자원 등이 있음
• 생태계 서비스로는 양식, 목재, 수자원 등이 있음
나. 하천 범람 방지나 폭풍 재해 방지와 같은 생태계 보호 장치 서비스나 휴식과 정신적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생태계의 문화 서비스 등은 시장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SEA에서 제외됨
2. 생태계 환경과 개발
가.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및 환경악화는 개발목표 달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
나. 생태계 악화는 빈곤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50년간 생태계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도 영향을 줌</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SEA 정책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가. 수원국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는 무엇이며 SEA 정책 및 전략이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게 미치는 직 · 간접 변화는 무엇인가?
나. 기존 생태계 서비스의 상태와 경향은 어떠하며 생태계환경의 악화는 경제발전과 인류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 미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 발전전략에 생태계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마. 어떠한 역량개발이 필요하며 평가 기제에 생태계 서비스의 양과 질이 포함되었는가?
2. SEA 기획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가. SEA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
• 선별: 해당 계획과 프로그램이 기반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선별
• 목표 설정: 선별 단계의 결과에 기반 하여 SEA의 목표 설정
• 관련 주체들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상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SEA의 관련주체: 원조 계획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구 또는 집단을 대변하는 공식 · 비공식 조직, 영향을 받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 원조계획 ·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는 생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의존하는 기관 및 기업
3. 적절한 SEA의 실행
가. 관련 행위자와의 대화를 통해 실행 범위 설정
• 범위 설정 시에는 관련 행위자의 의존도, 지속성,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한 재산권 등을 고려함
나. 기본 자료 수집 시 고려사항
• 범위설정 단계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택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가?
• 생태계 서비스의 상태와 경향은 어떠한가?
•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에 직 · 간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며 원조 계획 · 프로그램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td></tr>
</table>

	다. 대안 검토 •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한 장 · 단기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SEA가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주요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를 측정해 봄 라. 완화와 보상 방법 모색 • 원조가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방안을 고려해 보고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법적 프레임웍과 정책 사항을 검토함 •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효과성, 법적지위, 정치 ·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 제도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선별해서 실행함 마. SEA에 대한 총체적 검토의 고려사항 • SEA가 기획단계에서 생태계 서비스 문제를 반영했는가? •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자들의 참여 등 SEA 과정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SEA가 대안을 고려했는가? • SEA가 원조 계획 · 프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위험 ·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 SEA가 생태계 서비스 문제와 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자, 공무원, 기타 관련주체들의 역량을 향상시켰는가? • SEA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켰는가? • SEA가 국가 예산에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파괴위험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정 이슈도 포함했는가? • 원조 계획 및 프로그램이 생태계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있는가? • 원조 활동이 생태계 서비스 향상 및 개발 문제에 공헌했는가? 바. SEA의 결과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 되어야 하며 OECD/DAC 회원국에게 제공되고 일반 독자들을 위한 요약본도 함께 준비함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OECD/DAC Good Practice Guidance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10. 30 (2009. 1. 30) / 페이지 수 / 26
기타	–

<table>
<tr><td rowspan="2">제목</td><td rowspan="2">OECD/DAC 권고사항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환경 평가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of OECD/DAC Guidance and Other Internationally Important SEA Regimes)</td><td rowspan="2">DAC 문서 주제</td><td rowspan="2">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문서번호</td><td>EN-M-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s), 유럽 전략적 환경평가 지침(European SEA Directive), UN 유럽경제위원회 전략적 환경평가 의정서(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SEA Protocol)</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가 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전략적 환경 평가
가. SEA는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s)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법임
나. SEA는 다양한 방법 및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 볼 수 있으며 개별 국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다. SEA는 별도의 시스템이나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제도와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라. SEA는 정책 수준에서 적용해야 하며 제도 중심의 접근법임</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유럽 SEA 지침
가. EU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초법으로 환경 보호와 EU 회원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SEA의 기초적인 조항과 필수 이행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나. 환경 보고서 개발 및 공유, 자문회의 개최 등을 시행하고자 함
다. 2004년에 효력이 발생되어 현재 초기 실행 단계에 있음
2. UN 유럽경제위원회 전략적 환경평가 의정서(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SEA Protocol)
가. 유럽 SEA 지침과 유사한 기초법이지만 보다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나. 개발원조의 계획 · 프로그램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을 포함한 환경보호의 목표를 반영함
다. 환경 보고서의 범위 결정, 자문회의 실행,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한 원조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라. 2003년 35개 UNECE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임
3. 세계은행
가. 환경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우산(Umbrella) 정책으로 특히 채무국에 특정 목적에 따른 이행 사항을 의무화함
나. 개발 프로그램 계획과 전략이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함
다. 본격 시행 중에 있음
4. OECD/DAC
가.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SEA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접근 틀로써 SEA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명시하고 있음
나. SEA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개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이라고 정의함
다. DAC 회원국들에 의해 시험 운영과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 경험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td></tr>
<tr><td>보고체계</td><td colspan="5">–</td></tr>
</table>

평가 및 Feedback	1. 유럽 SEA 지침, UNECE SEA Protocol, 세계은행 및 OECD/DAC 권고사항은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SEA의 필수 이행 기준이 됨 2. SEA의 추진에 단일한 방법이 있을 수 없으며 국가별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1. 23)	페이지 수	14
기타	1. 유럽 SEA 지침, UNECE SEA Protocol, 세계은행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3개 SEA 레짐을 OECD/DAC 권고사항과 비교 분석함		

<table>
<tr><td>제목</td><td>기후변화 적응과 개발의 연계(Bridge Over Troubled Waters: Link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td><td>DAC 문서 주제</td><td>Environment</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EN-M-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기후 변화(Climate Change),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UN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기후변화를 개발의 주요 이슈로 통합함
2.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장기적인 접근으로 정책개발에 통합함
3. 현재의 다양성과 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고려사항을 적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개발 · 시행함
4. 기후 및 공여국의 지원활동과 수원국의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5. 수원국과의 협력 및 공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함
6.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함</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가. 적응(Adaptation):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킴
나. 완화(Mitigation):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온실가스를 포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2. 기후변화는 자원 투자의 효과성 및 개발목표의 달성 성과에 영향을 미침</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기후변화를 개발의 주요이슈로 통합함
가.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관관계
• 기후변화는 빈곤층의 건강을 저해하며 자산의 감소, 사회기반시설의 접근성을 약화를 초래하며 열과 관련된 질병 및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등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은 개발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정책 또한 개발활동과 연관되어 있음
• 기후변화는 사회적, 생물물리학적 취약성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함
나. 기후변화를 위한 기금 설립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결정함
• 최빈국의 기후적응을 지원하는 최빈국 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을 통해 최빈국의 적응정책을 위한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함 (2001년 7차 UN 당사국 총회)
• 모든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운송, 농업, 삼림 등 적응 및 완화정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특별 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마련(2001년 7차 UN 당사국 총회)
•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에서 생긴 2% 부담금의 일부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설립하여 이를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함 (2007년 13차 UN 당사국 총회)
다. 개발에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공여국은 주요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의 예상 결과를 포함
• 정부 및 관련 기관 및 주체와의 대화 및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포괄적 국가 및 지역 평가
• 기후변화 주류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기타 정부 부처와 민간분야 및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
라.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기후변화 목표 간의 정책 일관성 제고
• 장 · 단기적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통합
2. 기후변화와 개발활동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요건
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td></tr>
</table>

	나. 개발과 기후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부 및 개발협력 기관 내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과 기후변화의 위기관리에 관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ance)을 마련해야 함 다. 기후정보를 위한 적절한 개발지원 시작 시점을 명시함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가 개발지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프로젝트들이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EIA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킴 • 개발 활동에 있어서 기후정보의 활용과 통합 적용을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수원국의 토지이용계획과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경제 인프라를 강화함 3. 기후분석 가. 기후 분석 도구 및 접근방식은 개발활동이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 평가 나. 기후변화 예측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온도, 강수량과 해수면 변화, 지역적인 기후 변화를 예측함 • 정책결정자에게 미래 기후 예측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 예측의 주된 도구인 일반 순환 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을 MAFICC/SCENGEN 기후 시나리오 산출기(Climate Scenario Generator)를 통해 비교함 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한 대응을 우선함 • 정확한 미래 기후예측과 기후변화가 자연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고려함 • 정책결정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의 영향을 고려해 대응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함 4. 공여국의 지원활동과 수원국의 국가 개발 계획의 분석 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함 • 전염병, 수자원 공급 및 위생, 운송, 농업, 임업, 어업, 재생가능 에너지, 수력발전, 관광사업, 환경보호, 식량 안보, 긴급 구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함 나.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활동을 평가 · 분석하여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이 빈곤감소와 개발에 미치는 위험을 조사함 • 수원국의 국가개발 계획, 빈곤감소 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분야별 개발 전략, 유엔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하의 국가 간 정책대화를 분석함 • 공여국의 국가별 원조전략 보고서, 분야별 개발 전략을 분석함 • 프로젝트 디자인과 평가 자료, EIA를 분석함 5.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관리 가. 빙하호 홍수와 하천유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 • 빙하호 홍수의 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에 수력발전 설비를 구축함 • 홍수 피해 위험이 있는 빙하호 하류에 초기 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음 • 소규모 강 유역에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을 분산 설치함으로써 빙하호 홍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소규모 강은 수력발전에 주요한 하천유량의 변화가 크므로 적응전략으로는 큰 규모의 강 유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젝트 기획 시 빙하호 홍수, 하천유량의 변화와 영향을 고려함 6. 기후변화와 개발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가. 개발활동에 기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킴 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선정 도구 및 방법을 개발 · 적용함 • 관련 프로젝트 선정 도구 및 접근방식은 개발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성을 평가함 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개발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공여국 간의 협력과 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함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1. 원조 지원 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개발활동을 지원함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 친화적 개발의 가능성 가. 공학적인 면에서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시 해수면 상승, 빙하호 홍수 등의 영향을 고려함 나. 정책적인 면에서 빈곤감소, 분야 개발, 천연 자원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활동에 기후변화를 연계함 3. 기후변화의 주류화 방해 요인 가. 개발 공동체 내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및 대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자원의 부족 나. 기후변화의 주류화를 저해하는 한정된 전문지식 다. 3-5년간의 단기 개발 프로젝트는 장기간의 기후위기 관리 도구로 적합하지 않음 라. 기후정보의 불확실성 4. 급진적인 대처방안 보다는 환경 및 개발관련 정책의 우선적 실행이 더 필요함 가. 수자원과 에너지 절약, 산림 보호 등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2. 17)	페이지 수	153
기타	1. 사례연구: 네팔, 방글라데시, 우루과이, 이집트, 탄자니아, 피지		

제목	취약국가 포용방안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6-2007)	DAC 문서 주제	Fragile State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F-R-1
DB 키워드	취약상황(Fragile Situation), 원조의 흐름				
주제	1. 취약국가의 상황파악과 원조의 흐름 분석				
주요 연구결과	1. 취약국가의 현황 가. 현재 세계인구의 1/6인 10억 명이 취약국가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1/3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나. 전 세계의 5세 이하 영아 사망의 절반과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여성 사망의 1/3이 취약국가에서 발생함 다. 폭력분쟁, 조직범죄, 이주, 납치, 국내불안 같은 지역적 ·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가 개발협력커뮤니티를 넘어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킴 2. 취약국가로의 원조 유입 현황 가. 2006년 기준으로 USD 270억이 취약국가를 위해 지원됨 나. 취약국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75%가 5개 국가(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에 한정되어있으며, 부채경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 다. 취약국가의 분류 • 원조필요성이 높으나, 거버넌스 역량이 유사한 타국과 비교하여 원조규모가 작은 국가(예: 기니,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 원조필요성이 높으나, 거버넌스의 역량이 약한 국가(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소말리아, 토고, 짐바브웨) • 원조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예: 부룬디, 캄보디아, 차드,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니제르, 시에라리온, 타지키스탄) • 제한된 공여국을 통해서만 원조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 코모로스, 파푸아뉴기니) 3. 원조와 기타자원의 흐름 가. 안보와 개발 • 2000년 이래로, 유엔 평화유지 비용은 3배로 증가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동티모르로의 ODA의 2배에 달함 • UN의 평화유지군이 주재하고 있는 분쟁 후 국가에서 개발 지원활동이 시작되어야 함 나. 국내자원과 국가건설 • 정부 세입이 국가건설 및 발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 • 대부분의 취약국가의 정부세입이 국내총생산의 15%에 미치지 못함 다. 풍부한 천연자원 • 앙골라, 차드, 나이지리아, 수단의 천연자원은 국가적 성장을 위한 견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패와 갈등을 일으킴 라. 본국송금(Remittance) • 재외국민으로부터의 취약국가로의 송금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약 두 배로 증가함 • 2005년 예멘, 통가, 토고, 타지키스탄, 아이티,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본국 송금액이 공적개발원조액을 초과했음 • 취약국가에서 재외국민으로부터의 본국 송금액은 일반국민과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으나 스리랑카에서 경우처럼 폭력분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 마. 투자 • 투자는 고용 창출과 확대, 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함 • 해외직접투자가 대개 소수의 석유보유국(앙골라, 차드, 나이지리아, 수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주요 정책제언	1. 취약국가의 평화구축과 국가수립을 위해 개발, 무역, 자금조달, 외교 안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2.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원조기기관은 개발, 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며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연구방향	1. DAC취약국가그룹에서는 원조이외의 자원흐름에 대해 연구하며, 분쟁국가와 취약국가를 목표로 한 원조의 실패를 분석하고자 함		
관련 DAC 주제	1. 천년개발목표(MDGs) 2. 원조의 질(Quality of Aid) 3.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4.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관련 DAC 문서	1.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2. 9)	페이지 수	4
기타	1.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2006)’와 통합된 문서임		

<table>
<tr><td>제목</td><td>취약국가와 취약상황에서 올바른 국제적 개입을 위한 정책공약 및 지침(Policy Commitment an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td><td>DAC 문서 주제</td><td>Fragile State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F-R-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취약국가(Fragile States), 국가건설(State Building), 평화구축(Peace Building),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취약국가 또는 취약상황에서의 개발협력 원칙
2. 취약국가에서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제안</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국가가 약한 정부, 제한된 행정능력, 만성적 비인도주의, 지속적 사회 갈등, 폭력 및 내전 등의 장애요소로 인해 개발정체 상태에 직면한 경우 취약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2. 세계 빈곤인구의 1/3이 취약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3. 취약국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취약국가와 취약상황의 올바른 국제적 개입을 위한 원칙 도입
가. 수원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
• 수원국의 정치적 의지와 정부의 정당성, 제도적 역량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함
• 전후 정치적 상황, 거버넌스의 약화, 점진적 개선, 장기적 사태 및 교착상태 등 취약상황의 정도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반영함
나. 갈등상황 및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막고 부패를 방지함
다. 수원국의 정부구축과 국가건설을 원조의 중점 목표로 설정함
• 민주주의 정부 수립, 인권 증진, 시민사회의 개입, 평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정부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를 지원
• 정부의 기본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지원
라. 취약국가의 근본 원인 분석, 위험분석, 시민의 역량강화, 평화구축을 위한 지역 단체의 역량강화, 지역단체와의 공동 업무수행 등을 지원하고 위험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마.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상황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수원국과의 공동 전략 수립 및 이행함
바. 안정된 사회를 위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성 평등, 사회통합, 인권증진을 지원함
사. 국가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제고함
• 수원국이 취약성 개선을 위한 의지는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의 정부 외 기타조직과 연계하여 개입함
• 수원국 내의 폭력사태 및 약한 정부로 인해 정부와의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내의 각 분야별, 지역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함
아. 기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함
• 공여국 간의 공동 평가 수행 및 공동 전략 수립을 통해 공동 기관의 설립, 공여국 간의 업무분담, 공동신용자금 조성 등을 시행
자.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함
차. 원조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취약국가에서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가. 공여국 간 대화 및 수원국과의 대화를 통해 OECD/DAC 원칙 도입
나. 경제, 개발, 외교, 안보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제고
다. 범정부적 접근 활용
라. 취약국가 개발 원칙의 체계적 도입
•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대응 방안 마련
• 해당 기관의 취약국가 개발정책 ┌전략과 OECD/DAC 원칙간의 조화
마. 원조 배분시 관련 기관의 협력과 투명성을 확보
바. 원조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수단 도입</td></tr>
</table>

	• 단기적 과제인 평화구축, 정부구축, 안정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은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장기적 이행에 기여함		
향후 연구방향	1. 취약국가에 관한 개발 원칙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OECD 회원국과의 지속적, 전략적, 통합적 접근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천년개발목표(MDGs) 3.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3. 20 (2009. 2. 9)	페이지 수	8
기타	–		

제목	취약국가에서의 올바른 국제적 개입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DAC 문서 주제	Fragile State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F-R-3
DB 키워드	취약국가(Fragile states), 국제적 개입(International Engagement)				
주제	1. 취약국가에서의 올바른 국제적 개입에 관한 원칙 및 주요정책 이행 현황				
주요 연구결과	1. 취약국가의 정의 및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가. 사회에 대한 통제권 및 행정권이 제한적이거나 만성적인 비인도주의, 지속적인 사회 갈등, 폭력 및 내전 경험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취약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나. 취약국가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단합을 기반으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다. 국제적 개입만으로 취약국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나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입 원칙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주요 정책제언	1. 취약국가가 합법적이며 견고한 국가를 건설할 수 정부와 기관간의 협력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원조를 집행함 2.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가. 모든 원조활동은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하며 원조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 및 고려함 나. 분쟁 발생 위험 또는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분쟁의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다. 국가의 정치, 안보 및 개발 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 라. 안정된 사회를 위해 비차별 및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원조 프로그램의 조정 및 협력, 국제원조기관과의 협력 체제 협의, 취약국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실시함				
향후 연구방향	1. 향후 공여국의 효율적인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2007)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2. 8)	페이지 수	2		
기타	1. OECD/DAC장관급 및 국제원조기관의 대표자급이 참석한 2007년 OECD DAC 고위급회의(2007 OECD DAC High Level Meeting)에서 "취약국가 및 취약상황에서의 올바른 국제적 개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을 도입 2. 동 원칙은 2005년 1월 취약국가에서의 개발효과에 대한 고위급 포럼(2005 Senior Level Forum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Fragile States)에서 처음 제안된 사항으로서 취약국가는 다른 수원국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원조지원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촉구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3. 동 원칙은 취약국가에서의 공여국의 원조협약 실행 평가를 위한 OECD/DAC 동료검토(DAC Peer Reviews)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table>
<tr><td>제목</td><td>취약 상황에서의 국가 건설에 관한 주요개념과 딜레마(Concepts and Dilemmas of State Building in Fragile Situations)</td><td>DAC 문서 주제</td><td>Fragile States</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F-P-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국가 건설(State Building), 취약국가(Fragile State), 평화구축(Peace Building), UN 통합평화건설전략(Integrated Peace Building Strategy)</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국가건설과 취약 국가와 관련된 주요 개념 정리
2. 취약 국가에 대한 원조 공여국의 정책 권고사항</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가 취약상황에 빠질 수 있음
가. 국가–사회 간의 사회계약의 변동 관리를 위한 정치 과정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나. 국가의 조직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다. 국가의 기능 및 역량과 사회의 기대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2. 국가 취약상황의 원인 및 재건 요소
가. 사회가 국가에 갖는 기대치
나. 국가역량
다. 사회의 기대에 따라 국가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려는 엘리트의 의지
라. 국가의 정치과정
마. 국가 및 정권의 정당성
3. 국가의 역량과 국가에 대한 사회 기대치간의 균형을 조절 및 유지하여 취약상황에서의 국가 재건력을 유지할 수 있음
4. 취약국가의 정치과정 개혁과 경제성장을 통해 취약상황의 안정과 재건이 가능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취약국가의 국가 정책 분석 지원
가. 취약국가에서의 국가건설정책을 위해 국가의 현황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2. 취약국가의 정당성 확보를 지원함
가.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
• UN Secretary-General의 방문, 취약국가에 대한 지지지선언문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 확보를 지원함
3. 국가별 취약상황을 고려한 지원
가. 취약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경우
• 공여국은 취약국 정부와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 정부의 예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실시함
나. 국가의 재건 의지가 부재한 경우
• 수원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정치개혁 이행 및 서비스 제공 압력을 행사함
다.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경우
• 외교 ·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함
4. 취약국가의 정치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가. 국제사회는 취약국가 내 엘리트 집단에 대한 지원, 헌법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 분쟁해결기술 구축에 대한 지원, 위기 증폭 시 직접적 중재를 통해 취약국가의 정치과정을 지원함
5.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가. 취약국가가 국가와 사회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6. 취약국가에 대한 전반적 지원
가. 안보개혁 지원
• 안보 개혁에 대한 지원은 취약국의 거버넌스와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수원국의 국가 역량 및 비합법성 이슈가 포함되어야 함
나. 서비스 제공</td></tr>
</table>

	• 보건, 교육, 수자원과 공중위생 등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지원을 위해 수원국에 대한 지속적 현황평가를 실시함 다. 경제성장 지원 • 예산결정과정을 통해 수원국내 주요 경제성장 과제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부패와 범죄 예방 및 척결 지원 • 수원국 사회 내 반부패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 및 척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분쟁 후 취약상황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와 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평화구축활동을 통해 국가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7. 취약상황 극복을 위한 과제 가.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는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임을 인식하고 정당성 확립한 장기적 국가안보구조 개발을 중심으로 국가 건설 정책을 지원함 나. 취약상황 극복을 위해 UN 통합평화건설전략(Integrated Peace Building Strategy)을 활용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2.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to Fragile States and Service Delivery in Fragile Situations: Key Concepts, Findings, and Lessons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2. 8)2008 (2009. 2. 13)	페이지 수	79
기타	1. 본 문서는 DAC 취약국가그룹(DAC Fragile States Groups)이 후원했음		

<table>
<tr><td>제목</td><td>취약국가 및 취약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국제적 개입의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td><td>DAC 문서 주제</td><td>Fragile States</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F-P-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취약국가(Fragile States), 국제적 개입(International Engagement), 범정부적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취약국가의 빈곤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이 필수적임
2. 올바른 국제적 개입을 통해 취약국가의 빈곤 및 불안정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개입의 장기적인 목표는 수원국내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 제도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국민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것임</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취약국가의 사회정치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
가. 분쟁 및 위기 이후 또는 정치적 변화의 상황, 거버넌스 환경의 악화, 장기적 위기 해결의 역량, 정치적 의지, 법률적 제한점을 파악함
나. 해당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을 기획 및 집행함
2. 국제적 개입으로 발생 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함
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 국제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나. 공여국은 돈세탁방지와 금융 분야에서의 부패 방지에 대해 특별히 주의함
3. 국가 건설을 중점 목표로 수립함
가. 취약국가에 대한 개입 시 국가의 중점 기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나.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시민사회 참여 그리고 평화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원함
4. 우선순위에 입각한 위기관리를 지원함
가. 국제 개입 시 위기와 불안정의 초래 및 악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함
나. 위기관리 지원 시 국가 취약성의 근본 원인 이해, 여성을 포함한 수원국 국민의 역량 강화,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역 조직의 평화구축 역량 지원, 공여국 간의 위기분석결과 공유, 위기 방지 공동 미션 수행 등을 포함함
5. 정치, 안보, 개발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
가. 취약국가의 문제는 대체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인 측면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함
나. 범정부적접근의 실행을 위해 안보, 정치, 경제 개발 분야 원조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지원함
6.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건설을 지원함
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성 평등 및 사회 통합을 지원함
7. 공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함
가. 취약국가의 상황분석과 평가 및 전략의 공유, 신탁 기금, 공동 보고 등을 통해 공여국간의 협력을 제고함
8. 취약국가 및 취약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장기적 개입을 실시함
가. 수원국의 상황 변화에 대해 즉각적이며 융통성 있는 대응
나. 수원국의 제도 및 역량 개발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개입
9. 전 분야를 포용한 원조를 집행함
가. 공여국은 개발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원조고아(Aid Orphans)를 고려함</td></tr>
<tr><td>향후 연구방향</td><td colspan="5">–</td></tr>
<tr><td>관련 DAC 주제</td><td colspan="5">1.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2. 거버넌스(Governance)</td></tr>
<tr><td>관련 DAC 문서</td><td colspan="5">–</td></tr>
</table>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2.9)	페이지 수	4
기타	–		

제목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in Fragile States)	DAC 문서 주제	Fragile States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F-P-3
DB 키워드	공동 활동(Joint-up Working), 일관된 원조집행(Alignment), 공여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				
주제	1.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의 이행 사례를 분석하여 범정부적 접근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 입증 2.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관련 권고사항 제언				
주요 연구결과	1.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가. 취약국가에서의 초국가적 범죄, 무기 및 마약 밀매, 무력 충돌, 대학살, 테러 등은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안보와 개발에 위협이 됨 나. 국제사회는 취약국가에 대한 외교, 안보, 개발, 재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일관되며 조화된 원조를 집행함 • 공여국 및 공여국간의 일관된 정책과 원조 활동은 취약국가의 장기 개발 목표 달성과 안전성 제고에 효과적임 2. 개념 및 정책적 수준에서의 범정부적 접근 평가 가. 다양한 정치 구조 및 법적 절차가 정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침 나. 공여국 정부의 정치적 관심과 우선순위가 범정부적접근에 영향을 미침				
주요 정책제언	1. 범정부적 접근 프레임웍의 활용 가.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은 통합적 접근의 효과를 향상시킴 나. 범정부적 접근 프레임웍은 취약국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협력활동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공동 정책, 관계된 주요 행위자간의 효과적인 대화창구 마련 및 각 조직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도록 함 다. 관련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여 그들의 역할 및 목표를 제시함 • 개발 협력, 외교부처 및 안보 관련 부서는 취약국가의 범정부적 접근의 주요 행위자이나 주요 행위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제, 무역 등 다른 부서들의 참여를 권장함 • 다양한 행위자를 위해 통합된 목표와 아젠다, 정책 협상 및 정책 통합이 필요함 라. 정치적 결정권자 간의 협력이 필요함 2. 공동 국가 전략 및 공동 분석 가. 국가별 공동 운영전략 • 본부와 현장에서 국가 전략 실행 가이드를 제공함 • 범정부적 접근에 정치, 안보, 개발 이슈에 관한 공동 분석을 통합함 • 자원의 유용성과 공여국 역량간의 균형을 위해 국가 공동 평가를 실시함 3. 수원국내 환경 조성 가. 정치적 리더십과 지도력 확보 나.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확보하여 협력 증진 지원 4. 정책 일관성 및 공동 활동의 제고 가. 재정지원 메커니즘 구축 지원 • 공동예산 책정 및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공동 계획을 촉진함 • 부서별 재정경쟁 등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고려함 나. 보고체계 구축 지원 • 공여국과 수원국의 공동보고는 본부와 현장 간의 협력을 강화함 다. 직원 파견 및 배치 지원 • 파견근무를 통해 직원의 실무경험 및 공동 활동 역량을 강화하며 패러다임 도입을 촉진함 5. 범정부적 접근 활용 시 고려사항 가. 공여국간 원조조화 나. 수원국의 기관과 제도체계를 고려한 일관된 원조집행 다.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향후 연구방향	1. 범정부적 접근의 과제 및 문제점 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통합 나. 범정부적 접근에 포함되는 행위자의 범위 다. 행위자 간의 다양한 관점 및 역할의 균형 • 취약국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연구 • 행위자 간의 문화, 임무 및 법령 등의 차이 • 개별 부서의 이해관계 라. 재정 및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Policy Coherence and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in FragileStates (2005) 2. Piloting the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States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3)	페이지 수	56
기타	1.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사례연구(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p.47)		

제목	Service Delivery in Fragile Situations: Key Concepts, Findings, and Lessons(취약상황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DAC 문서 주제	Fragile States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F-P-4
DB 키워드	취약국가(Fragile States), 취약상황(Fragile Situations), 공공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거버넌스(Governance),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분야별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 분야별관리(Sector-Wide Management, SWiM),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				
주제	1. 기초 공공서비스 확대는 국가의 정당성을 재정립하고 시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재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 연구결과	1. 취약상황은 국가안보유지, 경제개발 진행, 국민들의 기본욕구 충족 등 정부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역량 또는 의지 및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임 2. 취약상황은 다음의 시나리오로 구분 할 수 있음 가. 취약상황의 악화 • 개발정체기(Arrested Development): 낮은 수준의 정부 역량과 정당성 • 개발후퇴기(Deterioration): 정부 역량의 감소로 인한 정당성 확보 불가, 사회 붕괴위기 증가 나. 취약상황의 안정화 • 전후과도기(Post-Conflict Transition): 낮은 수준의 정부 역량과 일시적 정당성 확보, 폭력사태의 경험 • 초기회복기(Early Recovery): 정부 역량의 증대, 국제적 지원 수요 감소, 분쟁 또는 기타 위협의 감소				
주요 정책제언	1.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작업 가. 취약상황의 개선을 위한 의지와 역량 보유한 국가의 경우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조 집행 2. 대안적 집행 모델: 수원국 정부의 취약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취약상황 개선사업을 집행함 가. 취약상황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 국가 규정(State Provision): 제한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략 분야이며 취약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법 및 안보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규제를 통해 제공함 • 계약(Contracting): 수원국과의 계약을 통해 공여국은 취약국가에서 국가가 계약을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도로, 정부조달 등의 공공-민간 혼합 서비스를 제공함 • 공동생산(Co-Production): 서비스 소비 집단이 응집성과 공통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양어장, 초등학교 등의 공공-공유의 혼합 서비스를 제공함 • INGO 규정(INGO Provision):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나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생식건강권(Reproductive Health)과 같은 공공-사유-공유의 혼합 서비스를 제공함 • 민간 규정(Private Provision): 기본적인 시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의 우려가 있는 가정용수공급 등의 사유재를 공급함 • 지역활동(Community Action): 사회자본, 리더십, 기본적 욕구의 보장에 의존하는 공공보건, 위생 서비스 등의 공공재를 지역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공함 3. 전략적 선택 가. 공여국간 조정 메커니즘 결정 • 공여국 간 조정 메커니즘: 신탁기금, 다자간신탁기금, 분야별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es, SWAPs), 분야별관리(Sector-Wide Management, SWiM),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WGA) • 공공서비스 패키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재구성 함 4. 당면과제 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접근법 선택 • 국가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특성 파악 나. 수원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개선				

	다. 각기 다른 제도적 기반, 사회집단, 계층 및 지역에 따른 이행수준의 상이성 극복 • 지역적 다양화에 대한 공여국과 해당 정부의 관심 • 특정 사회집단을 배제하지 않도록 함 라. 여성 복지와 경제적 참여 기회 증대 5. 취약상황 개선 정책 이행의 딜레마 가. 공여국의 공공서비스 참여 • 공여국의 참여 필요성과 협력방안에 대한 수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나. 수원국내 역량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역량의 탈집중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규모, 책임 기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다. 효율성과 지속성 간의 선택적 집행 • 취약국가 내에서 공여기관의 활동은 수원국 내 필요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이 광범위한 정치경제 목표와 조정될 수 있음 • 인도주의적 필요성(Humanitarian Imperative): 정부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자립형 INGO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긴급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정치적 필요성(Political Imperative): 공공서비스 재건의 정치적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역량과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단기적인 이익관계에 따라 방해할 수 있음 6. 정책함의 가. 수원국의 취약상황에 알맞은 정책 수립 • 수원국 별 취약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 프로그램의 전략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및 관리 • 각 분야의 공여국 개입방법에 따른 위험-편익 분석 나.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국가 건설에 장기적 초점을 맞춤 • 공여국의 공공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기획과 목표가 수원국의 국가역량, 거버넌스 개선 목표와 통합되어야 함 • 공여국의 공공서비스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간의 조정을 통한 일관성 증진이 중점 목표가 되어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국 내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수원국의 취약상황 변화에 따른 관리 • 공여기관은 수원국의 취약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 수립 • 수원국의 취약상황 변화에 따라 개발프로그램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수원국 정부로 이전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2. 거버넌스(Governance) 3.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4.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9.2.11) / 페이지 수 / 55
기타	–

제목	개발협력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대한 DAC 권고사항(DAC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DAC 문서 주제	Gender	DAC 문서 분류	Guidelines
				문서번호	G-G-1
DB 키워드	성 평등(Gender Equality), 여성의 권한강화(Women's Empowerment),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주요 권고사항	1. 성 평등을 개발 목표로서의 정립하고 개발계획 및 평가 과정에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 2. 정부와 시민사회, 외부 개발기관의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확립 3.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의 권한 강화를 통해 성 평등을 달성				
세부 권고사항	1. 성 평등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인간 중심의 개발을 달성해야 함 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지식과 통찰력, 경험을 결합시켜야 함 나. 지역적인 리더십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전략을 개발함: 성 불평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 강화를 지원함 다. 성 평등 문제를 모든 개발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분석과 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함 라. 개발 관련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함 2.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주도적으로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과 실행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함 가. 수원국 내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정책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함 나. 성 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통해 다자 원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 다.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 관련 정책의 일관성 개선을 위해 OECD/DAC 회원국 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함 3. 성 평등을 증진하고 수원국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DAC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함 가.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제안된 성 평등 정책의 효과와 가능성을 분석해야 함 나. 정책대화에는 여성기관과 성 평등 지지그룹을 포함시키도록 장려 함 다. 국가별 분석과 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적절한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함 • 해당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파악함 • 성 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국가 정책과 전략을 파악하고 관련 책임 기관의 역량을 분석 • 수원국 내 성 평등 관련 기관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와 우선 분야에 대해 논의 • 경제학자, 사회과학자 등 관련 전문 인력과의 협력과 대화를 증진 라. 분야별 정책 개발과 기관 개혁을 실행 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채택해야 함 마. 정책개발과 실행 및 관리 기관의 역량강화: 해당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 분석 후 성 평등 달성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함				
주요개념	1.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여성과 남성 모두 개발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사회 자원 및 결정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함				
배경과 역사	1. 1995년 여성에 관한 UN 제4차 세계회의(United Nations Fourth World Conference)에서 OECD/DAC 회원국과 수원국 간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간 중심의 개발모델에 기반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함 2. 이 문서는 베이징 선언(1995) 및 개발과 개발협력을 위한 중심 목표로서의 성 평등에 관한 1995 DAC 고위급 회의 성명,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대한 국제 및 국내공약과 일치하는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임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원조의 질(Quality of Aid) 2.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d Development (1995) 2.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New Global Context (1995) 3.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9 (2009. 2. 8)	페이지 수	46
기타	1. Annex 1.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p.37) 2. Annex 2. Beijing Declaration(p.42)		

<table>
<tr><td>제목</td><td>젠더와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Gender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G-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Women in Africa)</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성차별은 여성의 빈곤과 개발기회의 결여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함
2. 아프리카 지역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해 여성의 토지 소유권 확보, 투자 및 무역 기회의 개선, 경제 규제 및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아프리카 여성의 현황
가. 아프리카 지역 내 15세 이상 여성의 문맹률은 49%에 이름
나. 아프리카 지역 내 HIV/AIDS 양성 반응을 보이는 15-24세 이하의 인구 중 75%가 여성이며 임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유럽 지역의 180배에 달함
2. 여성의 토지 소유권
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토지는 빈곤 계층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성을 갖는 자산이나 여성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1% 미만이며 여성의 농업 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미미함
나. 아프리카 여성들은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계유지가 어려움
다. 주요 과제는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임
3. 경제 정책에서의 양성 평등
가. 양성 평등을 고려한 예산은 국가 개발 체계 전반에서 양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기제가 됨
나. 젠더 예산 설정은 공공재원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에서의 양성 평등 주류화를 목표로 하며 현재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러한 젠더 예산 설정을 실행하고 있음
다. 젠더 예산 설정의 주요 과제는 정부 내 양성 평등 주무 부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여성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4. 투자 및 무역 정책에서의 성 차별
가.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차별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나. 무역 및 투자 정책의 성차별 영향에 관한 분석 및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젠더 정책 분석이 필요함
5. 양성 평등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원조
가. 1995년 베이징 회의 이래 양성 평등을 위한 원조는 향상되어 2001-2005년간 양성 평등에 중점을 둔 ODA는 160% 증가했지만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ODA는 전체의 10%에 불과함
나. 양성 평등에 관한 몬테리올 합의와 파리 선언 이행이 주요 과제임
다. 결과 중심적 원조 평가 과정에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3">1.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가. 여성의 토지 소유권 확대
• 토지 개혁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여성 친화적 법률과 정책 실행 감독 기관 설립 및 재정 계획 수립
• 성차별적 토지 상속권, 유산 분배를 검토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td><td colspan="2">2. 공여국에 대한 정책 제언
가. 여성의 토지 소유권을 확대함
• 여성 소유 토지의 개발, 토지개혁의 감독과 평가 기구를 지원</td></tr>
</table>

	나. 양성 평등을 위한 경제 규제 • 양성 평등을 고려한 PFM 체계 수립 및 젠더 예산 설정 강화 • 가사 업무 등을 비롯한 여성의 노동 부담과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절차 인정 다. 양성 평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 • 적절한 자원 분배를 위해 부서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계획 단계에서 부터 양성 평등 목표 달성을 고려해야 함 • 빈곤 감소 전략에 양성 평등 촉진을 위한 예산 분배를 설정함 라. 투자 및 무역에서 여성에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아프리카 여성 경제인 지원을 위해 대출 신용 한도를 높임 • 중소기업경영 여성들의 생산 확대와 다각화를 위해 지원함 • 기술 활용을 통해 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다각화 및 상품 차별화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개선함	나. 양성 평등을 위한 경제 규제 • 원조 예산에서 양성 평등 달성을 고려하는 예산 수립을 장려함 다. 양성 평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 • 양성 평등 개발 정책 목표 및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파리 선언과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을 장려함 • SWAPs의 성 주류화와 수원국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양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재정 담당 기관을 설립함 라. 투자 및 무역에서 여성에 기회 를 확대해야 함 • 여성 관련 제조업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도모함 • 프로젝트 실행과 양성 평등, 무역 성과 및 개발 간의 연계를 인식하고 무역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여성 위원회에 보조금과 교육훈련을 지원함 •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역량을 향상시킴 • 아프리카 여성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시행함
향후 연구 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3.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02.10)	페이지 수 57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성 평등과 원조 집행 : 1999년 이후 개발 협력기구의 변화(Gender Equality and Aid Delivery: 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R-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성 평등(Gender Equality), 원조 집행(Aid Delivery), 개발 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 원조 기구(Development Agency),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회원국 원조기관들의 성 평등 정책과 제도 마련 및 실행 연구
가. 성 주류화를 위한 원조 목표와 원조 양상의 최근 변화
나. 성 주류화의 제약 요인 및 효과적 대응 전략
다.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절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원조 목표와 원조 양상의 변화
가. 1999년도에 OECD/DAC은 개발협력 기관들이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개발 기관들은 젠더 전문가들의 고용 증대 및 필드 배치와 정규적인 모니터링, 특별 예산 선정 등을 권고 받음
• 1999년 이후 성 평등 또는 여성과 개발의 강조가 확연해짐
나. 성 평등을 강조한 새로운 원조양상을 소개함
• 성 평등을 개발 협력에 있어서 우선시 함
• 새로운 원조 목표와 원조 양상이 성 평등 이슈를 개발 협력의 일부로 통합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임
• 프로그램에 기초한 접근, 주인의식, 발전된 공여국과의 조화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및 성 평등의 평가와 분석의 부족으로 성 주류화에 실패함
• 원조기관 또는 공여국 정부의 성 평등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가 성 평등 활동을 저해함
• 성 주류화가 조직 또는 정부 전체에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지기보다 여성부 등의 관련 부처에만 제한되고 있음
• 담당 전문가와 성 평등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부족함
다. 새로운 성 평등 정책 및 전략은 원조기관과 공여국의 내부 변화를 가져옴
2. 성 평등 정책의 현주소
가. 성 정책
• 대부분의 원조기관은 성 평등을 개발 활동 및 정책의 일부로 다룸
• 성 평등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성 주류화 및 여성과 개발을 정책에 포함)
• 정책의 구체화 및 법제화를 위해 특정 목표와 책임을 명시함
• 다른 정책에서도 성 평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나. 담당 직원과 예산
• 부족한 예산과 직원 수는 성 주류화 확산을 저해함
• 성 주류화와 성 평등에 있어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예산과 성 평등 자문을 둔 국가 사무소(Field Office)의 비율, 자문의 직위 등에는 오히려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다. 집행과 절차
• 대부분의 원조기관에서 OECD/DAC 성 평등 정책 평가(Gender Equality Policy Marker)와 같은 모니터링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조기관의 성 평등 정책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도입되지 않았음
• 원조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성 평등에 관한 내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음
라. 정책의 적용
• 성 평등 활동은 대부분의 원조기관의 활동에 포함되어있으나 완전한 성 주류화에는 이르지 못함
• 전반적인 성 평등 관련 정책 및 활동 그리고 성 평등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의 규모가 확대됨</td></tr>
</table>

	3. 성 주류화의 제약요인 가. 담당 직원 및 원조기관 직원들의 젠더 훈련이 부족함 나. 성 평등 향상을 위한 지식과 의지가 부족함 • 문화적 차이, 수원국 성 평등에 대한 무관심, 정치적 의지가 부족함 다. 예산 부족 및 예산 운영의 문제점 라. 조직의 열악한 구조와 책임 있는 절차 및 모니터링이 부족함		
주요 정책제언	1. 성 평등 정책의 임무 완수를 위해 담당 직원과 예산 및 집행에 투 자가 필요함 2. 성 평등 이슈에 관한 제도적 관심이 필요 가. 책임 절차 및 장려금, 직원채용 증대 및 직원 훈련이 필요함 3. 전문적인 자문단의 수를 늘리고 이들을 현장에 배치 함 4. 다양한 모니터링과 책임기제를 개발함 5. 효과적 집행과 절차가 필요함 가. 공여국은 수원국의 여성 조직 ·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나. 성 평등을 HIV/AIDS와 같은 다른 주요 이슈들과 연계함		
향후 연구 방향	1. 성 평등 활동을 개발 원조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2. 성 주류화를 위한 부족한 인력과 자원의 충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Development (2000) 2. Analysis of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1999-2003)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1. 23)	페이지 수	68
기타	1.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의 평가 구조(p.35) 2.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원조 평가(p.37-38) 3. 부록: 질문서		

제목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파리선언의 공약과 정책적 함의(Paris Declaration Commitments and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DAC 문서 주제	Gender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G-R-3
DB 키워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성 평등(Gender Equality), 권한강화(Empowerment), 성 평등 전문가(Gender Specialist), 젠더대응지표(Gender Responsive Indicator)				
주제	1. 파리선언의 이행을 통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의 도모				
주요 연구결과	1. 파리선언과 성 평등 가.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나. 파리선언을 통해 성 평등의 달성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함 2. 성 평등 관련 파리선언의 이행 상황 가. 성 평등 목표가 빈곤감소 전략, 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분야별원조계획에 잘 통합되어있지 않음 나. 예산지원프로그램에서 양성 평등과 여권신장이 주류화 되지 못함 3. 개발정책이 성 평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불평등한 원조 예산 분배, 제한적인 원조 지원의 구조 개혁 등으로 인해 원조 효과성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정책제언	1. 빈곤 여성 및 남성 모두의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파리선언을 이행하고 지지해야함 2. 국가 내 개발협력 전략에 성 주류화를 실시 · 확대해야 함 3. 젠더를 고려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야 함 4. 젠더 전문가들이 정책대화와 원조지원 및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해야 함 5. 공여국/기관과 수원국의 역할과 책임성을 증대시켜야 함 6. 공여국 간의 실무작업반을 설립하고 공동연구와 지원을 도모해야 함 7. 국가개발계획과 전략수립 과정에 남녀 모두 공평한 발언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8. 성 평등을 위한 원조를 공약한 공여국은 수원국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및 정책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활용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 9.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 평등 원조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모든 과정에서 성 평등 이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원함 10. 젠더대응지표(Gender Responsive Indicator)를 활용해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함				
향후 연구 방향	1. 원조 효과성 실무작업반의 향후 연구 방향 가. 성 평등 안건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기회가 있는가? 나. 젠더전문가들이 원조효과성 조사위원회의 계획을 지지하고 집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 파리선언의 이행 시 성 평등에 대한 고려를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2. DAC 젠더네트워크(GENDERNET: 기타 참고)와 회원국의 향후 연구 방향 가. 파리선언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범세계적 개발전략 수립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나. 개발전략 사용의 적당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다. 공여국/기관 간의 성 평등 정책의 조화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가? 라. 공여국의 성 평등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여국 간 원조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마. DAC 젠더네트워크는 회원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7. 23 (2009. 2. 10)	페이지 수	14		
기타	1. DAC GENDERNET: 성 평등 전문가, 시민사회,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성 평등에 관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하고 경험, 정보 및 지식을 공유를 모색하고 있음				

<table>
<tr><td>제목</td><td>여성의 시장진입과 빈곤 친화적 성장의 활성화(Enhancing Women's Market Access and Promoting Pro-poor Growth)</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M-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성불평등(Gender Inequality),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시장진입 장벽, 권한강화(Empowerment), 성 분석</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빈곤 친화적 성장 및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여성의 시장진입을 막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가. 금융시장
• 대출 신청 시 담보 요구, 복잡한 대출 신청과정 및 서류, 대출최저한도 및 상환기간의 변경 불가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절차 간소화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대상 대출과 보험 가입이 어려움
나. 노동시장
• 여성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남성에 비해 저임금, 고위험, 열등한 근무조건 및 저조한 노동조합 가입을 특성으로 하는 직업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
• 노동생산성을 고용과 급여체계의 평가 지표로 활용해 형평성 확보
다. 상품 및 서비스 시장
• 상품 판매 및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이용의 제한, 수출허가 요구, 상품의 최소거래 한도 제정 등이 여성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진입을 제한하므로 시장 정보의 유통 활성화가 필요함
• 여성의 경우 사회적 금기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고용, 서비스 용역 이용이 크게 제한되며 가사와 출산의 의무로 사회 활동 저조함
• 육아시설 확충 및 에너지 및 수도 공급을 통해 여성 가사부담 축소
• 여성 시장진입의 구조적 장벽을 줄이고 소외 계층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성장 및 빈곤 완화 도모함
3. 여성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이윤 창출 도모</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시장진입에서의 성불평등
가. 사회 · 문화적 금기 및 규범으로 인해 여성의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함
나. 노동, 금융, 상품, 서비스시장에 있어 여성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함
2. 성불평등으로 인한 손실
가. 효율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 저하 및 소득 불균형을 초래함
나.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경우 복지혜택 감소, 성별 간 임금격차 증가 등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함
다. 성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은 세대 간에 세습되는 경향이 높음</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여성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원조 및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가. 남녀 성차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원조 및 개발프로그램 마련
• 남녀 성차로 인한 가치 체계를 중점으로 하는 성분석기법 도입을 통해 성불평등과 그 영향을 파악함
• 여성의 사회적 위치, 가치 분석을 통해 원조 및 개발정책을 결정함
나. 원조제공 시 성 차별 위험을 최소화함
• 장기 원조는 금융기관 및 사회 참여 보장 확대를 통해 성차별적 위험을 완화시켜야 함
• 단기 원조는 긴급 Food-for-Work 프로그램, 노동자 재교육, 수송 및 저장 수단 공급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
다. 여성의 권한강화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여성의 권한강화 및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여성의 고부가가치 상품 판매를 위해 교섭역량과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생산성을 강화 · 확대해야 함
• 육아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시장 진출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함</td></tr>
</table>

	라. 여성 연대와 교류 촉진을 통한 커뮤니티를 형성함 • 여성 연대와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여성의 협상 능력 강화, 자원 접근성 확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함 마. 여성 대상 대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사회 ·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이 금융시장 접근에 용이하게 함 • 빈곤층 여성에게는 사회 및 건강보험 제공이 중요함 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공식화를 도모함 • 행정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을 통해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 • 비공식 경제 여성이 공식경제에 편입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함 •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여성들 간의 연대 및 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의 공식 경제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함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1. Gender Equality in Sector Wide Approaches 2. Gender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8. 26(2009. 1. 23)	페이지 수	10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젠더문제의 중요성
(Why Gender Matters in Infrastructure)</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R-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인프라(Infrastructure), 식수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 여성의 권한 강화(Women's Empowerment)</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여성과 소녀들의 삶과 기회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중점 목표가 되어야 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식수 및 위생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여성의 해당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함
가. 프로젝트 기획 시 젠더 요소를 포함해야 함
• 인프라 구축 지원 기획 시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우선순위와 수요, 인프라 시설의 이용 유형 등을 파악해야함
나. 성 분석 및 성 구분 데이터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활용
• 성 분석은 성별 필요사항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며 토지 사용이나 수자원에 대한 권리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성 구분 데이터의 활용은 여성과 남성의 활동 패턴 및 고용과 시간 활용, 프로젝트에 의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빈곤여성에 대한 투자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빈곤 여성 관련 데이터는 국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보다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함
다. 자문, 참여 및 결정권 행사 시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 사항
• 여성의 직무 기회를 넓히고 직접적인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교육과 직업 기회를 창출하며 식수 운반 등의 부수적인 노동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여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통해 여성 지도자와 전문가를 배출해야 함
라. 빈곤 여성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성 평등 전략 개발 시 고려사항
•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여성 및 남성의 일상적인 업무 또는 계절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지의 여부
• 수도 인프라가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지의 여부
• 새로운 인프라의 건설이 현재의 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관련 여성 인구의 수입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 도로 건설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 여성의 식수나 땔감 획득을 위해 소용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
• 식수원 등 여성의 인프라 활용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곳인가에 대한 검토
마. 기술,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훈련, 컴퓨터, 운송 수단 등의 자원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바. 여성 권한강화에 대한 비전 공유
• 수원국 정부와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 지방 엘리트 등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의되어야 함
• 수원국의 여성관련 부처 및 NGO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공여국과 원조기구들이 각기 실행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간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중복 사용과 낭비를 방지함
사. 프로젝트의 젠더 목표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프로젝트의 결과와 영향력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만족도 조사도 중요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td></tr>
<tr><td>향후
연구방향</td><td colspan="5">–</td></tr>
</table>

관련 DAC 권고사항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4. 10 (2009. 2. 9)	페이지 수	8
기타	1. 본 문서는 DAC의 양성평등 네트워크에 의해 작성되었음		

<table>
<tr><td>제목</td><td>성 평등 관련 개념 및 접근방법에 대한 DAC 자료집(DAC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M-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성 평등(Gender Equality), 주류화(Mainstreaming), 베이징협약(Beijing Platform for Action), 권한 강화(Gender Empowerment),</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성 평등과 연계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며 각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고 성 평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며 접근방법을 연구</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양성 평등과 연계된 주요 개념에 대한 배경, 문제점 및 접근방법
가. 책임성: 양성 평등 관련 정책의 실행 지연으로 인해 각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구별되면서 나타나는 "정책의 계층화(Hierarchy of Policies)"는 정책 분석가들에게 한층 강화된 책임성 있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책임감은 실제 정책 실행 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내세운 정책 계획, 강화된 리더십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정책 수행, 수원국을 위한 개발협력프로그램 수립 등 한층 강화되고 독립된 여성운동이 등이 필요함
나. 여성의 권한강화: 양성 평등의 연계로서 개발협력정책, 문서 및 자료 등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권력과 개발 간의 상호관계로 인해 명확한 정의가 어려움
• 개발협력프로그램은 여성이 직접 주체의식을 갖고 여성 자신의 역량과 권한 강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함
• 베이징협약 하에 각 국가는 여성이 사회적 의사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함
• 여성의 권한 강화를 정의함에 있어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함
2. 베이징협약의 주류화
가. 지속적인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서 수원국 정부 및 공여기관의 역량 부족은 장애물이 되기 쉬움
나. 양성 평등 및 개발에 대한 이해, 연구, 분석, 기획,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및 트레이닝 기관 구축 등을 범정부적으로 증진할 것을 강조함</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양성 평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가. 단순히 개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평등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시 여성의 비전과 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2. 양성 평등을 위한 접근법
가. 베이징협약은 양성 평등의 주류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및 이익이 제공되도록 여성 권한강화를 강조함
나. 모든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함
다. 세부적인 개발협력프로젝트와 함께 정부 차원의 포괄적,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라. 수원국의 여성 기관과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를 지원함
마. 동시에 남성 평등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함
• 양성 평등 전략 수립 시 여성의 평등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및 사회 내의 성별권한 및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해 남성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함
바. 양성 평등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 양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구, 시민사회의 주요 역할 및 분야, 역사, 문화, 행정 절차,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양성 평등 달성 목표를 서로 연계하여야 함
3. 제도적인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가. 공여기관은 다음 세 가지 분야로 구별하여 성 주류화를 실행해야 함
• 수원국: 수원국의 성 평등을 위한 제도, 법, 정책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함
• 공여기관: 공여기관 자체의 절차 등을 활용함
•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활용함</td></tr>
</table>

나. 주류화의 합리적인 실행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함
- 인종차별 철폐 및 통합적 접근
- 모든 개발 관련 아젠다를 선정하는데 여성이 참여함으로서 기존의 개발 체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다. 여성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역량강화
-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여성의 복지 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관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함

4. 기획 및 실행 과정 중의 정책 소멸: 수원국 정부의 정책 노력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해 발생하는 정책소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리더십, 정보 수집 및 분석, 제도,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양성 평등 관련 이슈별 자문, 행정 절차의 간소화, 국가적 차원의 관련 기관 간 협력 등이 필요함

5. 젠더 훈련(Gender Training)

가. 양성 평등 목표와 접근법에 대한 범정부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나. 공여기관 담당 전문가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웍, 용어 및 기술,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전문 교육 훈련이 필요함

6. 여성의 참여 및 평등 관련 성과와 영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

7. 프로그램 지원

가. OECD/DAC은 일반 · 부문별 프로그램 지원, 식량지원 프로그램, 부채 경감을 통해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함

나. 정책대화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 양성 평등 강화를 위해 정책대화를 활용함
- 양성 평등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원국과 협의함
- 양성 평등 문제가 기타 개발 어젠다와 함께 고려되도록 함
- 정책대화에 여성단체 및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원국 정부가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다.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 및 분석적 툴은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른 수혜자 평가(Gender-disaggregated Beneficiary Assessment), 공공지출부담 분석(Gender-disaggregated Public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 성별 예산 및 시간 조사 분석(Gender-disaggregated Analysis of Financial Budget and Time Survey Interactions)
- 성 인지적 공공지출에 대한 정책평가(Gender-aware Policy Evaluation of Public Expenditure), 성 인지적 중기 경제정책 (Gender-aware Medium-term Economic Policies)

8. NGO의 양성 평등 프로그램

가. 정부는 NGO가 관련 프로그램에서 양성 평등 달성 목표의 반영 여부, 프로그램 이행 시 필요한 자원과 역량 및 운영시스템 보유, NGO 간의 협력, 양성 평등과 기타 개발사항 간의 연계성 확보,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 참여 정도,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여부 등을 살펴

9. 양성 평등 지원을 위한 지역적인 프로그램

가. 양성 평등 지원 프로그램 실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는 국가기금 또는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성 평등과 인권 보호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함

10. 담당자별 토론 및 시너지 효과

가. 정치가, 공여기관 등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일괄적으로 토론을 가지기 보다는 각 문제에 맞는 담당자별 토론을 마련하고 '여성과 환경'과 같이 기타 이슈와 여성문제를 통합 접근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임

11. 부정(Denial), 소극적인 자세, 의사결정의 지연, 명목주의, 주류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과 같은 저항 세력에 대한 대응방안

가. 성불평등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 및 정보 보고서를 준비

나. 프로젝트 기획 시 성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프로젝트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다. 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 영향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마련 라. 프로그램 실행 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파일럿프로젝트(Pilot Project) 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양성 평등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홍보함 마. 여성의 기본적인 관심사 및 다양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며, 양성 평등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평가 전반과 이를 수행하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		
관련 DAC 권고사항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8 (2009. 2. 17)	페이지 수	80
기타	1. 동 자료집은 1998년 개발협력을 위한 성 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DAC 가이드라인(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1998)을 구축하는데 있어 성 평등에 연계된 주요 개념 및 접근방법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table>
<tr><td>제목</td><td>빈곤과 환경, 젠더의 연계(Poverty-Environment-Gender Linkages)</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Manual</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G-M-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지역사회에 근거한 자원 관리 프로그램 (Community-Based Resources Management Programmes, CBRM)</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개발도상국의 빈곤, 환경 변화와 성 차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td></tr>
<tr><td>기본개념</td><td colspan="5">1. 농촌의 빈곤과 환경파괴, 성 차별의 연계성
가. 환경파괴와 자원손실은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를 유발하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기회로부터 고립되어 사회적 혜택을 받기 힘든 농촌 지역 빈곤의 중대한 문제가 됨
• 농업 생산성 증가만으로는 빈곤과 환경파괴와 천연자원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나. '빈곤-환경-성 불평등'의 상호관계
• 빈곤 인구는 식량, 연료, 수입의 근원이 되는 환경과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와 같은 공유재의 활용과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음</td></tr>
<tr><td>세부 매뉴얼</td><td colspan="5">1. 농촌의 빈곤과 환경파괴, 성 차별의 연계 문제의 접근 및 대처 방안 – 긍정적 관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을 증진해야 함
나. 기술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동등한 교육과 정보 및 시장 접근성 증진을 도모해야 함
다. 농촌 인구와 특히 여성 빈곤인구의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함
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원 관리 프로그램(Community Based Resources Programmes)을 실행해 지역의 자원관리 역량 강화와 빈민과 여성의 참여를 도모함
2. 도시의 빈곤과 환경파괴, 성 차별의 연계 문제의 접근 및 대처방안
가. 빈민가 거주자들을 위한 삶의 조건 개선을 지원
• 주택, 기본 인프라 구축·개선 및 위생 교육의 인식증가 등
나. 도시의 수도 관리, 산업 오염물질과 폐수 통제 및 규제 강화를 지원
다.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지원
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3. 빈곤과 환경파괴, 성 차별의 연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전략
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
• 빈곤 인구가 생계를 위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환경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지원
• 대체 에너지 및 농업 자원, 생계 수단의 개발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혁신을 지원
• 환경 변화와 파괴에 취약한 지역 인구의 자립을 위한 지원
나.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활용을 통한 접근
•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수원국과 지역 사회를 원조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참여를 확대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함
다. 빈곤감소, 환경보호,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개혁과 역량 강화
• 빈곤과 환경파괴, 성 차별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정책 수립과 계획 과정에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환경-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써 지역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분권화를 추구하고 특정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룹의 공존을 위한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수원국 내 다양한 개발정책 간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함</td></tr>
</table>

보고체계	–		
평가 및 Feedback	–		
관련 DAC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Development: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01) 2. The DAC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1998)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2009. 1. 22)	페이지 수	93
기타	1. 빈곤-환경 관계(농촌) (p.14)		

<table>
<tr><td>제목</td><td>성 평등, 인권 보호 및 소외계층의 포용을 통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Making Aid More Effective Through Gender, Rights and Inclusion)</td><td>DAC 문서 주제</td><td>Gender</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P-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인권 보호, 소외계층 포용의 필요성
2. 성 평등 실현과 효과적 원조를 위해 국제기구, 공여국, 수원국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접근해야 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다음의 분야에 파리선언을 도입하여 젠더, 인권 보호 및 소외계층의 포용 제고가 이루어짐
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정부가 여성부와 함께 원조 관리 프레임웍의 구성 및 적용
나. 수원국의 개발계획 내에 사회적 목표와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운용
다. 정부와 수원국의 시민사회가 정책 개발 과정에서 성 평등 및 인권 강화 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라. 성인지 예산 수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사회분석 실행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학계 간의 효과적인 협력
2. 파리선언은 정책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으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3. 공여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자원 지원과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수원국 시민사회의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인식 확대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양성 평등, 인권 보호 및 소외계층의 포용을 통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을 이행해야 함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정책과정의 민주적 주인의식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대한 참여적 대화에 포함되어야 함
• 수원국의 기타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성과 중심적인 원조 집행을 통해 양성 평등과 인권보호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함
나.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는 그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정책 대화, 실행 및 모니터링, 변화하는 원조와 정책형성 환경의 이해, 지역적 · 국제적 협력 기회 마련 등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함
다. 수원국내 형평성과 인권 보호 목표의 주류화를 위해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공여국간 원조 조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다자 개발은행등과 같은 기타 주요 공여기관은 형평성과 인권의 주류화 달성을 위한 역량구축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과정을 검토해야 함
• 수원국내 성 평등의 주류화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부처의 약화 또는 상대적 주변화(Marginalisation)를 방지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라. 수원국 정부의 형평성과 인권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 및 절차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 효과적인 젠더 및 사회 분석 실행, 사회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 역량 강화를 지원함
마. 공여국은 수원국의 사법 · 입법기구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함
바. 파리선언에 기초한 상호책임성 및 파트너십의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인권 프레임웍의 도입이 필요함
사. 효과적인 국가 인권 보호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시스템 내의 역량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원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공여국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 성 평등의 주류화를 위해 젠더 분석기술과 그 결과를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함
아. 사회적 목표 달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조정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결과기반 프레임웍(Result-based Framework)을 도입 함
자. 국가 사회 영향 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통한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 Procedures)의 주류화로 인권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td></tr>
</table>

	2. 양성 평등과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국 내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 (예: 공공 재정 관리 개혁에서의 성인지적 예산 도입)		
향후 연구 방향	–		
관련 DAC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1.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Effective Aid by 2010? What It Will Take 2. Paris Declaration Commitments and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6 (2009.2.15)	페이지 수	41
기타	1. 사례연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케냐, 시에라리온, 우간다, 베트남		

제목	SWAPs에서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in Sector Wide Approaches)	DAC 문서 주제	Gender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G-P-2
DB 키워드	성평등(Gender Equality), 분야포괄적원조방법(Sector Wide Approach, SWAPs)				
주요 권고사항	1. SWAPs의 성 주류화를 통해 SWAPs의 지속가능성 및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촉진				
세부 권고사항	1. 여성 대상 개발협력 지원 규모를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성 주류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2. 분야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함 가.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 전반의 성차별 환경 평가 · 분석(예: 법적 성별 권리의 인정과 규제 수단의 효과, 정부 예산 수립이 성차별 환경 조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나. 각 분야와 주요 제도적 성차별 환경 평가 · 분석(예: 성별 유/무급 고용 유형, 각종 서비스 사용 및 접근에 대한 구조적인 효과 분석 등) 다. 미시적 차원의 가계 및 개인 구성원의 성차별적 환경을 평가 · 분석(예: 성별 노동 분담과 영향 분석 등) 라. 지역 공동체 남성 및 여성이 그들의 목표와 제약 요인 등을 확인하는 참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젠더 분석을 강화함 3. 정책 협의 과정과 방식에 젠더 문제를 포괄하도록 함 가. 절차상 남녀에게 공평한 발언권을 부여함 나. 협의 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을 조직함 다. 여성 대표단이 사전 협의를 거쳐 여성과 성 평등 달성을 위한 개발수요와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SWAPs의 성 주류화 지속성 증대를 위해 원조기관의 조직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 가. 원조기관 내 젠더 전문가와 성 주류화 전담 부서를 설립해 전문성을 높임 나. 젠더 전문가 외에도 기타 실무자들이 성 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다.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도 젠더 균형을 향상 5. 국가 정책 개발과 예산 수립 절차에 젠더 관점을 통합 가. SWAPs에 따른 개발 정책에 성 평등 정책을 통합함 나. 예산 수립 절차와 같은 재정 절차에서도 젠더를 고려하는 SWAPs 정책들을 실행하여 분야별 정책을 수립함 6. 젠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와 방법 마련 7. 성 주류화를 위해 공여국/기구 간의 정책 조정과 조화를 도모 가. 젠더 이슈 관련 개념과 접근법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통해 일관성을 개선 나.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제공하지 않는 원조 기관들도 대화에 참여함 다. 분야별 젠더 이슈에 대해 공여국/기구 간의 정책 대화를 활성화 라.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평가 시 성 주류화 도구/방법 간의 조화를 모색 마. SWAPs을 통한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여국/기관의 내부 역량을 개발 바. 젠더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주요개념	1. SWAPs의 개념 가. 수원국 해당 분야(sector)의 개발 목표 및 성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원조기획 등에 반영하는 접근법 • 수원국 정부 주도 하에 원조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총체적인 정부 지출 프로그램의 마련, 개발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 기관 개혁 및 역량 강화, 보고 및 회계 체계 개혁과 개선을 지원함 나. 예산지원(Budget Support), 프로그램 원조, 투자 프로그램 마련과 같은 개념을 포괄함 다. 한 부문 내에서의 특정 활동을 지지하는 '프로젝트 기반 접근'과 대조되는 개념임				

배경과 역사	1. 1995년 '평등, 개발 및 평화에 관한 제 4차 세계 회의'에서 유엔회원국들은 "베이징 행동강령"을 통해 핵심적인 인간의 권리이자 개발 이슈로서 성 평등을 확인함 2. SWAPs은 전 분야에 걸친 장기적으로 개발의 달성을 목표를 함 3. SWAPs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함 4. 기존 교육, 보건 및 농업 분야에서의 SWAPs은 성차별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 여성 대상 지원의 규모 확대에 그침 5. SWAPs은 성차별과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분야별 정책과 예산 수립 및 모니터링을 필요로 함		
평가지표	–		
관련 DAC주제	–		
관련 DAC 문서	1.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Through Sector Wide Approaches in Education: Synthesis Report (2001) 2.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Through Sector Wide Approaches: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Health Sector (2001) 3. Gender in Agricultural Sector Wide Approach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9. 01. 23	페이지 수	11
기타	–		

제목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 실무작업반의 최종보고서: Part I(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 I)	DAC 문서 주제	Governance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GV-G-1
DB 키워드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주요 권고사항	1. 민주화와 건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함 2.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개발과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함 3.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함 4. 수원국의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함 5. 공여국과 수원국 내 시민사회 간 정책 대화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함 6. 수원국 관련 책임기관과 인력의 관리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함 7. 공공경영(Public Management)와 책임성에서 공여국 의존 문제를 해결해야함 8.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웍 안에서 개발협력을 추구해야 함				
세부 권고사항	1. 민주화와 건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함 가. 민주적인 거버넌스 내 투자는 개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해야 함 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빈곤감소, 성 평등,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야 함 다.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양성이 평등한 참여를 확대해야함 라. 빈곤감소를 위하여 법치와 인권존중, 건전한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한 사회발전과정에 빈곤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마. 빈곤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개발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함 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쌓아가며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 3.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함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함양이 개발협력의 중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나. 공여국은 정책분석을 통해 참여적 개발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4. 수원국의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함 가. 참여적 개발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수원국 내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나. 분쟁 후 국가에서는 특히 시민사회가 갈등세력 간의 합의 도출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5. 공여국과 수원국 내 시민사회 간 정책 대화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함 가. 공여국과 수원국 내 시민사회의 토론 및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대화 및 조정이 이뤄져야 함 6. 수원국 관련 책임기관과 인력의 관리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함 가. 공여국/기관은 수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개발계획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 집행해야 함 나. 건전한 거버넌스와 참여적 개발을 위한 원조 운영 및 집행 체계 및 기술을 개발해야 함 다. 지속적인 개발과 주인의식의 강화를 위해 수원국 내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함 7. 공공경영(Public Management)와 책임성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공여국 의존 문제를 해결해야함 가.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 거버넌스 개혁의 인센티브를 낮추어 개혁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음 나. 공여국은 수원국 스스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 노력에 힘쓰도록 격려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8.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웍 안에서 개발협력을 추구해야 함 가. 민주화와 인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적 개발 사업을 추구해야함				

주요개념	–		
배경과 역사	1.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 실무작업반은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를 위한 DAC 지향(Orientation)”의 채택으로 설립되었음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Evaluation of Program Promot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7 (2009. 2. 7)	페이지 수	26
기타	Annex 1.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 Annex 2.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정 강화를 위한 정책노트 Annex 3. 참여적 개발과 올바른 통치 이슈에 관한 국가 내 조정 도입 안내		

<table>
<tr><td>제목</td><td>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에 관한 실무작업반의 최종 보고서 Part2(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2)</td><td>DAC 문서 주제</td><td>Governanc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V-G-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민주화(Democratization), 인권(Human Rights),</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인권 보호,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공여국의 역할을 이해</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민주화는 개발도상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나 외부의 지원을 통해 민주화 촉진 및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음
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수원국 정부의 정당성과 의지,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공여국은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개발 및 정책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민주화를 지원해야 함
나. 법적 체계(Legal System) 마련
•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법적 체계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건전한 거버넌스, 인권 보호 및 OECD/DAC의 '21세기 전략(21st Century Strategy)'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
다. 개발도상국의 분쟁 조정과 민주화 확립을 위해 원조 공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원조 활동에는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에 관한 OECD/DAC 지침을 고려할 수 있음
2. 민주적 다원성을 위한 토대를 확립해야 함
가. 공여국은 수원국 내 정당들 간의 협력과 NGO의 의사결정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야 함
나. 국가와 지역의 주인의식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지원함
3.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가. 시민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수요와 지지를 표명하고, 계획 수립 및 협상과정 훈련 등 교육적 역할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나. 건강한 국가와 시민사회는 상호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다. 시민사회는 정치적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을 대표해 국가 권력에 대응하고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사회 내 다양한 그룹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
라. 독립적인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의견 교류 및 확산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마. 공여국은 보다 효과적인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적인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지원해야함
바. 민주화와 개발을 위해 시민사회와 개발원조의 역할 제고와 성공 요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연구와 조사가 필요함
4. 민주적 분권화(Democratic Decentralization)
가. 보다 효과적인 업무 분담과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해 국가 기능과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분권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 향상, 법률에 대한 존중,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 경쟁력과 효율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
다. 빈곤과 문맹률, 성차별은 민주적 분권화의 장애물로 이를 극복해야 함
5. 민주적 분권화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
가.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해당 수원국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문화와 법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파악이 필수적임
나. 다양한 정치적 그룹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비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 민주 분권화를 통한 빈곤감소 달성을 위해 빈민과 소외그룹의 권한 강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함
6. 인권 강화를 위한 개발전략
가. 관련 자료와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광범위한 활용을 권장하며 지역 NGO와 이익집단,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강화 및 공유함</td></tr>
</table>

	나. 인권과 민주화 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지원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 다.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원조 집행을 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서 수원국 내에 설치된 공여기관과 해외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함 라. 수원국 내 여성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함 마. 인권보호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분야별 프로그램 수행 지침 개발, 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공여기관의 역량을 개 7. 정부와 국가기관의 역량강화 가. 공여국은 인권 강화를 위해 이에 관한 명확한 정책 발표와 지속적 실행을 통하여 공여국 간의 협력을 도모함 나. 공여국은 수원국 내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다. 소수 민족, 여성, 아동, HIV/AIDS 감염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인권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임		
주요개념	–		
배경과 역사	1. 개발협력에서의 인권 가. 개발도상국의 인권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여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수원국의 민주화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개발도상국 내 시민 교육, 건강, 기초 생활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가 불공정, 비효과적인 국가 정책을 비판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함		
평가지표	1. 공여국의 수원국 민주화와 인권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원조 평가기준 가. 참여적 개발을 위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했는가? 나. 수원국의 민주적 개혁과 효율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했는가? 다. 기타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민주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는가?		
관련 DAC 주제	1. 성 평등(Gender) 2. 원조의 질(Quality of Aid)		
관련 DAC 문서	1. 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art I (1997)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7 (2009. 2. 14)	페이지 수	30
기타	1. 본 문서는 1993–1996년 간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에 관한 임시작업반이 OECD/DAC 회원국, OECD 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담고 있음		

제목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DAC 문서 주제	Governance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GV-G-3
DB 키워드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민주화(Democratization),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인권 (Human Rights)				
주요 권고사항	1.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 원조의 기획과 집행 시 개발도상국의 참여적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의 달성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				
세부 권고사항	1. 수원국의 참여적 개발을 지원 가. 전문가 협회나 여성 단체, 소비자 단체 및 무역 협회 등과 같은 조직 형성과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이 이사회나 자문단 등을 통해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나. 마을 단체와 같은 풀뿌리 조직의 형성과 활동 범위의 확대를 지원 다. 다양한 관련 기관과 조직이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수원국의 민주화에 기여 가. 전문가 및 무역협회 등의 형성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도모 나. 여성의 시민사회 및 정치적 참여를 지원 다. 미디어의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 증진을 지원 라. 정보 및 교육 캠페인 등 민주적 선거 실시를 지원 마. 자체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분석 시행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 지원 3. 올바른 통치 가. 법치주의 • 국가의 법률 및 공공 간행물을 출판 및 배포 • 여성 및 소외계층의 인권 강화를 위해 현행 법 및 관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NGO의 활동 현황을 파악 • 관례법과 같은 비공식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식 법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작권, 상거래 및 투자 관련 법적 환경 개선 나. 공공 분야 운영 • 정부기관 및 민영부문의 회계 및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 절차의 개선 다. 부패 감독 관리 • 부정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강화 • 반부패 프로그램의 설립과 실행을 위한 인력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 •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라. 군사 지출 감축 • 군과 민간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위한 대화 마련 • 군사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 기술 개발 4. 인권 가. 경찰, 법조계 및 기타 공무원, 군사, 의료계 및 과학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나. 개도국과 국제적 또는 OECD 회원국 내 인권그룹 및 협회 등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도모				
주요개념	1. 참여적 개발 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과 정보의 활용과 공공 감시를 통한 정직하고 효과적인 관료체제 운영과 지역사회의 '자립심'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2. 민주화 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는 민주화 기능의 중대한 특성이며 민주화는 건전한 거버넌스, 참여적 개발,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점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음 3. 건전한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나 세계은행은 정치적 권한 및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해 자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 내에서의 조정을 행사하는 것이라 명명함 나. 법치주의, 공공분야 운영, 부채 방지,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용의 감소 등은 건전한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인임		
배경과 역사	1. 1993년 인권에 대한 비엔나 선언(Vienna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서 인간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확인 2. 궁극적인 개발은 개도국 자신의 책임이며 자국의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 자립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됨 3. 특히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은 활발한 시민사회와 참여를 강화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 Series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5. 1 (2009. 2. 12)	페이지 수	34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역량개발지표의 설계와 사용법(The Design and Use of Capacity Development Indicators)</td><td>DAC 문서 주제</td><td>Governance</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GV-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역량개발지표(Capacity Development Indicators), 역량지표(Capacity Indicator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평가와 측정이 가능한 역량개발의 개념과 역량개발지표의 예를 제공
2. 역량개발지표의 설계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역량개발 목표 및 전략
가. 역량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i) 역량개발의 주요 기능・목표를 설정한 후, ii) 해당 목표에 대한 접근・추진 방법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iii) 정치적 지지, 재정적 지원, 직원들의 역량등과 같은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나. 역량개발전략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역량개발에 필요한 조직변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숙고・명료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함
• 역량개발전략에는 새로운 조직 결성과 같이 사전에 결정해서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는 반면 훈련프로그램 또는 기술지원과 과 같이 사전계획에는 없었으나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생겨나는 사안이 있으므로 역량개발전략과 지표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역량개발전략은 참가자 또는 수혜자들에게 비전, 희망과 같은 가치를 심어주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러 단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2. 역량개발전략 추진방법
가. 대중매체와 대인 관계를 통한 정보 확산
나. 워크샵, 단체 활동 등을 통한 합의구축과 비전설계
다.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간제공
라. 전략적 대화 및 정책 연구와 계획
마. 분쟁 해결 기제 개발
3. 역량개발지표 설계
가. 산출물(실제로 개발된 역량)은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만료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역량, 그리고 시점에 관계없이 실제로 개발된 역량 등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해당 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 정부부처, NGO, 주요인물,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 역량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수행 시 알아야 할 일반 행동 양식; 현재의 성과 수준에 대한 분석; 변화가 필요한 단체, 조직, 개인에 대한 분석; 현재 역량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에 대한 분석; 이용가능자원(인적・재정적・기술적・조직적)에 대한 정보; 관련 원조단체의 관심과 지지도; 정책 목적;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진단
• 프로젝트 만료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역량에 대한 지표설계 시 고려 사항: 새로운 기준과 성과에 대한 분석; 새롭게 도입해야 할 가치, 신념체계, 행동 양식 등에 대한 분석; 역량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예상되는 역량개발의 장・단기 결과; 예측되는 역량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역량능력개발에 필요한 기간; 예측되는 역량의 질에 대한 평가 방법
• 프로젝트 만료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참가자들은 새로운 역량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예측한 역량과 실제 달성한 역량 간에 격차가 있는가?; 있다면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 실행
•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장・단기적 성과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함</td></tr>
</table>

	• 조직 또는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역량개발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주요 기능을 지원하는 단기적 사업지원도 함께 해야 함 •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과향상에만 초점을 둔 원조활동은 오히려 부진한 성과를 야기할 수 있음 다. 지속성(Permanence) • 지속할 수 있는 단체(Sustainable Organization)란 그들의 결과물, 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지지를 획득하여 안정적 또는 발전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단체를 말함 4. 역량개발지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역량의 주체, 역량개발의 주요 목표, 기존의 역량, 변화 전략을 고려하여 역량지표를 설계해야 함 나. 역량 개발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해 역량개발 결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과 기존 수원국 기관과의 연관관계, 장기간 재정지원 전략의 유무,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 지속성을 방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다. 외부요소 • 역량개발은 외부환경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 사회, 경제, 재정 등 역량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그러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
주요 정책제언	1. 역량지표 설계와 관리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음 가. 상식적 판단력에 기반하고 지표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함 나. 역량지표의 진단적 가치를 높여야 함 다. 지표들 간의 연관성을 높여야 함 • 역량지표는 전략, 과정, 상황적 요소, 그리고 성과에 기인하거나 이러한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함 • 역량지표는 참여자들이 이를 설계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일치된 틀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된 틀의 일부여야 함 라. 실제 적용 차원에 있어 역량지표의 유용성을 높여야 함 마. 주인의식(Ownership)과 책임의식(Commitment)에 기반 하여야 함 바.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역량지표는 감독과 평가, 전반적 정책 평가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직원 동기부여나 관리 학습, 의사소통, 그리고 분배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음 • 공여국 관리자나 현장 행정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역량지표의 형태, 시점, 그리고 목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점을 요구 함. 사. 유인동기를 고려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유인 동기의 형태에 대한 영향력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7. 12 (2009. 1. 18) / 페이지 수: 55
기타	1. 본보고서는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CIDA)의 정책과의 후원을 받아 작성됨

제목	거버넌스, 조세 및 책임성(Governance, Taxation and Accountability: Issues and Practices)	DAC 문서 주제	Governance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GV-P-1
DB 키워드	거버넌스(Governance), 세제개혁(Tax Reform), 책임성(Accountability)				
주제	1.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원조 효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침 2. 수원국의 조세제도 개선은 공여국과의 신뢰관계의 형성 및 수원국의 역량 강화의 핵심요소임 3. 수원국이 해외원조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제개혁을 지원해야 함				
주요 연구결과	1.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가. 시민들의 조세저항, 저소득 경제구조, 해외자본에 대한 회계 관리문제, 인력자원 부족 문제 등이 과세와 관련 불법 행위규제를 저해함 나. 엘리트 집단에 편중된 정치경제적 영향력 •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한 기득권 엘리트집단이 세제 개혁에 저항하여 제도 정비 노력을 저해함 다. 부존자원의 역설(Natural Resource Curse) • 원유 및 광물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아 과세 및 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의지가 낮음 2. 세제개혁의 핵심 요소 가. 무역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세(부가가치세,VAT)를 확대 나. 세제의 간소화 다. 세무 행정제도 강화 3. 세제 개혁, 세무행정의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조세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음 가. 수원국내 정부, 민간분야, 시민사회의 재정협정(Fiscal Pacts)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함 나. 국가차원의 개혁보다 용이한 지역정부의 세제개혁의 활용 4. 조세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성을 필요로 하지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대안이 없는 경우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주요 정책제언	1. 공여국은 수원국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세입 증대를 지원 2. 역량개발 가. 공여국은 수원국의 지역중심의 리더십(Local Leadership)과 지역 차원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 나. 공여국은 수원국 조세제도의 정치경제 구조적 측면을 비롯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 다. 개발도상국내 관련 실무자들과 국제사회의 관련 전문가들의 대화 활성화를 통해 수원국 역량 강화를 지원 라. 수원국의 역량 강화가 수원국의 내부적 조세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함 3.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전략적 지원 가. 수원국이 관련 개혁을 위해 투자 자원을 확보하는 동안 공여국은 단기적으로 원조 의존도가 높은 수원국과의 협력협정 체결 및 원조를 지원 나. 우호적인 환경조성 •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제를 위해 공여국은 개발도상국과 함께 조세조약을 협상하고 이행 • 조세의 정치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인센티브, 수원국의 책임성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원조 유형을 파악 •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고려한 세제개혁을 위해 국제 조세 전문가와의 대화채널 구축 • 기술 지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강화 • 수원국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조세개혁을 위한 지역적 이니셔티브 및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협력학습(South-South Learning)에 중점 다. 공여국의 일관성 있는 개발지원 • 공여국은 수원국 내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주체(납세자 및 기업협회, 노동조합, 전문가집단 및 정당 등), 이슈 및 협의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검토				

	• 조세개혁과 해당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의 조화를 도모 라. GOVENET(The Network on Governance)의 이용 • GOVENET은 OECD/DAC의 세금 제도 및 관리센터(CTPA)와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2009.2.10)	페이지 수	40
기타	1. 국가의 세금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p.16)		

<table>
<tr><td>제목</td><td>부패방지를 위한 공여국 활동 원칙(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td><td>DAC 문서 주제</td><td>Governance</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GV-P-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반부패(Anti-corruption), GOVNET 보고서(GOVNET Report), OECD 뇌물수수 방지 컨벤션(Anti-bribery Convention)</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부패방지를 위한 공여국 간 협력 활동 강화</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배경
가. 2003 GOVNET 보고서에 따르면 역량 부족, 주요 문제점의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단편적 접근 등으로 인해 공여국의 부패 방지 지원 활동의 진전
나.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원 등 점차 효과적인 접근방법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오고 있음
다. 부패방지를 위한 일관적인 프레임웍을 통해 국제협력 및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함
라.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 거버넌스, 부패 방지위한 제도적 개선, 책임성 및 재정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함
2. 부패방지를 위한 공여국 개발협력 원칙
가. 2004년 12월 공여국의 부패척결 효과성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포럼(Partnership Forum on Improving Donor Effectiveness in Combating Corruption)을 통해 소개된 동 원칙은 보다 효과적인 부패척결 및 방지를 위해 공여국 간의 협력을 통한 수원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제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3. 부패방지를 위한 공여국 개발협력 원칙의 유용성
가. 동 원칙사항은 부패척결 및 방지에 대한 공여국의 공동 활동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나. 공여국/기구 또한 자국 내 부패방지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의 운영평가를 위한 진단 수단으로서 동 원칙사항을 활용할 수 있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공여국 간의 협력
가. 국가 차원에서의 공여국의 활동 원칙
• 수원국과 공여국의 부패척결과 방지를 위한 공통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
•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
• 시민단체, 미디어, 민간기업 등 관련 주요 단체와 협의
• 시민단체의 역량 개발 지원과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장기적으로 정부의 헌신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취약한 국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외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 관계자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
• 지역적인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배경 및 과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
• 장기적인 대응이 우선시되나 새로운 안건 및 신흥 개혁 국가 및 기관을 대상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나. 개별 공여국의 활동원칙: 반부패원조를 위한 공통 전략 및 비전과 공여국 간 공통적인 접근법을 따르도록 동의해야 함
2. 부패 지역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응
가. 개발기관의 활동 원칙
• 개발협력기관은 공여국의 부패발생 지역에 있어 자체적으로 혹은 OECD 뇌물수수 방지 컨벤션(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국제적 회담을 통해 강화된 대책방안을 모색
• 대책방안을 타 개발지원기관과 공유</td></tr>
</table>

	• 대책 마련을 위해 수원국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도모 • 원조 지원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 3. 성과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향후 접근 방향을 정립 가. 국가 차원에서의 공여국의 활동 원칙 •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정책 개발에 활용 • 보다 사실적인 증거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격려해야 함 •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 절차와 성과에 대한 보고체계와 수단 구축 나. 범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여국의 활동 원칙: 전략적인 리서치 및 정보의 수집, 통합, 공통의 연구결과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개선해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 내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주체(납세자 및 기업협회, 노동조합, 전문가집단 및 정당 등), 이슈 및 협의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검토 • 조세개혁과 해당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의 조화를 도모 라. GOVENET(The Network on Governance)의 이용 • GOVENET은 OECD/DAC의 세금 제도 및 관리센터(CTPA)와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2003 GOVNET Report (2003)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0) / 페이지 수: 5
기타	1. 동 원칙은 부패척결과 방지에 대한 공여국의 공동 활동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2. 공여국/기구와 자국 내 부패방지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의 운영평가를 위한 진단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

<table>
<tr><td>제목</td><td>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분석(Map-making and Analysis of the Main International Initiatives on Developing Indicators on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td><td>DAC 문서 주제</td><td>Governance</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V-P-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민주주의(Democracy), 거버넌스(Governance), 인권(Human Right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의 정의
2.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의 지표 개발 방법 및 분류</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의 정의
가.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 단일한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세 개념을 측정하는 수단과 지표 역시 다양하게 존재함
2. 민주화 수준의 평가 이니셔티브
가. Freedom House Index
• 1972년부터 매해 7단계 기준을 사용하여 국가별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정도를 측정
• 분석과정에서 투명성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정치체제 데이터 시리즈(Polity Data Series)
• 1850년도부터 11단계의 기준을 사용하여 국가별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
• 평가 분석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음
다. Banks의 이니셔티브
• 17단계 기준을 활용해 1850년부터 매해 분석을 실시해왔으나 분석대상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음
라. Przeworski 이니셔티브
• 1950년도부터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카테고리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국가별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 분류함
마. Vanhanen 이니셔티브
• 투표자 수와 정당의석수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810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투표가 없는 년도에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바. Eurobarometer, Latinbarometer, Afrobarometer, East Asia Barometer 이니셔티브
•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상지역의 민주주의를 평가 분석, 측정범위가 지역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사. World Values Survey 이니셔티브
•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역적 구분에 관계없이 20-43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관한 인식 및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
3. 인권 수준의 평가 이니셔티브
가. UNHCR 이니셔티브
• 전 세계 각 국가의 국제인도법상의 조항 준수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투명한 코딩절차와 분석결과의 신속한 활용 가능성이 강점임
나. ILO 이니셔티브
• 각 국가의 공공 문서를 통해 법률적, 실제적 노동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 출처가 독립적이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다. 테러지표(Political Terror Scale), 고문지표(Torture Scale), 여성인권지표, 노동자인권지표, 소수자인권지표
• 전 세계를 조사 범위로 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투명한 코딩 규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해 지속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음
라. 이 이외에도 Amnesty, Human Right Watch, US State Department 등의 의한 국별 인권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음
4. 거버넌스 수준 평가를 위한 이니셔티브</td></tr>
</table>

	가. Heritage Foundation, Wall Street Journal 이니셔티브 • 161개국을 대상으로 매해 경제적 자유를 관념적인 측정지표(Abstract Scale)를 사용하여 조사 발표함 나. Fraser Institute 이니셔티브 • 12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유를 측정지표(Standard-based Scale)를 사용한 국별 거버넌스 측정지표로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측정지표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다. Political Risk 서비스 • 부패, 법의 지배, 정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140개국을 분석하나 전문가 의견이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라. 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 이니셔티브 • 50개국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사용하여 분석하나 코딩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됨 마.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니셔티브 • 각 국의 부패 정도를 전 조사해 매해 발표하나 조사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바. Contract Intensive Money • 객관적인 IMF의 측정지표로 매년 업데이트되면 10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전체화폐공급량에서 비유동성화폐의 비율을 기준으로 거버넌스의 수준을 평가,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질수록 개인의 유동성 화폐보유량이 적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
주요 정책제언	1.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의 평가지표 개발 방법 및 분류 가. 지표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지표를 개발 · 활용해야 함 나.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 명확한 개념 정의가 최우선시 되며 평가의 목적이 뚜렷해야 함 •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를 명확히 해야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함 • 명확한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함 • 인권 정도의 평가는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함 다. 정보수집 분류 • 설문조사(Survey-based Data)에 기초한 정보 수집은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의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함 • 기준(Standards-based Data) 에 기초한 정보 수집은 개념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함 • 사건(Events-based Data)에 기초한 정보 수집은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관련 구체적 사건 자료를 취합하고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분류하여 사용함 라. 지표의 분류 •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측정 지표의 기준은 다양하게 활용됨 • UNDP는 투표율, 사회경제적 성과, 인권조약의 비준 같은 객관적 지표와 함께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 등의 주관적 지표를 사용함 • 의무(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earer)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투입(Input)지표, 정책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절차(Process)지표, 달성된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Outcome)지표로 구분 할 수 있음 • 인간개발지수를 인권 수준의 평가지표로 대용할 수 있음 2.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활용함 가. 측정하려고 하는 목표(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등)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나. 동일한 코딩규칙과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측정지표가 만들어 질 수 있는가? 다. 측정구조에 오류는 없는가? 라. 측정지표의 개발 시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마.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가? 바. 어느 단계까지의 측정지표를 갖추고 있는가? 사. 어떤 종류의 정보를 사용하였는가? 아. 논리적 모순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지표 내에 결합시키고 있는가?

향후 연구방향	1.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의 중복 및 재사용, 또는 측정지표가 미개발된 분야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측정 지표의 도입이나 기존의 데이터의 종합 및 재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권고함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3. 7. 24 (2009. 2. 14)	페이지 수	98
기타	1.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의 개념(p83)		

<table>
<tr><td>제목</td><td>개발에서의 인권: 공여국의 관점, 경험과 과제(The Development Dimensi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Donor Approaches, Experiences and Challenges)</td><td>DAC 문서 주제</td><td>Governance</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GV-P-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인권기반 접근법(Human-rights Based Approaches, HRBAs), 인권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 인권정책대화(Human Rights Dialogue)</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개발협력 정책 내 인권정책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2. 인권신장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가. 대다수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 인권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고 수원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나. 공여기관의 인권정책 채택의 당위성
•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에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한 바 있음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등하며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님
• 개발협력에서 인권 보호와 신장은 빈곤감소와 경제개발 및 안보를 위해 효과적임
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based Approaches):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아 개발 분야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해야 함
• 인권 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 현행 원조 분야에 인권을 통합하기위한 노력
• 인권정책대화(Human Rights Dialogue): 수원국과 공여국 간 논의를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조의 방식과 규모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인권 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가. 공여국 개입의 종류와 정도
• 공여국은 프로젝트 집행을 통해 수원국 내 인권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권 관련 조약의 비준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국가별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권 주류화를 지원함
• 인권 관련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협력에 인권을 통합하는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나. 수원국 거버넌스의 지원
• 공공분야개혁이나 재정관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발 지원 시 인권 중심적인 시각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공공지출관리(Public Expenditure Management)와 공공분야개혁, 반부패 이니셔티브(Anti-corruption Initiatives) 등에 인권 보호와 신장의 목표가 보다 명확하게 통합되어야 함
다. 인권주류화
• 아동, 여성 및 소외계층의 지원,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협력에서 인권주류화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개선된다는 점이 확인되며 인권 주류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라. 인권정책대화와 인권관련 조건부 개발원조 (Conditionality)
• 1990년대 초 EU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발협력의 필수적인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인권정책대화를 통해 인권 프로젝트의 집행과 인권 주류화 시행을 권고해오고 있음
• 대다수 공여기관은 개발원조 제공 조건으로 수원국의 인권 보호 노력 및 성과 제시 요구를 통해 수원국의 노력을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비효율성과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어 공여국 간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3. 개발협력에 인권 통합에 관한 연구 결과
가. 종교나 문화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권 중심적인 개발원조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함</td></tr>
</table>

	나. 인권 중심적인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총체적인 역량과 시민권의 강화,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수원국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정확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이 필수적임		
주요 정책제언	1. 개발협력과 인권 통합의 제도화 가. 공여기관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절차를 도입하고 인력자원의 역량 개발을 도모해야 함 나. 인권 관련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정책을 개발하고 수원국의 인권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함 다. 수원국 내 효과적인 인권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해 지지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함 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의 공유와 교환을 활성화해야 함 마. 인권 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 평가를 위한 절차와 도구를 개발해야 함 2.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 구축 가. 수원국의 역량 부족 혹은 정치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 공여국 및 기관의 개입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나. 취약국가 및 분쟁 상황의 경우 인권 보호와 장기적인 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거버넌스(Governance) 3.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1. DAC Orientations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1993) 2.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8. 2. 5)	페이지 수	169
기타	1. 이 간행물은 DAC Network on Governance(GOVNET)에 의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음 2. Policy Statements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p.27, table1–1)		

제목	역량개발을 위한 과제: 모범사례(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DAC 문서 주제	Governance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GV-P-5
DB 키워드	취약국가(Fragile States),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주제	1. 모범사례 연구를 통해 역량 개발 프레임웍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논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책지침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1. 역량개발의 의미와 의의 가. 역량이란 업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인력, 조직, 사회 전반의 능력을 의미 나. 역량은 기초 필수품과 서비스의 제공, 개발 정책의 실행, 법적 제도 등과 같은 국가 시스템의 성과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 다. 역량 개발이란 인력, 조직 및 사회가 역량을 생성 · 강화 ·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 라. 개인 및 조직의 행동은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역량 개발은 개인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및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 2. 역량 개발의 중요성 가. 수원국의 역량은 경제 성장, 빈곤 감소,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s)의 달성과 같은 개발 성과에 있어 필수적임 • 공공 재정 관리에 대한 지원과 무역 협상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의 특별 역량 개발 지원이 중요함 나.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충분한 국가적 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함 • 아프리카 지역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의 사례를 보면 수원국 역량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 어려움 • 충분한 국가적 역량 없이는 대규모 원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개발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움 • 최근 몇 년간 원조의 상당 부분이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목표로 기술 협력 분야로 집중되고 있음 3. 역량 개발과 건전한 거버넌스의 관계 가.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 나. 거버넌스 또는 국가 효율성의 개선은 국가 역량을 개발 · 강화하며 역으로 강화된 역량은 거버넌스 및 국가 효율성을 증진함 다.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NGO의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함 4. 역량개발에 대한 인식 변화 가. 최근까지 역량 개발을 지식보급과 이전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식하여 역량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일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나. 1950-60년대에는 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공공 부문의 제도 구축을 중요시해 제도 및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기술협력이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됨 다. 80년대 들어서야 수원국의 경제개혁 관리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역량 개발을 위해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의 수반을 강조함 5. 역량 개발에 대한 새로운 합의 가. 정치적 리더십과 거버넌스 시스템이 역량 개발 노력에 영향을 미침 나. 2005년 파리 선언에서 역량 개발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내부 변화 과정으로써 수원국에 의한 국가 개발 전략의 목표 설정 필요성에 합의함 6. 공공부문 역량 개발의 장애요인 가. 우호적 환경의 결여 • 무력충돌의 발생과 인간 안보 위기 • 약화된 의회 견제 세력과 무력한 경제 정책 • 정치기관의 부패와 인권존중에 대한 낮은 인식				

	나. 정부의 비효율성 • 정부의 분열, 투명성 및 책임성의 결여, 경제 및 공공 재정 관리 역량의 부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 낮은 임금 수준, 원조 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열악한 공공 서비스 제공 환경 •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리 문화, 미비한 성과 보상체계 7. 조직 차원에서의 역량 개발의 성공 요인 가. 강력한 리더십, 외부로부터의 변화 요구, 효율적 관리 능력, 다양한 관련기관의 지지 등 8. 역량 개발의 수권환경,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상호 관계를 평가 가. 변화를 수용하거나 저해하는 체계적인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함 나. 수권환경,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제약요인들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차원에서 역량 개발의 성공을 증대시키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임 다. 불완전한 거버넌스 상황에서 특정 조직의 역량 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좋은 대안임
주요 정책제언	1. 원조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역량 개발을 중점 지원 2.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체계적이며 융통성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반복함 가. 1단계: 국제사회 및 개별 국가의 상황을 이해 나. 2단계: 수원국 주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원 다. 3단계: 원조를 지원 라. 4단계: 환류 시스템을 구축 3. 역량 개발을 위해 상기 각 단계에 따라 우호적 환경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가. 1단계: 역량 개발 의지가 약한 역사적 요인, 인센티브 효과 등을 파악하고 제도 및 권력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 나. 2단계: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역량개발을 촉진 수단을 파악 다. 3단계: 공여국의 조직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과 원조 지원 방식의 학습 효과 향상성과 등을 파악 라. 4단계: 조직 내 규칙의 변화 여부, 원조 제공 방식을 감독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의 존재 여부를 고려 4. 역량 개발을 위해 상기 각 단계에 따라 공여국 조직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가. 1단계: 현재의 역량 수준, 역량의 가변성 여부, 민간부문의 공공부문 역량 향상 지지압력 또는 자원 보유 여부 등을 파악 나. 2단계: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정책 목표로서의 역량개발 추구, 실질적인 주인의식의 구현 여부 등을 고려 • 원조 기관과 수원국 간의 상호 관계가 수원국 역량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련해 변화의 선순환 또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다. 3단계: 역량 개발에 대한 목표 성과를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 지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 • 모범사례: USAID의 지원 하에 크로아티아의 Odarz라는 NGO가 해당 지역 사회 리더들의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장려함 라. 4단계: 역량 개발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모니터링 · 평가의 여부, 역량개발 과정에서의 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고려 5. 개인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가. 1단계: 해외 이주자들이 자국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필수 요인 등을 고려 나. 2단계: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의 공공부문의 역량 약화 방지, 수원국의 임금보상계획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여부와 현황을 파악 다. 3단계: 교육훈련과정에서 현대정보기술의 활용, 개개인 교육훈련을 통한 기관의 효율성 개발성과, 신기술을 활용 지원 상황을 파악 • 성공사례: 독일 개발협력부(German Technical Cooperation, GTZ)와 스리랑카 재경부 협력하에 개발 NGO인 빈곤분석센터(The Centre for Poverty Analysis, CEPA)를 설립하고 빈곤 현황 분석 역량 개발에 기여함

	라. 4단계: 개인 역량 개발의 기관 역량 향상에 대한 효과를 파악 • 아프리카 사례 연구에 따르면 기관의 역량 향상과 개인에 대한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개인 역량의 향상보다는 주요 기관들의 제도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 6. 취약 국가의 역량 개발 가. 취약성을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선택적인 국가 핵심 업무 역량 개발에 집중해야 함		
향후 연구방향	1. OECD/DAC이 긴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역량 개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공고히 하고 원조 체계 전반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려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대화에서 역량개발을 중점 주제로 설정해야 함 나. 현재 국가 주도의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과 수권 환경의 취약 요소를 파악 다. 국제 개발협력 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사항을 확인 라. 효과적 기술 활용에 필요한 조직 개혁 및 제도 변화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적 자본을 개발함 마. 정책 관련 기술적인 통계를 구축 바. 취약 국가의 역량 개발 사례를 통해 실행지침을 마련		
관련 DAC 주제	1. 천년개발목표(MDGs)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3. 분쟁과 평화(Conflict and Peace)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02.16)	페이지 수	48
기타	–		

제목	반부패에 관한 정책 및 지침: 공동행동을 위한 의제 설정(Policy Paper and Principles on Anti-corruption: Setting an Agenda for Collective Action)	DAC 문서 주제	Governance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GV-P-6
DB 키워드	반부패(Anti-corruption), 반부패평가(Anti-corruption Assessment),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주제	1.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OECD/DAC 회원국의 국가적, 국제적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이를 통한 원조 효과의 증대를 기대함 2. 통합된 반부패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여국이 부정부패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연구결과	1.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한 부정부패가 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음 가. 공여국의 자원이 본래 개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등 개발 목적의 달성을 위협함 • 수원국 정부의 부정부패는 공여국의 원조가 목적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함 나. 수원국의 부패 정권에 개발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공여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까지도 저하시킴 다. 합법적인 정부와 건전한 거버넌스는 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해 필수 요인이 됨 • 반부패 평가는 거버넌스 평가에 주요 요소가 됨 2. 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와 반부패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 또한 증가함 가. 부패는 정치시스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개혁을 위한 수원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가 필수적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박힌 부패의 근절을 위해 보다 넓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3. 국가 운영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의 실패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됨 가. 거버넌스 붕괴 및 효과적인 기관의 부재는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나.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및 정치적 개혁 의지의 부족은 저소득빈곤국에서 많이 발견됨 4.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와 공여국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중재가 요구됨 가. 수원국의 수요와 공여국의 이해와 관심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 나. 건전한 거버넌스와 평등한 성장에 대한 요구 및 효과적인 리더십과 제도는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주요 정책제언	1. 공여국과 수원국의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진하고 이를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전략에 통합시킴 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공동의 개발 전략을 개발하고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정책 대화 및 활동을 위한 통합된 메커니즘을 개발함 • 공여국은 수원국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함 • 반부패정책은 수원국의 특정 환경과 제도에 맞추어 실행되어야 함 • UN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의 이행에 관한 수원국 정부의 공약에 기초함 • 공동의 정부 및 리더십의 개혁을 추구함 나. 통합된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 및 변화와 성과를 점검함 다.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 언론, 민간 부문 등 비국가행위자와의 협력을 도모함 라. 반부패 개혁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반부패 노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모니터링 및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함 • 정부와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개혁 또한 필요함 마.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취약한 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협력의 대안으로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행위자들과 협력함 •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지 강화는 주요 목표임을 인식해야 함				

	바.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배경 및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함 사. 장기적인 문제 해결과 대응이 바람직하나 신속한 대응 또한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함 아. 공유된 비전과 전략, 공여국 간의 공동 대응에 대한 공여국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해야 함 2. 부패 발생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 가. 공여국/기관은 공여국 기업에 의한 뇌물, 돈세탁, 자산송환, 비준 등과 같은 부패 행위 및 원인에 대해 수원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또한 OECD 뇌물방지 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국제 협약을 이행해야 함 나. 기타 공여국/기관과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함 다. 수원국의 민간부문과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함 라. 모든 공여국 원조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보장되어야 함 마. 상호 법적 지원과 자산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함 • 국제적 법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함 • 수원국의 관련 부서와 협력함 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뇌물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센티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확인되므로 OECD/DAC 회원국은 반부패를 위한 자국 정부 내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 및 유지해야 함 •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청렴한 리더십을 향한 세계적 운동을 확산하여 인센티브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킴 3. 지식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 정도를 측정함 가. 공여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원조 정책과 활동 정보를 공동 수집하고 공유해야 함 나. 공여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원국 정부가 정책 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함 다.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발전 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를 정부가 체계화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함 라. 국제적 차원에서 공여국은 지식 수집과 연구조사 결과를 지속적인 정책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DAC 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ion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2. 10) / 페이지 수 / 49
기타	–

<table>
<tr><td>제목</td><td>21세기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의 기여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td><td>DAC 문서 주제</td><td>MDGs</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M-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주인의식(Ownership), 파트너십(Partnership)</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 상호 책임감
• 개발을 위한 자원 생산과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
• 폭력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부패와 부정행위의 척결 및 방지
• 고성장 개발도상국 및 지역 개발의 경험을 공유
나. 개도국의 책임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원칙과 제도를 준수
• 성 평등과 사회 개발을 위한 기본 목표 달성에 충실
• 책임감 있는 정부 및 법치주의 강화
• 인력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
• 기업 활동 및 국민 저축을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다. 공여국의 책임
• 합의된 개발목표와 최우선 과제의 달성을 위해 지원
• 개도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개발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적 개발협력 합의를 준수
• 수원국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
• 수원국의 정보와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를 지원
• 인권 및 폭력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간의 일관성 도모
• 기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 협력을 강화
2. 효과적인 원조
가.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지원
• 개도국의 예산 및 재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원조 지출이 필요함
나. 개발자원의 확보
• 개도국이 자본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저축, 효율적인 재무 시스템, 건전한 경제 정책이 필수적임</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21세기의 개발 협력은 보다 사람 중심의 참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지님
가. 빈곤 감소와 동시에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달성
나.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분열과 국가 기능 실패를 저지
다.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 협력에 대한 참여와 기여의 폭을 확대함
라. 개도국이 세계 경제에서 무역 및 투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td></tr>
<tr><td>배경과 역사</td><td colspan="5">1. OECD/DAC 21개 회원국 중 GNP 대비 ODA 비중의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4개국뿐이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도주의적 원조 및 부채 탕감에 지원되고 있음</td></tr>
</table>

평가지표	1. 경제 개발의 지표 가. 세계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현재 세계인구의 30%가 절대빈곤인구에 해당됨 나.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 절대빈곤인구를 1/2 감소해야 함 2. 사회 개발의 지표 가. 모든 국가에서 초등 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함 나.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성별 불균형과 차별을 제거해 성 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를 개선해야 함 다. 2015년까지 개도국의 유아 사망률을 1990년의 2/3로 감소해야 함 라. 안전한 가족계획수단을 포함한 출산 관련 기초보건서비스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늦어도 2015년까지) 확대 보급되어야 함 3. 환경의 지속성 및 재생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환경 및 자원 훼손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대해야 함		
관련 DAC 주제	1. 빈곤감소(Poverty) 2. 환경(Environment) 3.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1995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6. 5 (2009. 2. 11)	페이지 수	24
기타	1. ANNEX: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의 개발 파트너십(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New Global Environment)		

<table>
<tr><td>제목</td><td>개발 협력에서의 OECD의 역할(Making Poverty Reduction Work: OECD's Role in Development Partnership)</td><td>DAC 문서 주제</td><td>MDGs</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M-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개발 파트너십 (Development Partnership),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원조일치(Alignment),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원조 조화(Harmonization), 취약국가(Fragile State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OECD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조명하며 빈곤감소를 위한 OECD의 역할을 강조함
2. OECD 회원국과 수원국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을 제시함
3.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해 주요정책에서 추구하는 시너지 효과와 개선 사항을 조사해 개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MDGs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 OECD의 주요 역할
가. 정책 실행자들 간의 OECD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경험 및 역량개발을 공유함
나. OECD/DAC은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주요 공여국을 조직화해서 원조 정책의 조화를 독려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함
다. OECD는 공여국의 개발정책의 통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여국 별 접근법에 관한 분석 틀을 개발했음
2. OECD 회원국과 수원국의 경제성장은 MDGs 달성의 기본조건임
3. 안보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DAC 정책 및 모범사례는 취약국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 노력의 지침을 제시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OECD 회원국과 수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안정된 환경 조성이 필요함
가. 안보와 정치 안정은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성장과 개발, 빈곤감소를 위한 주요요건이므로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협력해야 함
• 원조 통합에 있어서 원조분배는 물론 외교 및 무역 정책을 취약 국가와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함
나. 신뢰할 수 있는 거시경제 구축과 유지를 지원해야 함
• 안정된 경제구조는 국가 경제의 통합 및 투자 장벽의 제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
• 투명하고 안정된 경제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전략을 통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요구됨
• 무역절차의 간소화, 제조업과 농업에 대한 관세 축소 및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와 자유화는 개발도상국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다. 에너지 수요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낮은 투자와 비효율적인 경영 및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공기업 환경은 에너지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됨
• 수원국, 공여국, 개발은행,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필요한 재정지원의 투자 및 유통을 위해 중요함
•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은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를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음
2. 정책 실행 역량과 다양한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향상함
가. 효율적인 원조
• 원조 조화(Harmonization): 공여국/기관 간의 공동 지원관리 절차, 프로그램, 간소화된 원조 절차와 시행 등을 통한 협력
• 일관된 원조수행(Alignment): 공여국이 원조를 경영하는 국가시스템은 원조제공자 간 협력과 원조수행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며 공여국의 개발목표는 수원국 개발목표와 일치해야 함
• 효율적 원조를 위해 국제적 개발 프로그램의 통합, 수원국 주도적인 개발 전략의 수립,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취약국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td></tr>
</table>

	• 구속성 원조(Tied Aid)는 수원국이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 집행 절차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가 효과적임 나. 개발과 기타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및 시너지효과를 향상시킴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책 통일을 추구해야 함 •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OECD 정부의 다른 정책들 간의 일관성이 중요함 • 빈곤 감소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지원은 원조-무역-투자-이민 간의 연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함 • 성 평등은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성장과 MDGs 달성을 위한 기본요소임 • 수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 · 선택함 • 이주노동자의 자국 송금은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 및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정책과 개발 정책 간의 일관성이 필요함 3. MDGs 달성을 위한 자원 동원 및 투자 가. 단순한 원조 규모 확대보다는 다양한 재정자원의 개발, 부정부패 척결 및 공공· 민간부문의 충돌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원조지원은 수원국의 예산계획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발원조는 예측 가능해야함 다. 수원국의 세제 관리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입의 증가가 필요함 4. 주요 분야의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네트워크를 이용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성 평등(Gender)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3.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1997)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2. 11) / 페이지 수 / 53
기타	1. DAC 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ion(p.41) 2. Principles for Donor Action in Anti-Corruption(p. 43)

제목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 (A Better World for All)	DAC 문서 주제	MDGs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M-R-2
DB 키워드	빈곤(Poverty), 성 평등(Gender Equality), 보건(Health),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 교육(Education)				
주제	1.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중요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가. 2015년까지 극 빈곤층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극빈층의 비율은 줄었으나 구소련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 인구의 절대적 수치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지만 상대적 수치 (전체 인구 중 빈곤 인구의 비중)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저체중 현상은 신체발달 및 지적성장을 저하하고 사망을 초래하기도 함 • 9억 명의 인구가 현재까지 극빈층으로 존재해 MDGs 달성이 긴급함 2. 초등교육 보편화 가.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중 1/3이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입학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의 낮은 질이 문제가 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시설개선, 교사 재교육 및 가정과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함 • 개발도상국 내 빈부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높음 •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3. 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 가. 2005년까지 여성의 권한 강화 달성 및 초 · 중교육의 성별 불균형 제거 • 여성 교육은 국가 내 사회, 경제, 정치적 진보를 이끌 수 있음 • 여성의 초 · 중등학교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빈부에 따른 격차가 높게 존재함 • 2005년까지 목표 달성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임 4. 유아사망률 감소 가. 2015년까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 감소 • 1998년 5세 이하 천백만 명의 영유아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경우였음 • 1960-1990년 간 영유아사망률은 절반이하로 떨어졌으나 1990년대 들어서 그 감소 속도가 낮아짐 • 식수 위생 관리의 미비, 질병(에이즈, 말라리아, 홍역, 폐렴)의 예방 및 치료, 영양 교육의 부족 등이 영유아사망의 주요 원인임 • 기초사회보장서비스 투자와 여성교육(특히 빈곤층 여성 교육)이 영유아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함 5. 산모사망률 감소 가.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의 3/4 감소 • 1995년에는 50만 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였고,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과다출혈, 낙태, 감염 등에 기인함 • 보건 시스템에 대한 투자 및 산전 · 후 조리 제공 등이 산모 사망률 감소에 기여함 6.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가. 2015년까지 생식건강의 관리를 보급 • 매년 세계적으로 4백만 명의 청소년이 낙태를 경험하며, 에이즈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위험에 놓여 있음 • 에이즈와 같은 성병 예방과 피임 교육의 보급 및 여성을 해하는 관습 폐지가 필요함 • 1999년 말 3천3백만 명의 에이즈 보균자 95%가 개도국에 거주함				

	7. 지속가능한 환경 가. 2005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가정책 및 계획에 통합시키고 2015년까지 훼손된 환경 자원을 회복시킴 • 1990년대 초반 대규모의 열대우림이 훼손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5-10여 개의 열대우림종이 30년 안에 멸종할 것으로 예측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우환경회의에서 몇몇 국가만이 '리우선언'과 'Agenda21'을 채택했으며 이행 국가도 소수에 불과함		
주요 정책제언	1. 빈곤층에게 발언권을 부여 가. 여성과 빈곤층에게 동등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2. 빈곤 친화적 성장을 지원 가. 빈곤층이 적절한 보수를 보장받으며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나. 빈곤 여성의 토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훈련을 지원해야 함 3. 기초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을 지원 가. 양질의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해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 4. 개발성과의 효과적인 분배 가. 저축을 장려하여 특히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에 재투자해야함 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지원해야 함 다.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백신 프로그램 보급과 부채 경감 등 개발협력을 확대해야 함 5. 무역 · 기술 · 지식 시장의 개방 가. 관세 장벽을 낮추고 수출입 및 재정시스템의 개선을 지원 나. 수원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성 평등(Gender) 3. 환경(Environment)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0 (2009. 2. 11)	페이지 수	26
기타	–		

<table>
<tr><td>제목</td><td>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공적개발원조의 역할(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P-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ODA가 수원국 내의 투자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빈곤 감소를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ODA가 수원국 내의 투자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 투자비용 감소: 높은 사업비용은 이익과 투자를 감소시키므로 인프라 조성과 범죄와 부패 예방,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함
나. 투자 위험 축소: 안정된 투자환경과 투자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원국의 정책적 제도적 개혁을 지원해야 함
다. 경쟁 증진: 수원국의 시장보호 장벽 제거 또는 시장 경쟁 장려 정책 또는 관련 법률제정을 지원해야 함
라. 역량 개발: 투자환경개혁은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효과적인 제도변화를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역량 구축을 지원함
2. 빈곤 감소를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함
가. 빈곤층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여러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함
• 빈곤층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지원해야 함 (빈곤층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시행, 정부 관료의 권력남용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Help Line 구축 등)
나. 여성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하여 여성의 시장 참여를 확대
•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인프라 확충과 여성교육확대, 급여와 일자리 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감소시키는 법률에 대한 지원 등
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 재정 정책이필요함
• 빈곤층은 특히 환경오염에 취약하므로 수원국과 공여국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등을 이용해야 함
라. 소규모자본대부(Microcredit)를 포함해 금융 분야를 발달시키면 빈곤층과 소규모 기업인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음
• 공여국은 법률, 감독, 재정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금융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마. 사회기반시설의 낙후와 미비는 성장, 무역과 투자에 가장 큰 장애가 되므로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를 강화해야 함
• 교통, 에너지, ICT 서비스는 빈곤층의 시장 진입을 위해 중요함
• 수원국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제안함: i)수원국 주도의 프레임웍 사용; ii) 빈곤층에 대한 인프라의 영향성 강화; iii)인프라 투자 관리 체제 향상; iv)인프라에 대한 자금 조달 증가
바. 농업 생산성 증대와 다양화를 위한 투자: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대부분은 민간농업분야에 종사하므로 시장접근성 강화, 생산성 향상 기술 증진, 전력, 관개, 도로 인프라 투자 촉진은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td></tr>
<tr><td>배경과 역사</td><td colspan="5">1.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에 중요한 촉매제인 민간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원국 내 민간투자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ODA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부각됨</td></tr>
</table>

평가지표	1. 민간부문개발, 농업, 인프라, 거버넌스, 역량개발, 환경, 젠더 각 부문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동일한 전략적 틀 안에서 공여국/기관이 서로 협력하였는가? 2. 수원국의 투자환경과 발전단계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과 원조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여기구 내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고려했는가? 3. 수원국 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했는가? 이는 계약 협상에 대한 공기관의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4. 원조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수원국 내에서 조달함으로서 원조기관은 수원국 내의 민간부문 개발 지원을 고려하였는가? 이를 위해 수원국 민간 부문의 역량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5. 물품과 서비스의 직접 공급, 기술협력, 무상지원, 파트너십 등 다양한 원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OECD/DAC 구성원들은 한정된 원조수단에 의지하고 있는데, 원조 수단이 원조 목표, 특히 민간부문 투자촉진에 적합한지를 고려했는가? 6. OECD/DAC 구성원의 정책이 투자동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했는가? 이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에 속하지 않는 정책들이 수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1.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9. 1. 22	페이지 수	37
기타	-		

제목	빈곤친화적 성장의 촉진(Promoting Pro-poor Growth)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P-G-2
DB 키워드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주인의식(Ownership), 파트너십 (Partnership)				
주요 권고사항	1. 빈곤층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원국의 성장 속도와 유형을 권고함 2. 빈곤친화적 성장 정책을 위해 빈곤층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세부 권고사항	1.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의 속도와 유형이 모두 중요함 2. 빈곤층의 토지, 노동, 자본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빈곤층의 이익과 고용, 창업을 위해 역량개발과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빈곤층을 성장에 참여시키는 파트너십이 중요함 3. 여성의 참여 증진은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의 핵심이자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써 증가하는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함 4. 건전한 시장 기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진해 빈곤층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함 5. 국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민간 분야의 구조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소외되기 쉬운 시민사회와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참여해야 함 6. 공여국은 수원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빈곤친화적 성장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수원국의 국내 정책 과정에 통합시키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함 7. 공여국은 파트너 국가의 개발 단계, 정책 환경, 국가 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조 지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함 8. 공여국은 수원국 내에 프로그램 협상, 조정,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함				
주요개념	1. 신속하고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위해서 빈곤친화적 성장이 필요함 가. 빈곤친화적 성장이란 가난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에 참여 및 기여하도록 하고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장 패턴과 속도를 말함 나. 젠더와 환경과 같은 주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다.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해 수원국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빈곤층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수원국과 수원국의 정책형성과정은 개방되고 투명하여 빈곤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배경과 역사	1. 2001 빈곤감소를 위한 OECD/DAC 가이드라인은 빈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성 평등(Gender) 3.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1. 2001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4. 5 (2009. 2. 5)	페이지 수	4		
기타	1. 본 보고서는 2006년 4월 5일 OECD/DAC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었음				

제목	빈곤감소에 관한 DAC 가이드라인(The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P-G-3
DB 키워드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주요 권고사항	1. 수원국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프레임웍과 정책고안 2. 빈곤 감소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 3. 빈곤감소,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을 위한 제도 변화와 개발				
세부 권고사항	1. 수원국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프레임웍과 정책고안 가. 수원국의 기존 개발프레임웍을 토대로 해야 함 나. 빈곤감소가 개발원조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다. 다양한 원조 활동 간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고려해야 함 라. 원조 계획단계에서부터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마. 분야별 원조방법(Sector Wide Approaches, SWAPs)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파트너십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바. 보다 효과적인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국 상황에 맞는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2. 빈곤 감소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 가. OECD 회원국은 빈곤감소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야 함 나. 빈곤 감소 정책은 특히 무역, 농업, 식량 안보, 갈등조정 등의 분야와 일관성을 가져야 함 다. 공여국/기관 간의 개발협력 정책 일관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함				
주요개념	1. 빈곤의 개념 가.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교육적, 정치적, 안보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차원의 박탈감을 지칭함(예: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가.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쟁이나 부패, 인권 경시, 성 차별, 급격한 인구 증가, 에이즈 등의 질병의 전염으로 더욱 악화됨 3. 빈곤 측정 지표 가. 성별, 나이, 사회 계층 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 HDR)"를 이용함 4. 빈곤감소 정책의 방향 가. 빈곤친화적 성장과 성 평등의 개선 • 성장의 속도와 함께 공평한 성장의 분배 및 조화가 필요함 나. 빈곤층의 자립 능력을 강화 다. 공공사업을 통해 깨끗한 식수, 안전한 주거환경,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 라.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추구 마. 성 평등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강화 바. 지속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과 생활환경 보호				
배경과 역사	1. 다양한 개발원조의 성공사례를 통해 빈곤 감소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극심한 빈곤과 에이즈의 확산, 사회 ·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층의 문제는 빈곤 감소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세계화와 기술적 진보가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3. OECD/DAC의 21세기 전략은 선진국이 사회 · 경제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함				

평가지표	1. 빈곤감소 관련 수원국 평가지표 가.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과 중기적 세부계획이 존재하는가? 나. NGO의 견해가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다. 빈곤 감소와 성 평등이 이루어졌는가? 라. 예산집행이 투명하였는가? 마. 빈곤감소정책이 자원분배에 반영되었는가? 바. 국가의 빈곤감소 전략을 이행하는데 합의된 기준은 무엇인가? 사. 빈곤감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빈곤감소 척도가 있는가? 아. 정책 프레임웍이 사회적 ·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요구를 잘 반영했는가?	2. 빈곤감소 관련 공여기관 평가지표 가. 수원국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공여기관의 전략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 공여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는가? 라. 공여국 간 정책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마. 수원국 주도의 국가별 맞춤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을 원조기관이 지지하고 강화했는가? 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원활하였는가? 사. 다른 공여기관들과 원활한 정책 대화가 있었는가?	
관련 DAC 주제	1. 성 평등(Gender) 2. 환경(Environment)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2009. 1. 13)	페이지 수	130
기타	–		

<table>
<tr><td>제목</td><td>DAC 지침: 민간부문의 개발 지원(DAC Guidelines: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P-G-4</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공기업 개혁(Public Enterprise Reform), 금융부문 개발(Financial Sector Development),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민영화(Privatisation)</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경제 개발 및 사회복지 개선 목표에 기초한 민간부문 개발을 유도함
2. 경쟁력 있는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개발함
3. 민영화와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 간의 균형을 유지함
4. 경쟁력 있는 기업의 구축 및 성장을 지원함
5. 사업 활동을 장려하는 법적 ·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가.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전략을 위한 필요 요건
• 시장 자유화, 자유경쟁, 합리적인 정부 규제 및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에 관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책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기업 활동 활성화, 민영화, 수출 촉진, 금융부문 개혁,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법률 제정 및 실행을 위한 수원국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 수원국의 개발단계와 현존 사회경제 시스템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부문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함
다.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 목표에 기반한 민간부문의 개발을 유도하며 발생가능한 시장 왜곡 효과는 피해야 함
라. 수원국의 공공부문 역량 강화와 민간부문의 조직적 개발 및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시스템과 책임기관의 구축을 지원해야 함
마.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은 공공기관의 구조 개혁을 포함하는 정책 대화와 정책집행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바. 민간부문 개발과 원조계획은 양립 가능해야 하며 민간부문 개발 정책은 수원국 국가원조계획에 통합되어야 함
사. 공여국은 기업개발, 민영화 추진, 수출 증대, 금융부문 개혁, FDI 유치를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함
아. 민간부문의 평가에 수원국 정부가 참여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자. 수원국의 부정부패와 보호무역은 민간부문이 사회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저해하므로 공여국은 수원국 민간-공공부문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해야 함
차. 공여국은 비정부기구(NGO), 협동조합, 자조그룹(Self-help group)등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운송, 에너지 등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 개선해야 함
카. 공여국은 개발금융 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s)을 설립해 이를 통해 수원국 기업에 투자함
타. 기술이전 및 규제, 법제 개혁을 위한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함(예: 효율적 세제 관리, 재산권 보호, 경직된 노동시장의 완화)
파. 공여국 간의 목표, 전략, 정보 교환 및 협력,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함
2. 금융부문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가.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의 조성이 우선과제임
• 수원국의 저축 증가와 자본형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함
• 안정된 은행 시스템과 합리적인 정부 규제가 필요함
• 공여국의 개발금융기관은 개발도상국 시장에 기초한 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및 자본시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다양한 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하여 금융시장을 지원해야 함</td></tr>
</table>

	• 민간부문과 정부 저축을 유지 및 증가하기 위한 수원국의 정책이 필요함 3. 수원국의 민영화와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여국의 가이드라인 가. 수원국 공공-민간 부문의 균형을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함 • 수원국 기업 매각은 자유 시장경제 추진 및 규제완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관되고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실행기관 설립을 지원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민영화 전략 개발과 민영화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원조 프로그램은 민영화 목표와 일관되어야 함 나. 안정된 투자 환경을 위해 다자기관과 협력해야 함 다. 수원국의 민간-공공부문의 역량강화를 도움 • 수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라. 수원국의 실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예: 고용 재훈련 프로그램, 상담, 해고수당 지급 등) 4. 기업 개발(Enterprise Development) 가. 공여국은 기술이전과 FDI를 통해 기업 생성 및 성장을 도움 • 공여국의 민간 기업들은 수원국 내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원, 정보, 서비스가 기업부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입되도록 수원국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나. 공여국은 하청, 특허 또는 공공부문과 공여국의 정부조달 등을 통해 수원국의 기업과 국제적 기업의 연계를 도모해야 함 다. 수원국 기업 간의 연계 강화, 조직 혁신, 지역통합 등의 민간부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라. 고용, 소득분배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소규모기업개발(Micro-enterprise Development)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소규모기업 개발프로그램은 신용과 저축활동을 추구해야 함 • 금융기관과 소규모기업의 연계 형성 및 강화가 필요함 5. 기업활동개발(Business Development) 가. 투명성, 예측 가능성, 법제화 등 기업 활동을 위한 경제, 법률, 제도적 체제 및 법적 체제를 마련함
주요개념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 가. 민간부문 개발이란 "사람"에 관한 것으로 생산성, 경제성장 및 개발을 향상시켜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함
배경과 역사	1.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 개발 정책이 확대되며 민간부문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 2. 민간기업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구조개혁을 실행함(재정 및 화폐 개혁, 규제완화, 경쟁력 강화, 관련 법률 개선 등) 3. 민간부문 개발은 거시경제 안정 및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며 자유와 안보를 제공하는 다원적 사회의 형성, 민주주의에 기초한 친환경 시장경제 및 공정한 사회 건설을 촉진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DAC Orientations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1993) 2. DAC orient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1994) 3. Private sector Development: A Guide to Donor Support (1995)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5 (2009. 02. 04) / 페이지 수 / 42
기타	-

<table>
<tr><td>제목</td><td>빈곤친화적 성장의 촉진: 사전(事 前) 빈곤 영향력평가의 조화(Promoting Pro-poor Growth: Harmonizing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P-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사전 빈곤영향력평가(Ex-ante PIA),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td></tr>
<tr><td>주제</td><td colspan="5">1.사전빈곤영향성평가(Ex-ante PIA)는 서로 다른 방법론과 수원국 정부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상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여기관과 수원국이 공여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줌</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EX-ante PIA란 원조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여국간 또는 수원국과 공유하는 과정임
2. Ex-ante PIA의 주요 장점
가. 빈곤의 복합 다면적인 특성 및 OECD/DAC의 역량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국제원조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과 의의를 고려하여 원조 대상에 대한 영향의 질적 · 양적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함
나. 천년개발목표 달성 및 거버넌스와 안보 등의 전략적 목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별적인 원조 지원 채널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됨
라. 국제적 개입과 국내 개발전략 및 빈곤 감소 전략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마.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기획 수립에 활용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음
바. 빈곤 친화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개선 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음
사. 개발협력 진행 중 또는 사후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3. 적용 범위: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임
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따르는 원조 접근법은 정책적 대화, 국가기획 프레임워크, 및 예를 들어 분야별접근법(Sector Wide Approaches, SWAPs)에서의 빈곤 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음
4. 수원국의 모든 관련 기관과 참여자들이 자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함
가. 본 접근법의 상세한 수준은 포괄적인 분석과 자원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 사이에서 합리화되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원은 시행 기구가 제안한 개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결정함
나. 대체로 Ex-ante PIA는 소규모의 전문분석가 팀의 능력에 의지하여 수원국 동료들과 협력하여 일하게 되며 기존의 정보과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빈곤층 및 취약층에게 많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주요 개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 및 위기 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와 신뢰성 있는 분석이 중요함
다. 중요한 지식 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적 · 양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본 접근법을 강화할 수 있음
5. 분석의 틀
가. 분석의 틀: 국가전략 · 계획 지원방법의 합의(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지원 경로의 선택,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 이해, MDGs 등에 대한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이해</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빈곤 감소에 대한 수원국의 전략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함
2. 가격(물가, 임금), 고용, 세금 및 양도, 기본 사회 서비스 등에의 접근성, 제도 및 기구, 물리적, 인적, 사회적 자산 등 6가지 경로를 통한 지원활동의 잠재적인 결과를 Ex-ante PIA 시행을 통해 파악함
3. MDGs 또는 다른 전략 목표와 관련하여 효과를 통합함
4. 결과 보고 및 권고사항
• 보고서에는 원조 개입의 내용과 국가 빈곤 감소 정책과의 관계, 주요 효과, 잠재적인 위험, 프로젝트 기획의 변경 가능 부분 등이 포함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고지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함</td></tr>
</table>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천년개발목표(MDGs) 2.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OECD/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 Practical Guide to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6)	페이지 수	29
기타	1. 전송채널 및 표적집단의 결과(p.18) 2. 이해집단별 결과(p.19)		

제목	공식화의 장애요소 제거(Hot Topic Paper: Removing Barriers to Formalization)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P-R-2
DB 키워드	공식화(Formalization), 공식 경제(Formal Economy),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규제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				
주제	1. 수원국 경제의 공식화의 중요성과 주요 장애요인을 파악 2. 공식화의 장애요소 제거 우수 사례를 제시				
주요 연구결과	1. 공식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가. 비공식 경제는 단기적으로 실업자, 여성, 청소년 및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및 수입 소득을 제공하나 장기적으로는 빈곤감소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음 나. 장기적 개발과 경제 형성을 위해 공식 경제가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복지 확대, 사회 안정, 빈곤 감소 등을 이루어야 함 다. 기업의 공식화는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공식 경제를 이룸 • 급여 여건 및 고용 안정 등이 보장된 직장 제공 •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약속강화 • 기업 간 협약에 대한 신뢰성 • 투자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여건 마련 • 과세기준의 폭을 넓힘(잠재적으로 저세율 허용) •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지방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지지를 위한 프레임웍 강화 • 공식 경제의 금융권에 의한 중개를 위한 자원을 지원 • 지하경제 축소 • 비즈니스 서비스, 자본금 및 토지 개선 지원 2. 기업의 관점에서의 공식화 장애요소 가. 규제적 장애요소: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 감사 등 의무 절차 나. 행정적 장애요소: 과도한 행정 서류, 비효율적이며 지연되는 행정 절차,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 권력 남용 등 다. 각종 과세 부담 및 재정적 요구사항: 복잡한 세금법규 및 관세절차, 신규 사업 및 면허에 대한 등록비 부당 책정 등의 관료적 요구사항 라. 부패: 공식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서 공무원의 부패로 인해 정부 주도적 사업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비공식화를 초래 마. 사회문화적 장애요소: 비공식 경제 내 기업 간 상호의존관계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기업의 공식화로의 전환을 저해함				
주요 정책제언	1. 공식화의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정책제언 가. 폭넓은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지원 및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의 도입 나. 정부 내 친생산/경제 문화의 조성과 관련 공공 서비스 개선 다. 다양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절차의 간편화 라. 세금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마. 세금 사용처와 기업의 세제혜택의 정보공유 바. 사업등록 및 허가제 합리화 사. 면허 남용 방지 및 면허 신청의 간소화 아. 사업 및 생산자 연합 등록을 독려 자. 등록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 공식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 관계자와의 대화 시도 (지역 회의, 라디오 토론 등)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과 공식화를 지원 • 정부의 부패를 해소해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식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비공식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여국은 상보적이고 점진적인 공식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협력 2. 유용한 정책 및 실행사항 가. 공여국의 효과적인 공식화 경험을 포함한 도구(Toolkit)을 개발 보급 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공식화를 촉진 다. 기업성장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지역 차원의 공식화를 위해 지원 • 전면적인 법률개혁이 어려운 경우 일괄처리서비스(One-stop Shops)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 행정절차를 실시 라. 공식화 절차 중 정부와 기업 간 연계로 인한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특히 등록 및 면허 절차에서의 부패방지가 필요함) 마.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공무원 교육을 통해 비공식 경제의 중요성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식화 도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 바. 비공식 경제의 복리 증진 계획이 공식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함 사. 공식화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신뢰와 이해를 쌓기 위해 정부와 비공식 기업(혹은 그의 관련된 연합단체) 간의 대화를 지원 아. 장기적인 공여국의 개입으로 인한 강점을 고려 • 규제 및 행정적 장애요인 개혁, 정부 의 관료적 절차 개선 등의 강점이 있음 • 장기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다 신중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움 자. 지방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량 차를 좁히기 위한 절차를 마련 차. 공식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유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9) / 페이지 수 / 9
기타	–

<table>
<tr><td>제목</td><td>공여국의 빈곤 감소 정책 및 실행에 대한 OECD/DAC 연구(DAC Scoping Study of Donor Poverty Reduction Policies and Practices)</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P-R-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주요 공여기관의 빈곤감소 정책과 실행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기관의 전략 및 역할을 이해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기관의 목표, 개념 전략과 역할
가. 공여기관의 목적과 의무
• 모든 공여기관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빈곤감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조적인 지원도 실행해야 함
나. 빈곤의 개념
• 공여기관은 '기본욕구충족/수입과 소비/자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사회적 포용력/성 평등과 인종평등/ 정치적 자유와 안전'의 결핍 또는 부족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빈곤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수용하고 있음
• 빈곤의 개념의 불명확성과 다양한 개념 간의 혼란으로 인해 빈곤의 원인과 영향성에 대한 합의된 사항은 없음
• 각 공여기관은 자체적인 빈곤층의 개념과 목표에 따라 원조수혜 대상을 관련 사회경제 그룹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예: 농업 분야 관련된 기관들은 주요 대상을 소작농에 제한)
• 빈곤층 뿐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의 이해와 파악 및 빈곤화 과정에 대한 공여기관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됨
다. 빈곤 감소를 위한 공여기관의 전략
• 공여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과 사회 안전망을 고려해야 함
• 성(性)별 역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성정책은 빈곤감소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주요 공여기관의 빈곤감소 기본전략이며 이때 여성정책과 분배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빈곤감소를 공여기관 내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가. 원조기관의 인센티브제도
나. 빈곤감소를 주요 목표로 하는 공여기관 조직
다. 성 평등 달성을 핵심 과제로서 인식
라. 빈곤 문제에 초점을 둔 원조정책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3. 국가적 차원의 빈곤 감소 노력
가. 충분한 분석을 통해 수원국 지원전략 도출 및 공여국 간의 협력 도모
나. 빈곤 감소를 위한 수원국 내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국가와 지역 파트너 간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공여기관의 빈곤감소 목표와 역할
가. 공여기관은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제를 채택하고 통일된정책을 실행해야 함
나. 수원국 내 NGO와의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더 잘 이해하며 개발 원조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함
다. 피드백을 통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목표 달성 결과를 확인하여 공여기관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기구를 설립해야 함
2. 공여기관의 빈곤 감소 주류화를 위한 필요 사항
가. 공여기관의 정책과 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나.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 및 실행
다. 수원국의 원조 관련기관, 정책, 공공부문 지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대화가 필요함</td></tr>
</table>

	라. 빈곤감소를 위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접근법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여기관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 실시 마. 원조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와 정책개발을 실시 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빈곤감소 정책에 통합시키기 3. 국가적 차원의 빈곤 감소 노력 가. 빈곤감소의 목표를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통합시키기 • 빈곤 친화적 성장의 지원을 위한 정책 개혁 시 성(性), 사회개발, 기관신설, 거버넌스,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원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수원국 주도의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공여국과 연합하여, 수원국 정부가 개발을 이끌 것 • 원조기관들은 보다 정확한 빈곤 평가(자료수집 및 분석)를 위한 기술 개발 • 목표가 수행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및 목표수행결과에 대한 책임감 증진 나. 양자 및 다자기구간의회담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도모 • 공여국은 빈곤감소를 위한 공통 목표를 지니는 수원국 내 특정 부서(예: 재경부)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도모하고 시민사회나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빈곤감소를 위해 수원국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수원국 내 인적자원역량(Human Resource Capacities)과 기관의 역량강화 필요 • 파트너십은 빈곤감소를 위한 제도적 지속성과 효율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 다. 원조기관 별로 빈곤에 대한 정의와 목표대상이 다르므로, 목표가 일치하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수원국 내적으로는 지역별, 분야별 필요를 잘 파악하여 정부와, 지역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도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9. 11. 15 (2009. 2. 7) / 페이지 수 / 122
기타	–

제목	사전빈곤영향성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Practical Guide to 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Manual
				문서번호	P-M-1
DB 키워드	사전빈곤영향성평가(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Ex-ante PIA), 영향성평가(Impact Assessment),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주요 권고사항	1. 사전 빈곤영향성평가(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를 통해 결과 중심적 접근의 강화, 빈곤정책 집행 비용의 감소, 수원국 부담의 최소화를 추구함 2. 사전 빈곤영향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개발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과를 제고함				
기본개념	1. 사전 빈곤영향성 평가 가. 사전 빈곤영향성 평가는 기존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거나 또는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춤 나. 자료, 시간, 인력과 재정적 측면의 자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집행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공 다. 사전 빈곤영향성평가는 정보 제공의 목적뿐 아니라 그 결과를 활용하여 원조지원 계획의 개선사항을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서 원조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함 라. 사전 빈곤 영향성 평가는 빈곤친화적 성장, 국가 개발전략과 계획, 이해관계자 및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 마. 원조 집행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원조 전달 경로를 결정함 • 원조 전달 경로: 가격, 고용, 양도와 세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자산 2. 결과의 연쇄적 파급효과 가. 결과의 연쇄적 파급효과는 초기의 투입이 즉각적인 결과산출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결과 뿐 아니라 최종 목표까지 예측할 수 있음				
세부 매뉴얼	1. 사전빈곤영향성평가의 5단계 가. 1단계: 원조집행 계획의 소개 및 현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 국가 전략 및 계획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원조의 필요성을 확인함 • 다차원적인 빈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조 지원 분야 및 지역의 빈곤 현황을 분석함 • 빈곤감소 전략의 존재 여부와 우선적인 고려 사항을 파악 나. 2단계: 원조집행 영향을 받는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 원조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원조 집행과 그 효과성의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관과 인구에 대한 분석 다. 3단계: 지원경로와 성과에 대한 검토 • 목표의 파악 및 이해관계자와 해당기관에 대한 이해 →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원조 전달 경로를 사용할지 결정 라. 4단계: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에 미칠 영향 고려 •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원조 집행의 결과와 영향 예측 • 이해집단에 대한 원조 집행의 결과와 영향은 경제, 인간, 정치, 사회문화, 안보에 기초하여 분석됨 마. 5단계: MDGs 및 기타 전략적 목표에 대한 결과의 분석 • 국가 전략에 따른 MDGs와 기타 중요 목표 달성의 성과와 장기적 결과를 살펴 봄 바. 정보의 양과 질 등에 대해 각 단계에서 평가되고 결정 됨				

보고체계	1. 대부분의 빈곤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는 공여국의 요청과 수원국 또는 관련 기관의 동의하에 진행 2. 수원국이 직접 설계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를 이해함에 따라 수원국이 국내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빈곤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3. 빈곤정책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는 원조 집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력을 겸비한 평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됨		
평가 및 Feedback	1. 사전빈곤영향성평가는 원조 전달 경로와 그에 따른 5가지 분야(경제, 인간, 정치, 사회문화, 안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2. 강점(Strength), 방향(Direction), 영향(Impact)에 따라 ++(매우 긍정적), +(긍정적), 0(관련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로 평가 3. 사전빈곤영향성평가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제안을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가. 원조지원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기간 나. 빈곤 친화적 특성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다루기 위한 원조 제공 계획의 수정 사항 다. 잠재적 위협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및 정보 체계 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분석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보완책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7 (2009. 1. 14)	페이지 수	82
기타	1. 사전 PIA의 구체적인 양식(p.38)		

제목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역할에 관한 정책시사점(Policy Lessons on the Role of ODA in Mobilising Private Investment)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P-P-1
DB 키워드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주제	1. 민간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의 역할에 관한 정책 교훈				
주요 연구결과	1. 민간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ODA의 역할 가. 수원국 내 개발목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 및 개입이 필요 나.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의 분석 및 파악이 필요 다. 지역자본시장과 자금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원조와 민간투자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라. 지역 내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공급 차원의 지원 필요 마. 공식 경제의 경제 성장 저해 요소를 감소시켜야 함 2.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ODA 프로그램의 고려사항 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개입이 필요 나. 수원국의 개발정책에 기초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 3. 민간개발투자유치를 위한 ODA의 역할 가. 민간부분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의 완화와 관련 기관의 개혁을 유도해야 함 나. 투자 환경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입이 필요함 • 시장 규모 및 성장전망, 관련 정책 및 규제, 인적자원, 경제 · 기술적 인프라, 국제무역 및 시장 개방성 등이 투자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분야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 정책제언	1. ODA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 가.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다음과 같은 환경개선이 필요함 • ODA 지원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법률 및 규제구조 개혁지원 • 기업지배구조 및 공공지배구조의 개선 • 교통, 통신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수원국의 시장 자유화 및 무역구조 개선을 유도 • 외국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 나. 수원국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 다. ODA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창업교육 및 직업훈련, 선진국 기업과의 사업 제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투자 유치를 촉진 라. 민관파트너십(PPP) 체결을 유도하고 체결 절차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Mobilizing Investment for Development: ODA and Investment Synergies in Africa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6. 6 (2009. 2. 13)	페이지 수	50		
기타	-				

<table>
<tr><td>제목</td><td>민간부문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친화적 성장의 가속화(Accelerating Pro-poor Growth through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P-P-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빈곤친화적성장(Pro-poor Growth),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빈곤감소를 위한 공여국의 민간부문 개발 프로그램 효과 증진</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빈곤친화적성장과 민간부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빈곤친화적성장의 정의
• 빈곤친화적 성장의 상대적 의미: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평균 소득 증가율 보다 빠르게 증가해 빈곤층과 그 외 집단 간의 소득 불균형이 감소됨
• 빈곤친화적 성장의 절대적 의미: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에 중점을 두며 MDGs에 포함됨
• 빈곤친화적 성장은 대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을 이용해 측정하지만 실제로 빈곤층의 수입 증대로 인한 성장의 효과는 나라 및 시기별로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음
나. 민간부문의 정의
• OECD/DAC 정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 및 경쟁구도 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정신을 발휘하며 생산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
• 민간부문은 부유층, 빈곤층, 개인 혹은 단체 등에 관계없이 수입 및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주체
•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이 국가 경제발전의 엔진역할을 하며 국가 GDP 및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음
2. 빈곤친화적 성장과 민간부문 개발의 연관성
가. GDP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은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산 활동과 시장거래 증진의 결과이므로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민간 부문의 역량 개발을 통해 경제 가치와 부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함
나. 빈곤친화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빈곤층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빈곤층도 경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3.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를 통한 민간부문개발 주류화
가. PRSP에서 강조하듯 민간부문개발은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주류화가 되어야 함
나. PRSP는 민간부문의 개발이 빈곤감소, 경제성장, 시장개방, 거버넌스 강화에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나 비즈니스 규제,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시장접근 및 기능 등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분석은 부족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빈곤친화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레임웍을 마련해야 함
가. 기업 활동과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기업은 수입과 수익률 증대를 위해 생산, 투자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 생산 역량의 개발, 일자리 창출, 신기술 도입을 이끌어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기타 생산 활동의 생산력 증대를 유도해야 함
• 기업의 생산과 투자 촉진을 위해 단순한 세금감면만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과 수익 보상 간의 균형에 따라 인센티브를 기획하고 제공해야 함
• 투자 위험과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생산과 투자의 인센티브는 저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도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혁신을 통한 생산력과 경쟁력 증진을 도모함
• 시장 요소 강화: 재정부문 강화, 노동 수요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 빈곤층 인력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및 지원함
• 비즈니스 서비스, 구조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 정보와 지식 공유 및 확산, 비즈니스 서비스와 기관의 역량 강화</td></tr>
</table>

	• 연구 및 기술 기관, 학계 지원: 관련 연구와 혁신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함 다. 수원국을 국제 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생산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원국을 세계 무역시장으로 통합시킴 라. 시장접근성 개선 • 빈곤층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빈곤층의 생산 활동 참여를 높이고 빈곤친화적인 성장을 도모함 마. 위험 및 취약성 감소 • 빈곤층은 인재 및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보험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빈곤층을 위한 위험 관리 전략을 개선해야 함 2. 민간부문개발을 통해 빈곤친화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 추구 가. 빈곤친화적 제도로의 변화를 위한 절차 • 빈곤친화적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간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함 • 정부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과 시민단체에 정치경제적 영향을 행사함 • 민간부문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므로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시민단체는 사회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함 • 급속한 변화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개혁의 반대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를 지원함 나. 우선사항 및 순차적 변화 • 우선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순차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진단 툴(민간 부문 평가와 경제 분석을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함(예: 세계은행의 투자환경평가) • 빈곤친화적 성장은 시장 개혁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임 • 성과와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참여적 조사방법(Participatory Learning)을 포함해 지원 대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함 3. 새로운 민간부문개발 의제 설정을 위해 공여국의 지원이 필요함 가. 공여국은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지원 접근법 개발, 수원국 정부의 빈곤친화적 성장 범위 파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함 나.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해야 함 • 시장규제 개선, 빈곤친화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조직 및 기관이 필요함 • 기업 지원을 통해 시장접근을 개선함 다. 비즈니스개발서비스(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 개선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기업의 서비스 지원, 시장원리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공 • BDS 제공자를 위한 교육훈련과 인증 시스템 개선 라. 빈곤층을 위한 금융시스템에서 소액금융(Microfinance)의 주류화 • 소액금융 제공자가 상업적 원칙하에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함 • 상업은행의 소액금융지원을 지원함 • 소액금융기관 통합에 필요한 재정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함 • 거래비용을 줄이고 지역적 지원을 위한 기술 도입을 위해 소액금융기관 및 상업은행과 협력함 마. 공여국의 개입은 직접적이며 제도와 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며 이루어져야 함 바. 공여기관의 조직 개혁 • 공여기관의 조직 체계는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협력이 가능해야 함 • 참여적 평가와 학습을 통해 모니터링을 함 • 분야별원조방법(SWAPs) 등을 활용해 공여국 간의 협력과 빈곤친화적 성장을 가속화 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MDGs(천년개발목표) 2. Governance(거버넌스)		
관련 DAC 문서	1. DAC Orient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1995 (1995) 2.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in 2001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4 (2009. 2. 15)	페이지 수	73
기타	–		

제목	빈곤과 보건복지(Poverty and Health)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Guideline
				문서번호	P-G-5
DB 키워드	빈곤친화적 보건 접근방법(Pro-poor Health Approach), 보건(Health),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				
주요 권고사항	1. 빈곤 감소를 위해 보건 복지 향상에 있어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보건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2. 효과적인 빈곤친화적 보건 복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3. 빈곤친화적 보건 복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둠 4. 수원국 주도적인 빈곤친화적 보건 복지 접근을 장려하고 지원함 5.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보건 관련 세계적인 공공재 개발을 장려함				
세부 권고사항	1. 빈곤 감소를 위해 보건 복지 향상에 있어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보건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가. 예산 재분배 정책을 통해 수원국 내 보건복지 분야에 자원을 동원하고 보건 복지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체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킴 나. 수원국의 빈곤 친화적 개발 달성을 위해 보건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정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 • 보건 복지 부문의 투자와 빈곤감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발 원조를 지원하고 경제재건과 민주주의 강화 등 다각적으로 빈곤 친화적 보건복지 접근을 모색함 • 개발목표 공유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대화를 활성화함 • 공여기관들 간의 공동 절차를 구축, 활용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 다. 보건 복지 관련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과 빈곤 완화를 위한 원조를 증대함 2. 효과적인 빈곤 친화적 보건 복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가. 수원국은 보건 복지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빈곤층도 양질의 보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원국 정부는 보건 서비스 공급자로서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의료 전문 인력 개발과 확대를 위해 전략을 수립함 나. 수원국은 빈곤층이 보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재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평등한 보건 관련 재정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빈곤 친화적 보건 복지 접근을 모색함 • 세금에 대한 공동 관리 제도를 개발하여 보험과 위험 분담을 담당하는 재정 체계를 확립함 다. 수원국은 지역의 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화를 모색함 라. 수원국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함 • 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수원국은 민간 의료 서비스와의 협력, 보조금 지원, 파트너 관계 구축을 모색함 마. 공여국은 수원국 보건복지 관련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함 바. 공여국은 빈곤층에게도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국의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사.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위해 시민사회 또는 민간 기관을 지원함 • 수원국 주도 하에 보건 복지 정책이 향상되도록 지원 수단을 강화하고 빈곤 감소 전략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3. 빈곤 친화적 보건 복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둠 가. 수원국은 보건 복지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분야와 목표를 조화시키며 이를 위해 여러 행정 부서들과 협력해야 함 • 농촌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지원하고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정책을 마련함				

	• 안전한 식수 공급, 위생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함 • 사고 발생 시 빈곤층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할 체계를 개발하고 여러 부문 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한 환경을 개선해야 함 나. 교육, 영양, 수질, 위생 분야의 정책과 보건 부문 간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빈곤 및 보건과의 연계성) • 빈곤층에게 건강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질병 발생률과 아동 및 여성 사망률이 높음 • 성불평등은 빈곤과 보건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여성 대상 교육을 통해 아동, 가족, 공동체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영양실조와 식량 안보 문제는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문제는 빈곤 감소에 있어서 중요함 • 대부분의 빈곤층은 값싼 구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오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단 근처에 거주하여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므로 환경 문제는 빈곤층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짐 4. 수원국 주도적인 빈곤 친화적 보건 복지 접근을 장려하고 지원함 가. 수원국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이를 빈곤감소전략(PRS)에 통합해야 함 • 보건 기관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통해 보건 서비스 제공 시 빈곤층을 더욱 고려하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취약 그룹에 대한 특별 전략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함 • 빈곤층의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들을 예방하고 필요한 보건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질병 통제력을 향상시킴 나. 수원국은 PRS와 보건 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킴 다. 수원국은 세계 보건복지 이니셔티브가 국가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노력함 라. 형평성, 접근성, 서비스의 질, 빈곤층의 재정 문제를 고려하는 지표들을 선택하여 보건복지 시스템의 개발 성과를 모니터링 함 마. 성 평등 정책과 같이 빈곤층의 보건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보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정확한 분석과 수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빈곤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함 바. 공여국은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PRS와 보건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공동 평가 절차 구축을 지원함 • 각 국가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고 수원국 주도적인 전략적 프레임웍을 통해 빈곤 친화적 보건 복지 접근을 지원함 사. 수원국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역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건복지와 빈곤 감소 목표들의 이행을 파악함 아. 수원국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국제적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함 5.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고 보건 관련 세계적인 공공재 개발을 장려함 가. 질병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 보건 관련 기술개발과 같은 국제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PRS에 통합함 • 인센티브를 강화해 세계적인 공공재 개발과 원조 효과성을 제고함 • 국제협력을 통해 빈곤층의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수원국의 노력을 강화함 나. 빈곤층에게 필수적인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등 무역 및 이주문제를 포함한 정책들과도 일관성을 도모함 • 빈곤 국가에게 필수 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TRIPS와 공공 보건에 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을 따름 • 보건과 무역 분야 담당 인력은 정책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킴

주요개념	1. 빈곤 친화적 보건 접근 방법(Pro-Poor Health Approach): 빈곤층의 보건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개발 접근 방법		
배경과 역사	1. MDGs에 따라 2015년까지 보건 복지의 개선을 달성해야 함		
평가지표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성 평등(Gender) 3. 거버넌스(Governance) 4. 무역(Trade)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4 (2009. 02. 11)	페이지 수	94
기타	–		

제목	빈곤친화적성장의 장려: 농업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P-R-4
DB 키워드	빈곤친화적성장(Pro-poor Growth), 농촌사회(Rural World), 농업생산성(Agricultural Productivity),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				
주제	1.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이드라인 내 제안된 정책들의 세부적인 실행방침 제시 2.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 방안				
주요 연구결과	1. 수원국 내 농업관련 지원의 중요성 가. 농업은 수원국의 국가소득의 주요 원천임 나. 농업 자체가 농촌 수입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식품가격을 내리고 안정화함으로 빈곤 감소를 돕고, 고용증가, 관련 소비재와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농업 이외 경제의 성장 또한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다.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와 생계수단의 다양화는 빈곤감소의 핵심요인임 2. 농업성장을 위한 도전과제 가. 세계화로 소규모 자작농의 시장접근성은 증진되었으나, 식품의 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통합으로 인해 농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약화되고 있음 나. HIV/AIDS 등이 농촌지역의 인구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구밀도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음 3.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가. 농촌에 대한 투자가 빈곤 감소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개발원조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정책에서 농촌에 관한 정책적인 공약 및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나.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다. 빈곤층이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 인 필요 4. 농촌사회(Rural Worlds)의 다섯 가지 유형 가. 아래 5가지 농촌사회에 관한 유형은 농촌 및 농업체계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빈곤감소 정책제시를 가능하게 함 • 농촌사회1-대규모의 상업적 농가와 농기업 • 농촌사회2- 전통적인 농가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농기업 • 농촌사회3- 생계를 위한 농가와 소규모의 농기업 • 농촌사회4- 땅이 없는 농가와 소규모의 농기업 • 농촌사회5-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만성적인 빈농가 5.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농촌 경제와 농민의 생계전략, 잠재적인 생산성, 농업생산에 관계된 노동, 농업의 기회에 관한 이해에 바탕을 둬야함 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해야 함 • 지역적인 상황: 농업생태학적 잠재력, 수반되는 경제변화에 따라 다양 • 농업에 관계되는 공공정책 : 각각의 농업생태학적 잠재력과 각 나라가 도달해있는 변화의 단계에 맞춰져야 하며 농업의 자원들이 경제의 다른 분야로 이동 가능 하도록 융통성 있어야 함 나. 제도설립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 부여 • 농업의 성공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원인은 제도에 있음 •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재정 지원, 시장접근성을 지원해야 함 다. 빈곤 감소에 관한 국제적 활동을 지원 • 세계적인 무역 협상 및 천년개발목표(MDG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원조의 규모를 키울 것 •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논의된 원조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G8 수장들은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정신(NEPAD) (농업생산성 증대와 도시-농촌 연결 및 빈민의 권한을 강화를 반영)을 지원 하는데 동의함				

	라. 협력 장려 • 국가의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시행을 위해 중요함 – 과거엔 농업과 농촌 개발은 농촌빈곤 특성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빈곤감소전략에서 경시되었음 • 전반적인 생산력 증가 및 가이드라인의 융통성 있는 실행 등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주요 정책제언	1. 농업 분야 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가. 정책 • 농촌 내 빈곤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빈곤층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함 • 각국이나 각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소규모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투자가 필요함 나. 공공 · 민간 ·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혁신적 기관 정비를 통하여 농촌 내 빈곤층에 농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다. 투자 •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생계와 관련된 천연자원에 투자해야 함 • 빈곤층 소유의 천연자원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나눠야 하며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함 2. 시장접근성과 생산성 증대 가. 빈곤층의 생계에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역 · 국내 · 국제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증대해야 하며, 농촌 사회의 지역적 현실 및 농촌빈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를 두고 진행해야 함 나. 농업분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정책과 규제에 관한 프레임웍이 필요함 다. 새로운 정책과 법적인 프레임웍은 천연자원관리기술, 관리 프레임웍을 개발하고, 빈곤층의 토지 및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라. 토지 및 수자원 사용에 관한 적절한 법률 제정과 그 시행을 강화해야 함 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고 빈곤층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생계수단의 증진 가. 정책들은 민간분야 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함 • 빈곤선상(Poverty Line)에 있거나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세제 • 빈곤층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토지소유체계(Tenure System) 개정해야 함 다. 지속적인 산업개발을 위한 천연자원을 보호 정책이나 법의 제정 라. 직업의 다양화를 꾀함 마. 국가별 분석 작업에 기초하여 농업과 농촌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꾀할 때 농촌생계의 다양화가 가지는 복잡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4. 농업관련 사회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가. 사회 · 경제적 기본서비스에 투자해야 함 나.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연구와 개발에의 투자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5) / 페이지 수 / 92
기타	1."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for Donors"에서 발췌 2. Risks in the Five Rural Worlds(p.69, table 4.1)

<table>
<tr><td>제목</td><td>빈곤친화적 성장 촉진: 사회경제인프라
(Promoting Pro-poor Growth: Infrastructure)</td><td>DAC 문서 주제</td><td>Poverty</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P-R-5</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사회경제인프라(Infrastructure), 취약국가(Fragile State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인프라 구축 및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살펴봄</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빈곤친화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회경제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2.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은 MDGs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다수의 공여국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사회경제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가. 수원국 주도로 실시되어야 하며, 공여국의 원조와 조화되어야 함
나. 사회경제인프라가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선해야 함
다. 인프라 투자와 관리 개선을 통해 장기적,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함
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함
2.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적용
가. 수원국 주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함
• 공여국들은 기술 지원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원국과 협력함
• 빈곤친화적 성장에 필요한 전략을 수원국 주도로 수립하고 공여국은 여러 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프로그램 중심의 원조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이를 위해 사회분야의 개편과 예산을 지원함
• 공여국과 수원국은 사회경제인프라 투자의 실행 가능성과 개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함
• 사회경제인프라 계획, 설계, 관리, 운영 및 규제에 관한 기술 지원과 훈련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함
나.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빈곤친화적 성장을 도모함
• 사회경제인프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계획 및 이행 시 가능한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함
•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빈곤층의 참여를 유도함
• 투자지역에 필요한 장기적인 사회기반시설 서비스에 맞추어 기술적, 상업적 인프라 투자를 도입하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수원국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성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다. 사회경제인프라 서비스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장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함
• 수원국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요한 투자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빈곤층의 지불능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가격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
라. 사회경제인프라 관련 투자와 재정을 확대함
• 수원국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공여국은 장기적 개발 원조 지원과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3. 가이드라인의 분야별 적용
가. 교통
• 교통수단 계획 및 관리의 통합, 교통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함
• 대중교통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용도를 높임
• 교통수단 건설로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진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함</td></tr>
</table>

	• 도로교통 안전 확보,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방지, 교통으로 인한 HIV/AIDS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나. 에너지 •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빈곤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관세와 보조금으로 인프라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광범위한 지역까지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야 함 • 세수 증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함 • 바이오매스 에너지(Biomass Energy)와 같은 기술 도입과 확산을 통해 저비용의 에너지 제공을 도모함 • 빈곤층의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액대출제도를 도입함 다. 정보통신 •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필요함 •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을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발함 •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을 지원함 라. 수자원 • 수자원 관리는 경제성장과 수자원 관리 실패로 인한 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함 •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법규 및 규제를 마련함 • 관개사업 투자에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실시 및 확대해야 함 •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수자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위생 관련 투자의 확대, 교육 실시 및 확대 4.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적용 가. 취약국가와 전후국가에서는 핵심 사회경제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수원국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함 • 취약국가와 전후국가의 경우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빈곤과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중앙정부의 재건과 역량강화를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 도로, 에너지, 상하수도와 같은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에 중점을 둠 • 국가의 안보 강화를 통해 인프라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인프라 관리 및 유지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관리권을 해당 지역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함 나. 중소득 국가의 빈곤완화를 위해 민관파트너십 체결 및 시행이 필요함 • 중소득 국가 내 지역적인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 정부 실패, 부정부패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NGO와 민간부문의 인프라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인프라시설 관리와 유지를 위해 지역 민간부문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함 • 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민관협력체결을 통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함 •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연계된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함 다. 무역 증진, 국가안보 개선, 천연자원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공여국 간의 조정을 위해 비용분담 메커니즘 도입이 필수적임 • 무역 활성화를 위해 철도 등의 운송 수단 건설과 출입국 시 인종차별적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방지함 •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조 및 프로젝트 실행 준비 기관을 설립함 5. 사회경제인프라의 영향 평가 가. 빈곤 감소에 미친 사회경제인프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인프라 영향평가시행이 필요함 나. 평가지표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시스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다. 사회경제인프라 계획과 빈곤감소, 역량강화 전략과의 조화를 도모함

	라.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함 6. 전략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가. 수원국 주도의 프레임웍을 활용하여 공여국 간의 조정 및 조화 도모 여부를 다음의 지표를 통해 평가함 • 전체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중 공여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의 비율 • 분야별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중 공여국 펀드의 비율 • 공여국 간의 중기적 공동 지원전략 수립의 유무 • 공여국과 수원국의 빈곤감소 전략과의 연계 여부 나. 인프라 제공에 있어서 빈곤층의 지원 여부는 다음의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함 • 공여국의 사전영향력평가 시행 여부 및 회수 • 범분야적 계획 수립과 영향력 평가 시행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는지 여부 다. 인프라투자 관리 개선 여부 평가 지표 • 인프라 시설의 유지와 개발을 위한 재정의 비율 • 정기적인 유지 및 관리와 관리능력 개발에 투자하는 공여국의 수 • 수원국의 분야별 계획 및 예산 수립 시 공여국 프로젝트와의 연계 라.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재정 활용의 효과성 평가 지표 • 인프라 조달 자금 중 비정부 개발원조 자금의 비율 • 공여국의 원조에서 경제적 인프라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취약국가(Fragile States) 3. 천년개발목표(MDGs)
관련 DAC 문서	1. 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for Donors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4) / 페이지 수 / 92
기타	1. 빈곤친화적 성장 촉진을 위한 공여국의 정책가이드(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for Donors) 문서 중 하나임

제목	빈곤친화적 성장 촉진: 민간개발(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DAC 문서 주제	Poverty	DAC 문서 분류	Report
				문서번호	P-R-6
DB 키워드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공식화(Formalization), 여성의 권한강화(Women's Empowerment)				
주제	1. 빈곤감소와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해야 함				
주요 연구결과	1. 민간부문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을 통한 빈곤감소와 M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 주요사항에서 공여국의 역할이 필요함 가. 경제 공식화의 장애 요인 제거 나. 개발도상국 내의 경쟁정책 도입 시행 다. 기술 및 재정 지원 강화 라.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한 금융부문 강화 마. 여성의 시장 진출 촉진 바. 공공 · 민간 대화 도모 2. 빈곤친화적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 개발을 가속화해야 함 3. 국가기관과 정책의 개혁을 통해 공여국의 역량을 강화함				
주요 정책제언	1. 공식화의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 가. 폭넓은 규제개혁 프로그램 지원 및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도입 나. 정부 내 친생산/경제 문화 조성과 관련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고안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절차의 간편화 라. 경제 공식화를 장려하기 위해 과세 소급제도 무효화 마. 세금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바. 세금 사용처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 확산 사. 사업등록 및 면허제도 합리화 아. 건강, 안전, 환경 및 기타 문제가 되는 사업활동에 대한 면허제한 • 면허 남용 방지 및 면허 신청의 간소화 자. 사업 및 생산자 연합 등록을 독려함 차. 등록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카. 경제 공식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 관계자와의 대화를 시도함(예: 지역회의, 라디오 토론 등)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과 공식화를 지원함 • 정부의 부정부패를 해소해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식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비공식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여국은 상보적이고 점진적인 공식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협력함 2. 개발도상국 내의 경쟁정책 시행 가. 해당 수원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구조, 법률 및 문화에 적합한 경쟁정책을 개발, 수립함 나. 빈곤층을 배려하는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함 다. 경쟁정책은 매년 중기 기획과 예산을 반영해야 함 라. 경쟁정책의 초점은 시장 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리의 제도화에 있음 마. 해당 관리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자원을 지원받아야 함 바. 관리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 경쟁정책 도입 초기 장애효과와 비용이 가장 높은 사항에 우선적으로 집중함 3. 기술 및 재정 지원 역할 강화				

가. 공여국 개입: 직접적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시장문제, 제안된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 개입 자체가 시장왜곡 및 시장개발방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나. 공정 경쟁: 민간 기업에게도 원조 자원 활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

다. 기업 및 중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최소화함

- 재정 및 기술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가능한 시장 원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함(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과 위험분담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

라.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보조금을 지원함

- 사회 및 인프라 서비스 등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투명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함

마. 성과중심적인 원조 원칙을 적용함

-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에 있어서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해당 비용 부담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바. 민간 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 사전에 명확하게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을 준비함

- 상황에 따라 시장개발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특히 분쟁관계에 있거나 자연 및 인공 재해의 경우, 피해 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조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제도적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접근법을 활용할 시작 및 출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4.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지원함

가. 개발도상국의 금융 서비스에의 접근성 수준과 접근에 있어서 장애요인,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함

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제도 및 법적 환경을 구축하고 금융부문 평가 서비스를 비롯하여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함(예: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가 공동운영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 금융 정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 IMF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역할도 중요함
- 금융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국제금융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함

다. 금융 중개기관의 현대화를 지원함

- 은행, 보험회사, 소액금융기관 등의 금융 중개기관과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교육, 보건, 주택건설, 중소기업, 농업 및 자금상환 등 수익률이 낮은 분야의 금융 중개기관을 지원함

라. 담보, 신용등급제 도입,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의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 개선하고 외국과 지역 투자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금융계획과 메커니즘을 도입함

마. 국내 자원에 의한 투자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저축 증대를 촉진함

- 종합 저축관리, 건강 및 연금 보험 등의 금융 메커니즘을 지원함

바. 송금 정책

- 해외 이주자는 공식, 비공식 재정 축적에 기여하나 상당수가 공식적인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해외 이주자의 송금을 공식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해야 함

사. 세계 소액금융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원칙하에 소액금융(Microfinance)지원의 법적 프레임웍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금융기관과 기존 소액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소액금융기관과 은행 간의 연계 강화를 촉진함

아. 빈곤감소전략(PRSP)과 금융부문 정책 개발을 지원함

- 금융정책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함

	5. 여성의 시장 진출을 촉진함 가. 젠더분석도구(Gender Analysis Tool)를 개발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확인함 나. 여성의 시장참여기회를 강화하기위해 성별 가치사슬 분석(Gender-disaggregated Value Chain Analysis)을 도입함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미시-거시적 경제의 연계를 강화함 라.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예:Food-for-work), 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기타 보험 및 연금제도 등을 구축함 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프로젝트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지원하고 여성의 시장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 정보와 통신기술을 제공함 바. 비공식 경제에서 여성의 권한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및 규제적 장애요소 제거, 조세 개혁, 건강보험 및 연금혜택을 제공함 6. 공공 · 민간 대화(Public-Private Dialogue, PPD) 채널 구축 가. PPD는 중소기업과의 대화 및 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 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 설립을 지원함 다.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치적 리더십과 책임감 강화를 지원함 •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쌓고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야 함 라. 상향식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시행을 지원함 •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은 보다 참여적인 기획과 예산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빈곤 친화적인 민간부문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자원의 재분배(Redistribution)와 균등화(Equalization)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3. 성 평등(Gender)
관련 DAC 문서	1. Acceleration Pro-Poor Growth through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4) 2. Removing Barriers to Formalization, Promoting Pro-Poor Growth: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6)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5) / 페이지 수 / 88
기타	–

<table>
<tr><td>제목</td><td>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OECD/DAC 가이드라인</td><td>DAC 문서 주제</td><td>Quality of Aid</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QA-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Untied ODA),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Partially Untied ODA), 구속성 공적개발원조(Tied ODA), 혼합신용(Associated Financing)</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가 최대한 투명성을 갖도록 해야 함
2.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 각각에 대한 지속적 사후 관리가 필요함
3.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는 개발 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주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혼합신용, 증여율이 50%이하인 구속성 및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 증여율이 50% 이상인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 각각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선별기준과 디자인을 다른 OECD/DAC 회원국과 OECD 사무국(Secretariat)에게 제공해야 함
2. 공적개발원조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개발 우선사항을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수원국 정부가 이미 허가한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지의 여부
나. 국제개발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지의 여부
다. 국제개발지원기구나 다른 OECD/DAC 회원국이 우선 개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3.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가. 구속성 원조가 개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
나. 평가 결과는 정기 OECD/DAC 혼합신용 심사(DAC Associated Financing Reviews)에 제출해야 함
4. 개발원조 재정분야 실무단(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의 요청이 있으면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을 받는 개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가. 보고서는 위 실무단이 결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나. 보고서는 요청이 있은 후 즉시 준비되어야 하며 정기 OECD/DAC 혼합신용 심사에 제출되어야 함
5. OECD/DAC 혼합신용 심사 후에 열리는 차기 OECD/DAC 고위급 회의(DAC High-Level Meeting)에 위 보고서의 요약본을 제출해야 함
6.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가 최빈국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조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7.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여국은 행정절차 상에 있어 연락사무소(Contact Point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다른 OECD/DAC 공여국이 특정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td></tr>
<tr><td>주요개념</td><td colspan="5">1. ODA는 정부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도상국과 다자기구에 제공하는 자원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가. 원조의 주요 목표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이어야 함
나. 원조는 무상이거나 증여율이 최소 25%이어야 함
2. 혼합신용은 다음을 포함함
가. 공적개발원조
나. 증여율이 25%이상인 공적지원
다.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수출 신용, 증여율이 25% 이상인 공적지원이나 자금지원
3. 혼합신용은 무상적인 요소와 유상적인 요소가 복합된 형태의 자금조달이며 수원국이 무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지원되는 원조도 수용해야 함</td></tr>
</table>

	4.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는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조달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말함 5.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는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공여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일부의 한정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경우임 6. 구속성 공적개발원조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임 7. 비구속성 원조 또는 부분적 비구속성원조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여국은 원조 지원 제안 시, 수원국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원조 조달 가능 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배경과 역사	1. OECD/DAC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가 국제발전 목표를 지향하며 공정한 무역경쟁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평가지표	1. 개발원조 재정분야위원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받았는가? 2. OECD/DAC에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3. 새로운 정책이 채 택된 경우 OECD/DAC에 고지했는가?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Untying of Bilateral Development Loans in Favor of Proc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문서작성일 (번역일)	1987. 4. 24 (2009. 2. 12)	페이지 수	5
기타	1. 본 문서의 원 제목은 “혼합신용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개발원조 대한 OECD/DAC 가이드라인”으로 1987년 4월 24일 OECD/DAC에 의해 채택됨		

<table>
<tr><td>제목</td><td>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OECD/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td><td>DAC 문서 주제</td><td>Quality of Aid</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QA-L-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식량원조(Food Aid), 비구속화(Untying),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구속성 정부조달 관행(Tied Procurement Practices)</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최빈국에 대한 ODA의 비구속화를 통해 원조의 규모와 질을 개선함
2. 공여국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및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을 제시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OECD/DAC 회원국은 2002년 1월까지 다음 분야에서 최빈국에 대한 ODA를 비구속화 할 것을 동의함
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구조조정 지원, 채무면제, 부문별 또는 다부문 프로그램 지원, 투자관련 프로젝트 원조, 수입 및 물자 지원, 상업 서비스 계약(Commercial Services Contracts), 정부 조달 관련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 지원
나.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국내 생산품 최소 이용법(Minimum National Content Rule) 규정을 보유한 공여국은 ODA 비구속화의 실시와 확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식량 원조의 경우 국제 포럼의 협의사항이 OECD/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영향을 미침
나. 투자관련 기술 협력과 독립적인 기술협력의 경우 수원국의 기술 요청 목적과 공여국의 국가 개입에 관한 기본 방침이 OECD/DAC 회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정부 조달
가. 물자 및 서비스 조달은 OECD/DAC의 바람직한 정부조달 관행(Good Procurement Practices) 원칙을 따라야 함
나. 원조를 통해 지원되는 물자 및 서비스는 1996 OECD/DAC 권고와 1997 OECD 협약의 지침을 적용하여 조달해야 함
2. 회원국 간의 노력과 역할 분담의 진전사항
가. 회원국의 상황과 초기 및 참고 시점에 관한 평가는 참고지표모형을 참고함
나. 균형적인 노력 분담을 위해 참고지표모형은 원조 집행의 절차와 과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실적분석표(Performance Profile)와 함께 사용됨
다. 회원국은 참고지표모형에서 현재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을 보여주는 연간 국가 보고서(Annual Country Profile)를 준비하고 ODA 비구속화를 위한 초기 및 중간 단계의 목표를 명시해야 함
라. 해당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간의 동료검토(Peer Review)는 회원국의 균형적인 노력분담 증진을 위한 추가 활동 실행에 기여함
마. 본 권고사항의 이행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는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관한 동료평가와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고려되어짐
바. 공여국 간의 역할과 노력 분담 메커니즘 및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2009년에 실행될 것임
3. 투명성
가. 비구속성 원조의 경우 OECD/DAC 회원국은 수원국과 협력하여 원조관련 세부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야 함
나. OECD/DAC 회원국은 비구속성 원조에 속하는 재정계약에 관한 정보를 OECD/DAC에 제공해야함
4. 모니터링과 평가
가. OECD/DAC은 다른 메커니즘과의 조화를 통해 이 권고사항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함
나.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검토하는 연차보고서는 연간 OECD/DAC 고위급회담을 위해 OECD/DAC이 검토함
• ODA 규모, 질, ODA 흐름의 방향에 있어서 권고사항의 반영 정도
• 투자관련 기술협력과 식량원조에 대한 회원국의 정책교서</td></tr>
</table>

	• 회원국 간의 노력과 역할 분담 개선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 OECD/DAC 회원국의 정부조달 시행과 비구속성 원조의 형태 • 수원국의 정부조달 역량 강화와 원조에 의해 제공된 정부조달에 수원국 기업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본 권고의 이행사항 및 그 효과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는 2009년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며 권고사항의 이행 및 OECD/DAC 회원국 간의 균형적인 노력 분담,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 개선에 초점을 둘 것임		
향후 연구방향	1. 투자 관련 기술 협력과 본 권고사항의 효과적 실행을 보장하는 식량원조의 개념을 운용하기위해 필요한 우선사항으로 추후 연구가 실행될 것임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2.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1997)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12 (2009. 2. 5)	페이지 수	10
기타	1. 이 리포트는 1998 OECD/DAC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 임무에 대한 OECD/DAC의 대응으로 논의된 결과이며 위의 권고사항은 최빈국에 대한 OECD/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에 적용될 수 있음 2. 이 권고사항은 DR 700,000 이하(투자관련 기술협력의 경우 SDR 130,000) 의 활동, 독립적인 기술협력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최빈국 ODA의 비구속화 참고지표 모형(p.6) 4. 최빈국 리스트(p.9) 5. 원조조달 자유화(Aid Procurement Liberalisation): 1998 OECD/DAC 고위급 회담 임무(p.10)		

제목	원조의 구속화(The Tying of Aid)	DAC 문서 주제	Quality of Aid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QA-P-1
DB 키워드	구속성 원조(Tied Aid), 양자원조(Bilateral Aid), 다자원조(Multilateral Aid)				
주제	1. 구속성 원조에 관해 OECD/DAC 회원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와 의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원조에 대한 기술적인 참고문헌을 제공함				
주요 연구결과	1. 구속성 원조의 형태 가. 구속성 원조의 종류로는 특정개발프로젝트/프로그램, 특정서비스, 지역에 대한 구속 등이 있음 나. 구속성 원조의 규모는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 않음 다. 공여국에서 구매되어 수원국에 조달된 상품은 구속성 원조로 분류됨 2. 구속성 원조와 양자원조 가. 저개발국가로의 교사, 자원봉사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술협력이 양자 원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나. 혼합차관(Mixed Credit)이 부분적으로 공여국의 국제수지에 도움이 되고 있음(혼합차관의 개념은 기타 참조) 3. 구속성 원조와 다자원조 가. 다자원조의 경우 대부분은 비구속성 원조이나 구속성 원조도 존재함 (예: 모든 개발도상국에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은행은 적격성에 따라 수원국의 수를 제한하므로 다자원조가 구속화 됨) 나. 총 개발원조에서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 다자원조는 양자원조에 비해 공여국의 이익 보다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따른 개발협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라. 1980년대 협조융자(Co-financing)의 증가와 정책 일관성 강화와 같이 다자 원조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다자 원조기구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OECD/DAC 회원국 내 다자간원조 규모와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주요 정책제언	1.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함 2. 양자 구속성 원조에서 다자 구속성 원조로 이행해야 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1.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987)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9. 2. 1 (2009. 2. 16)	페이지 수	39		
기타	1. 혼합차관(Mixed Credit) – (출처: www.koica.go.kr) 가. 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해외융자를 할 때 금리가 싼 정부 원조자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 나. OECD 가입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수출 금융을 제공할 때는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상환기관 등 융자조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완화시킬 수 없으므로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빠져나가기 위해 프랑스가 제일 먼저 혼합차관을 도입했으며 뒤이어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table>
<tr><td>제목</td><td>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구조조정정책 사례연구(Trade and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td><td>DAC 문서 주제</td><td>Trade</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T-R-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무역정책(Trade Policy)</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생산과 수출의 다양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 구조조정정책과 무역을 달성한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적용 가능한 정책 교훈을 탐색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사례연구
가. 지역, 자원부존 상황, 경제 · 사회적 개발 정도에 따라 5개국(칠레, 케냐, 레소토, 모리셔스, 태국)이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나.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내 구조조정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부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책적 교훈
가. 정책 프레임웍
• 거시경제 안정을 확보하고 수출의 장애물을 제거, 현실적인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수출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문기구 회원에게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문기구를 설립함
나. 무역정책
• 수출 촉진 및 경쟁과 혁신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시장 진출을 꾀함 (예: 사례국들은 다자, 지역, 양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OECD 시장 진출을 꾀함)
• 수출 물품의 다양화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무역 개혁은 성공적인 구조조정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례국 모두 이를 실행하였음
• 다양한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함(예: 수출상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에 세제 혜택 제공, 면세기간 설정, 여타 재정조치를 제공함)
다. 투자
• 정부는 개입이 아닌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를 하고 있음
• 국내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출 관련 분야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라. 인프라
• 교통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수출품 또는 부품 배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마. 사회·환경적 영향
• 산업 발전으로 수질오염, 망그루브 보존 지역이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사례연구
가. 칠레
• 경제 · 사회적 배경: 1973년 이후 주력 산업이 섬유와 기계 제조에서 수출 중심 농작물로 전환되어 과일, 와인, 연어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음
• 주요 산업: 농수산업
• 정부정책: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비차별적 투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있음
• 과제 및 기회: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 시장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나. 케냐
• 경제 · 사회적 배경: 거버넌스와 인프라가 취약해 산업 성장을 저해함
• 주요 산업: 화훼
• 정부정책: 정부가 연구 개발과 서비스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과제 및 기회: 경제 침체와 빈곤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시장 진출 시도와 정부와 기업 간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구상 중임
다. 레소토
• 경제 · 사회적 배경: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생산적인 노동력과 EU와 미국 시장에의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산업: 의류 생산업</td></tr>
</table>

	• 정부정책: 거시 경제적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레소토의 의류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과제 및 기회: 외국인소유의 기업이 시장접근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제가 점차 주요 산업위주로 편성되고 있음 라. 모리셔스 • 경제 · 사회적 배경: 주요산업은 제조, 서비스(여행), 농업, 어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류제조업은 1970년대 설탕수출 및 외국자본으로부터 생성된 자본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됨 • 주요 산업: 의류 생산업 • 정부정책: 인프라에 대한 투자, 노동력, 시장접근의 용이함 등이 산업 발달을 지원하고 있음 • 과제 및 기회: 산업 분야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마. 태국 • 경제 · 사회적 배경: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산물 수출국이며, 농업과 어업이 국가 산업화 과정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 주요 산업: 수산업 • 정부정책: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음 • 과제 및 기회: 선진국 수입시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환경문제로 인한 해산물 질의 저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과 베트남 시장의 성장이 태국의 직면한 과제 임
주요 정책제언	1. 수원국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해야 함 가. 거시 경제 안정을 지원함 나. 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역량 강화를 지원함 다. 인력 자원과 인프라 시설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함 라. 수원국 내 투자 증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수출 시장 확대, 관련 기관 설립 및 역량을 강화함 2.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가. 개발도상국은 수출 지향적이고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우호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함 나. 개발도상국은 자국 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전략프레임웍 안에서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라. 구조조정의 효과는 인프라와 인력자원, 기술수준과 같은 국가 제도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음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5 (2009. 2. 13) / 페이지 수: 68
기타	–

<table>
<tr><td>제목</td><td>개발을 위한 무역 역량 강화에 관한 OECD/DAC 지침(DAC Guidelines on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td><td>DAC 문서 주제</td><td>Trade</td><td>DAC 문서 분류</td><td>Guideline</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T-G-1</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무역 역량개발(Trade Capacity Building), 무역정책(Trade Policy)</td></tr>
<tr><td>주요 권고사항</td><td colspan="5">1. 무역은 빈곤감소와 개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효율적인 무역정책이 필요함
2. 효과적인 무역정책 개발을 위한 요건을 제시함
3. 수원국의 무역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일관적인 노력이 필요함
4.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이 무역역량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5. 공여국 내 무역역량강화가 필요함
6. 수원국 내 통합적인 무역정책 프레임웍을 마련해야 함</td></tr>
<tr><td>세부 권고사항</td><td colspan="5">1. 효과적인 무역 정책이 필요함
가.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성장과 개인 및 기관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나. 공여국 정부기관은 공여국 내 뿐만 아니라 수원국 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공여국은 네트워크 구축을 무역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공여국은 무역정책 네트워킹과 정책개발을 위해 수원국 내 현지 연구기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
• 자원의 공동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개발을 지원함
• 개발도상국은 공여국의 무역 지원기관(Trade Support Institutions)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다. 성공적인 무역 개발을 위해 수출 지향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라. 무역 개발 노력에 있어 수원국의 참여 및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개발협력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 국민을 직원으로 고용해 인적 역량개발을 도모함
2. 효과적인 무역정책과정을 위한 요건
가. 무역개발은 젠더 및 환경과 같이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어야 하며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통합된 일관성 있는 무역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무역 정책 분석 및 모니터링, 관련 자문 제공 등 각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예: 수입자유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법률과 규제 프레임웍, 간소화된 통관절차, 효율적인 사회경제 기반시설 등)
다.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예: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양화, 시장 규모 확대, 수입제도 개혁, 해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기관의 역량강화 등)
라.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간의 정책 협력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무역 정책형성과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마. 무역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분석이 필요함
바. 수원국의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필요함
• 다자무역 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에서 민간부문이 협상 및 협정 실행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 지역적, 국제적 전략 시행을 위해 모든 주요 무역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함
3. 무역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
가. 무역 역량개발은 포괄적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4.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함
가. 무역개발 전략은 국가개발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의 무역전략 개발 및 실행을 위해 수원국과 협력해야 함
나. 무역 역량개발은 수원국의 정책입안자,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연계활동을 포함함</td></tr>
</table>

	5. 수원국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무역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함 가. 공공 및 민간기관 설립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자문 기구가 필요함 나. 정책 조정 및 정보 교환을 위해 공여국의 체계적인 구조, 기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6. 수원국 내 통합적인 무역정책 프레임웍을 마련해야 함 가. 개발 목표 및 빈곤감소의 주요 전략에 무역을 포함해야 함 •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에 무역정책 프레임웍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재정 및 인력자원을 제공해야 함 나. 통합적인 무역정책 프레임웍을 마련하기 위해 4단계의 무역정책 개발과정을 숙지해야 함 • 1단계: 국가개발정책의 하나로써 무역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 부서 및 기관, 기업, 시민사회 모두 무역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함 • 2단계: 협상 전략 준비 및 실행 • 3단계: 협정 실행 • 4단계: 정책과 협정 실행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다. 무역 개혁, 무역 역량강화, 시장의 접근성, 국제 규범, 지역적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 라. 국가적인 우선 고려사항, 수요, 무역 역량 간의 격차를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함 마. 공여국의 통합된 대응방안을 제공함
주요개념	–
배경과 역사	1. 무역과 무역 자유화는 상품, 서비스, 기술과 지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분야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빈곤감소와 개발에 기여함 2. 많은 OECD 회원국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기관 및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국제시장에 통합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수원국의 무역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함 3. 공여국은 통합된 프레임웍을 강화하기로 협의하고 G-8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함
평가지표	1.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 목표 달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공여국의 개입 정도, 다방면의 전략을 분석해야 함 가. 원조 활동은 수원국의 국가 전략과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 및 실행되었는가? 2. 공여국의 지원활동은 목표를 달성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평가해야 함 가. 지원 물자의 질과 활동 지원 팀의 역량을 평가해야 함 나. 공여국 개입의 결과와 영향력을 조사해야 함 다. 결과의 실제적, 잠재적 지속성을 평가해야 함 라. 공여국이 실행한 관련된 원조 간의 연계와 다자원조 활동 간의 연계를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와 통합적 활동 면에서 평가해야 함 마. 수원국의 참여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평가함 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여국 지원의 영향을 평가함 3. 통합된 무역정책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가. 무역개발에 있어 주요 장벽은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은 무역 전략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나. 지역 내 무역파트너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은 무엇인가? 다.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라. 사회·경제 인프라 정책, 투자 및 무역금융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마. 무역개발계획은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웍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바. 무역을 통해 어떻게 빈곤감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사. 무역 자유화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관련 DAC 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2. 빈곤(Poverty)
관련 DAC 문서	1. DAC Guideline on Capacity Development for Trade in the New Global Context Paris (2001)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1 (2009. 2. 16) / 페이지 수 / 72

기타	1. 부록 – 모니터링과 평가 (p. 63) 2. 사례연구 – 엘살바도르, 가나, 세네갈, 베트남 (p. 67) 3. 무역 역량 개발에 유용한 웹사이트 안내 (p.69)

제목	효과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Making it Effective)	DAC 문서 주제	Trade	DAC 문서 분류	Publication
				문서번호	T-P-1
DB 키워드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ade 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RTA/CB), 무역 역량개발(Trade Capacity Building),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주제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주요 연구결과	1. 2005 홍콩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선언에서 세계무역기구는 OECD에게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2005년 OECD 파리선언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원칙을 제안함 2.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에 대한 정책제언 가. 무역개발전략 수립 및 이행, 무역 규모 증대, 수출 품목의 다양화, 외 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나. 국내기업의 무역 활성화와 수출 중심 기업에 투자 확대를 지원함 다. 수원국이 무역을 위한 원조관련 협상에 참가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3. 무역을 위한 원조 아젠다 가. 무역을 위한 원조 아젠다는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카테고리 1: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에 관한 무역 정책 및 규제 • 카테고리 2: 무역에서 공급 측면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운송 및 저장 수단, 통신,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규제 • 카테고리 3: 무역에서 공급 측면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금융서비스, 기업서비스, 농업, 산림, 어업, 산업, 광업, 관광업 분야의 생산성 역량 강화 정책 및 규제 나. 기존 무역을 위한 원조 아젠다는 카테고리 1만을 목표 대상으로 삼았으나 카테고리 3까지 확대되어야 함 4. 수출경쟁력 가. 수출경쟁력은 국내생산성(생산비용 결정), 무역 비용, 시장진입의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됨 나. 수출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은 수출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줌 5.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원조 규모 결정 시에는 공여국의 역량을 감안해야 함				
주요 정책제언	1. 2005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의 5가지 원칙 가. 주인의식: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개발정책 및 전략을 존중하며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주인의식을 강화함 나. 협력: 공여국은 수원국 주도로 수립된 개발우선순위와 결과중심적인 전략의 이행을 위해 개발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수원국의 기관이나 시스템 개혁 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수원국기관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함 다. 조화: 공여국은 개발원조 집행 시 여러 정책간의 조화와 협력을 도모해야 함 라. 성과 관리: 원조 집행은 수원국의 주도하에 성과 중심적 전략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의 성과관리 과정을 지원해야 함 마. 공동의 책임: 자원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과 원조 집행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함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가. 홍콩선언은 무역을 위한 원조를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하고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공함 • 공여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규모 확대와 무역과 경제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함 • 무역을 위한 원조 전략은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기타 원조 전략과 조화를 이뤄야 함				

	• 수원국의 무역관련 지식과 기술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파트너십 이행 시 조화단계(공동협정 수립, 실행방법 간소화, 정보공유)→협력단계(수원국과 공여국의 아젠다 통합,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주인의식단계(수원국 주도의 아젠다 수립)로 시행하는 Bottom-up 방식과 주인의식단계→협력단계→조화단계로 시행하는 Top-down 방식을 사용함 • 수원국의 책임성 강화: 무역을 위한 원조 파트너십과 수원국 파트너십의 연계(지역연계협정, Local Accountability Pacts, LAP)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 및 공여국과 수원국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제적 평가(Global Review) 메커니즘 도입: 지역연계협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진전 상황에 대한 연구 보고 •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사회의 피드백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도모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6 (2009. 2. 16)	페이지 수	84
기타	–		

<table>
<tr><td>제목</td><td>최근 무역관련 원조 평가의 시사점(Trade-Related Assistance: What Do Recent Evaluations Tell Us?)</td><td>DAC 문서 주제</td><td>Trade</td><td>DAC 문서 분류</td><td>Publication</td></tr>
<tr><td></td><td></td><td></td><td></td><td>문서번호</td><td>T-P-2</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무역관련 원조(Trade-Related Assistance),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공여국의 무역관련 원조활동 중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최근 무역관련 원조 평가 자료를 통한 현황 파악
가. 공여국의 다양한 무역관련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은 명확한 목표와 평가 지표의 부족,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의 개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움
나. 수원국은 평가 자료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무역과 무역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무역 관련 대화에 참여를 모색하게 됨
2. 평가 자료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
가. 비체계적이고 불충분한 수요의 분석
• 수원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반영이 불충분함
나. 프로그램 관리 체계 미흡
• 소요비용, 시기, 진전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
• 수원국 내 주요 관계자와의 세부적 협의 없이 프로그램 시행
• 공여국 및 수원국 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분 미흡
다. 공여국의 단기적인 활동으로 인해 불충분한 시너지 효과
• 장기적이며 수원국 주도의 무역관련 원조 전략 체제에서 단기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공여국의 상호 보완적이고 순환적인 개입을 구축하기 어려우며 민영부문 및 지역관련 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발 지원 프로그램 실행 시 종종 공여국의 개입이 차단되기도 함
라. 빈곤감소와의 연계성 부족
• 무역관련 원조 중 소수 프로그램만이 실제 목표에 빈곤감소와 직접적인 연계를 보임
마. 공여국 간의 협력 미비
• 수원국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공여국의 개입과 공여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부족함
바. 무역관련 문제에 대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과 전문 역량의 부족
• 수원국 내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과 무역정책과정 지원 업무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없음</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무역관련 원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함
가. 주요 관계자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킴
• 국제무역기구, 공여국과 수원국 내 민영부문, 시민단체 등 주요 관계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협력 체제를 강화함
나. 상호 자문을 통해 각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수원국 내 기존 평가 시스템 및 평가도구를 활용해야 함
• 무역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수원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고려해 수원국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함
• 사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평가부는 국제무역센터의 무역활동, 국제적 수요, 시장의 잠재성, 생산품의 다양성, 시장접근의 장애물 및 경쟁사의 역할 등의 지표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Trade Map)의 유용성을 강조함
다. 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빈곤감소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무역과 빈곤의 연계성 분석과 사전빈곤영향성평가(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등을 통해 무역과 개발원조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함</td></tr>
</table>

	• 구체적인 부문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목표를 수립, 실행해야 함 • 사례: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프로그램(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의 양봉 프로젝트의 경우 서부 케냐 지역의 농부를 주요 대상으로 함 라. 프로그램 성과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실질적 진전 사항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정, 예상 성과를 고려해 성과중심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며 이행 단계에 따라 각 관계 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함 • 성과 중심적인 개발협력운영은 개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절차적 융통성과 지역 사무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예: DFID의 콜다운 시설(Call-down Facilities)은 지역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장 근무 와 원조수단 개발 등에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실행 절차를 간소화 함) • 공여국과 수원국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예: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무역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함) • 기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공동평가는 수원국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여국 원조지원의 효과성과 장기적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음 마.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자금 지원 경로 및 직접적인 지원 대상을 식별해야 함 •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공여국 간의 원조 조율과 조화를 촉진하므로 가장 적절한 원조 지원 경로라고 판단되기도 함 • 직접적인 지원 대상 선별과 관련하여 USAID 평가는 무역연합회(Trade Association)와 같이 민영부문을 대상으로 한 원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함 • 유럽위원회평가(The EC Evaluation)는 무역정책과 규제 관련 프로젝트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함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중한 대상 선택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원 대상은 반드시 충분한 배경지식과 전문기술 활용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참가자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함 바. 프로그램 결과의 지속성을 강화 • 장기적인 원조 지원과 재정 및 기술 부문의 사후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결과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함 • DFID와 네덜란드정부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 방글라데시 개발연구기관의 합작 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해 연구소의 무역관련 지식과 연구 분석 역량 개발을 지원함 • 지역단체와 정부당국,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기관 및 기업에 하청을 줌으로써 지역 역량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결과의 지속성을 강화함 사. 공여국 간 협력과 조화 및 상보적 관계를 개선 •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협력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현장에서는 정기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 활용해야 함 • 각 공여국은 각기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의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타 공여국과의 정책 조화를 도모해야 함(예: 유럽위원회의 독립국가연합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EU-TACIS)중 우크라이나의 무역관련 프로젝트는 DFID의 이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음) 아. 공여기관의 역량을 강화함 • 인센티브를 통해 공여기관 내 내부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킴 • 공여기관의 무역관련 원조 전략과 매뉴얼을 배포함 • 공여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협력, 협정 또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역관련 원조와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예: EC의 무역관련 원조 지침(Guidelines for EC Trade-Related Assistance)) • 해외 현장 지부나 운영 팀에게 재정 및 인력 지원을 비롯하여 일관된 인센티브를 제공함
향후 연구방향	–

관련 DAC 주제	1. 빈곤(Poverty) 2.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관련 DAC 문서	1. 2005 Joint WTO/OECD Report on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2005)		
문서작성일 (번역일)	2008. 11. 3-4 (2009. 2. 15)	페이지 수	5
기타	1. 동 책자는 2008년 11월에 개최된 OECD 무역을 위한 원조 정책회의(OECD Policy Dialogue on Aid for Trade) 중 배경 설명을 위해 참조된 자료로서, 2001년 세계무역기구 도하각료선언(2001 WTO Doha Ministerial Declaration)에 의해 무역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래 공여국의 원조실행 결과와 원조 효과성 등의 평가 및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함 2. 동 책자는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적인 원조집행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table>
<tr><td>제목</td><td>무역, 투자 그리고 개발: 정책일관성의 문제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Matters)</td><td>DAC 문서 주제</td><td>Trade</td><td>DAC 문서 분류</td><td>Report</td></tr>
<tr><td colspan="4"></td><td>문서번호</td><td>T-P-3</td></tr>
<tr><td>DB 키워드</td><td colspan="5">투자(Investment),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td></tr>
<tr><td>주제</td><td colspan="5">1. 무역, 투자, 개발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발 목표로서 수원국의 무역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2. OECD 회원국가의 일관된 개발협력을 장려하는 OECD의 역할을 확인하고 OECD 회원국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발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강조함</td></tr>
<tr><td>주요
연구결과</td><td colspan="5">1. 무역과 투자의 개방과 개발
가. 개방 경제가 폐쇄 경제에 비해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속도가 빠름
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 효율적인 제도,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과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다. 일관된 개발 전략을 위한 기본요건
• 건전한 거버넌스, 법적 제도 및 규제의 강화
• 정부 내 다양한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 강화와 거시 경제 및 구조적 차원의 정책 일관성
• 교육과 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인력 자원 개발
라. 해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이 전문 인력과 금융 기술, 제도를 빠르게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마. 자연 환경에 대한 개방 무역과 투자 정책의 영향은 복합적임
바. 무역과 투자 중심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OECD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정도에 따라 개도국들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로 인한 개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가. 정책개발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개발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와 기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비전
•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정책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 개발 정책 일관성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역량
•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특정 사안에 있어서 폭넓은 합의 구축
나. 개도국 시장개방의 개발효과 증대를 위한 OECD 회원국의 노력
• 재화, 서비스, 자본 및 지식의 원활한 국제적 흐름을 위한 체제를 강화함
• 국제적 법률 체계 개발에 개도국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
•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3. OECD는 동료검토(Peer Review)와 여러 전문 분야의 분석을 통해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OECD는 비회원국이 OECD의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폭넓은 정책 대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국제 경제 체계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함</td></tr>
<tr><td>주요
정책제언</td><td colspan="5">1. 수원국 주도 하에 건전한 거버넌스와 제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괄적인 개혁 조치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함
가. 시장 경제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인력과 제도적 역량 개발에 투자함
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의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와 정책 환경 개선을 지원함
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치적 리더십 구축을 지원함
라. 일관적, 총체적인 무역과 투자 개방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 및 환경 정책과 함께 거시 경제적 안정과 기타 구조 개혁을 추구함
마. 무역개방과 투자가 향후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유를 대중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혜택 또는 손실을 입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무역 개방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향상시킴</td></tr>
</table>

	2. OECD 회원국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우선 고려 사항 가. 국제 무역 흐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프레임웍을 강화함 • 제조업과 농어업 분야의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킴 나. 국제적 투자 및 자본 자유화를 위해 제도적인 프레임웍을 강화함 • 국제적 투자 기준 및 원칙을 강화함 • 개도국이 경제 및 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무역과 투자와 개발과 환경의 조화 라.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국제정보사회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킴 마. OECD 회원국의 개발 협력 정책과 실행에 있어서 일관성 향상 • 공여국은 수원국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개발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함 • 수원국 내 민간부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 • 고채무빈곤국가의 채무 감소를 위한 전략을 실행함 •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분쟁 방지와 평화유지를 장려함		
향후 연구방향	1.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자유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조 개혁에 따라 새로운 사회 제도와 안전망 개발이 필요함 나. 금융 체계의 합리화와 역량 강화 다.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마련과 투자, 정책, 개발, 환경 정책의 일관성 향상		
관련 DAC 주제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2.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DAC 문서	1.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1996)		
문서작성일 (번역일)	1999 (2009.02.13)	페이지 수	84
기타	1. ANNEX 1: 무역, 투자, 개발의 연관성: 동향과 사례 가. 사례와 동향 소개를 통해 일련의 정책과 개혁 조치의 연관성 및 일관된 무역개방과 투자 정책의 실행을 강조함 2. ANNEX 2: 배경 요약 보고 문안들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5-030

선진 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 대응방안 연구

발 행 2010년 3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우: 461-833)
전 화 031) 740-0301
팩 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아데라커뮤니케이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002-4 13320

ISBN 978-89-6469-002-4 13320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KOICA
WORLD'S FRIEND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418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833, Korea
T. 031-740-0114 F. 031-740-0655
http://www.koica.go.kr